

2011년도 전략연구과제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임준홍·김양중·송두범·김종수·이관률·허남혁

2012. 1

충남발전연구원

발간사

외환위기(IMF) 이후 우리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본격 진입하였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82.2%로 G20 회원국(평균 43.3%) 중 1위이며, 최근,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효과 등에 힘입어 충남의 GRDP(2009년)는 3,370만원으로 울산(4,622만원)에 이어 전국 2위이며(전국 평균의 2,187만원), 그 성장률은 전국 1위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생산현장인 삼성 LCD 공장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민의 생활수준은 전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일자리문제도 전국과 별반 다르 없다. 더 나아가 충남도민은 과연 타시도민에 비해 행복할까? 아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 답은 바로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그 실천의 주요 수단 중의 하나가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필요성과 지역기여도를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였다. 이 작은 연구결과가 충청도정과 도민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2011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연구진

연구책임	임준홍 책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
연구진	송두범 선임연구위원
	김종수 책임연구원
	이관률 책임연구원
	허남혁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이은애 씨즈 이사장
	김민숙 씨즈 컨설턴트
	김영식 씨즈 연구팀장
	김신양 성공회대 교수
	이란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채종헌 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조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수료
	강병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적 기업센터 책임연구원
	왕소영 대전리서치 실장

연구심의위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주심)
	여형범 책임연구원
	홍성효 책임연구원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
	이정만 공주대학교 교수
	추 욱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TF팀장

자 문 진

연구자료 제공 및 자문	송두범(충남발전연구원)
	최혁진(원주의료생협 전문이사)
	조우석(소기업발전소 연구원)
	조경민(마포희망나눔 운영위원)
	강내영(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류병윤(대구경북사회적 기업지원센터장)
	하승우(지행 네트워크)
	함영진(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화수(한국사회적 기업협의회 상임정책위원)
	김성훈(풀뿌리사람들 컨설턴트)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유정규(지역재단 상임이사)
	김동준(엔씨스콤 이사)

연구 요약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루어졌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충남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이론 및 국내외 선진사례와 사회적 경제 실태분석을 통해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특히, 충남의 사회적 경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대표 및 임원 대상)를 했고, 사회적 경제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판단되는 조직(8개 조직 선정)과 지역(홍성군 홍동지역 중심)을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충남도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해 연구과정에서 구성된 '충남 사회적 경제연구회'와 충남도가 구성한 '충남 사회적 경제기획단'과 협력하면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 사회적 경제는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외환위기(IMF) 이후 우리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본격 진입하였다. 2010년 경제협력 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82.2%(수출 43.4%, 수입 38.8%)로 G20 회원국(평균 43.3%) 중 1위이며, 최근,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효과 등에 힘입어 충남의 GRDP(2009년)는 3,370만원으로 울산(4,622만원)에 이어 전국 2위이며(전국 평균의 2,187만원), 성장률은 전국 1위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생산현장인 삼성 LCD 공장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이 있다.

하지만 충남 도민의 생활수준은 전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일자리문제도 전국과 다르지 않다. 과연 충남도민은 타시도민에 비해 행복할까? 아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 답은 바로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사회적 경제가 있다.

□ **충남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사회적 경제란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업이나 국가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나 협회, 재단 등 제3섹터가 주체가 되는 사회경제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미 한국에서도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NGO 등의 형태가 존재하고, 최근들어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민선5기 공약에서 충남형 사회적 기업 200개 육성이란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하였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 조직유형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1년 7월 기준)

(단위 : 개)

구 분	합계	상법 회사	사단재단 법인	사회복지 법인	민간 단체	영농어 조합	소비자 생협	농협
합 계	80	37	6	2	15	18	1	1
인증 사회적 기업	17	9	1	0	6	1	0	0
예비 사회적 기업	5	0	0	0	4	0	1	0
지역형 사회적 기업	58	28	5	2	5	17	0	1

충남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증 사회적 기업 중심의 정책에 대한 한계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정책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경제통상실 내에 ‘사회적 경제 TF팀’을 설치하고, 실행을 위한 충남발전연구원 산하 ‘충남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충남도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다. 충남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개발, 자율적 자체예산 확보 등의 한계가 있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과 전략이 요구된다.

□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분석은 매출액, 순수익 등의 측면에서 경영(영업)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조직 대부분은 정부나 민간 지원이 끊어질 경우 생존이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직의 경영상태 등은 열악하지만 지역사회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측면에서 지역친화적이고,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 고용이 100%이며, 여성고용 비중이 높고, 원재료의 구입과 생산된 재화·서비스의 판매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직의 약 40% 이상이 지역사회에 환원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이해) 정도는 잘 모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표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고용특성 및 지역사회 기여효과

(단위 : %)

구분	지역민 고용	여성 고용	취약계층 고용	시군에서 원재료구입	지역사회 재투자
비중(%)	90.3	48.8	20.5	93.6%	41.8 (96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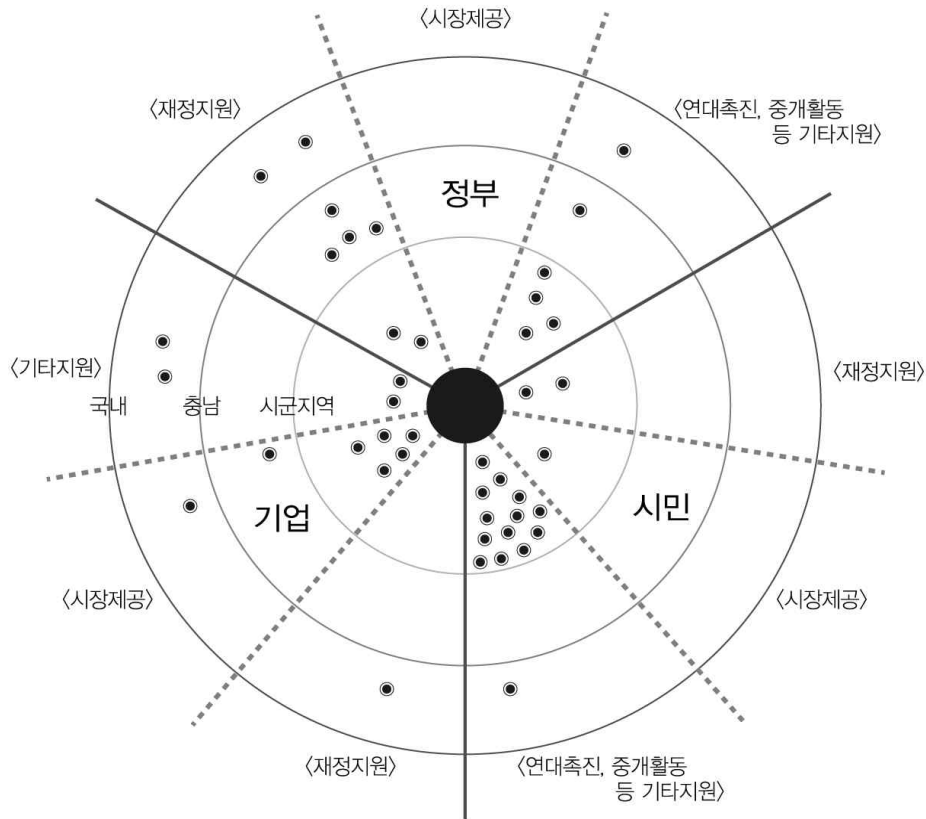
*는 1개 조직당 1년에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출액임

□ 충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미약하지만 연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어, 생태계 구축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8개 조직을 심층인터뷰 조사한 결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네트워크) 구조는 아직 시작단계지만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대구조가 조직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우선 정부, 시장, 시민영역 모두의 다양한 관계망 확립이 요구되며, 현재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 집중적인 지역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유지하며 지역 내 연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지지 그룹과의 관계, 실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 그룹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확대해야 한다. 정부 영역과는 일방적 지원관계가 아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 시장의 소비자로서 내용 있는 사업 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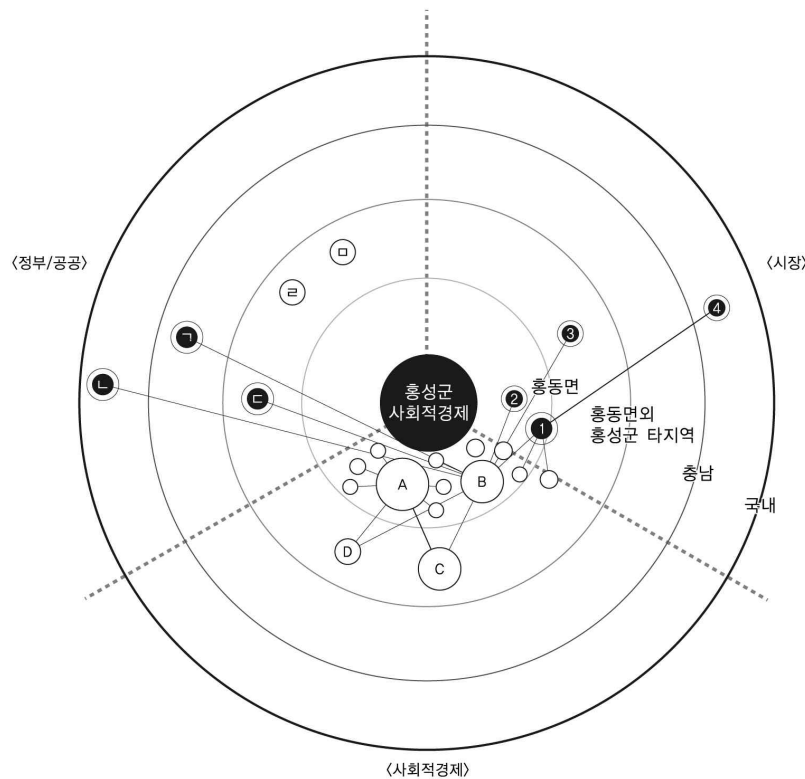


- *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연대관계 가운데 관계도가 50%가 넘는 경우만 표시
- * 각 영역별 연대관계는 크게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시장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적 재정지원과 시장제공을 제외한 여타의 지원을 하는 경우로 구분함

[그림 1] 충남 사회적 경제의 섹터별 연대구조

홍성군(홍동지역 중심)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경제 실태 분석 결과 홍성군의 사회적 경제 연대구조는 홍동면의 사회적 경제·제3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밀도 있는 연대구조와 그 이외

의 지역과 섹터에서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연대구조가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임을 발견했다. 홍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한 연대구조의 원동력은 지역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홍성폴무학교’와 교류와 거점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인 ‘마을활력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홍성군의 연대효과 및 사회적 경제 분위기가 홍성군 이외 지역이나 충남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의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례

정부/공공 영역	사회적 경제 / 제3섹터 영역	시장영역
ㄱ : 충남도청	A : 폴무학교	1 : 폴무생협
ㄴ : 중앙정부 (농림수산부/행정안전부 등)	B : 마을활력소	2 : 폴무축산
ㄷ : 홍성군청	C : 폴무신탁	3 : 홍성 유기농조합 법인
ㄹ : 지역대학(청운대학교)	D : 홍성 YMCA	4 : 폴무생협 거래처
ㅁ : 지역대학(혜전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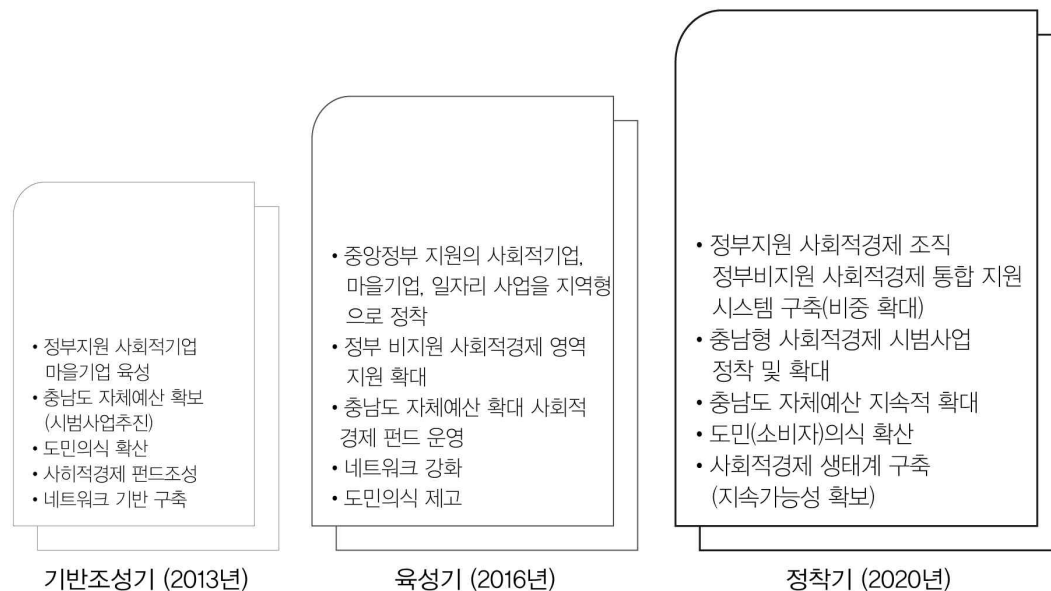
[그림 2] 홍동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연대구조

□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단, 중·장기적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순환과 공생의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비전 아래 단기, 중장기적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충남의 특색에 맞게 효율적으로 통합 추진해 투자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상호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끌 리더를 육성하고, 시범지역, 시범업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경제 정책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야 한다. 충남형 사회적 경제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고, 충남도 전역에 확대 추진해야 한다. 사업대상 역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생활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확대와 조직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3] 충남의 사회적 경제 발전단계별 정책목표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지원의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들을 충남의 성격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지속적인 예산 확대,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주체로서 도민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민의 생활 속에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한 소비행태가 일정부분 자리 잡고 확대될 때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정책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개발되고 실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설정된 정책목표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다차원의 시책 및 사업이 개발돼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시책, 8개 세부시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책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로 2가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경제 내부에 대한 인재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 외부에 대한 사회적 경제와 다양한 행위자와의 네트워크다. 즉,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 및 그를 육성하는 시스템, 방향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자산을 발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경제 관련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인재의 범위는 창업을 준비하는 리더 및 창업자 뿐만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근로자와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전문컨설턴트,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범위가 확장된다. 사회적 경제관련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후자는 인재육성 못지않게 사회적 경제 관련 외부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환경으로부터 요구와 지지를 얻고, 투입되며, 이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환경과의 교호작용은 조직의 존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으로는 사회적 경제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 외부 액터 등과의 협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책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영역이다. 3가지 세부시책이 추진되는데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내발적 발전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한 세부시책으로 첫째, 사회적 경제 통합 육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통합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다양한 사업들을 충남도의 상황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둘째,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을 추진할 수 있다.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토착화할 필요가 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충남만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인지도(수익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정도는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적 경제조직만 인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인지한 경우도 설문대상자의 5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도 저하는 구매력 저하로 귀결된다. 인지도 제고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사업, 목적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표 3>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요조사

(단위 : 5점(매우필요) 만점)

시 책	세 부 시 책	조직임원		전문가	
		5점만점	2개선택	5점만점	2개선택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경제역량 및 연대강화	4.36	17.8	4.67	26.2
	사회적 경제지역사회 협력 강화	4.31	17.7	4.72	18.1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	사회적 경제 통합육성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 포함)	4.22	15.2	4.20	4.8
	사회적 경제 인지도(수익성)강화	4.20	14.9	4.25	8.1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	4.19	13.6	4.54	19.0
	지속적·안정적 자원 확보	4.31	15.4	4.56	19.0
	제도(조례)정비	4.17	5.4	4.40	4.8

세 번째 시책은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로 3가지 세부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나는,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내 사회적 경제추진체계가 잘 구축돼야 하며 정책 및 사업의 성패에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조직이 취약할 수록 조직 자체의 노

력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발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기존 센터의 기능을 정립해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조직 내 공무원들의 사회적 경제 및 그 조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정보공유 등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지속적·재정적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진입하려는 상당수 조직들이 영세한 점을 감안해 초기 운영자금 마련은 중요한 난제다. 시의적절한 정책자금이 투입된다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성을 일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한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제도(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제도적인 장치가 체계화돼야 한다. 충남이라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 정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충남도의 경우 조례를 정비해 지원조직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예산지원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또 유사한 지원책이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목 차 례>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4
3) 선행연구 검토	4
2. 연구내용과 방법	8
 제 2 장 이론적 고찰: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대상 설정	11
1. 사회적 경제의 근원과 대두배경	11
1) 사회적 경제의 근원	11
2) 사회적 경제의 대두배경	13
2. 사회적 경제의 개념	16
3. 사회적 경제의 주체	22
4. 사회적 경제의 기능과 발전가능성	27
5. 사회적 경제의 영역	28
6.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대상	31
1) 사회적 경제의 관점	31
2) 사회적 경제의 개념	32
3) 사회적 경제의 대상(영역)	33
 제 3 장 국내외 선진사례	35
1. 국외	35
1) 프랑스	35
2) 영국	42
3) 스웨덴	47
4) 이탈리아	51
5) 캐나다 퀘벡	55
6) 일본	61

2. 국내	66
1) 성미산 마을만들기	66
2) 원주	74
3) 대구경북	81
3. 국내외 선진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도출	86
1) 국내외 사례 주요내용 정리	86
2) 시사점	89
 제 4 장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분석	93
 제1절 충남의 사회적 경제 여건분석	94
1. 충남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94
1) 충남경제의 현황	94
2) 충남경제의 문제점	95
2. 충남 사회적 경제의 여건	96
1) 정책여건	96
2)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구성여건	99
3) 제반인식여건	105
4) 미래전망	106
3. 충남 사회적 경제 여건으로 본 시사점	107
 제2절 충남 사회적 경제 의식분석	109
1. 조사개요	109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	112
1) 조직운영 실태	112
2) 매출구조 실태	116
3) 정부지원여부	117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네트워크) 구조	119
4. 지역사회 기여도	127
5. 요약 및 시사점	132

제3절 충남 사회적 경제 심층사례 분석	134
1. 조사개요	134
1) 조사목적	134
2) 조사 내용 및 방법	134
3) 분석 방법	137
2.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분석	139
1) 사회적 경제 조직개요	139
2) 연대구조 내용 비교분석	145
3)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과정과 자원확보	152
4)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정리	154
3. 홍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	155
1) 홍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일반특성	155
2) 홍성군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성요소간 연대구조 분석	159
제4절 종합분석: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의 시사점	162

제 5 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와 방안

제1절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방향	168
1. 정책과제	168
2. 정책목표	170
3. 시책 및 사업	173
제2절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176
1. 시책의 목적	176
1) 시책의 배경 및 필요성	176
2) 목적 및 기대효과	178
2. 시책 구성 및 추진방향	179
1) 시책개요	179
2) 시책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	181
3. 시책별 사업의 주요 내용	183
1) 사회적 경제 역량 및 연대 강화	183
2)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협력 강화	199

4. 정책 건의	210
제3절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	213
1. 시책의 목적	213
1) 시책의 배경 및 필요성	213
2) 목적 및 기대효과	214
2. 시책의 구성 및 추진방향	215
1) 시책 개요	215
2) 시책추진 및 추진체계	216
3.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 주요 내용	218
1) 사회적 경제 통합육성(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218
2)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시범사업)	222
3) 사회적 경제 인지도(수익성) 강화	231
4. 정책건의	236
제4절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	238
1. 시책의 목적	238
1) 시책의 배경 및 필요성	238
2) 목적 및 기대효과	239
2. 시책 구성 및 추진 방향	240
1) 시책 개요	240
2) 시책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	241
3. 시책별 사업의 주요 내용	244
1)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	244
2) 지속적·안정적 자원 확보	250
3) 제도(조례) 정비	253
제 6 장 결론	267
1. 요약 및 정책제언	26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74

〈표 차례〉

〈표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9
〈표 2〉 사회적 경제 연구회 워크숍 개최 개요	10
〈표 3〉 사회적 경제 기획단 회의 개최 개요	10
〈표 4〉 국가별 사회적 경제의 인식과 목적	14
〈표 5〉 사회적 경제의 대두배경과 영역	15
〈표 6〉 학자별 사회적 경제의 정의	19
〈표 7〉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	21
〈표 8〉 한국 사회적 경제 분류(노대명)	31
〈표 9〉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리와 중요도	33
〈표 10〉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경제 대상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적합도	34
〈표 11〉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1993)	38
〈표 12〉 영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들	43
〈표 13〉 스웨덴 서비스 관련 정부 지출 변동 추이 (1980 - 2001)	48
〈표 14〉 연차 보고서에 따른 연대협동조합 자료	57
〈표 15〉 성지연의 지속적인 활동	68
〈표 16〉 성미산 마을의 사회적 경제 조직현황	69
〈표 17〉 신탁조직육성사업(1975-1993)의 결과	76
〈표 18〉 주요 단체들의 활동내용과 규모	78
〈표 19〉 분야별 단체현황	79
〈표 20〉 대구(경북)지역 생협 및 직거래단체 현황	82
〈표 21〉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의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지역 내 구입정도	83
〈표 22〉 국내외 선진사례 요약	87
〈표 23〉 도 신규시책 중 연계발굴 가능사업	97
〈표 24〉 2012년 충남의 사회적 경제지원 예산(안)	98
〈표 25〉 충남의 2011년 중소기업지원 예산	99
〈표 26〉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현황(2011년 6월 기준)	100
〈표 27〉 시도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1년 7월 기준)	100
〈표 28〉 분야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1년 7월 기준)	101
〈표 29〉 시군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1년 7월 기준)	102
〈표 30〉 조직유형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1년 7월 기준)	102
〈표 31〉 사회적 경제 인식 여부	105
〈표 32〉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의 부합정도	106
〈표 33〉 현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106
〈표 34〉 미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107

<표 35> 설문대상(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및 표본수	109
<표 36>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110
<표 37>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실태	113
<표 38> 매출액의 변화	115
<표 39>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처(1/2)	116
<표 40>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처(2/2)	117
<표 41>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조직의 경영상태	118
<표 42> 사회적 경제 조직에 따른 연대구조	119
<표 43>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대하고 있는 단체의 소재지	120
<표 44> 연대구조 활성화가 조직에 주는 도움 정도	121
<표 45> 주로 교류하고 있는 영역	122
<표 46>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현황	123
<표 47>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대내용	124
<표 48> 지방정부와 협력에 대한 만족도	125
<표 49> 지방정부와 협력을 어렵게 하는 점	126
<표 50>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고용특성	127
<표 51> 사회적 경제 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구입처	128
<표 52>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처	129
<표 53>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재투자	130
<표 54> 지역사회 재투자(예)	131
<표 55>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	132
<표 56> 지역사회 재투자 현황	133
<표 57> 사례조사 대상 업체	135
<표 58> 사례조사 대상 업체 유형별 구분	135
<표 59> 홍성군 심층면접 대상 조직	136
<표 60> 사례조사 대상 단체의 조직개요 요약	139
<표 61>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구성원 특성	141
<표 62>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재무현황 요약	142
<표 63> 홍성군 심층면접 대상 조직 개요	156
<표 64>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요조사	175
<표 65>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 구성	181
<표 66> 사회적 경제 협의회의 주요 활동	197
<표 67>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대회 주요 활동	200
<표 68>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구성	216
<표 69>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구성	241
<표 70>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요조사	272

〈그림 차례〉

[그림 1] 충남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2
[그림 2] 사회적 경제 문제의 영역 설정	2
[그림 3] 연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	8
[그림 4] 연구 논의구조	9
[그림 5] SE 역사적 개념의 변화	12
[그림 6] 사회적 경제의 주체	23
[그림 7]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유형	25
[그림 8]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매개체로서 사회적 경제	26
[그림 9] 사회적 경제의 영역	29
[그림 10] 사회적 경제 실태분석 과정	93
[그림 11] 충남지역 1인당 GRDP1) 및 시도별 1인당 GRDP1)(09년)	94
[그림 12] 충남도 시군별 마을기업 수	103
[그림 13] 충남도 마을기업 조직유형	104
[그림 14] 충남도 마을기업 사업내용	104
[그림 15] 충남도 마을기업 회원규모	104
[그림 16] 조사대상 조직의 분포	110
[그림 17] 설문대상자 및 응답자의 속성	111
[그림 18] 설문대상 조직의 활동 특성	112
[그림 19] 조직유형별 매출액 분포	114
[그림 20] 설문대상 조직의 핵심사업(주요활동)	131
[그림 2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구조	133
[그림 22] 교류하고 있는 영역	133
[그림 23] 생태계 분석 모형의 사례	138
[그림 24] 즐거운 밥상 vs 얼굴있는 먹거리	146
[그림 25] 온양온천시장 vs 천안KYC(산재)(1/2)	147
[그림 26] 온양온천시장 vs 천안KYC(산재)(2/2)	148
[그림 27] 난장앤판	149
[그림 28] 희망칼국수	150
[그림 29] 마을 활력소 → 마을활력소를 중심으로 하는 제3섹터 및 사회적 경제 세부구조 ...	151
[그림 30]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장과정별 자원확보 상황	152
[그림 31] 홍성군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연대구조	160
[그림 32]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환경분석	163

[그림 33] 홍성군 사회적 경제의 이중적 구조	164
[그림 34] 충남 사회적 경제의 섹터별 연대구조	166
[그림 35] 충남의 사회적 경제 발전단계별 정책목표	171
[그림 36] 시책의 추진체계 및 세부사업	182
[그림 37] 아카데미 교육 체계도	186
[그림 38] ‘소셜벤처대회’ 사업 추진단계	190
[그림 39] ‘사회적 경제 리더 및 전문컨설턴트 육성’ 사업 추진단계	193
[그림 40] ‘주민아카데미’ 사업 추진단계	196
[그림 41] ‘사회적 경제 협의회’ 사업 추진단계	199
[그림 42] ‘충남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대회’ 추진단계	202
[그림 43] ‘민간상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단계	204
[그림 44]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조직도 및 협력체계(안)	205
[그림 45]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사업 추진 단계	206
[그림 46] ‘프로보노 운동 전개’ 사업 추진단계	208
[그림 47]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약체결’ 추진단계	210
[그림 48] 시책의 추진체계 및 세부 계획	218
[그림 49] 사회적 경제 전략분야 개발과정 및 효과	223
[그림 50] 전략사업형 사회적 경제 모델 개발 과정	224
[그림 51] 지역클러스터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224
[그림 52] 시범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안	226
[그림 53] 주민창안제도 추진 과정	229
[그림 54]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홍보 과정	234
[그림 55] 시책의 추진체계 및 세부 사업	242
[그림 56] 충남 사회적 경제 전담 부서 신설 단계	245
[그림 57] 충남 사회적 경제 전문가 채용 절차	246
[그림 58] 공무원 대상 사회적 경제 교육 효과	248
[그림 59]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단계별 핵심 역할	249
[그림 60] (가칭) 충남 사회적 경제기획단의 조직도	250
[그림 61] 충남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255
[그림 62] 충남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 절차	258
[그림 63]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 인증 절차	260
[그림 64]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기여효과 및 연대구조	270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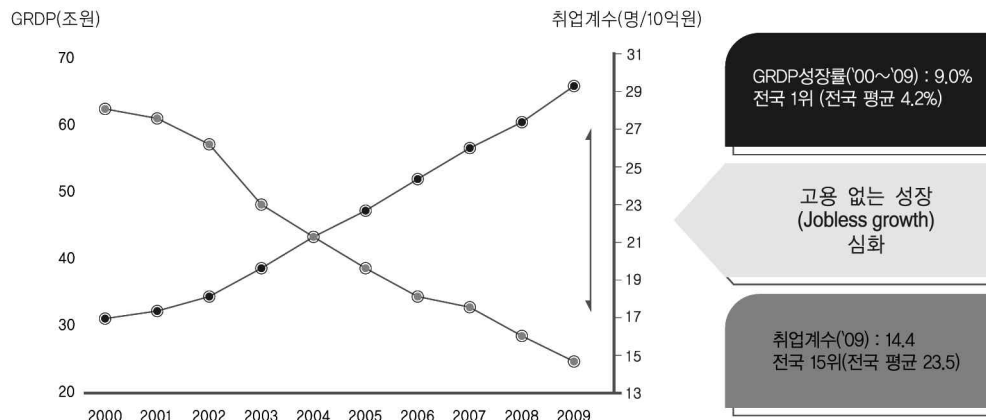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1990년대 중반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세계적인 무한경쟁이라는 전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고, 사회운영의 한 부분인 시장의 논리가 사회의 절대적인 운영논리로 올라서게 되었다. 외환위기(IMF) 이후 우리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본격 진입하였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82.2%(수출 43.4%, 수입 38.8%)로 G20 회원국(평균 43.3%) 중 1위이며, 최근,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효과 등에 힘입어 충남의 GRDP(2009년)는 3,370만원으로 울산(4,622만원)에 이어 전국 2위이며(전국 평균의 2,187만원), 그 성장률은 전국 1위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생산현장인 삼성 LCD 공장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이 있지만 충남 도민의 생활수준은 전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문제는 전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더 나아가 충남도민은 과연 다른 시도민에 비해 행복할까? 아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 답의 하나가 사회적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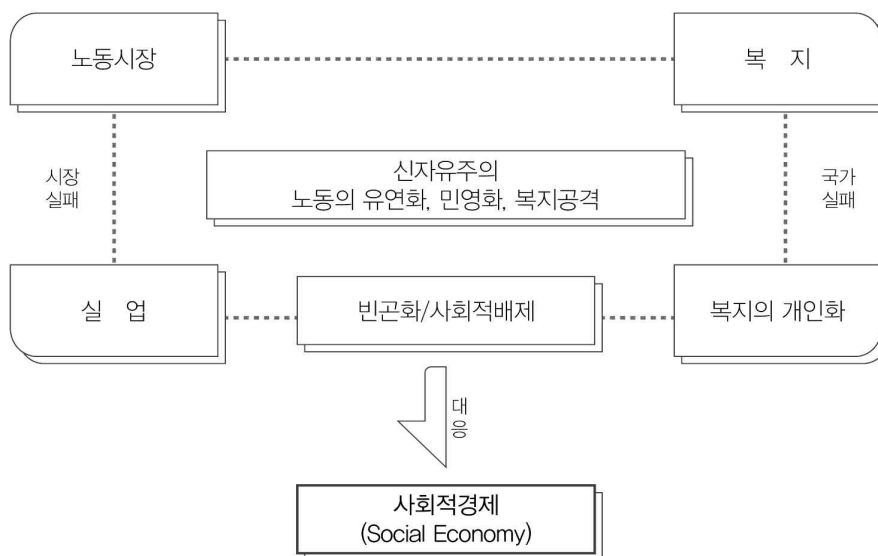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생활세계에서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빈곤층,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심화된 소득불평등, 점차 증가하는 고용불안,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부담 등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경제 주도의 경제사회에서 소홀히 다룬 불평등, 양극화문제,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유형인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고용을 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은 지역민 고용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그림 1] 충남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뿐만 아니라 자활공동체 및 간병간호 등 각종 복지 관련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복지의 양적공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림 2] 사회적 경제 문제의 영역 설정

실제로 서구 각국에서는 사회적 경제 개념을 표방한 다양한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도들 또한 구체화 되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전통적 협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한계를 넘어 ‘개방된 형태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이익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안경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보다 의미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순환과 공생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주요 부문을 구성하고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경관의 유지·보전, 도농교류 활성화, 자원순환형 농업생산, 로컬푸드 운동, 지역개발 등 농촌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토대 강화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힘이 되며, 이는 주민이 삶의 질 제고와 지역순환과 공생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경제의 하나의 형태라 볼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관련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커뮤니티비즈니스(지식경제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민선5기 출발과 더불어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행정조직 내 사회적 경제계(일자리경제정책과 내)를 설치하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충남발전연구원 내)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총량경제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나, 지역 간 발전격차가 심화되고, 성장과실의 외부유출도 심화되어, 도민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서비스제공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제한된 의미를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충남에서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개념 및 영역을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의 사

회적 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환경의 조성을 위해 충남의 사회적 경제 실태가 어떠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정립과 실태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선진사례와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충남도에서 실천가능한 정책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3)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연구는 초기단계로 주로 개념적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수행되었는데, 대부분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6년간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 역시 개념적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담론 혹은 이론적 소개 수준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연구들은 학술논문의 형태가 아니라 일반 잡지 혹은 학술발표 등의 특별기획차원에서 집필되고 발표되었다. 일부 선행연구(황미영, 2007)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실태에 관한 언급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연구내용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국내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관련 선행연

구로는 장원봉(2005), 장원봉(2006), 뮌크너한스 외(2006), 김영철 외(2007), 노대명(2007), 황미영(2007), 장원봉(2007), 김정원(2009), 신명호(2009), 장원봉(2009), 김신양(2009), 이기구(2011) 등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 대로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외국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소개하는 수준의 논의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사회적 경제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황미영(2007), 장원봉(2009)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연구 역시 실제 사회적 경제의 실태분석은 초보적 수준이고, 대부분의 연구내용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국외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국외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도입됐다. 초기연구는 주로 개념적 차원에서,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사회적 경제의 기능과 현황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개별 서비스별로 사회적 경제의 기능과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기능에 관한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OECD LEED(2005)를 중심으로 한 개별 국가별로는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발전과정, 그리고 활성화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로는 C. C. Williams & R. White(2001), R. Galliano(2004), F. Moulaert & J. Nussbaumner(2005), OECD LEED(2005), A. Kay.(2006), Graefem(2006), P. Teague(2007), OECD LEED(2007), A. Noya & E. Clarence(2007), V. Gonzales(2007), C. Jette' & Y. Vaillancourt(2011)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논의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기관, 예컨대 Social Enterprise London(SEL) 등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책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외국에서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수행되고 있고,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지역발전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연구의 성격이 학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내 주요 연구]

- 장원봉(2005),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운동의 모색”, 도시와 빈곤, 제73호.
- 뎀크너한스외(2006), “사회적 경제와 촉진 지향적 기업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비영리조직의 공통분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4권제1호.
- 장원봉(2006), “빈곤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발전과제”, 도시와 빈곤, 제80호.
- 장원봉(2007),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 김영철외(2007), “양극화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연구, 제15권 제2호.
- 김정원(2009),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은 민(民)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도시와 빈곤, 제89호.
- 노대명(2007), “한국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 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 황미영(2007),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 신명호(2009), “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도시와 빈곤, 통권 제89호.
- 장원봉(2009),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도시와 빈곤, 제89호.
- 김신양(2009),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다른 경제를 꿈꾸는 지방-프랑스의 노르빠드칼레”, 도시와 빈곤, 제89호.
- 이기구(2011),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통합적 기업”,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1호.

[국외 주요 연구]

- Williams, C. C. & R. White(2001), “Evaluating the Role of the Social Economy in Tackling Rural Transport Problems”,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 16, No. 3/4.
- Galliano, R(2004), Social Economy Entrepreneurship and Local Development, OECD.
- Moulaert F. & J. Nussbaumner(2005), “Defining the Social Economy and its Governance at the Neighbourhood Level. Urban Studies, Vol. 42, No. 11.
- OECD LEED(2005), The Social Economy in Central, East and South-East Europe,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 Graefem P.(2006), “The Social Economy and the American Model”, Global Social Policy, Vol. 6. Issue 2.
- Gonzales, Vanna.(2007), “Globalization, Welfare Reform and the Social Economy”,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Vol. 34 Issue 2.
- Kay, A.(2006), “Social Capital, the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Vol. 41, Issue 2.
- OECD LEED(2007), The Social Enterprise Sector: A Conceptual Framework, in <http://www.oecd.org/dataoecd/43/40/37753595.pdf>.
- Noya, Antonella & E. Clarence(2007), The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OECD.
- Teague, P.(2007),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i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1. No. 1.
- Jette’, Christian & Yves Vaillancourt(2011), “Social Economy and Home Care Services in Quebec: Co-Production or Co-Constr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22, No. 1.

(3) 본 연구의 의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외국의 연구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담론수준을 벗어나 학술적·정책적 연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2000년 후반 이후 소개돼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 주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몰이해까지 보이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현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실제 지역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가 등의 실질적인 연구영역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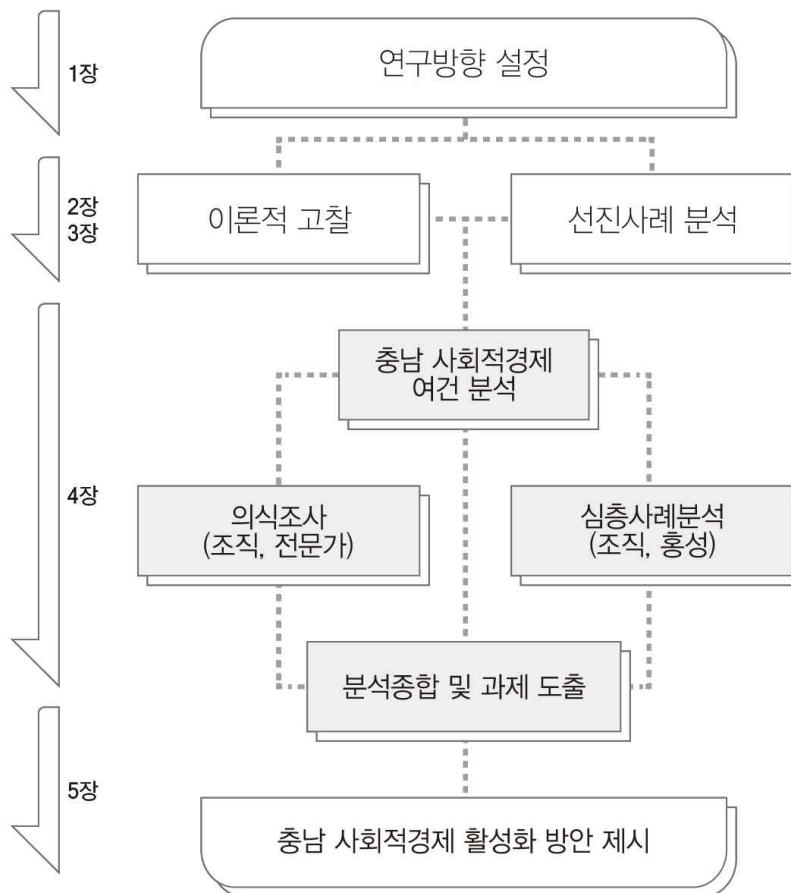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론적 수준에서 논의되어 온 사회적 경제의 연구를 탈피하여 충남 지역을 사례로 한 사회적 경제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성격(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 국외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담론수준에서 탈피하여 학술적·정책적 연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
- 특히 사회적 경제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와 실증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론적 수준에서 논의되어 온 사회적 경제의 연구를 탈피하여 사회적 경제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에서 의미가 있음.

2.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은 원내외 연구진의 관련 이론 및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했다. 자문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연구방향에 따라 관련 이론과 사례를 재검토·재정리했다. 충남사회적 경제 여건과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은 각 장과 절에서 상세히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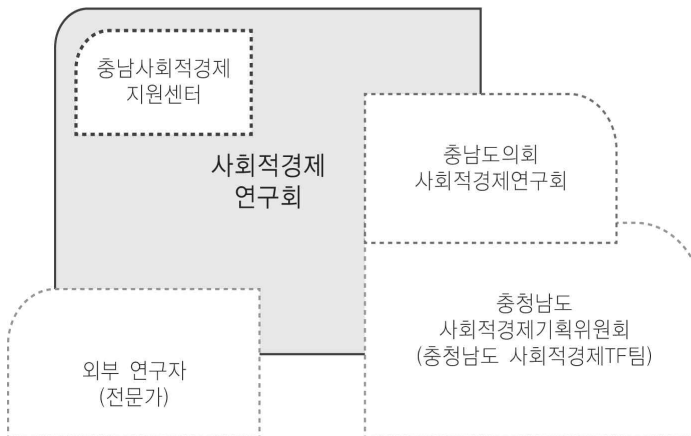
[그림 3] 연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

특히,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충남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분석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파악하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층사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조 사 방 법
사회적 경제 조직 의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 조직의 경영실태 - 조직의 연대구조 - 정책에 대한 수요 	교육된 조사원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사회적 경제 전문가 의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 정책에 대한 수요 	워크숍 참석자 면접조사 및 전문가 이메일 조사 병행
심층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 6곳과 관계되는 2곳(총 8곳) - 홍성군 홍동면 중심 	조직당 평균 1박2일 대표자(임원) 심층 면접조사

연구의 수행방법은 원내외 전문가와 실천가들이 참여하는 ‘충남 사회적 경제 연구회’를 통해 학습과 공감의 과정을 거쳤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충남도의 실무부서인 사회적 경제 TF팀 및 충남 사회적 경제 기획위원회와 논의구조를 가졌다. 이를 다시 연구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림 4] 연구 논의구조

충남 사회적 경제 연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이론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태분

석, 기획단에서 제시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정책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단회의도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2> 사회적 경제 연구회 워크숍 개최 개요

구 분	일 정	논 의 내 용
사회적 경제의 이해	3월 25일	-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4월 1일	-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 충남도 현황
	4월 19일	- 영국의 사회적 경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5월 3일	- 일본의 사회적 경제 - 성미산 마을만들기
실태 분석	5월 19일	- 충남 사회적 경제 여건분석 -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 -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
사회적 경제의 이론 및 실제	6월 8일	- 원주의 사회적 경제 - 대구·경북의 사회적 경제
	7월 7일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포괄) - 사회적 경제와 주거협동조합
	7월 21일	- 사회적 경제와 지역화폐 - 사회적 경제와 기금(펀드)
	8월 10일	- 사회적 경제와 시민단체(포괄) - 풀뿌리사람들(구체적)
	8월 31일	- 사회적 경제와 지역발전(CB) - 사회적 경제와 정부정책
	9월 22일	-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 -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
	10월 13일	- 충남형사회적 경제정책의 모색 - 충남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와 방안

<표 3> 사회적 경제 기획단 회의 개최 개요

개 최 일	논 의 내 용
2011.7.21	-정책기획단의 지위 -시군토론회, 대토론회, 5개년 육성계획 등 방향 논의
2011.7.26	-사회적 경제 시책 논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역할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2011.8.9	-예산확보 전략 -지원센터 확대개편 방안 -사회적 경제 후속세대 교육방안
2011.8.19	-2012년 사회적 경제 예산확보 -프로보노 활성화 -사회적 경제전략분야, 클러스터 시범지역사업
2011.9.1	-사회적 경제 기금형성 -사회적 경제 예산 조정방향 논의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제 2 장 이론적 고찰: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대상 설정

1. 사회적 경제의 근원과 대두배경

1) 사회적 경제의 근원

사회적 경제는 프랑스에서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문제점,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라는 학문 영역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사상은 다양한 사회개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전통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 시작을 보면 공상적 사회주의자, 결사체주의자(associationism): Saint Simon(1760-1825), Robert Owen(1771-1858년), Charles Fourier(1772-1837년) 등과 그 외에 J.S. Mill(1806-1873년), Leon Walras(1834-1910년), Frederich Raiffeisen(1818-1888년) 등의 사회개혁 사상가들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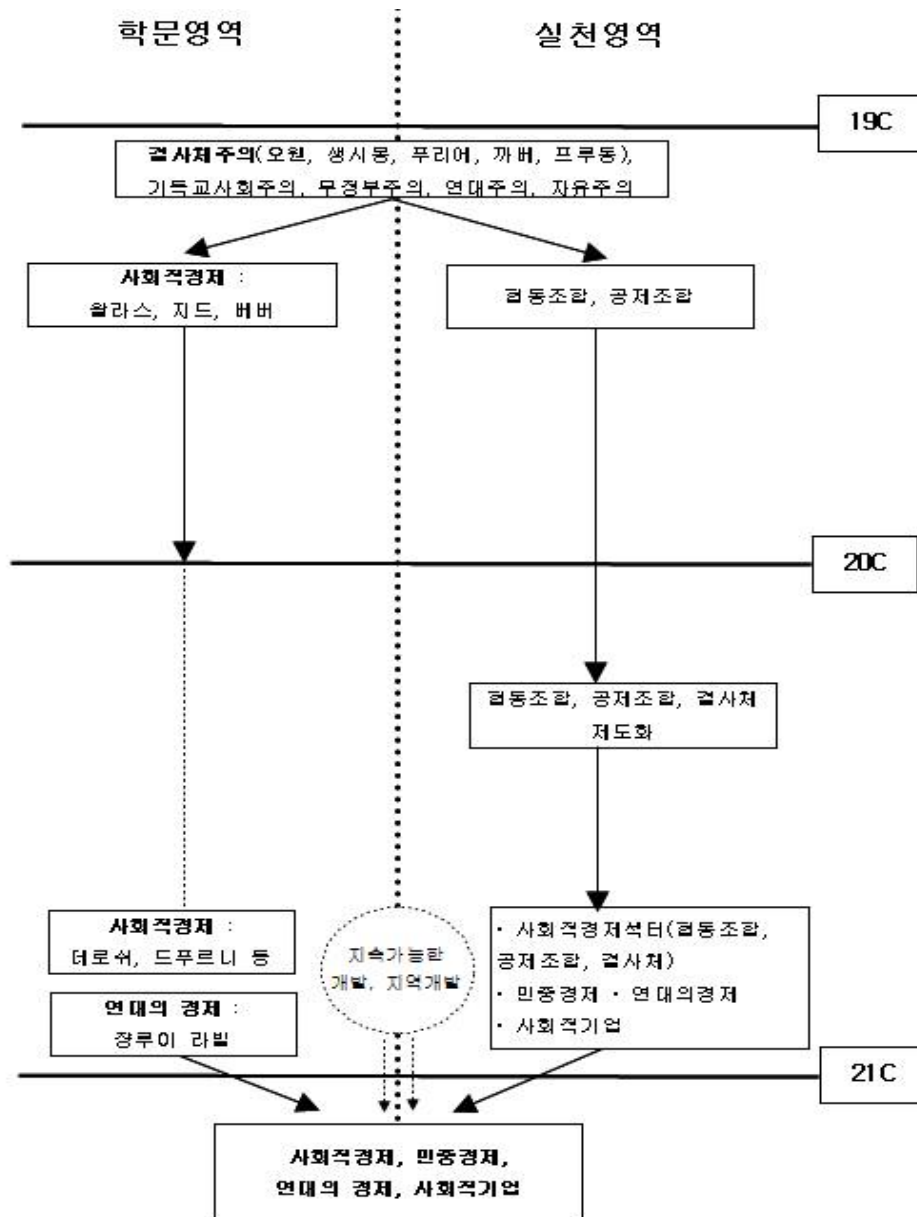
연대주의자(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샤로 지드(Charles Gide. 1848-1932)는 1900년 만국박람회에 '사회적 경제' 국제심사위원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에 심취하여 사회변혁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주창하였다. 그는 사회적 경제의 목적을 노동조건 개선, 주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 온갖 위기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적 자립의 보장 등을 들고 있다.

1901년 프랑스에서는 협동조합법의 성립으로 민간결사체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되었다. 그 후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제조합 등으로 조직화된다.

한편 20세기 초에는 시장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사상적 영역에서 침체·쇠퇴되었고, 실천의 영역에서도 큰 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전파 및 노동조합의 탄생으로 노동자 결사체의 이상을 가진 사회적 경제가 더 이상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실천방안이 되지 못하였다.

그 후 사회적 경제는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와 포디즘의 결합에 의한 노동계층의 생활안정화 등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이 대안경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부로 편입되게 된다. 이에, 사회적 경제는 이념과 실천의 측면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자본주의에 대

한 대안적 사상과 실천이라는 위치에서 자본주의 기업과는 다른 운영원칙을 가진 기업으로 존재하였다.



[그림 5] SE 역사적 개념의 변화

자료: 김신양(2011), “다른경제의 희망 : 사회적 경제, 연대의 경제, 민중경제” 발표 참고자료 p.45, 충남발전연구원 제1차 사회적경제 연구회 워크숍(2011. 3. 25) 인용.

2) 사회적 경제의 대두배경

사회적 경제는 이미 19세기에 등장한 개념이다. 당시 사회적 경제가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주류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온갖 위기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경제적 자립의 보장 등에서 찾을 수 있다(C. Gide, 1903).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주류경제학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진 것은 서구에서는 1990년대,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영역에서, 그리고 실천적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사회적 경제는 학문적 영역에서 출발하였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것은 실천적 영역에서 주류경제학의 한계와 대안을 고민한데서 비롯됐다.

유럽을 비롯한 서양의 경우, 시민사회에 대한 기반이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가 되어 왔을 뿐 아니라,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에 의한 사회적 경제의 실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김신양, 201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논의는 전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경제와 이념적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1960년대의 협동조합운동, 빈민운동, 자활공동체 활동, 1990년대 정부의 자활후견기관의 대한 지원사업, 2000년대의 자활지원사업(2000), 사회적 일자리사업 시행(2003), 사회서비스 공급확충 사업(2006), 사회적 기업에 관한 입법(2007)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노대명, 2007).

한편 사회적 경제는 실천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에 학술적 측면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개별 국가 및 사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개별 국가별로 상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Noya, A. & E. Clarence, 2007). 예컨대 미국은 시장 혹은 제3섹터의 보완적 개념으로, 스칸디나비아는 국가의 보완적 개념으로,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경제를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른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는 경제와 사회를 통합한 것으로 커뮤니티 경제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은 기존의 주류경제학에서 사

회가 함께 고려되지 못한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표 4> 국가별 사회적 경제의 인식과 목적

구 분	사회적 경제의 인식	사회적 경제의 목적
미 국	시장 및 제3섹터의 보완개념	경제와 사회의 통합을 통한 커뮤니티 경제발전
스칸디나비아 국가	국가의 보완개념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시민사회의 다양한 형태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대두배경을 특정 국가적 상황에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는 개별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된 배경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의 대두배경을 보다 일반화하고,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책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세기에 처음 대두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최근 새롭게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 기존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Weisbrod, 1998; James, 1987).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는 주로 비시장적 재화 및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사회적 수요는 있으나 영리단체나 정부에 의하여 생산·공급이 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를 대신 공급하고 전달하는 것에 주목을 하였다(Schneider et al., 2007; Loidl-Keil, 2002; 이기구,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원봉사 및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의 목적은 기존의 정부와 시장을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A. Amin, 2009).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9세기의 사회적 경제가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의 배경은 크게 전통적 대두배경과 현대적 대두배경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M. Mendell, 2005). 우선 전통적 대두배경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수요와 충족되는 수요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즉 시장과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적 재구조화와 변화, 완전고용의 종식,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빈곤한 사람들의 증가와 이들의 거대한 기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통적인 대두배경 이외에 최근에는 현대

적 대두배경에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사회적 경제가 사회역량의 제고, 경제적 삶과 정치적 삶을 통한 시민사회의 통합화, 그리고 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경제는 당초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불일치하는 수요의 제공, 새로운 사회 서비스의 제공, 새로운 시장과 영역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NPO의 자생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대두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기존 정부에 저항하던 NPO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고, 그 결과 NPO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NPO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그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되기도 하였다(도묘연외, 2010).

<표 5> 사회적 경제의 대두배경과 영역

구 분	19세기 초	1980년대 이전	2000년 이후
대 두 배 경	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 주류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개선 위기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적 자립의 보장	시장실패의 실패 보완 정부실패의 실패 보완	사회역량의 제고 시민사회의 통합화 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와 대안
영 역	실천영역	실천영역/학문영역	실천영역/학문영역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적 경제의 대두배경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추진되는 과정에 일정 정도 유사한 경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은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참여정부가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정책일 것이다. 2003년 당시 참여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혹은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대규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처음 사회적 경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집수리 사업, 무료 간병사업 등 복지분야 사업과 음식물, 폐자원 재활용 등 환경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 분야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라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커뮤니티비즈니스(지식경제

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진정한 사회적 경제인가 혹은 사회적 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최근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견해 중 사회적 경제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 사회적 경제를 시장이 방치한 특수한 영역으로 한정하려는 시도, 사회적 경제를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취업취약계층의 자활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 사회적 경제를 국가가 후퇴하는 영역의 대체방안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비수익형보다 수익형 사회적 경제를 선호하는 시도 등은 규범적 측면에서 잘못 접근된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Noya, A. & E. Clarence, 2007).

2.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L. Walras와 C. Gide에서 기인하지만, 지금까지 주류경제학이 학문적·사회적·경제적의 중심을 유지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학이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19세기 당시 L. Walras와 C. Gide가 제시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L. Walras는 경제학의 영역을 순수경제학, 응용경제학, 그리고 사회적 경제학으로 구분하였다(박홍립, 1992). 이중 사회적 경제학은 정의의 영역에서 정당성에 기초를 둔 부에 대한 자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순수경제학은 경제적 행위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을 규명하는 영역, 그리고 응용경제학은 유용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경제문제에 대해 자연법칙의 활용에 초점을 두는 영역이다. 한편 C. Gide(1903)는 사람들이 사회조직들의 형태, 성문법, 관습 혹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다른 체제 안에서 그들 스스로 성립하여 온 자발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사회적 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그는 순수경제학을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무생물의 관계에 초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장원봉, 2006).

일반적으로 경제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약적이기 때문에 모든 주체들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선택을 결정짓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그리고 호혜성(reciprocity)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는 선택의 문제에서 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아닌 호혜성에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김중수, 2009). 여기서 호혜란 모든 참여자들이 기꺼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자 할 때만 형성될 수 있는 집단과 개인들 사이의 재화와 서비스의 순환이다. 그러므로 호혜는 교환되는 상품보다 사회적 유대가 더 중요시되는 경제적 행위의 비계약적 원리이다. 호혜의 순환은 처음으로 선물을 받은 집단이나 사람들이 답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답례를 할 동기가 있지만, 답례를 하는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결정은 스스로의 것이다(아달베레르스, 장루이 라빌 편저, 2007). 이러한 호혜성의 원리에서 지역사회 내의 순환과 공생의 원칙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사상적(학문적) 영역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하여 실천영역인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최근에는 법과 정부정책에 기초한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19세기 초 생시몽 등이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을 고발한 이후, 전 세계적 규모의 시장 자본주의가 지난 200년간 인간과 자연과 사회를 어떻게 황폐케 했는가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데서 비롯됐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폴라니(K. Polani)의 논의를 들 수 있다. 폴라니는 인간(노동력), 자연(토지), 화폐까지 상품화(허구 상품)한 자기 조정적 시장경제(self-regulating market)를 맹신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비판하였다. 즉 사회에서 경제를 분리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경제는 사회에 배태(embeddedness)되어 있고, 사회의 실체는 인간들의 사회관계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폴라니는 사회적 경제가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라는 것이다.

한편, 1973년 오일쇼크 이후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20세기말 경의 사회적 경제는 사상적 영역에서도 부활하여 사회적 경제, 연대의 경제, 민중경제 등으로 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데로쉬, 드푸르니, 장루이 라빌 등이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에서 각기 다른 다양한 사상 속에 ‘사회적 경제’를 제시한다. 또한 남미에는 민중경제라는 이름으로, 프랑스는 연대경제의 이름으로, 캐나다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변주되어 온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확고하지 않고 모호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19세기 이후 다양한 이념과 실천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노대명, 2007). 즉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국가별·학자별 견해와 처해져 있는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유사용어로 제3섹터,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 연대의 경제, 그리고 자원활동부문 등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Noya, A. & E. Clarence,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한다면,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이익 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지역사회조직의 상업적 활동과 비상업적 활동을 의미한다(A. Amin, 2009).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소득 가구를 위한 유아방의 운영, 저소득층을 위해 재활용품을 공급 등은 전형적인 사회적 경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수익형 기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통해 기능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수익의 문제를 분리시켜서 보면 안된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 노동과 사회참여, 수익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보다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개념적 측면과 구성요소적 측면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는 사회와 경제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사회는 민주적 발전, 삶의 형평성, 잘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기여를 의미하는 것이고,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립적 경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제도적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M. Mendell, 2005).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립적 경제주체로써, 민주적 발전, 삶의 형평성, 잘사는 사회를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구성적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는 제도적, 경제적, 기능적, 그리고 구조적이라는 4가지 영역적 속성을 갖고 있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조직체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익창출을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혹은 공익을 추구한다. 끝으로 구조적 측면에서는 제3섹터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사회적 경제는 공식적, 비공공부문, 자기조절적, 이익배분의 금지, 자원봉사의 존재, 정치적 편향의 금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OECD LEED, 2007). 여기서 이익배분의 금지라는 원칙을 적용할 경우, 협동조합 방식의 집합적 이익추구는 사회

적 경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가진다.

<표 6> 학자별 사회적 경제의 정의

학 자	정 의
L. Walras	정당성에 기초를 둔 부에 대한 자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경제
C. Gide	온 자발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K. Polani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
A. Amin	경제적 이익 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지역사회조직의 상업적 활동과 비상업적 활동
J. Defourny	영리 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활동
Noya, A. & E . Clarence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의 영역
Mendell	민주적 발전, 삶의 형평성, 잘사는 사회 달성으로 목적으로 하는 활동
OECD LEED	수익창출을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혹은 공익 추구
장원봉, 김신양	재분배와 호혜성이라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메커니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대표적 학자 중의 한명인 J. Defourny(2001)는 사회적 경제를 규범적, 법규적, 비영리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우선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현실에서 보편적 가치 또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법규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고유한 법적 위상을 가진 세 조직, 즉 협동조합(cooperative), 공제조합(mutual), 시민단체(association)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는 영리 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더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활동 목적은 영리적 활동이 아니다.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이러한 견해는 국내의 일부 학자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소개하고 있는 국내의 일부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의 법적 조직 형태, 즉 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조직 등의 법적 지위에 기반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집단들에게 대부분의 지원과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 혹은 서비스로 목적을 국한하고 있으며, 운영원칙과 법칙의 측면에

서 개인들의 조직인 동시에 경제적 파트너십에 의해 활동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재분배와 호혜성이라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법적인 측면에서 지원법규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원봉, 2006; 김신양, 2011). 이는 앞서 살펴본 드푸르니(Defourny)의 의견에 바탕을 둔 것이고, 기본적으로 유럽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유럽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가 상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컨대 장원봉(2006)은 그의 저서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규정에서 조직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이지 않으며,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제외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사회적 목적에 우선시 한다면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비영리민간단체가 조직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다른 견해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를 2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 요소를 충족해야 사회적 경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M. Mendell, 2005; OECD LEED, 2007). 이러한 논의와 주장은 OECD의 포커스그룹을 통해 수년간 국제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된 것이라고 하겠다. OECD는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의 권한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 재정적 실효성이 결정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임금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참여자의 의사결정권이 자본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영향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명백히 추구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

구 분	구 성 요 소
경제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생산·판매 · 높은 수준의 자율성 · 참여와 탈퇴의 권한 확보 ·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 재정적 실효성 결정 · 또한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사회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결성 ·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 · 참여자의 의사결정권이 자본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영향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음. ·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음. · 지역사회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명백히 추구

자료: OECD LEED(2007)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양자의 견해, 즉 유럽적 관점과 OECD의 관점은 큰 차이가 가지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경제를 규정할 때, 이익배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다소 상이해지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제도로는 사회적 기업육성법(2007)과 생활협동조합법(1999)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기업육성법상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인증 조건을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와 정관 및 규약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정도 이상으로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사회적 기업육성법, 제8조). 한편 생활협동조합법상 생활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조직이다. 이러한 생활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정치관여에 대한 금지의 의무가 있고, 30인 이상의 조합원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조합원이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1인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의 이용측면에서 볼 때, 조합원이 아닌 경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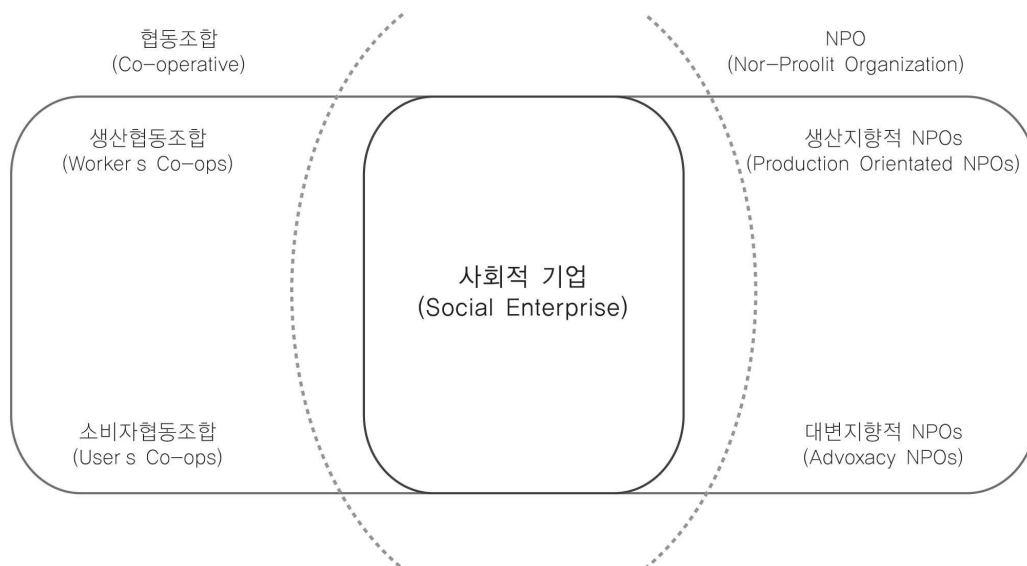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유럽과 OECD,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상 규정은 상당한 부분의 공통성을 갖는다. 즉 사회적 경제는 호혜성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하여 사회적 이익 혹은 공익을 우선시 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단위보다 지역에 배태된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지역의 공생과 순환에 기여하게 되고, 사회적 경제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¹⁾.

3. 사회적 경제의 주체

사회적 경제는 흔히 협동조합기업, 공제조합, 연합체의 성격을 가진 다양한 비영리조직 및 재단을 통해 공급된다(Noya, A. & E. Clarence, 2007). 과거에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주로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개방화로 인한 국가업무의 증대, 세계화로 인한 조세면책의 확대, 복지수혜자의 급증으로 국가의 재정적 위기로 국가 중심의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이 사회적 경제부문에서 관할 영역을 공유하는 혼합통치로 변화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의 주체는 국가, 기업, 시민결사체 등으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A. Amin, 2009).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전통적으로 협동조합(cooperatives), 공제조합(mutual societies), 시민사회, 그리고 NPOs 등을 통해 공급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공동체 이익 혹은 일반적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집합적

1) 실제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지역에 유용한 서비스를 공급한다든지, 지역의 생산물을 자재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생산 행위이면서 지역의 조직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사(collective enterprises)도 사회적 경제에 포함하기도 한다. 한편 캐나다 퀘벡의 경우 노동연대기금과 커뮤니티기업까지 포함한다. 노동연대기금의 목적은 직업창출,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M. Mendell, 2005).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 규모가 보다 큰 조직에서 작고 이질적인 조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사회적 경제가 협동조합, 공제조합, NPOs 등과 같이 큰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최근에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보다 이질적이고 작은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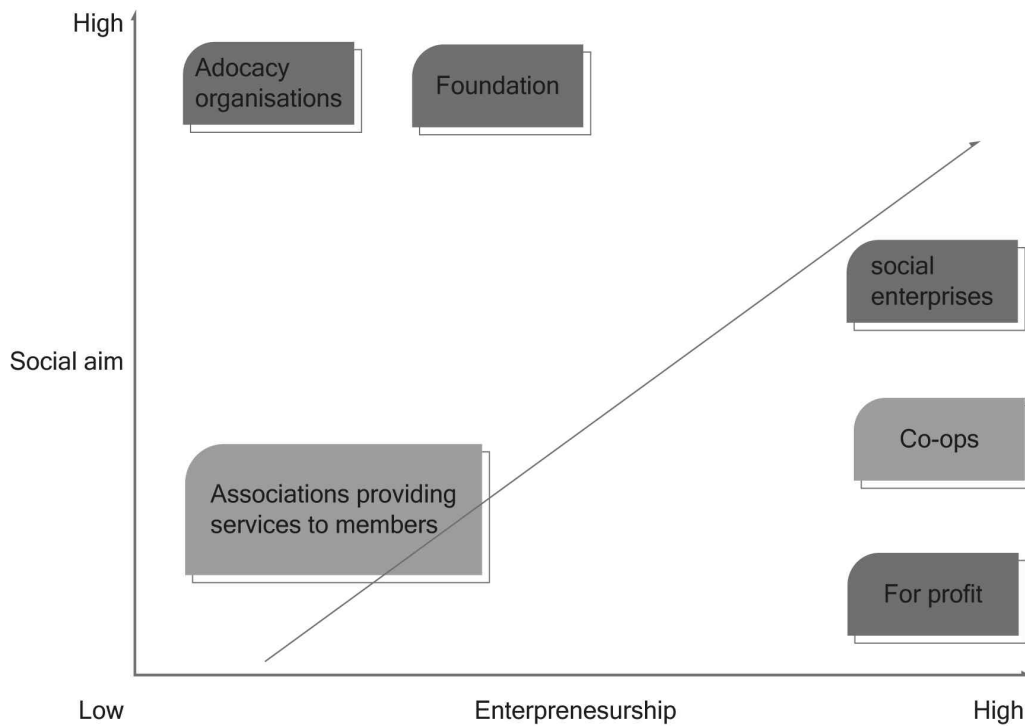
[그림 6] 사회적 경제의 주체

자료: Defourny(2001).

한편 사회적 경제의 개념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확정적이지 않고 기준이 일부 상이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OECD와 우리나라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반면, 유럽적 측면에서 볼 때, 재화와 서비스를 고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적 경제의 전제

조건 중의 하나인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의 우리나라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현실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활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생활협동조합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엄밀한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다는 측면을 갖고 있고, 아울러 생활협동조합의 수익을 사회적으로 상당부분을 실제 환원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상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어떤 단체가 실제 사회적 경제의 주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사회적 경제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생활협동조합은 무조건 사회적 경제의 주체이고, □□단체는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를 구분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외국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로 분류되는 조직과 단체가 사회적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에 맞는 재해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 이외에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지표 혹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지표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상이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적 경제에서 제외되지만, OECD의 관점에서 보면 이윤배분의 제한 원리의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오히려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의 주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기본적으로 영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갖는다(Noya, A. & E. Clarence, 2007).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주체는 회원과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 제공, 자기관리,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자본보다 사람 우선의 원칙, 그리고 참여,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무라는 운영원칙 하에서 활동되는 특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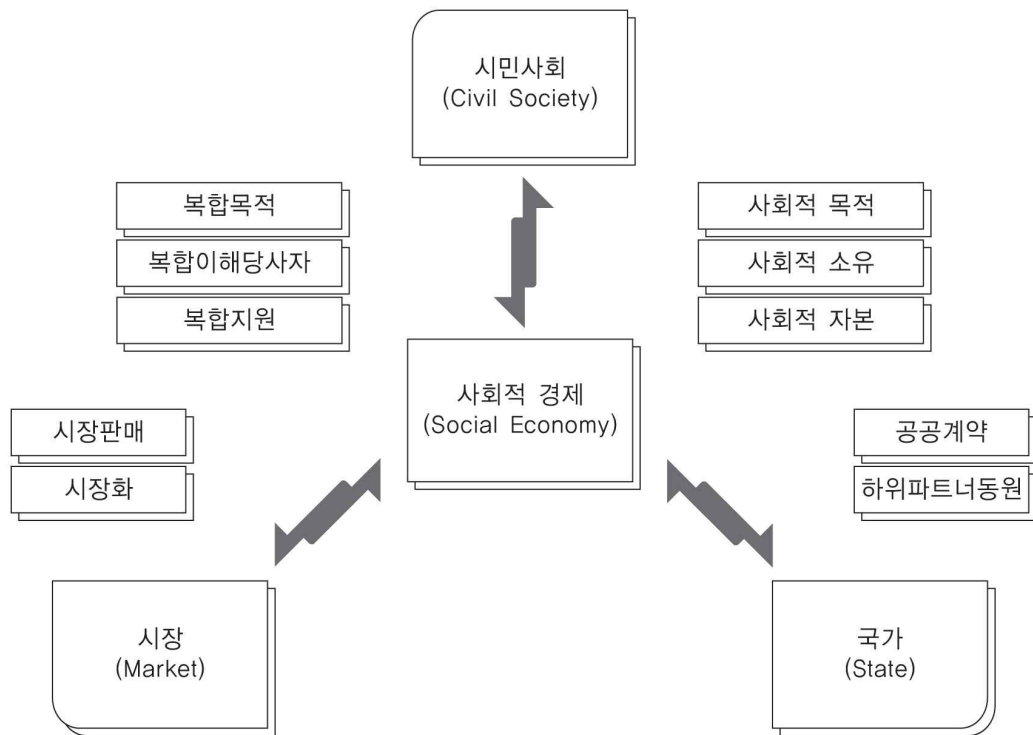
[그림 7] 사회적 경제 주체의 유형

자료: Noya, A. & E. Clarence(2007).

한편 사회적 경제 주체의 영역을 제1섹터, 제2섹터, 그리고 제3섹터의 영역적 측면에서 규정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제2섹터와 제3섹터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적 특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만,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2섹터와 제3섹터 모두를 포함하는 제1섹터의 일부 영역도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종합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위와 같은 원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시장과 국가로부터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위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하지만 역으로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시민사회가 시장에 의해서 시장화로 경도되거나, 정부의 하위파트너로 동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장원봉, 2008a: 32).



[그림 8]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매개체로서 사회적 경제

자료: Pestoff(1998).

제3섹터 또는 사회적 경제는 국가부문(제1섹터)과 시장부문(제2섹터)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은 영역, 즉 자율적이고 비영리적인 시민사회부문을 의미하는데, 관료주의에 기반한 국가부문 및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부문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사회경제 영역으로서 논의되어 왔다. 이렇게 실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은 개별 사회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는 형태로 기능과 역할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제2섹터와 제3섹터가 공존하는 지역, 즉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모두 갖춘 주체이어야 한다.

4. 사회적 경제의 기능과 발전가능성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발전의 조정역할을,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효용을 고려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게 할 뿐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창출한다. 다양한 주체와 그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고,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진하는 기여를 수행한다(Noya, A. & E. Clarence, 2007).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기능을 서비스 공급기능, 사회적 통합기능, 시민사회의 발전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OECD LEED, 2007).

우선 사회적 경제는 서비스 공급(service delivery) 기능을 수행한다. 즉 특별한 집단 혹은 개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비화폐적 자원에 제고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응집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기능을 수행한다. 한계집단의 노동력 통합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장기실업자, 장애인, 그리고 소수자와 같은 한계집단에 대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통해 임시 혹은 정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의 발전(civil society development) 기능을 수행한다. 즉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는 커뮤니티 범위에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는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3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M. Mendell, 2005). 이의 구체적인 이유는 지방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제도적 상황, 사회적 주체의 이동성 증대, 기업·조직들간의 협치, 그리고 공공정책의 지원 확대 등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와 지역발전의 연계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OECD에서는 LEED programme(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해 LEED Programme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OECD LEED,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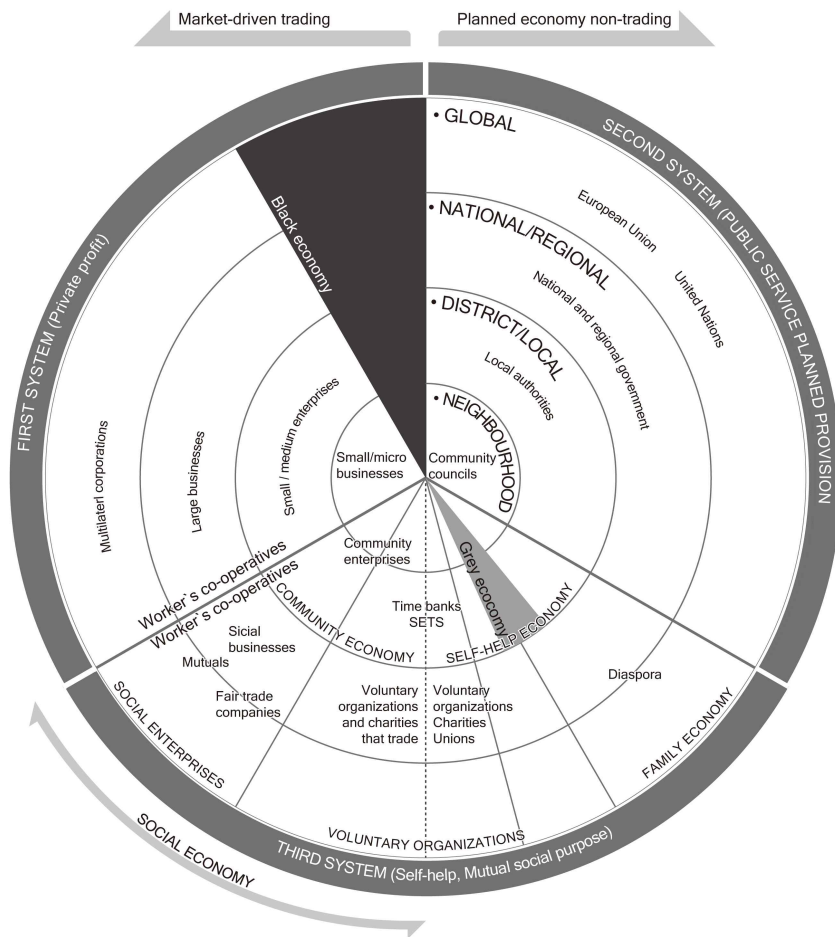
5. 사회적 경제의 영역

사회적 경제 영역은 제1체제의 이윤지향적인 민간상업시장 영역과 제2체제의 계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비상업적 계획경제 영역, 그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호혜와 자조의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제2체제의 영역중에서 시장지향적인 상업적 활동영역에 해당된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조직의 목적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에 속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데, 조직의 목적이 조합원의 배타적인 이윤의 극대화에 제한되어 있다면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합원의 지속적 고용과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조직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에 포함된다(Pearce, 2003; Brady, 2003).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조직들을 개념화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써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그림 9]와 같이 협동조합부문과 비영리부문의 교차점에서 양자의 성격을 융합하는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있다(장원봉, 2006에서 재인용).

우선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주요한 구성원이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소비자협동조합보다는 노동자협동조합과 좀 더 친화적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은 종종 전통적인 노동자협동조합보다 전체 지역사회 이익을 더 지향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융화하기도 한다. 한편 비영리조직들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친화력을 가진 부문은 대변조직들이나 보조금을 위한 재단보다는 생산지향적인 조직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은 비영리조직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협동조합이나 비영리조직의 법적 틀이 사회적 기업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벨기에 등에서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다(Defourny, 2001).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제3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도 아니며, 하나의 정형화된 조직적 모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경제, 제3부문, 제3체제, 비영리부문 등의 규정들이 가지는 개념상의 혼란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은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연구과정의 범위와 대상 설정에 혼란을 준다. 특히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정적인 조직형태 내지는 다른 시장부문이나 공공부문과는 대조되는 배타적인 영역으로서 제3의 부문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부문과 구별되며,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에 중심을 이룬다는 점

에서 국가제도에 근거한 공공부문과도 구별된다. 지역공동체의 경제활동부문으로 총칭되는 제3부문은 현실에서 시장부문과 국가부문으로부터 배타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영역은 아니다. 또한 미국적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들은 시장부문의 조직들과 어떠한 차별성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적인 전통에서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은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Evers & Laville, 2004).



[그림 9] 사회적 경제의 영역

자료: Pearce(2003).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전통적 사회적 경제(예, 협동조합)와 새로운 사회적 경제(예, 사회적 기업 등)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전통적 사회적 경제 조직은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 생산자 또는 노동자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처럼 단일 계층(혹은 단일 이해관계자)으로 이루어진 사회경제조직을 뜻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다중이해관계자 조직)은 -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조직으로서 구성원(조합원)에 대한 연대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는 최근 각국별로 법적 공식조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대협동조합, 비영리조직(NPO)을 들 수 있다.

<유럽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와 전통적 사회적 경제의 차이점과 공통점>

-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제조직일수록, 통상의 협동조합처럼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보다는 보다 넓은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또한 시장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벌인다는 것.
-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발표하면서 제7원칙으로 커뮤니티에 관여(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천명. 이로써 협동조합은 조합원만의 이익을 벗어나 넓은 의미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자림 매김. 실제로 생협을 비롯해 많은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목적 혹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조직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노대명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성, 정부의존정도, 영리추구 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4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를 현재의 조직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표 8> 한국 사회적 경제 분류(노대명)

성격 I	성격 II	유형 분류	세부 설명
국가 ▼ ▼ ○ ○	정부 의존 ▲ ○ ▼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노인생산공동체 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사회적 경제 ○ ○ ▲ ▲	자립지향 비영리 ▲ ○ ▼	공공지원형 사회적 기업 민간 지원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적 기업 대안금융기관 시민단체(서비스 공급형) 노동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농협/수협/산림조합
시장	영리		신협/새마을금고

자료 : 노대명(2007)에서 인용.

6.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대상

1) 사회적 경제의 관점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는 19세기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회개혁 이론(사상)에 뿌리를 두고, 20세기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다른 세계(화)의 모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국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 부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국가와 공존하거나 갈등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경제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관점(의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제3섹터로서 보는 것이며, 적극적 관점(의미)로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경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보는 관점은 연구자나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그 만큼 논란도 많으며,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순환과 공생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의 하나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고, 연구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경제가 갖는 본연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충남의 새로운 발전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사회적 경제를 보는 적극적 의미에서 출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충남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우선,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답을 찾고, 이것이 순환과 공생의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2)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가 사상적영역과 실천영역에서 동시에 전개와 변화되어 왔지만 실천영역에 발전과 변화에 비해 사상적 뒷받침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나로 개념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의 공통점에 착안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호혜성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하여 사회적 이익 혹은 공익을 우선시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며, 보다 연구성격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목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리’에 따라 호혜성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리’는 국가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관련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칙을 10가지로 정리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조직임원과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알아보았다.

결국,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조직의 유형이나 활동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사회적 목적)과 조직의 운영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개념과 현실적 개념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표 9>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리와 중요도

(단위 : 5점 만점)

운 영 원 리	전문가 중요도	조 직 임 원	
		중요도	준수정도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 판매한다.	3.90	3.98	3.82
경영에 있어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경영의 자율성)	4.20	4.13	3.78
정부 지원과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자립적 운영을 하고 있다.	4.25	3.91	3.72
최소 유급근로자와 함께 자원봉사자 등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4.03	3.97	3.65
시민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3.99	4.11	3.47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단체를 운영한다.	4.34	4.20	3.71
이윤창출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4.38	3.92	3.68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3.49	3.76	3.51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는다(이익의 사회환원).	3.90	3.83	3.50
수익배분에 있어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한다.	4.31	3.95	3.65

3) 사회적 경제의 대상(영역)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의 대상과 구분은 학자마다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선정이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되는 노대명의 분류를 참조하고,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유형A는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의 성격을, 유형B는 현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조직들을, 유형C는 유럽의 전통적 사회적 경제 대상인 생활협동조합과 미국의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체인 시민단체를, 유형D는 각종 금융관련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실제 이들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의 적합도를 의식조사 한 결과 금융을 중심으로 한 유형D를 제외하고는 절반 이상이 스스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대상선택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표 10>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경제 대상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적합도

구 분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적합도 (5점 만점)
유형A	장애인 보호작업장	19.2	39.4	37.5	3.8		3.74
	노인생산공동체	19.2	47.1	33.7			3.86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8.7	51.0	37.5	2.9		3.65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25.0	46.2	24.0	2.9	1.9	3.89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17.5	59.2	20.4	2.9		3.91
유형B	노동부 사회적 기업	50.0	38.5	10.6		1.0	4.37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39.4	37.5	21.2	1.9		4.14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38.8	36.9	22.3	1.9		4.13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26.2	38.8	31.1	3.9		3.87
유형C	소비생활협동조합	44.7	35.0	14.6	4.9	1.0	4.17
	시민단체(서비스공급형)	30.1	34.0	31.1	2.9	1.9	3.87
유형D	대안금융기관	30.1	35.0	30.1	3.9	1.0	3.89
	농 협	1.9	15.5	46.6	32.0	3.9	2.80
	수 협	1.0	11.8	45.1	38.2	3.9	2.68
	산림조합	1.0	8.8	56.9	32.4	1.0	2.76
	신 협	6.9	19.6	52.9	16.7	3.9	3.09
	새마을금고	1.0	17.6	49.0	26.5	5.9	2.81

제 3 장 국내외 선진사례

1. 국외

1) 프랑스

(1) 프랑스 사회적 경제의 개념

프랑스에서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전반 학문의 영역에서 최초로 그 개념이 등장한 이후 부문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학문의 영역에서 부활하고 있다. 1830년대 학문적 영역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여 19세기 후반에 왈라스(L. Walras) 및 지드(C. Gide)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20세기에 들어 사회적 경제는 제도화를 겪으며 일반자본주의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여겨졌다.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라빌(J.-L. Laville)과 사회과학반공리운동인 MAUSS 그룹에 의하여 ‘연대의 경제(économie solidaire)’로 재탄생하고 있다.

연대의 경제는 라빌이 90년대에 고안한 개념으로 현재 프랑스, 브라질 뿐 아니라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세계시민운동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광의의 의미에서 연대의 경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활동 전체’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Laville 2001). 연대의 경제는 대부분 결사체(association)의 지위를 가지나 상업회사의 지위를 가지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① 수요와 공급의 동시 구축 ② 시장자원(판매) 및 비시장자원(국가에 의한 재분배), 비화폐적 자원(호혜성의 원칙에 기반)을 혼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경제조직연합과 연대의경제조직네트워크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학계를 비롯한 공식적인 장에서는 이 두 흐름을 통합하는 ‘사회연대경제’로 명명되고 있다.

(2) 제도화 현황

□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및 부문 구축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한 법적 지위는 20세기 초 결사체에 대한 법의 제정으로 시작하여 공제조합회사 및 협동조합회사에 대한 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1년 결사체에 대한 법 제정, 1845년 공제조합회사에 대한 법 제정 후 1985년 개정, 1947년 협동조합일반법에 대한 법 제정 후 1992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재단의 경우 가장 늦게 1987년 7월 23일에 제정된 ‘메세나의 개발’에 대한 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70년대 초부터 연합조직을 구축하며 사회적 경제부문(sector)으로 인정되었다. 1970년에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이 연합한 후 1976년에 결사체까지 확장되면서 1980년에 ‘전국공제조합협동조합결사체위원회(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activités mutualistes, coopératives et associatives, CNLAMCA)’가 창설되어 프랑스 정부 및 국제기구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1977년 CNLAMCA는 이미 20만 명의 피고용을 둔 2천만명의 조합원(회원)을 포함하는 조직을 형성한 후 1980년에 ‘사회적 경제헌장’을 제정하였다.

사회적 경제 헌장(부분 발췌)

(CNLAMCA, 1980)

제 1 조

사회적 경제기업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상호 연대하고 평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5 조

사회적 경제기업은 특별한 배분방식 및 이익분배 제도를 가진다. 사업의 잉여는 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통제권을 가진 회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 7 조

사회적 경제기업은 궁극적 목적이 인간에 대한 봉사임을 천명한다.

1981년 사회당정부가 '사회적 경제대표부(Délégation à l'économie sociale)'를 두면서 사회적 경제는 프랑스 법의 규제대상이 되며 제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1986년 '경제사회위원회(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CEE)'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부문에 대한 인정을 강화하였다. 이 보고서에 사회적 경제기업은 자발성과 민주적운영, 비영리 라는 공통의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정의된다. 1989년 CEE는 국무위원회에 사회적 경제조직연합을 인정하는 관보를 발표하였으나 유럽차원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CMAF)연합'으로 표현한다. 결국 1991년 CNLAMCA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일반기업과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이 선언문은 '사회적 경제기업은 인간에 봉사하기 위한 연대의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창출된 이윤은 인간을 위한 봉사에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발표되었다.

□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현황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현황은 1995년 장떼(Thierry Jeantet)가 사회적 경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²⁾. 사회적 경제조직은 1,712,868명을 고용하는 수십 만개의 기업 및 그룹으로 구성되며, 회원 수는 약 300만명에 이른다. 이 중 결사체 수는 약 73만개에 이르며 단시간제를 포함, 약 1,230,000명의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자동차보험시장의 50%, 농식품시장의 30%, 소매시장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부문은 1994년에 GNP대비 2% 성장을 기록했으며 1995년의 경우 3% 증가하며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84년 ~ 1994년의 10년간 사회적 경제는 약 4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39%의 고용확대를 이룩하였다. 이 수치는 지속적인 고실업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90년대 중반부터 정책적 중요성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2) 이 보고서는 동년 L'économie sociale en action 이라는 제목으로 Editions CIEM에서 출판되었음.

<표 11>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1993)

구 분	회원수	이사회원수	조직수	피고용인수	규모*
노동자생산 협동조합	18,563		1,292	28,999	CA: 10.6
농업협동조합	1,300,000	60,000	4,000+ (농기구이용 협동조합 12,500)	93,000	CA:350 (자회함 400백만)
장인협동조합	113,500		950 (단위 및 그룹)	4,775	CA: 7.7백만
저임주택(HLM) 협동조합			160		38,500 공동소유주택
임업협동조합	18,000	1,200	150		CA: 8
운송협동조합			500	4,000	CA: 1.3
소비자협동조합	1,500,000		58광역연합	17,500	CA: 18
상인협동조합		444	37 네트워크	61200(가게), 4165(물류)	CA: 90(총회원), 34(협동조합)
신용대출 협동조합**	12,034,000			123,200	총액 2,472
보험공제조합	12,740,000		17	22,119	CA: 38.8
공제보험	5,000,000	160,000	25개 광역금고	12,500 (자회사포함)	CA: 31.4
농업사회 공제조합	4,700,000	120,000	85개 도단위금고	19,000	보장지출 139
건강공제조합 프랑스 공제조합연합 (FNMF)	25,000,000		6,400 6,000	55,400 50,000	보장: 36.7 조합회비: 43.87 조합회비: 40
결사체			730,000	1,230,000	자원봉사: 570 000명 예산: 234
총 계				1,712,858 (전일제기준)	

* CA: 총매출, 단위: 십억프랑

** 농업신용대출, 공제조합신용대출, 민중은행, 신용협동조합

(3) 최근의 정책 동향

97년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연립정부 수립 이후 사회적 경제는 1998년 ‘반소외법’의 도입과 더불어 주요한 정책적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당과 녹색당 간의 정책협약에 기초한 ‘새로운일자리-청년서비스’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면서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당시의 고용연대부는 ‘청년일자리(emplois-jeunes)’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는데 이는 제3섹터³⁾가 현재 시장과 국가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필요(환경, 근린서비스, 초등학생지원, 지역활성화 등)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3섹터는 지역사회, 지역사회 간, 그리고 지방 간 사회관계 재창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면서 주요한 사회통합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사회연대경제 담당 비서실’이 신설되었으며, 2001년 지방선거 이후 이 사안을 담당하는 300여명의 지방의원이 등장하였고, 2004년 광역지방선거 이후 15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역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에서 현재 사회연대경제는 실험단계를 벗어나 지역 단위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또한 강력한 사회적 경제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고, 2001년 ‘공동체이익협동조합(SCIC)’의 형태로 사회적 기업이 제도화되었다.

(4)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사례

□ 사회연대경제로 지역개발을 실현하는 북부의 노르빠드칼래(Nord Pas-de-Calais, NPDC)

NPDC지방은 프랑스에서 성공적인 사회투자 정책을 실현한 곳으로 중앙정부에 앞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개발정책을 실시하며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 지방은 일련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프랑스에서 높은 실업률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지방의회의 주도과 민간단체의 기여로 1996년 ‘지방고용노동포럼’을 운영하며 재도약을 이루고 있

3) 당시 프랑스에서 제3섹터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의 경제를 포괄하는 표현임

다. 이 지방의 의회는 매년 프랑스 통계청(INSEE) 지방사무소에 요청하여 지역의 사회연대 경제의 규모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이 지방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총 25,000개이며, 지역 시장의 14%를 점하고 있음. 총 고용규모는 219,000명이며 이는 공공 부문을 제외한 영리 부문 및 공익성을 가지는 민간부문의 11%를 차지한다.

포럼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업을 만들어냈으며 그 중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실업자'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단체와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혁신기금(FRIS)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이니셔티브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며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혁신'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과 차별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며, 프로젝트 선정의 핵심적인 기준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과 함께'라는 정신에 입각한다. 이 기금을 통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지역의 30여개 민간단체가 제안한 133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NPDC지방에서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서비스' 개발 정책이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된 이 사업은 근린서비스 개발로 지역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지방정부는 프로젝트를 독려하고 가속화할 뿐 아니라 지원받는 조직의 서비스공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06개 조직의 491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총 12,636,835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받은 조직에 대한 조사에 응답한 105개 조직은 지방의 재정 지원 이후 1,56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 중 2/3는 장기근로계약, 60%가 시간제, 70%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또한 NPDC지방은 2003년부터 '지방 사회연대경제 개발 계획(PRDESS)'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의회, 도의회, 예금공탁금고간의 협약으로 협약주체들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경제를 더욱 연대적인 경제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진다. 2005년 들어 PRDESS는 지방경제개발계획(SRDE)에 포함되어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의 한 구성주체로서 공인되었다.

(5)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정책

□ 연대금융 개발 및 지원

지자체들은 특정한 정책도구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정책도구를 사회연대경제에 개방하면서,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의 창업, 투자 그리고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음

노르빠드칼레의 경우, 연대적인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들로부터 예금을 모으는 '연대적 예금'의 대안적이고 지역적인 운영을 위한 투자자클럽(Cigales)과 '자치와 연대'라는 두 금융조직에 대하여 지자체가 이들의 활동이 잘 알려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관계의 땅(Terres de Liens)'도 중요한 성공사례이다. 전국적인 단체인 '관계의 땅'은 농업용지를 구입하기 위해 예금을 모으고, 농업생산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관계의 땅, www.terredeliens.org).

□ 사회연대경제활동 조직화 및 구조화를 위한 지원

그르노블(Grenoble)시의 경우 장인들의 협동 및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ARTIS의 설립 지원하고 있다. ARTIS는 4,000m²의 공간을 통해 장인기업들에게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목공예, 이삿짐서비스, 정보통신, 친환경 활동 (단열처리, 윤리소비, 재활용 자전거 등)이 있다. 이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서 지자체가 노동통합 조항을 적용시킨 덕분에 몇몇 고용취약계층 대상자들이 후원기업들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ARTIS는 공간의 공동관리에 참여하는 20여 기업들이 입주해있으며, 이 기업들은 노동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30여 명을 포함한 130명을 고용하고 있다. 공간의 운영은 입주회사의 유형에 따른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서, 경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맞추어진 임대료 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입주회사들은 공간의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민간단체를 결성하여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민간단체는 또한 여러 인프라를 공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2) 영국

(1) 영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과 현황

□ 사회적 경제의 등장-역사적 배경

영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등장배경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17세기부터 시작된 자선 및 박애주의 운동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소규모 공동체나 자원봉사조직으로 연결되고 있다. 둘째로는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사회운동과 캠페인이다. 이러한 연혁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단편적으로 성장한 임시적인 성격이 강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Aiken, 2006:).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사회운동과 캠페인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1844년에는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의 시발점인 로치데일 선구자(Rochdale Pioneers)는 첫 번째 상점을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였다.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부당한 가격을 좌지우지하던 당시 공장주들과 점포 소유자들에게 맞서기 위함이었다. 둘째로 1960년대 웨스트웨이 신탁(Westway Trust)은 노동자계층 지역사회의 중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다. 또한, 스코틀랜드 지역사회 기업 운동은 농촌 및 도시환경에서의 기회 부족에 대응하여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일부 노동자협동조합, 신용조합, 지역사회 상점(community shop), 개발신탁, 지역사회 비즈니스 운동, 노동통합(work integration) 사회적 기업 운동 등 새로운 '사회적 경제'운동이 시작되었다(Aiken, 2006).

□ 현황

정부는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무역산업부(DTI) 내에 사회적 기업국을 설치하여 지방정부의 협력체계하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규제 및 세제, 행정 체계 조율, 공공 서비스 중 상당부분이 사회적 기업에 의해 제공되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에서 이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협동조합유형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협동조합 유형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우(2005년 기준) 190,45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18,895,863명의 조합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609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제조합 및 유사형태의 경우 47,818개의 일자리와 330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기타 비영리 조직의 형태에서는 1,47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영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들

협동조합 및 유사 형태	공제조합 및 유사 형태	연합체 및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협동조합(2004년 기준) : 14,000개의 일자리 : 9,898,000명의 조합원 : 42개의 기업 - 상호보험조합(2004년 기준) : 12,938개의 일자리 - 농업협동조합(2000년 기준) : 12,600개의 일자리 : 583개의 기업 - 신용조합(2005년 기준) : 900개의 일자리 : 583개의 기업 - 노동조합(2005년 기준) : 1,340개의 일자리 : 397개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조합(2005년 기준) : 35,615개의 일자리(전일) : 12,203개의 일자리(파트타임) - 상호공제조합(1997년 기준) : 267개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연구 관련 조직(1995년 기준) : 587,000개의 일자리 - 문화 관련 조직(1995년 기준) : 347,000개의 일자리 - 사회 서비스 관련 조직(1995년 기준) : 185,000개의 일자리 - 개발 및 주택 관련 조직(1995년 기준) : 108,000개의 일자리 - 기타 관련 조직(1995년 기준) : 247,000개의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458개의 일자리 - 18,895,863명의 조합원 - 609개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818개의 일자리 - 330개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73,000개의 일자리

자료: Spear, 2006; Performance Report of Cooperatives Europe, 2005; Eurocoop, 2005.

Johns Hopkins Study, 1995.

(2)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영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뉴딜 프로그램(New Deal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는 영국의 고용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work fare)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보장 급여 수준을 조건으로 노동시장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프로그램에 주로 의존한다. 그 프로그램들은 실업수당의 지급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 직업상담, 직업 훈련, 고용 보조금, 창업지원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노대명 외, 2002).

다음으로 지역사회이익회사법(CIC)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영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유형의 회사법으로써 지역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ies)법을 제정하였다. CIC법은 민간영리적인 목적이나 혹은 자선단체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상대적인 자유로움 속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조직들에게 유용하게 적용된다. CIC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IC는 사적인 자산·영업 양도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회사의 이윤과 자산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또한 일부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발행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자선단체와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자선기관과는 달리 많은 의무에서 자유롭다. 지역공동체 이익회사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완화되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구성이나 민주적 지배형태의 실행 여부가 자유로워 자선단체보다 더 유연한 관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3) 영국의 사회적 경제의 사례

□ 동부 식품공급 협동조합

동부 식품공급 협동조합(EAFL: East Anglia Food Link)은 영국 동부지역의 6개 지역⁴⁾ 전역에서 식품 경제를 기반으로 공동체들의 발전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연계를 도모함

4) 영국 동부 6개 지역은 베트포트셔(Bedfordshire), 케임브리지셔(Cambridgeshire), 에섹스(Essex), 허트포드셔(Hertfordshire), 노퍽(Norfolk), 서퍽(Suffolk) 등이다.

으로써 지역 식품 경제의 생산과 시장의 다각화를 촉진하여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식품은 단순히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며, 농부에서 소비자까지의 식품공급 연계(food supply chains)에 있는 참여자들의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로써 경제·사회·환경에서부터 건강·교육·문화에 이르는 많은 문제들에 널리 걸쳐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AFI는 지역의 친환경적인 식품 연계의 모든 부분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EAFI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좀 더 호의적인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 사안과 관련된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생산과 시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 New Cross Gate NDC

영국 런던 루이섬(Lewisham)구의 'New Cross Gate NDC'는 런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은 루이섬 구의 New Cross Gate 지역의 재생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 및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다. 영국 블레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 지역에서도 10년이라는 기간 설정 하에 약 4,500만 파운드(약 100억원)가 투입되어 지역개발과 참여, 방법, 교육, 고용 및 기업, 건강·스포츠, 주택·환경의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NDC도 지역사회의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 간 연대 및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의 구축을 요청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지역사회 개발 및 재생을 추진하는 NDC는 공적 주체에 의해 영위되어 왔던 공적 서비스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적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주체들 주로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 설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및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업보다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영국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메카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 간의 멀티 파트너십에 입각한 제도화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 발전이라는 공통 과제를 가진 정부,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 지자체, 지역 내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경제조직들간의 강력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제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특정 행정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의해서 배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과제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중층적 주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의해 발전되어 가고 있다.

영국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단순한 직접적인 자원의 투자 및 지원 방식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역량을 발산할 수 있고, 개선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원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직접적인 지원방식보다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측면지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해당 과제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보다 유효하고 미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계량화해 낼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이 지표들을 통해 시장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스웨덴

(1) 스웨덴 사회적 경제 개념과 현황

□ 개념-역사적 배경

스웨덴에서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중운동에서 그 출발을 찾을 수 있다. 스웨덴 대중운동은 20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운동, 소비자협동조합, 스포츠, 레저, 문화, 성인교육, 주택조합 등에서 발달해 왔다. 특히 주택협동조합과 임차인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운영과 가격 협상력 등을 기반으로 서민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 개념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 영역, 즉 대중운동으로서 시민권을 강조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역할과 보편적 복지국가 역할의 변화에 따른 시민 참여형 복지주체로서의 역할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현황

90년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독점적 공공부문이 약화되고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되면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공급하는 역할을 사회적 경제가 수행하게 된다. (Welfare mix)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90%이상으로 여전히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로 보육, 요양, 주택설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는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보호협동조합(Cooperative childcare)이 대표적인 예로 현재는 2,000개 이상의 유치원이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며 전국 아동 보호서비스의 1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이 활성화 되었는데 의료보호, 사회원조, 거주시설 보호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는 민간으로 이양된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나 감독기능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스웨덴의 사회 서비스의 보편주의

성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스웨덴 서비스 관련 정부 지출 변동 추이 (1980 - 2001)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평균
서비스	13.49	12.67	12.73	13.99	13.18	13.58	13.27
사회서비스	5.09	4.84	5.19	6.87	5.82	5.93	5.62
노인서비스	1.23	1.28	1.53	2.29	2.47	2.49	1.88
장애인 서비스	0.47	0.45	0.44	1.36	1.31	1.4	0.91
가족 서비스	2.23	2.37	2.36	1.77	1.16	1.17	1.84

자료: 임혁백 외,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p. 82.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집단들은 기존의 협동조합들, 대중운동과 비영리 조직, 사회적 복지서비스 영역의 협동조합, 재단 등을 포괄하며 이러한 조직들은 92년 기준 전국적으로 20만개 이상으로 2000년에는 스웨덴 성인 인구 중 9/10가량이 한 개 이상의 제3부문 조직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2)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스웨덴은 국가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집단들을 키우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서비스 법을 들 수 있다. 이는 1998년 개정된 법으로 스웨덴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기초로 고용 보증활동, 직장체험 프로그램, 구제 사업, 공공고용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업자들에 맞는 근로와 고용지원을 통해 정규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돕는 적극적 노동정책의 일환이다. 운영주체는 지자체이며 근로능력 있는 사회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증활동은 직업센터 감독관이 참여자의 직업 계획을 작성, 고용보조금 받는 기업에서 참여자들이 노동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정규노동 외 비영리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경험을 쌓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제사업은 주로 장기실업자들에게 일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공공고용보호 프로그램은 사회병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재할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대명 외, 2002 :195-198)

둘째, 스웨덴에서는 정책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배제 층인 회원들의 경제적 이해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스웨덴은 위 사회서비스 법의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직업훈련과 보조금 지원고용의 공공지출 비용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서비스 판매 대가를 지불받거나 고용자 임금을 지원받으며 지자체의 고용정책과 공조하는 거버넌스 파트너로 활동한다. 일부 인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충당된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배제층의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유형과 두 번째는 사회복지 협동조합으로 회원 개인의 문화 취미 활동 등을 통한 재할에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 세 번째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회원들의 노동과 고용이라는 비즈니스 목표를 가지고 수익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협동조합 발전센터를 들 수 있다. 스웨덴 모델 동요기에 지방정부와 협동조합, 노동조합 공동으로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전국 단위의 각 부문 대표로 구성된 협동조합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것이 지역협동조합 발전센터(LKU, local co-operative development centre)의 설립 배경이 되었다. LKU의 역할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 조언활동, 기업형태에 대한 교육 등 협동조합 발전을 돕는 지역조직으로 요양, 보육, 교육, 장애인 개인서비스 영역에서 수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나는데 기여했다. LKU의 초기 자금은 50%는 정부보조, 나머지는 협동조합 측에서 부담하였고, 1986년 최초로 조직되어 현재는 스웨덴 전역에 26개 이상의 조직들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연합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재정구조는 수입의 75%가 서비스 이용료, 프로젝트를 통한 조달이다.

(3) 스웨덴 사회적 경제 사례

스웨덴의 사회적 경제 사례로 스톡홀름 시(市)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2001년 스톡홀름 시 행정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촉진을 위한 법안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내용으로는 노인요양서비스 발전의 필요에 따라 소규모 그룹의 제3섹터 조직들의 여성 기업가들에 유용한 행

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스톡홀름 시에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시장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회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우수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선정하는 ‘올해의 품질상’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스톡홀름의 사회적 경제 장려 계획은 2002년 유럽사회기금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러한 스톡홀름 프로젝트는 이주민 노인요양협동조합 설립을 증진하고 외국인 여성 대상 교육을 촉진하며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기본 구조를 제공한다.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스웨덴의 시민사회 영역은 정부에 대한 의존이 낮고 자원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발전한 노동조합과 주택조합, 임차인조합 등은 어떤 공공정책보다도 강력하게 사회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오랜 조직들이다. 이러한 기존 조직들 외에 앞서 설명한 복지혼합의 상황에서 등장한 최근의 사회적 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은 여전히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향력은 미약한 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와 사회 지출을 갖고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기능하게 된 것을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급박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웨덴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 내용은 지역협동조합 발전센터 LKU를 들 수 있겠다. 현재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충남의 상황에서도 이같은 개별 조직들에 대해 정보 제공,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의 역할과 신규 조직을 발굴, 인큐베이팅 할 지역의 LKU와 같은 형태의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간지원 조직을 고민한다면 홍성의 마을활력소와 같이 그 필요가 공유되고 이에 대한 민관의 합의가 이루어진 지자체부터 설치, 운영되는 방식이 좋다고 여겨진다. 또한 민에서 혹은 관에서 각각 설치되기 보다는 민관거버넌스의 형태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천의 조례제정으로 추진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톡홀름 시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그 내용을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양적인 조직 확대 보다는 설립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 지표들을 개발해냄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인정을 끌어내고 내용적인 측면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장려 지원시책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이러한 계기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이탈리아

(1)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게 된 이유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위기와 한계가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공공지출의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복지 체계는 70년대 이후 특히 증가했고, 90년대 들어 겨우 유럽연합의 평균치에 도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체계는 자금 이전에 관한 것이었고 사회서비스의 공급은 광범위하게 제공되지 못하여서 사회적인 복지 공급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복지모델의 실패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부양을 제공하는 가족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동시에 고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정보장애, 홈리스, 약물남용, 장기실업 등과 연관된 새로운 복지수요의 긴급사태가 확대되었다.

거대한 공공부분의 복지국가체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다수의 자발적 조직 등의 제3섹터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공공행정과 일반적인 기업보다 비영리조직들의 이로움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켰다. 사회적 협동조합운동의 발전도 이러한 제3섹터의 진전의 일반적인 경향 중 하나였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운동 내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들의 복원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한 능력과 사회복지체제의 약화된 영향력을 지속시켰던 정당체제와의 밀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게 되었다. 각각의 지방적인 배경에 제약되면서도 이런

조직은 ‘신빈곤층’ 다시 말해 가족문제를 포함하는 10대들, 고령자, 신체장애자, 홈리스, 약물남용자, 이민자 등과 관계를 가졌다.

(2)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현황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현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신뢰, 사회적자본, 민주주의, 복지서비스생산과 제공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진화된 모델로 평가된다.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970년대 말에 등장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1991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는 2000개 이하였다. 1997년 말쯤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4500개로 추정되어진다. 그 중 적어도 3500개가 활동 중이다.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체 협동조합운동의 4%, 전체 협동조합 고용의 10%를 대표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70%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불이익자를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통합 활동에 종사하는 B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30%이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동안에 협동조합과 이용자, 노동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통계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에 의해 실행된 2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2001년에 5,515개, 2003년에 6,159개, 2005년에 7,363개 규모에 도달했다. 2005년에 A-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3,300,000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44,233명의 임금 노동자가 직원으로 고용되었고, 거의 34,000명의 자원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31,000명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탈리아에는 2005년 기준으로 국민 100,00명 당 12.5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북부지역에서는 15.2개 수준이고, 남부지역은 12개 가량이다(Borzaga, 2007).

(3)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사회적협동조합 법의 제정과 재무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 법을 통해 법적지위를 마련해주고, 생

겨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무시스템을 마련하고 민간자금을 동원해 주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 살펴보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1970년대 말에 설립되었는데, 자치조직과 더불어 그들은 현대 이탈리아 제3섹터의 혁신적인 법률적, 조직적 형태중의 하나였다. 우선 협동조합은 그들의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된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유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연합체에 있어서 그들의 상대자들보다도 그들의 활동을 덜 위협하게 만들었다. 협동조합은 연합체보다도 협동조합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1인 1투표제' 원칙에 따라 그들의 사회운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1991년 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법은 지역사회 전체 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활동하며 노동자, 소비자, 지자체를 포함하는 법인들, 그리고 구성원의 최대 50%까지만 허용된 자원봉사자 구성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인 조직형태로 규정하였다. 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두 개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하나는 사회, 보건 및 교육 서비스들을 전달하는 협동조합들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하기 힘든 노동자들 혹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다. 후자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적어도 30%의 노동력이 취약계층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장원봉, 2006; 17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규정

- 제1조(정의)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A)사회,보건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의 운영, (B)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노동참여를 목적으로 한 농업, 공업, 상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며 인간적 향상을 시도하는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해서는 본 법과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로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동하는 분야에 관련된 협동조합이 규정이 적용된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형태이어도 조합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사용해야 한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규정의 구성 내용

제1조(정의), 제2조(자원봉사 조합원), 제3조(의무 및 금지), 제4조(불합리한 입장의 사람들), 제5조(위탁계약), 제6조(1947년 12월 14일 임시국가원수 입법령 제1577호의 수정), 제7조(세제), 제8조(연합회), 제9조(주의 규정), 제10조(지연 및 지도의 전문적 업무관계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제11조(법인의 참가), 제12조(경과조치)

사회적 협동조합의 재무시스템을 보면, 법 381의 조항에 따라 많은 재무장치가 정의되어 있다. 해당 법은 A와 B타입 협동조합 모두 서비스제공이나 노동 통합 활동과 관련 공공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약조달 법을 달리 해석하면 공공단체도 사회적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고 규정된 경제활동을 맡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은 공공단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명이 유사함을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상호간의 협동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법규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초기 빠른 성장을 도왔다. 최근에는 행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 선정에서 입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른 민간 또는 영리 기업과 경쟁하게 하고 있다.

다수의 지역 또는 자치주에서 비영리 조직의 재무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비영리 조직의 설립뿐 아니라 그 활동 관련 구체적 프로세스나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 예로 활동, 빌딩,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투자까지 정의하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주의 경험을 흔히 최고로 치는데, 트렌토주는 B 타입 사회적 기업의 열외 노동자 통합 경로를 지원하는 Azione 9라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 법은 해당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분담액을 전부 면제해 주었고, 또한 강사의 인건비까지 지원해 준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은행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은행(협동조합 은행 또는 윤리은행(ethic bank))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고, 대규모 금융재단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기업이 제출한, 특정 활동, 관련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대주고 있다. 영리 조직이나 공공 조직과 달리,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장, 비시장 및 비재정(non-monetary) 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수익 원천을 사용하게 된다. Emes Research Network에서 최근 유럽 전역에서 실시한 Perse 프로젝트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주로 노동 통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재무 및 비재정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소스를 동원한다고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로 계약과 기부 모두를 통해 모아지는 공적 재정 자원에 의존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과 민간기업 모두에 재화와 용역을 판매해서 민간시장에서도 자원을 모집하려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캐나다 퀘백

(1) 캐나다 퀘백 지역의 사회적 경제 개념

□ 캐나다 퀘백 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

퀘백지역의 사회적 경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발전은 1996년 퀘백의 주지사, Lucein Bouchard가 '퀘백의 경제, 사회 미래에 관한 정상회담 (Summit on the Economic and Social Future of Quebec)'에 지역사회 단체와 사회 운동가들을 초청하면서 부터이다. 'Chantier de l'économie(상티에)'는 여기에 초청된 세 특별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Bouchard 주정부(1996~2001)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와 실업적 위기를 해결할 전략을 제안하였다. '콩세르타시옹 (concertation, 협동을 의미<프랑스, 정치용어>)'이란 단어는 퀘백의 주요 3섹터인 기업, 정부, 노조의 삼자 협의 및 대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퀘백의 정치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 퀘백 연대협동조합 발전요인

먼저 지역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었다. 지역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는 조직활동이 증가하나, 기존 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 중심의 소유형태가 강조되어 지역개발 조직들이 비영리 조직이란 법적형태에 한정되어지자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Girard, 2004).

둘째, 시골마을의 소멸 또는 근린서비스 시설의 폐업이 나타났다. 도시화의 여파로 시골 청년들은 도시로 나갔고 인구가 감소하자 많은 마을에서 우체국, 주유소, 식료품점 같은 근린 서비스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근린 서비스의 실종은 많은 시골 지역사회에게는 곧 생존의 위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민간과 공공 조직을 결속시켜보려는 아이디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연대협동조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셋째, 보육시설 등 탁아서비스의 발전이 있었다. 지난 10여 년 간 노동시장에서 여성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육 서비스 발전에도 그 어느 때보다 압박이 가해졌다.

넷째, 노동통합의 문제가 있다. 1993년 퀘벡의 실질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의 22.8 %에 달했으며 인구수로는 873,000명에 달했다(Fortin, 1993). 게다가 1994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총 수혜자 수는 80만 명이었으며 이는 퀘벡 총인구의 총 10%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협동조합과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태동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프로젝트들이 개개인들에게 대략 6개월 정도 고용기간을 두고 전습기간을 준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갖추어진 다양한 이익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위한 홈서비스가 대두되었다. “다른 서구사회의 사례에 따르면 퀘벡도 분명 현저한 고령화에 직면할 것이다. 연로하여 자신의 자율성을 상실해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 물리적 한계가 걱정되는 공적 환경을 보장하는 데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든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노인들을 집에 머물도록 독려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사회 보건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기본적으로 일할 수 없고 가사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Girard, 2004).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존의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을 혼합한 새로운 조직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비영리조직의 법적 형태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협동조합의 단일조합원 구성과는 달랐다. 한편 소비자협동조합이나 노동자협동조합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서비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이용자 또는 노동자 가운데 누군가는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비영리 조직과 협동조합 사이에서 이처럼 불공정한 선택을 피하고자 CCQ 대표자들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관점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정부에 협동조합 모델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과제가 수행되었다.

(2) 캐나다 퀘벡 지역의 사회적 경제 현황

퀘벡 협동조합기업과 공제보험을 위한 ‘퀘벡 협동조합과 공제협의회’(le Conseil quebecois de la cooperation et de la mutualite CQCM)⁵⁾의 웹 포털사이트에서는 협동조합

5) 퀘벡 협동조합과 공제위원회(Quebec Cooperative and Mutual Council)는 협동조합들과 공제조직들의 보호막이자 공개토론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직은 1939년에 법인단체가 되었다. 2006년에 이르기까지 Conseil de la cooperation du Quebec (CCQ)라고 알려져 있다.

www.coopquebec.coop/site.asp?page=element&nIDElement=2282.

에 관한 당시의 인상적인 자료들을 잘 보여준다. 총 32,000개 협동조합과 39개의 공제조직이 있고, 850만 명에 달하는 개인 및 기업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87,000개의 일자리 중 60% 이상을 도심 외곽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미화 2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1997년 6월 연대협동조합이 합법화되자 곧이어 두 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그 후 1997년 6월~12월에 21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이들 초기 23개 연대협동조합 그룹 가운데 11개는 과거 다른 협동조합 범주의 형태로 존립하던 단체로 이들 조직은 연대협동조합이 되기 위하여 법적 요건 변경신청을 냈다(Chagnon, 2008). 설립된 연대협동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7년 7월 31일에는 최고점에 도달하여 479개에 이르렀다. 연대협동조합은 퀘벡 전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주로 준도시지역이나 시골마을에 밀집되어 있다.

<표 14> 연차 보고서에 따른 연대협동조합 자료

(단위, 미화 1000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조합수(개)	89	97	114	130	145
자산총액	23,492	27,654	30,215	44,412	50,522
재산총액	10,577	12,242	12,763	15,464	16,080
매출총액	32,765	41,464	46,760	52,929	56,604
잉여금	1,462	658	400	307	-220
조합원수(명)	23,526	28,942	36,791	43,751	50,371
고용인원(명)	1,877	2,193	2,020	2,209	2,124

자료: 통계자료(2007), Direction des cooperatives, MDEIE

(3) 캐나다 퀘벡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정책

캐나다 퀘벡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998년 설립된 노동자 연대 펀드(Workers Solidarity Fund)이다. 이 기관은 퀘벡 노동자 연맹(Quebec Federation of Labour)의 회원과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연금 펀드이다. Fonds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갖고 퀘벡의 경제 발전에서의 노동운동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83년 Fonds의 설립은 지방/연방 정부의 입법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투자자(subscriber)를 모집하기 위한 일반적 범위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마련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 연대 펀드의 금융성과에 집중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운동이 경제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상티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1996년 사회경제 정상회의에서 Bouchard 정부는 민간섹터와 시민사회에게 각각 퀘벡경제 재활성화 전략을 요구하였다. 2년간 20,000개의 일자리 창출 요구를 받은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는 그 이상의 일을 했다. 1996년 상티에의 초기 작업은 그 정책 수단에 반영되었다. 주간보호, 재가간병, 환경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떠오르는 부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며, 노동시장 훈련과 비즈니스 개발 등을 위한 펀드가 생겼다. 퀘벡 정부는 Ré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ébec (RISQ)와 같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출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투자 펀드를 만들어 민간섹터의 기여를 극대화 시켰다. 1996년 정상회의에서 상티에에 주어졌던 2년간의 의무는 광범위하였으며,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티에 스스로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티에가 대안적 경제개발 전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 활동을 하는 다양한 섹터에서 공동소유식(collective ownership)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상티에는 회원들을 대표해서 정부와 협상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으로 변화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가 부처 간 이기주의 없이, 수평적 정책 환경에서 진행 되도록 내각 상임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of Cabinet)에서 맡아 초기 작업을 진행한 것은 사회적 경제의 발달과 정치적 역량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후 2001년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special office for the social economy)가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에 설립되어, 사회적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수평적 정치 체계로 자리 잡았다. 2003년 정부가 바뀌면서 사회적 경제가 경제개발혁신통상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and Trade; MDEIE)로 이관되면서 많은 난관을 겪었다. 결국 주지사는 사회적 경제를 수평적이고 부처 간을 넘나드는 곳에서 관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부(Ministry of Municipal and Regional Affairs)로 옮겨졌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상티에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을 통해 상티에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를 만들어 냈다. 상티에는 금융,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체 부서와 협력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개발 조직과 운동, 그리고 각종 산업부문을 한 데 뒤섞은 독특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이중 연구협력은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상티에는 대학과 연계한 혁신적인 연구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 정책으로 연대금융을 볼 수 있다. 2007년에 상티에는 'Fiducie du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FCES)'를 출범하여, 5,380만 달러의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 또는 유사 주식 기금을 통해 집합적 기업이 장기 계획에 착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빛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새로운 금융상품은 무담보 회사채의 형식이며, 15년의 대출 기간 후에 상환하도록 한다. 이는 상티에와 퀘벡의 사회적 경제의 성과 중 하나로, 다른 부문(actor)과 파트너십으로 개혁하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의 강점의 또 하나의 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인 초기에, 연방정부로부터 기초 자금을 받았고, 이는 추가적인 펀드를 끌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 Fiducie는 혁신적이고 중요한 재정 중간지원기관이다. 초기 연방정부 보조금에 더해, Fiducie의 자본화는 두 개의 노동 연대 펀드에 의한 상당한 투자를 포함한다[예, Fonds de solidarité (\$12 million), FondAction (\$8 million), 퀘벡정부 (\$10 million)]. 짧은 기간 동안에 Fiducie는 6,200만 달러를 19개 프로젝트에 투자하였으며(2008년 9월 기준), 많은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Fiducie는 2차 금융시장의 생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연대 금융 교환을 생각하고 있다.

Fiducie의 역할은 투자 자본 풀을 형성하는 2차 시장을 조성하거나, 기업의 장기 자본 수요에 대응하는 두 가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상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세부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일에 더해 사회적 기업의 지도를 그리는 일뿐 만 아니라, Fiducie의 잠재고객을 찾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예측자료 제작을 함께 진행하였다. Fiducie는 두 개의 하부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잠재적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잠재적 투자처를 찾는 것이다. 이 예측자료(observatory)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프로파일을 포함한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사 시에는 지역사회와 욕구 그리고 잠재성

과 밀착한 퀘벡 전역의 지역개발센터(CLDs)와 함께 작업한다. RISQ를 포함한 퀘벡에 존재하는 많은 연대 금융기관이 1997년 상티에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들은 모두 7억5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해 왔다. 이들 기관은 최근 그들의 역량을 늘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효율적 자금흐름을 위해, 퀘벡의 금융섹터에서 그들의 프로파일을 늘리기 위해, 연대금융섹터를 연합하고 생성할 필요를 견지해왔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퀘벡에서는 연구네트워크가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퀘벡에서 연구자와 실무자 사이의 관계도 “함께 협력해야 co-construction” 했다. 연방 사회 과학 및 인간 연구 협의회(federal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가 설립한 새로운 ‘지역사회-대학 연구연맹프로그램(CURA)’가 이러한 관계의 구심점이 되었다. CURA는 이들이 함께 논의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 연구 그룹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분석을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참여적이고 서로 배우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코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 사회 경제개발과 사회적 경제를 배우고 있으며, 인턴이나 프로젝트 연구 보조로 일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 교육, 기업개발, 연구 등의 구체적 도구 개발을 함께 진행하며, 지역, 주, 국가단위의 연맹을 형성하고 있다.

(4)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경계를 넘나드는 상티에라는 네트워크 조직은 시민사회로부터 기인했고, 많은 섹터를 대표해 한 목소리를 내어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상티에는 이러한 분권화된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복잡한 그물망 조직이다. 또한 다양한 연맹체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관도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경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수평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것이 중요한데 퀘벡은 이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6) 일본

(1) 일본의 사회적 경제 개념

일본은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해당되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직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NPO는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겪은 행정의 한계와 달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불린티어 활동의 힘을 일반 시민이나 정책 입안자들도 실감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했고, NPO법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NPO는 '제3섹터'나 '사회섹터'를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인에게도 확산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으로 이들을 포괄하여 일본내에 소개한 것은 토미자와 켄지(히토즈바시 대학)나 카와구치 키요후미(리츠메이칸 대학)등에 의해서이다. 그들은 '시민섹터 정책기구'와 '참가형시스템연구소' 그리고 '시민이 만드는 정책조사회'등 3개 단체를 연합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8회에 걸쳐 '사회적 경제 촉진 프로젝트'라는 공개연구회를 개최한다. 이 연구회의 출범은 현재의 사회변혁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잠재적가능성을 높이고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가, 정치가, 연구자, 일반시민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였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주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카스야 2005).

사회적 경제의 정의 그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조직이나 문헌에 소개되어져 왔으나, 그 중에서도 2000년에 설립된 "Social Economy Europe"이 2002년 6월20일에 선언한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널리 통용되어지고 있는데,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나 공공·사회 전략에 입각한 메시지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의 힘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 내용은 ①자본보다 개인과 사회의 목적이 우위성 ②자발적이며 개방적인 멤버십에 의한 민주적 통제 ③멤버와 이용자 및 일반인이 결합하여 연대와 책임의 원칙 적용 ④자율적 매니지먼트 ⑤공적권위로 부터의 독립 ⑥잉여의 대부분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활용되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등이다.

(2) 일본의 사회적 경제 현황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조직으로서 협동조합(각 협동조합법에 준거한 법인), 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컬렉티브, 비영리조직(NPO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이 있다. 특히 일본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전통적인 조직으로서는 농협이나 생협 등을 들고 있다(이마무라 2011).

또한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제3세대 또는 제4세대라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흐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생협이나 농협조직 가운데 새로운 실험을 하는 소규모의 대안적 조직이나 환경·복지·의료생협 그리고 워커즈컬렉티브와 노동자협동조합 등의 사례와 함께 복지·환경보호 등의 커뮤니티사업을 벌이는 NPO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협동조합과 사업화, NPO의 활력이 사회변혁의 담당자로 부각되고 이러한 실천들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서 기인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공영역'의 구축에 있어 주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역할론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먼저 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일본의 ICA회원조직으로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림중앙금고, (사)이에노히카리협회(家の光協會), 일본농업신문,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삼림조합연합회,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및 전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12개 단체가 가맹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협동조합에 관한 통일적인 법제도가 없으며, 각 행정부처의 기준에 준거하여 생협법, 농협법 등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별협동조합법 등의 형태로 세분화된 법률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총 17개에 이르는 각각의 개별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은 42개 조합이지만, 노동자협동조합과 워커즈컬렉티브는 각각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규가 없어 협동조합의 설립운동을 둘러싸고 많은 행정지도와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노동자협동조합과 워커즈컬렉티브는 서로 연대하여 다양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와 함께 '협동조합법'의 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워커즈컬렉티브 네트워크 제팬(WNJ)'을 중심으로 한 '워커즈 컬렉티브 법제화 운동' 및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에 의한 '노동자협동조합법제화운동'(2000년 11월 이후에는 협동노동의 협동조

합법)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노동자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의 한 부문으로 존재하고 있다. 2008년 3월 기준으로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센터 사업단, 지역노동자협동조합, 고령자협동조합 등(회원수 36,600명)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 10,903명과 사업총액 228억5,400만엔을 기록했다(코무라 2008). 이러한 노동자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의 업무위탁과 동시에 지역에 밀착된 대인(對人)서비스 영역 다시 말해 주로 청소나 리사이클 등에서 출발하여 학교급식이나 개호복지와 같은 지역복지 영역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고용창출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악화와 민간역량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정관리자 제도로인해 행정으로부터 공공시설들이 대폭 민간에게 장기위탁되고 있는데 그곳에 이 노동자협동조합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위커즈컬렉티브도 하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최초의 위커즈컬렉티브는 1982년에 가나가와현에서 탄생하였다.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에서 만든 가게로 채소나 도시락을 팔던 모임이었으나, 1980년의 ICA대회 참가를 계기로 “지금부터의 사회는 노동자생산협동조직의 형태로 일하는 사업체가 비전이 있다”라는 발언에 급속적으로 확산된다.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인 위커즈컬렉티브는 고용관계가 아닌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출자로 대등하게 일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이며, 관련 분야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리사이클, 개호서비스, 시민문화, 정보발신, 환경사업, 협동조합운동 지원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까지 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써 발달해 온 생활클럽생협 등의 위커즈컬렉티브는 2007년 현재, 전국조직인 WNJ에 소속된 단체 수가 600개, 참가하는 멤버 수가 17,317명, 사업총액 136억 엔까지 성장했다(제8회 위커즈컬렉티브 전국회의 실행위원회편 2008).

NPO(Non Profit Organization)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신대지진에서의 시민과 NPO의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져, 정부와는 다른 강점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 후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이 가세해 지속적인 요구와 활동을 통해 1998년 12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⁶⁾이 제정된다. 그 결과 NPO에게 있어 법인자격취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수적으로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6) 1998년에 시행되었던 일본의 법률로서 다양한 형태의 특정비영리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2011년 3월 31일 현재 인증된 NPO법인만도 전부 42,387개소에 이른다. 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공섹터의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주민들에게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서비스의 담당자로써의 NPO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살펴보자. 영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일본에서 벤치마킹 하여, 1994년 호소우치 노부타카에 의해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용어가 일본 내에서 처음 사용된다. 당시 그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 일본의 각 지역사업들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 또는 단체를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부른 것이다. 이후 이 용어는 일본 내 매스미디어나 행정기관에 정착되어 현재는 일반화된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호소우치 노부타카 1999).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주요 활동분야로써는 복지를 시작으로 건강, 의료, 장애인지원, 노숙자지원, 지역 활성화, 마을만들기, 관광, 안전, 안심, 예능, 스포츠, 국제교류 등 다양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의 2009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관련사업자수는 약 8,000개소이며 고용규모는 32 만명, 그리고 시장규모는 약 2400 억엔, 사업형태는 NPO가 약 50%, 주식회사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3) 일본의 사회적 경제 정책

일본의 사회적 경제 정책으로 경제산업성의 정책을 살펴보자. 경제산업성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소셜 비즈니스에 포함되어진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B연구회에 의한 SB의 정의에 따르면, ①사회성(사회적 사명), ②사업성(지속적 사업활동), ③혁신성(이노베이션: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체제·가치의 생산)등의 요소를 가진 사업체이며, 종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대상지역이 넓고 사업성과 혁신성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의 목적 내용이나 기업형태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극히 다양한 사업체를 포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경제산업성 SB연구회 2008). 반면 CB는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자원의 발굴·활용 등을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활성화나 사회공헌과 사업의 자립·지속적 발전이라는 양쪽을 실현하고자하는 것으로써, 특징으로서 ①사업성 ②지역성 ③혁신성 ④시민성 ⑤공헌성 등 5개 요소를 들고 있지만, 가네코(金子)의 경우는 ①미션성 ②비영리 추구성 ③계속성 ④자발적 참가 ⑤비경제적 동기

에 의한 참가로써 전자의 3개는 조직에 대한 특징이며 후자 2개는 그 곳에 참여하는 개인에 관한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중간지원조직 기능강화산업, 농상공 연계 대책지원사업, 지역활성화 고용촉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일본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경제 스펙트럼이 충남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의 자발적, 주체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정보의 수집, 공유, 모델의 확산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가운데 지속적인 지역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기존의 협동조합이나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충남형 사회적 경제 모델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결국 사회적 경제영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주민의 활동이 끊임없이 서로 발굴되고, 격려하고, 순환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 주민역량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기에는 그러한 경험이나 훈련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이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이러한 주민역량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이 필요하고,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단계별 육성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2. 국내

1) 성미산 마을만들기

(1) 마을만들기의 시작

성미산⁷⁾마을은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긴 여러 조직들 그리고 서울시의 배수지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지역사회운동 등의 계기를 통해서 탄생한 곳이다. 지역사회 내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주도하는 지역사회운동의 성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들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마을만들기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즉, 성미산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확산시켜 나갔는지 살펴 보겠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성미산 마을의 형성 및 전개과정

① 성미산마을의 태동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젊은 부모들은 1994년 9월 3일 ‘우리 어린이집’을 마포구 연남동에 개원하였고, 그들과 같은 교육 가치를 품게 된 지역주민들이 1995년 ‘날으는 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공동육아 구성원들의 고민은 자연스레 지역사회로 이어졌다.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은 먼저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7) 표고 66m인 성미산은 마포구 성산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이 성 같이 둘러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말에 ‘성매’, ‘성미’라고 불리었다. 현재 성미산은 1993년 8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후 연인원 183,000명이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이 56.5m 봉우리를 중심으로 한 산림지역은 1977년 7월 미 시설 근린공원인 성산제2공원으로 지정되어 셋터공원으로 명명되었으며, 연인원 5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생태보전시민모임, ‘성미산 자연생태 현황 조사보고서’, 2001: 1).

주제로 접근한다. 공동육아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성미산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1998년 ‘도토리 방과 후 교실’, 1999년 ‘풀잎새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안학교의 설립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의 두 번째 접근은 먹을거리 등 일상생활에 대한 대처방안의 모색이다. 이는 2000년 마포 두레 생협 결사체(이하 두레생협)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두레생협의 설립은 성미산마을의 등장에 큰 의미를 갖는다. 두레생협의 결성으로 인해 육아라는 일부 주민들이 갖는 가치의 공유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먹을거리’로 확대되어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에 성미산 인근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이후 마을 축제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김의영 외, 2008: 162).

② 성미산 보존운동

서울시가 ‘성미산을 개발하겠다’는 성미산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하였다.⁸⁾는 것을 인식한 성미산 주민들은 공동육아, 두레생협 결사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성지연’을 조직하게 된다. 성지연은 서울시의 성미산 개발계획에 반대운동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⁹⁾ 성지연은 생태/환경, 체육, 교육, 문화 등의 의미를 갖는 성미산을 개발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성지연은 성미산 보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들과 접촉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이를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켜 성미산 보존을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전문지식으로 서울시와 마포구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성지연은 2003년 1월 성미산 대책위로 확대하여

8) 한양재단은 1960년대 학교용지로 성미산 부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30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었다. 1995년,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을 자연녹지로 계획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지만, 한양재단이 전액 보상을 요구하여 매입계획이 보류되었다. 한편, 1997년 서울시에서 성미산 ⅓에 ‘배수지 건설계획’이 결정되었다. 이후 ‘한양재단에서는 남쪽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하면 남쪽 부지는 구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마포구청에 접수하였다. 2001년 7월,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이 ‘배수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접하게 되었다(성미산생태공원화 제안서, 2008: 1-2).

9) 성미산 지키기 운동의 시작은 두레생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두레생협의 활동 대상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인 상근자가 근무하였기 때문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유창복, 2009: 35).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성미산 대책위는 기자회견, 지자체 단체장과의 면담 마을축제와 음악회 개최 등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성미산 주민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92.6%의 주민이 성미산 보존가치를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2003년 10월 서울시는 배수지 건설계획 유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성지연은 배수지 건설계획 반대운동에 그치지 않고 이후 숲속음악회, 생태현황조사, 마을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표 15> 성지연의 지속적인 활동

내 용	기 간	비 고
서명운동	2001.08.10	주민 2만 명 서울시, 마포구에 제출
숲속음악회	2001.09	주민 1,300여명 참여
생태현황 조사	2001.09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연대
마을축제	2002.05	주민 1,500여명 참여
선거운동	2002.06	성미산 지킴이 3명 입후보

자료: 생태보전시민모임, 2001; 성미산 대책위, 2003: 3-4

(3) 사회적 경제로의 발전

성미산의 사례는 지역의 결사체로부터 시작하였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경제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사체조직은 초기부터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심의’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선호를 이동하고 그 결정에 대해 납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즉, ‘개발’과 ‘환경’의 논리가 부딪히는 갈등 사례에서 끊임없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렇게 훈련된 일상화된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제로의 발전에 큰 힘을 가진다.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주민들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마포 지역 내에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시민 단체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제

안하여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마포연대)’를 만드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마포연대는 마포주민이 주인으로 서는 지역 공동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주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지역 공동체, 넉넉한 삶을 가꾸어가는 지역공동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김종호, 2003).

이러한 마포연대를 배경으로 성미산 주민들간의 연대와 협동을 일구고자 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미산 마을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관계를 회복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즉 혼자살기보다는 호혜적관계망을 가지고 더불어 살고, 자발성의 씨앗에 나눔의 물을 주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주체를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성미산 마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교육, 경제, 복지, 환경, 문화, 자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성미산의 다양한 주체들은 도시지역의 생활문화관계망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크고 작은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각 부문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성미산 마을의 사회적 경제 조직현황

부 문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교 육	공동육아어린이집 4곳, 공동육아 방과후대안학교(성미산학교), 마을배움터, 마을학원
경 제	마포두레생협, 동네부엌, 작은나무, 성미산대동계, 동네금고, 한뫼두레, 비누두레, 성미산밥상
복 지	마포희망나눔, 돌봄두레, 의료생협
환 경	성미산대책위, 자동차두레, 되살림가게, 녹색가정
문 화	마을극장, 마포FM, 마을축제 동아리 10여개, 마을아카이브, 마을신문, 문화교육공간
자 치	(사)사람과마을, 마포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마을단체대표자회의
협 력	민중의집, 열린마루, 마포보건의료인연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턱없는밥집

자료: 조경민, 2011.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이해.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 경제연구회 워크숍 자료집

① 공동육아

공동육아 결사체 구성원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과 소통할 지역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이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공동육아 결사체 구성원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관계없이 살다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지나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개네들이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야 하는 아이들, 개네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때야 비로소 다른 아이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내 아이의 문제가 우리 아이의 문제들로 확산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퍼져가는 것이 '학교에 애를 넣으면 그 아이들(자신의 아이의 친구들)도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공동육아, 성지연, 성미산 대책위 참여 주민)

공동육아 결사체 구성원들은 육아문제를 해결하였던 방식대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구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우리아이들의 문제는 공동육아 방과 후 교실을 만들게 돼서 해결을 해요. 저학년을 중심으로 학교 끝나면 어린이집에서와 같이 비슷하게 과제가 있으면 과제도 같이 풀고 했었는데, 아이들은 계속 크니까 방과 후를 끝낼 때 쯤 전에 학교 들어 갈 때 쯤 다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보니까 이게 꽤 괜찮은 대안이다. ... 지역의 끌어들이 주체를 이제 우리가 되기로 한 거죠. ...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고민들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 '우리마을 꿈터'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요. 이 사무실 보다 약간 큰 거기서 이제 공동육아 아이들을 비롯해서 그 외 동네 아이들이 다양한 방과 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태권을 배운다든지 무용을 배운다든지 학습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런 복합 공간을 만들고 '우리마을 꿈터'라는 이름으로 동네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한 거구요.

(공동육아, 성지연, 성미산 대책위 참여 주민)

한편, 공동육아 결사체는 축제라는 형식을 빌려 마을과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공동육아 결사체의 주도로 2001년 5월 성미산 마을 축제가 개최되었다. 마을 축제 역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지역주민들의 생각에서 근거하였다. 마을 축제는 각 결사체 구성원들의 상호교류와 일반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을 추구하였다.

‘동네야 놀자’라고 축제를 했어요. 어쨌든 골목축제를 해요 어린이집이 두 개가 있고 방과 후가 두 개가 있고, 썩 교류를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2000년 즈음에 ‘왜 우리가 서로 관계를 안 맺고 살지?’ ‘아빠들끼리 좀 소통을 하고 살자’ ‘왜 우리가 서로 모르고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어린이집 간에 서로를 초청하는 행사를 해요. 이러다가 동네 골목길 축제를 해보자. 2박3일 동안 뽀시게 합니다. 그 때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아이들만 사는 게 아니구나... 다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아이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엮어서 살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겠다. 그것이 지역에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연관 맺고 사는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고민을 하고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이 너무 골목에서의 즐거움이 없이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골목에서 하던 고무줄놀이 땅따먹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지역노인들로부터 떠들고 노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의료자원센터를 꾸려서 어르신들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그렇게 2박3일은 한 거죠. (공동육아, 성지연, 성미산 대책위 참여 주민)

공동육아 결사체 구성원들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을 지역 사회의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으며, 교육시설과 마을축제의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발생시켰다. 자녀들로부터 기인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은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관계의 확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동육아조직이 갖는 공동체적이고 생태 및 환경적인 가치의 공유의 확장의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을 축제라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을 시도한 공동육아 결사체는 지역사회와 결사체 간에 소통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성미산 지키기 운동의 인적 원동력을 갖게 되었다.

② 두레생협

두레생협의 결성은 지역사회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공동육아 구성원들의 논의에서 시작하였다. 육아문제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육아는 소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기에는 지역주민 일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소재였다. 공동육아 구성원들은 논의 끝에 ‘먹을거리’를 다루는 결사체를 결성하기로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계속 크니까 방과 후를 끝낼 때 쯤 전에, 학교 들어 갈 때 쯤 다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보니까 이게 꽤 괜찮은 대안이다’ 먹을거리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 ... 지역의 끌어들이 주체를 이제 우리가 되기로 한 거죠. (공동육아, 성지연, 성미산 대책위 참여 주민)

두레생협은 공동육아의 공동체적이고 생태 및 환경적인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는다(유창복, 2009: 34-35). 공동육아는 특정 인구가 관심을 갖는 주제였지만, 두레생협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먹을거리를 내용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두레생협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 공동체와 환경 및 생태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특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두레생협은) 유기농 먹거리를 공동 구매하고 공동으로 배달해서 나눠먹는 일이 가장 큼니다. 성인병이라든지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을 중요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농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역민들과 대화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니까 그렇게 모인 엄마 아빠들이 친해지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 그런 주민 자치적인 동아리 활동들이 생협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창복, 성미산학교 설립위원장 겸 교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김상민, 2005: 60)

두레생협을 통해 형성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관심사를 공유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러 동아리를 결성하는 것으로 연계되었다. 또한, 두레생협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성미산 보존을 위한 성미산 지키기 운동에 참여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③ 성미산 차병원¹⁰⁾

성미산 차병원은 국내 최초로 조합원 스스로가 만들고 운영하는 조합형 자동차 정비업체로 2003년 11월 시작되었다. 차병원은 초기 80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21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차병원은 정비가격을 정찰제로 공개하고 부품은 순 정품만을 사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출자금을 낸 201여명의 조합원들에게는 가격 혜택뿐만 아니라 병원 주치의와 같이 차량을 관리해 준다.

차량주치의 성미산 차병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성미산 배수지 건설 반대운동이 한참인 200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성미산 기슭벌목에 맞서 산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들은 낮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지키고 밤에는 퇴근해서 돌아온 아빠들이 산을 지키는 방식으로 농성을 이어가던 중 처음 차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들끼리 밤에 천막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자들은 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다들 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는 말들이 안심하고 차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 어떤 아빠는 새로 산 차를 잘못 맡겼다가 아주 낭패를 봤다고 하던데... 나도 꾸준히 다니는 정비소가 없을 정도로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아예 만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국 성미산 차병원도 94년 공동육아와 생협으로부터 이어져온 공동체운동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마을공동체 운동의 한 모습이다(이주영, 2006; 35-36).

10) 2011년 9월 현재 성미산 차병원은 해산되고 없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인용하였다.

(4) 시사점

성미산 마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경제의 바탕이 '운동'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모으고 이끌어어나가는 운동적인 요소가 조직을 태동하게 하였다. 이는 바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공동육아, 두레생협, 차병원 등의 사례의 공통점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모임의 배경은 성미산지킴이 운동을 통해 지역 주민이 서로 교류하였다는데 있다.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떤 인자가 있는지 알게 되고, 서로 교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모아질 수 있었다. 이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태동되는데 주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미산 마을은 몇 번의 방송을 타서 현재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마을이 일구어지기 까지는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하여 마을을 만들어나간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의 길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당장의 일자리 몇 백개의 목표를 두지 말고, 주민들의 문제해결을 돕는 도구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들이 고민하고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시도되는 사업을 육성할 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원주

(1) 원주의 사회적 경제

원주는 그동안 협동조합 운동과 유기농 생협 운동인 한살림의 본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1970년대 이후 원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협동조합 운동은 90년대 이후 내부의 운동성 약화와 신자유주의, 정부 개입, 제1금융권 팽창 등의 외부요인으로 정체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나 원주는 2000년대 들어 쇠신의 시기를 거쳐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의 흐름

속에 다시금 주목을 끄는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오랜 협동조합 운동을 바탕으로 다져진 시민 사회의 힘과 지역 주체들 간의 능동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경제의 모습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하고 있는 원주의 저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라는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농업의 생산과 가공, 유통에서부터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여러 사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다층적인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사회적 경제의 실재(實在)로 구축해 가고 있는 원주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협동조합 운동의 출발

군사도시로서의 명성 외에 원주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메카로서의 역사를 갖게 된 데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제공한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선구자 지학순 주교와 한살림 생명운동의 창시자 무위당 장일순 선생 두 분의 만남이 그 출발점이 된다.

장일순은 1928년 원주 출생의 사회운동가로 1965년 원주교구의 설정과 함께 주교로 부임한 지학순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언에 따라 평신도 역할과 활동을 중시한 지학순의 사목방침에 따라 본당의 재정자립과 평신도역할을 강화를 위한 자치위원회를 조직하고 1966년 신자들 35명과 출자금 64,190원으로 원주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었다. 1972년 8월에는 신탁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신탁 운동은 합법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 지역 저소득층을 고리대금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원주 밝음 신용협동조합이 창립된다.

한편 신탁법이 제정된 같은 시기 원주를 비롯한 남한강 유역의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해 지학순 주교는 독일 등지에 원조를 요청하게 된다. 약 3억 6000만원 규모의 막대한 지원금(당시 원주시 인근 땅 한평이 200-300원이었다고 함)이 조달되었는데 이를 재원으로 천주교구는 '원주 교구 재해 대책 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여기에 협동조합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결합하였고 마을단위의 공동체운동과 자립, 협동조합운동을 병행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김지하를 비롯한 수십 명의 젊은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원주로 내려와

결합하게 되었고 1993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는데 이로써 영서 남부지역에 많은 수의 신용협동조합 조직이 설립되게 된다.

<표 17> 신탁조직육성사업(1975-1993)의 결과

구 분	단 위	농 촌	광 산	계
조합수	개	31	15	46
조합원수	명	5,100	15,800	20,900
출자금	백 만	263	1,425	1,688
총자산	백 만	462	4,568	5,033

이 사업은 지역자활사업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운동으로 해당부락이 선정되면 1단계 긴급 구호식량 보조사업, 2단계 전담복구 생산기반조성사업, 3단계 부락개발사업, 4단계 지역산업 개발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 협동체의 건설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여성 지도자 교육 사업(1973-1985), 한우 지원 사업(1973-1985) 등이 있었으며 특히 한우 지원 사업은 농촌 협동조합운동의 최초 조직기반 사업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1980년부터는 소비자협동조합사업(오늘날의 생협)이 본격화되어 농촌에 48개의 소비조합과 광산에 15개의 소비조합이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조합운동은 주민의 의식개발과 협동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중간상인의 횡포를 방지하고 유통구조의 개선함으로써 지역물가의 조절기능과 주민의 간접소득을 증대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당시의 소비조합은 주로 생필품의 조달이 어려운 농촌과 광산에 설립되어 도시의 공산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급감과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에 오염되는 농업으로 인해 도시민들의 삶도 피해를 입고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데 대한 성찰과 대안을 고민하게 되는데 장일순과 지학순은 70년말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사상, 생명운동을 벌이게 된다. 두 사람은 천주교 일본교구와 연계하여 1981년 교구내지도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을 일본의 유기농업현장과 생협 운동을 견학하고 이를 토대로 최초의 도시 생협인

1985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 한살림 생협)을 결성한다.

70년대부터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간 소비조합운동은 1980년대 초반 충주댐 조성으로 남한강 유역 수물로 많은 신흥과 소비조합이 사라졌으며 석탄산업의 몰락과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점차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다가 1998년 생활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조합설립 및 인가요건으로 조합원 300가구 이상에 출자금 300만원 이상의 강화된 기준을 요구받게 되고 공산품 취급 제한 등으로 2000년 들어 대다수의 농촌 생협은 해산하고 만다.

천주교 원주교구의 사회개발사업으로 전개되어 온 협동조합운동은 내용적으로는 1985년 외국 원조 중단과 신군부의 탄압으로 협동조합 리더 그룹의 해산과 93년 지학순주교, 94년 장일순 선생의 연이은 타계로 1세대를 마무리 하게 되었다.

(3)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의 발전

80년대 신군부의 탄압과 90년대 1세대 원로들의 타계 이후 정체되었던 원주 협동조합운동은 2000년대 들어 IMF 이후 생존권의 약화와 농업의 몰락, 실업의 가속화, 협동조합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게 된다.

2002년 밝음신흥, 원주생협, 원주 한살림의 공동 발의로 만들어진 원주 의료생협은 협동조합 간 협동의 모델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2000년대 이후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은 그 동안 신흥의 여신운동과 생협의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살림을 넘어서 노인과 취약계층 등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영역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영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설립된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로 만들고자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복지사업을 전개 하면서 협동조합을 통해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원주지역자활센터와 성공회 나눔의 집 같은 협동조합 운동을 지원하는 조직들도 가입하게 된다. 원주지역 협동조합 운동 주요 단체들의 활동 내역과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 18> 주요 단체들의 활동내용과 규모

단 체 명	창립연도	규모 및 주요활동 (2009년 기준)
원주밝음신탁	1972	조합원 약16,700명 / 자산830억 /자본금 47억 지역사회 공헌 사업 및 서민경제 지지
원주생협	1989	생산자 조합원 200명, 소비자조합원1,200명 총사업규모 21억 7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을 통한 생활공동체 지향
원주한살림생협	1985	조합원 5,400명, 공급액 32억2천5백 친환경 농산물 소비 유통
남한강삼도생협	2003	조합원수 130명 강원, 경기, 충북 접경 지역 농산물 직거래
원주의료생협	2002	조합원수 1,680명, 매출 12억 1천만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사회 구현
성공회 나눔의 집	1999	후원회원 200명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원주자활센터	2001	64명 자활근로, 10명 자활공동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자리 제공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미당	1999	25가구 조합원 학부모 출자로 교육 자치 실현
원주노인생협	2005	조합원 1,100명 노인복지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원주기능영농조합	1976	출자회원 88명, 조합원 250명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상지대생협	2005	조합원 3,200명 물자 및 서비스 공급 구매, 교육 및 홍보
참꽃 어린이 교육협동조합	2005	조합원 13가구 대안교육기관
문화생협	2007	조합원 350명 지역 문화사업 및 매장 활동
갈거리 사랑촌	1991	노숙인 지원 및 지역 복지사업
(주) 살림농산	2008	2008년 원주 한살림에서 법인 분리

이외에도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네트워크 '물꼬' 등의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원주의 협동조합의 회원 수는 약 3만 800여명 규모로 이는 (중복 조합원 포함) 원주 인구의 10%에 달하는 숫자이다. 이 같은 원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근간에는 초기 신용협동조합 운동으로 설립된 많은 신탁 조직들이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밝음신탁의 경우, 위 표에서 보듯 2009년 말 기준 16,700명의 회원에 830억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기

초생활수급자들이 주축이 되어 소액무담보 대출을 운영하는 누리협동조합과 원주 노숙인 쉼터와 쪽방에 거주하는 이들을 주조합원으로 예적금, 소액신용 대출을 하는 갈거리 협동조합 등이 신용분야의 특징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가능한 자원을 활용, 생산, 소비,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동조합 운동의 확산은 사회적 기업의 출현으로 이어져 지역 내 더욱 확대된 경제 활동과 서비스 구조를 갖추으로써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 기존 원주 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2009년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한 단계 진화하게 된다. 현재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속한 다양한 단체들을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19> 분야별 단체현황

분 야	단 체 명
친환경 농업	기톨릭 농민회, 삼도생협, 원주생협
신 용	밝음신협, 갈거리 협동조합, 누리 협동조합
소비자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노인생협
	원주의료생협, 상지대 생협, (주)살림농산
사회 서비스	나눔의 집, 갈거리, 자활센터
교 육	참꽃어린이, 소꿉마당, 껌병이 길찾기
사회적 기업	다자원(재활용), 노너메기(집수리), 시루봉(장애인떡사업), 아가야(보육)
	급식센터, 신화마을(문화예술, 농산물 가공유통) 햇살나눔(농산물 유통)
문 화	문화생협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상호부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 ‘협동카드’와 ‘공동의 홈페이지 구축(쇼핑몰 포함)’, ‘협동기금 출연’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개별 조직들 간의 활동을 실제 경제 생활을 통해 보다 손쉽고 효과적으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시사점

한국사회에서 원주가 이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출현하여 연대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본 바대로 협동조합 운동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의 사회적 경제는 이와 같은 협동조합 운동의 핵심 가치와 정신에 대한 교육과 이를 조직화 해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집단적 토양 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성장한 시민사회 영역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당면한 사안들에 대해 지자체와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2009년에는 전국 최초로 ‘원주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의 식량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후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의 원주의 사례에서 시사되는 점은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 분야의 대표 주자로 대거 육성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핵심가치와 정신은 그 뿌리를 바로 협동조합 원칙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방식은 이러한 핵심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한 채 외형적 조건에 치중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가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토양을 육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원주 사례에서 보듯이 협동과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자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는 구성원들과 조직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대를 통해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 연대를 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이러한 연대체가 완성될 때만이 기존 시장 경제에 매몰되지 않을 자체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인 지표에 매달려 성과주의로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역동을 갖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생력을 잃게 되므로 시민사회가 보다 근원적이고 흔들림 없는 사회적 가치와 철학이 내재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원칙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깊이 있고 끊임

없는 교육과 학습, 이를 기반으로 한 조직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충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도의 사회적 경제계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기반을 스스로 조성해 나가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시민주체들이 참여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의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여 당면 과제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제정,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 등 각 지역 상황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의 곳곳에서도 지학순, 장일순과 같은 높은 뜻을 품은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 협동과 연대의 세상을 펼쳐 나가길 기대해 본다.

3) 대구경북

(1) 대구경북의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기업 현황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 기업 포함)의 주요 활동분야는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문화분야가 2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식품분야로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조 8%, 환경 7%, 사회복지 4%, 재활용 2%, 가사·간병 2%이며, 기타가 13%였다. 그리고 고용인원별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 수를 보면, 10명 이하가 30%이고, 11~15명 이하가 35%, 16~20명 이하가 21%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20명 이하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사회적 기업 단체유형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유형은 30개 업체로 33.3%, 비영리법인은 11개 업체로 12.2%, 사단법인은 20개 업체로 22.2%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과 민간단체를 포함한 비영리조직이 69개 업체로 75.6%나 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은 5개 업체(5.6%), 사회복지시설은 6개 업체(6.7%)로 사회복지기관이 11개 업체로 12.3%에 불과하였고, 협동조합과 기타가 각각 1개 업체였다. 이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근로시설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비율이 높아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생활협동조합의 성과

대도시인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한 부분인 농산물 판매 관련 생활협동조합(생협)과 직거래 단체가 지난 1990년부터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는 지역 동질의식이 강하고, 지리상 인접해,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임산물을 대구지역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생협사업이 비교적 용이한 사회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10년말 현재, 대구지역 13개의 생협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1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200여억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기업 못지않게 지역의 사회적 경제 범위와 영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표 20> 대구(경북)지역 생협 및 직거래단체 현황

단 체 명	설 립 일	조합원 (회원)	자본금 (출자금)	직 원	매 장	매출규모
푸른평화	1990. 4	2,000여명	1억9천만원	15	6	40억원
곰네들 (직거래 단체)	2009. 1	600여명	1억원	1	1	1억5천만원
농부장터 (직거래 단체)	2009. 1	500여명	5천만원	5	1	4억원
땅지기생협	2004. 4	500여명	7천만원	1	1	1억5천만원
대구생협(아이쿱)	2001. 11	1,128명	9억3천만원	12	1	19억원
참누리생협(아이쿱)	2003. 10	1,330명	9억1천만원	14	1	21억원
행복생협(아이쿱)	2003. 11	1,621명	10억6천만원	22	2	45억원
녹색살림생협	2002. 7	911명	3억1천만원	3	1	21억원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1991.	없음	1억2천만원	5	1	10억원
대구 우리밀	2003. 4	없음	3억원	8	1	12억원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 대(직거래 단체)	2006. 2	600명(단체 12개)	3천만원	20	1	4억원
땅살림 생명살림 (직거래 단체)	2003. 10	없음		5	4	15억원
대구 한살림	1996.	800여명	2억원(기량)	4	1	5억원
안동기톨릭농민회 (직거래 단체)	1990.	120명	억원	15	없음	40억원
총계		10,110명	42억7천만원	130명	22개	239억원

주: 매출은 2010년 연간 규모이며, 일부 항목은 추정치임

자료: 김병혁, 류병윤(2011)의 조사자료

(2) 대구경북 사회적 경제의 지역밀착성

사회적 기업의 '지역밀착성'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지역내 구입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2개의 대구경북 소재 사회적 기업 중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중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 14개 중 '거의 대부분을 지역내에서 구입'하는 기업이 10개사(71.4%)에 이르고, '절반 정도를 지역내에서 구입'하는 기업이 1개사(7.1%)였다.

<표 21>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의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지역 내 구입정도

지역 내 구입정도	빈 도	비 율
거의 대부분을 지역 내에서 구입	10	71.4
절반 정도를 지역 내에서 구입	1	7.1
지역 내 구입은 절반이 안됨	1	7.1
지역 내 구입은 거의 없음	2	14.3
합 계	14*	100.0

주: 설문조사 응답한 기관 22개중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원자재를 구입하는 사회적 기업 수

자료: 문순영(2010)

지역 사회적 기업의 '지역주민에 대한 상품 판매 정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을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15개사 중 9개사(60.0%)에 이르고, '절반 정도를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3개사(20.0%)에 달했다. 사회적 기업이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을 지역 내 주민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16개사 중 10개사(62.5%)이며, '절반 정도를 지역 내 주민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2개사(12.5%)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역밀착적 성격을 가장 적실하게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지역주민 비율'은 '근로자를 거의 지역 내에서 고용'하는 기업이 22개사 중 18개사(81.8%)로 나타났고, '근로자의 절반 정도를 지역 내에서 고용'하는 기업이 3개사(13.6%)에 이르렀다(문순영, 2010).

이는 한겨레경제연구소와 지역재단의 조사 연구결과인 '지역 내 소재 대기업 10개소의 고

용 근로자 중 지역주민 고용비율'과 비교해 보면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외지인, 지역주민 비정규직'이 50.0%이며, '대부분 지역주민, 정규직'이 25.5%, '절반정도 지역주민, 정규직' 25.5%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 기업이 가진 지역밀착형의 성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은 환경, 제조, 돌봄, 식품, 문화예술 등 모든 사업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자 및 노인, 장기 실업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경력 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78.0%나 고용하고 있다.

2010년말 현재 대구지역 23개 사회적 기업에서 431명(자체고용 119명 포함)을 고용해, 1년간 약 67억7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경북지역 23개 사회적 기업에서는 530명(자체고용 238명 포함)을 고용해, 약 13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서 살펴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지역 총생산 규모와 1인당 지역총생산액을 고려하면,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과 1인당 생산액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근로자 중 50%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이러한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사회적 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정책적 제언

최근 원유와 다른 원자재(식료품 포함) 가격의 상승은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과열된 신흥시장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성장이 느려진 선진국 시장의 경우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신흥국에서는 석유와 식료품 가격은 물가 구성 요소의 2/3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매우 느슨해진 통화정책과 함께 신흥시장에서의 매우 강력한 성장은 사회적 경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선진국들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반면에 신흥시장은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 수요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부르고 있는 반면, 여전히 세계경제는 재정, 환경에서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글로벌 수요패턴의 거대한 바위틈에 끼어 꼼짝을 못하는 형국이다. 시장에서 자생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경영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에 치중된 현재의 지원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나 국공유지 임대, 우선구매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대책에는 구체적 신청절차와 지원기준, 지원내역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김준양, 2010).

국세나 지방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도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또한 법규상의 지원사항들이 대부분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행정재량이 과도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삼성과 현대·기아자동차, LG, SK 등 '4대 재벌의 주력계열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들의 지난 4년간 매출 및 고용 증가율'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4대 기업의 2010년 9월말 현재 고용 규모는 187,514명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의 175,673명에 비교해 6.7%(11,841명) 늘어난 수준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사업보고서(2007년~2010년)를 분석해 보면 4년간 매출액이 50% 이상 늘었지만 고용 증가율은 9.9%에 그쳤다. 현대자동차도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 가까이 증가했으나, 고용은 1.3% 증가에 그쳤고, SK텔레콤은 고용은 줄고 매출액만 10% 이상 성장했다. LG전자만 고용 증가율(9.4%)이 매출 증가율(3.9%)을 앞질렀다.

특히 '투자 대비 고용 효과'는 더욱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8조4000억원(2007년)의 투자에 이어 21조2000억원(2008년), 15조8000억원(2009년), 28조원(2010년, 잠정치) 등 4년간 83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유발된 고용 규모는 10,000명이 되지 않았다. 특히 2007~2009년 사이에는 오히려 고용이 921명이 줄어들었다. LG전자도 같은 기간 연평균 2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2010년을 뺀 고용 증가 규모는 연평균 30명도 되지 않았다(한겨레신문, 2011. 1. 24).

재벌 대기업의 투자 대비 고용 효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여건의 악화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기반이 되는 제3섹터의 규모나 제3섹터 간 거래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한계를 보인다. 또한 민간의 사회적 기업 투자 및 지원기반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사회적 기업 촉진을 위한 환경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0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근 일본의 경우 '신공공(NPO) 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더 확산되는, 공공 시설물 및 서비스에 대한 운영, 관리를 비영리법인(NPO)에 위탁 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례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원과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납골당 등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를 기존 광역시도나 시군 산하 공사,공단 등 공기업에의 위탁경영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 법과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관리 경영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적 기업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탄생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국내외 선진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도출

1) 국내외 사례 주요내용 정리

국내외 선진사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정책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 각국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 경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양태에서 차이가 있다. 유럽이 이타주의, 호혜성, 연대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강조함에 비해 미국은 재단,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 사회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정책에서도 유럽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대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고민한다면, 미국은 개인의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유럽은 공동체이익회사(영국), 사회적협동조합(이탈리아)를 지정하여 계약방식으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지역개발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기금 지원방식으로 비영리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과 달리 일본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협동경제의 전통이 강하고 최근 경제산업성에서는 소셜 비즈니스라는 용어로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NPO의 자발적인 활동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로 옮겨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이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자리잡게 하는 특징은 지역자원의 발굴 활용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있는 점이다. 특히 경제산업성에서는 이를 소셜 비즈니스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성미산 등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태동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사회적 경제의 움직임이 지역의 결사체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사체 조직은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선호를 만들어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터이다. 이는 원주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원주에서도 IMF 이후 생존권의 약화와 농업의 몰락, 실업의 가속화, 협동조합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조직들이 지역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적 경제 블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표 22> 국내외 선진사례 요약

구 분	개 념	대상 및 유형	정 책 화
프랑스	·연대의 경제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상호 연대하고 평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경제	·협동조합, 공제조합, 공제보험 결사체 등	·새로운 일자리 청년 서비스 정책 ·연대금융 개발 및 지원 ·사회연대경제활동 조직화 및 구조화를 위한 지원
영국	·지방의 커뮤니티에 의해 설립되어 지방의 커뮤니티가 소유 관리하고, 지방의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목적	·협동조합, 공제조합, 자선단체, 재단(전통적 형태) ·공동체기업회사(CIC) *주로 커뮤니티협동조합형태로 존재	·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유형의 회사법으로써 공동체이익회사(CICs: Community Interest Companies)법을 제정
스웨덴	·대중운동으로서 시민권을 강조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역할과 보편적 복지국가 역할의 변화에 따른 시민 참여형 복지주체로서의 역할	·노동운동, 소비자협동조합, 주택조합 등 ·최근에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됨	·사회서비스법 제정(실업자들에 맞는 근로와 고용지원을 통해 정규노동시장 진입)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며 인간적 향상을 시도하는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	·종교단체, 공제조합, 협동조합(전통적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존재	·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1991년) 지방정부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 제공(계약방식)

캐나다 퀘벡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지역사회를 이익을 위한 혼합조직	·협동조합기업, 공제보험 ·연대협동조합 등	·노동자 연대펀드 ·상타에(사회적 경제 영역 지원활동) ·연대금융 ·활발한 연구네트워크
미국	제3섹터, 비영리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투자	· 재단, 자선조직 · 수익활동하는 비영리조직 ·기업의 사회적책임 (CSR)	· 정부의 보조금, 용역계약, 서비스요금 지불계약 등의 형태 지원 ·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CDFIs) 기금 지원 ·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지원 · 지역재투자법(CRA) 기금 지원
일본	연구자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협동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협동경제'라고 하기도 함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컬렉티브 ·비영리조직 ·사회적 기업(SB) ·커뮤니티 비즈니스 (CB) 등	· 경제산업성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소셜 비즈니스에 포함되어진 의미로 지원하고 있음 - 인지도향상에 기여하는 계발 - 광고 및 보급활동, 네트워크 구축 - CB/SB 창출하는 사업환경의 정비 - CB를 담당하는 인재의 발굴, 육성
성미산 마을 만들기	사회적관계를 회복하는 경제활동	·공동육아어린이집, 대안학교, 의료생협 등 자발적 결사체	·지역주민 스스로 마포연대 설립 ·마을기업, 자발적노동, 지역통화 등의 유기적인 연결
원주	·협동조합간 협동의 모델 - 지역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들려는 노력	·원주밝은신탁, 한 살림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들	·지역사회의 가능한 자원을 활용, 생산, 소비,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협동조합 운동 확산 ·지역에 당면한 사안들에 대한 지자체와 거버넌스 구조 유지-원주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 경북	·지역밀착형 운동방식 - 지역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지역의 주체가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업적 방식이나 사회운동에 의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사회적 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존재	·사회적 기업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

2) 시사점

□ 왜 사회적 경제를 논의해야 하는가

선진사례를 통해 왜 사회적 경제 정책이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각국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제 사회적 경제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해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소통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고 확산할 수 있다. 생활세계의 위기는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빈곤층,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심화된 소득불평등, 점차 증가하는 고용불안,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한 절대빈곤의 증가 등 이 모든 것이 생활세계의 위기를 뜻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은 필요한 곳에 그냥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의 정부정책은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단순히 물리적인 인프라를 제공해주면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는 우리의 삶에서 나눔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꿈꾸게 한다. 예를 들면 대안건축과 대안 교육을 꿈꾸게 하던지 말이다. 이는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틀에 박힌 자본주의적 생활세계를 바꾸어내는 일이다. 성미산 사례를 통해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공동카센터, 대안학교 등 다양한 실험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태동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하다. 이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에는 지역 내 인재가 포함될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주체를 키워낼 수 있고, 역량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충남의 농촌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나간다면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연대와 협동의 가치를 확장시킴으로서 지역 내

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대가 필수이다. 이제까지 지역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상호 거래비용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은 다 서울로 올라가버리고, 지역 내 소비자도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유럽의 협동조합 네트워크처럼 우리도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한다면 그 자체로 내부거래 시장을 확장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충남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충남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의 연대와 협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정부, 지자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들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가 특정한 단체를 통해서 배양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과제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안전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중층적 주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의해 발전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각국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스웨덴의 지역협동조합 발전센터나 캐나다 퀘백의 상티에의 활동이 그러하다. 이들 조직은 특정한 섹터의 머무르지 않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다양한 조직들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 각국 모두 공통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캐나다 퀘백의 상티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이후 정부와 협상이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상티에는 금융,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체 부서와 협력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개발 조직과 운동, 그리고 각종 산업부문을 한 데 뒤섞은 독특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또한 이 조직은 연대금융의 역할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이 장기 계획을 착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빛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퀘백에는 Fiducie라는 재정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한다. Fiducie의 역할은

투자 자본 풀을 형성하는 2차 시장을 조성하거나, 기업의 장기 자본 수요에 대응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경제 스펙트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아도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통해 기존의 협동조합이나 자활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미산 사례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생겨난 조직들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망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자발적 모임의 배경은 성미산지키기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서로 교류하였다는데 있다.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떤 인자가 있는지 알게 되고, 서로 교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모아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결합이 중요하다. 원주의 경우 지역사회의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소비,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동조합 운동의 확산은 사회적 기업의 출현으로 이어져 지역 내 더욱 확대된 경제 활동과 서비스 구조를 갖추으로써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상호부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인데 ‘협동카드’와 ‘공동의 홈페이지 구축(쇼핑몰 포함)’, ‘협동기금 출연’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수준에 맞는 지방정부의 지원의 설계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우선적으로 만나고, 신뢰를 쌓고, 공동 사업을 하는 단계로 네트워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수준별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먼저 네트워크 형성기에는 서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면대면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받아야 한다. 즉, 사회적 기업협의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 조직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후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공동사업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구축, 유통망 확립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돕고,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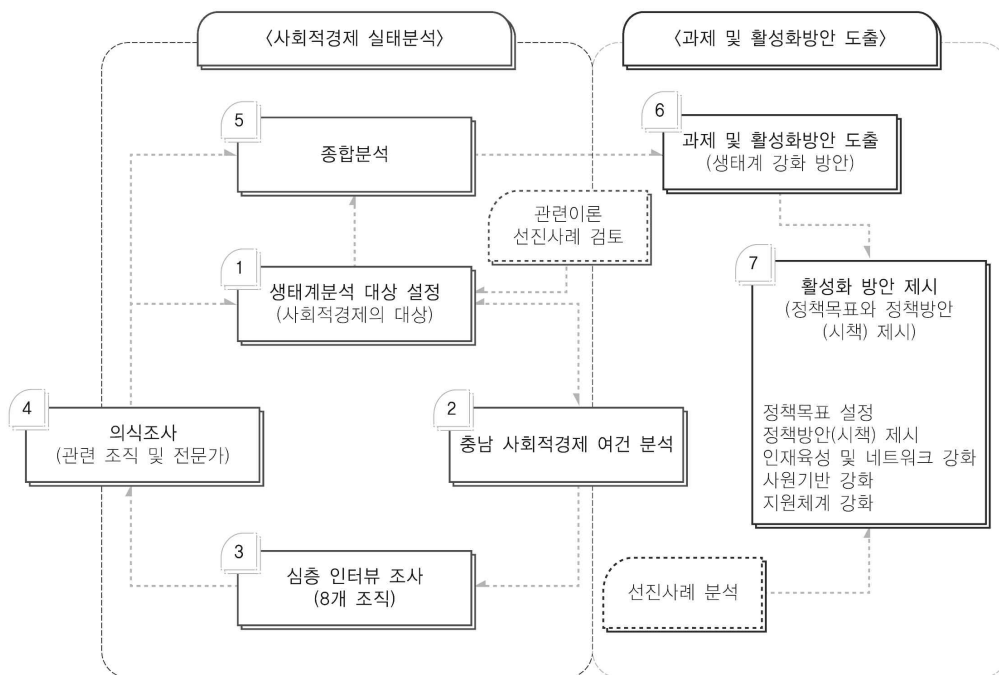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속세대를 키워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충남도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사업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

하는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파트너를 만나는 과정이어야 한다. 프랑스의 '지방고용노동포럼'이나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수당의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 직업상담, 직업 훈련, 고용 보조금, 창업지원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지역에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사람에 10년을 투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제 4 장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분석

본 장에서는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충남의 경제정책, 사회적 경제 정책 등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 중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홍성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10] 사회적 경제 실태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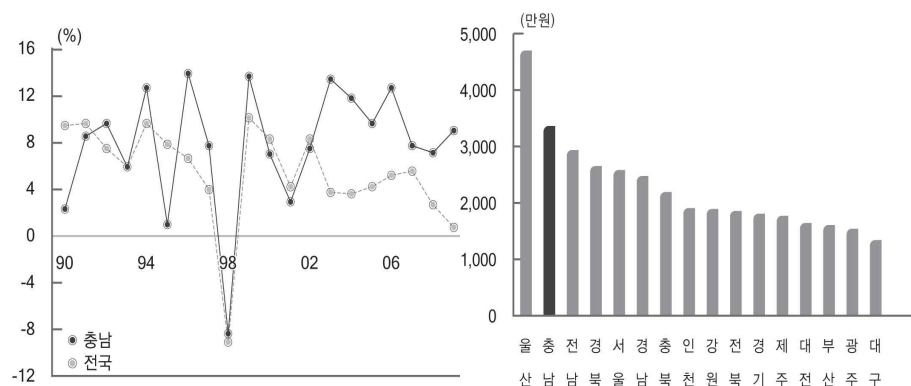
제1절 충남의 사회적 경제 여건분석

비단 충남뿐만 아니라 타 시도를 살펴보다도 사회적 경제의 인식과 기반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여건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 중 사회적 기업과 자립형 마을공동체사업(이하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충남의 사회적 경제 여건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충남 경제의 한계극복을 위한 충남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후 충남의 사회적 경제 여건을 정책여건, 조직구성여건, 제반인식여건, 미래전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충남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1) 충남경제의 현황

그 동안 충남은 외자유치, 기업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09년 충남의 GRDP는 66조 규모로 16개 시도 중 5위이며, 특히 1인당 GRDP¹¹⁾는 3,370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2위였다.



[그림 11] 충남지역 1인당 GRDP1) 및 시도별 1인당 GRDP1)(09년)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충남지역 경제의 특징 및 발전방향, 2011, pp.1-3.

11) 1인당 GRDP는 울산(4,623만원), 충남(3,370만원), 전남(2,864만원), 경북(2,655만원), 서울(2,565만원) 순

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2009년 5.8%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2000년 이후 연평균 GRDP 성장률은 9.1%로 16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의 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왔고, 수치적으로만 살펴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경제우위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 충남경제의 문제점

충남이 그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외자유치, 기업유치가 북부 4개 시군(천안·아산·서산·당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일부 성과가 달성하였을지라도 충남경제는 지역불균형과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마저도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 간 과당경쟁 등으로 투자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들의 토착화와 지역기여활동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충남이 해결해야 할 충남경제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충남의 월평균 임금 60% 이하 취약계층비중¹²⁾은 53.5%로 16개 시도 중 1위이고, 둘째, 2010년 충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¹³⁾은 14.87%로 16개 시도 중 4위였다. 셋째, 2009년 충남의 민간소비지출¹⁴⁾은 1,008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11위로 전국평균인 1,185만원보다 적었고, 넷째, 2010년 충남의 재정자립도¹⁵⁾는 36.6%로 16개 시도 중 10위로 전국평균인 52.2%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외형적 성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충남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발적 발전이 필요하며, 내발적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2) 한국노동연구원의 2008년 노동패널데이터 분석결과 임

13) 고령인구비율은 전남(18.29%), 경북(15.57%), 전북(15.22%), 충남(14.87%) 순

14) 민간소비지출은 서울(1,516만원), 울산(1,214만원), 경기(1,206만원), 부산(1,142만원) 순

15) 재정자립도는 서울(85.8%), 경기(72.8%), 인천(70.4%), 울산(67.2%) 순

2. 충남 사회적 경제의 여건

1) 정책여건

외형적 성장이 도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였고, 충남도 또한 그 혜택을 완전히 공유하지 못하였다. 외형적 성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과 충남의 재정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는 충남의 부가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 지역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은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충남도 행정조직으로 사회적 경제 T/F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른 시도에 한발 앞서 내발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사회적 경제 지원의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T/F 주요업무는 사회적 기업육성, 마을기업 육성 등 아직까지 일부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2011년의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예산 또한 56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육성 사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형 지역경제 구현에 그 목적이 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풀뿌리형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매칭성격으로 충남만의 차별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은 전무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획일적 정책을 탈피하기 위해 충남도는 나름대로의 추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충남도는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립경영을 지원 한다는 전략 하에 신규시책 중 사회적 경제 정책과 융·복합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3> 도 신규시책 중 연계발굴 가능사업

분 야	연 계 사 업
기획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 살기좋은 都農 상생마을 만들기
경제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 마련 - 영세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전통시장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자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 편익시설 사회적 기업 참여 - 자원봉사 활성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
문화체육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문화콘텐츠 융합으로 '新天下之大本' 농어촌마을 조성 - 문화바우처 사업
농 수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등 마케팅 역량 강화 - 살기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 농특산물 쇼핑몰 「농사랑」 운영 활성화
복지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사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중증장애인재활시설 설치 - 보호자없는 병실운영
환경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 융복합사업과 연계한 산촌시범마을 육성 - 숲산림휴양단지 조성 - 녹색제품 소비촉진
농업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자원활용 6차 산업화
공무원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이해 과정(전문과정) 설치 운영 - 사회적 경제 정책을 공통 기초 소양과목으로 반영
홍보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홍보관 운영 활성화
여성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주자 활용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창업과 사회적 기업 연계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아울러 기존시책 중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으로 육성 지원 가능한 사업분야에 대해서 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발굴에 노력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재정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또 각 실국별로 관련 시책사업과 사회적 기업 연계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과 연계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산의 확보는 더딘 편이다. 비록 충남이 2012년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지원확대를 위해 예산의 증액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충남의 사회적 경제 지원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해볼 때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주요사업은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14억),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기반 구축(4억), 사회적 경제 이해확산 및 사회적 기업육성(3억),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138억) 등 이다.

<표 24> 2012년 충남의 사회적 경제지원 예산(안)

사 업 명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사회적 경제 분야)	15,939	8,640	4,082	3,208	9
① 사회적 경제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1,410	—	1,410	—	—
②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400	—	400	—	—
③ 사회적 경제 이해확산 및 사회적 기업 육성	305	—	248	48	9
④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	13,824	8,640	2,024	3,160	—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2011)

사회적 경제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충남은 중소기업 토탈지원,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전략산업 육성, 산업입지 공급,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전략 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육성계획(38개 과제)을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지원 총사업비는 38개 과제 총 3,411억 규모(국비 2,592억, 도비249억, 시군비 395억 등)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남의 사회적 경제 지원 총예산은 56억 수준이나 충남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총예산은 3,400억 정도이며 특히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전략산업 육성에는 900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내발적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관련 지원예산 중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사용하는 예산인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예산과 비교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예산은 중소기업육성정책 예산의 1.6% 수준이며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전략산업육성 예산과 비교해보더라도 6.2%에 불과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비록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 관련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충남의 사회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분야는 금융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5> 충남의 2011년 중소기업지원 예산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백만원)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계 (9개 분야)	38개 과제	341,143	259,219	24,900	39,518	17,506
1. 중소기업 금융지원	3개 과제	5,820	-	5,820	-	-
2.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수출지원확대	6개 과제	3,065	1,000	2,060	-	5
3. 기업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4개 과제	1,378	-	440	938	-
4.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제도모	4개 과제	20,315	11,197	500	8,412	206
5. 투자 및 창업 활성화	3개 과제	31,487	21,600	3,117	6,770	-
6. 산업용지 적기 공급	5개 과제	167,949	164,444	705	2,800	-
7. 일자리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칭 해소	3개 과제	3,786	2,172	1,554	60	-
8. 신기술 개발 및 지역특화산업육성	5개 과제	16,562	9,999	2,440	505	3,618
9. 신성장동력 창출 및 전략 산업 육성	5개 과제	90,781	48,807	8,264	20,033	13,677

2)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구성여건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는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에서부터, 공공지원형 사회적 기업, 민간 지원기관까지 다양하며 충남에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외에도 81개의 자활공동체, 359개의 시민단체, 17개의 소비생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이 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조직들과 사회적 기업의 연계모델을 개발하고 전문기관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유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표 26>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현황(2011년 6월 기준)

(단위 : 개)

구 분	총 남 현 황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81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17
충남형 사회적 기업	30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립형공동체사업)	37
시민단체	359
소비생활 협동조합	17
산림조합	18
장애인보호작업장	15
노인생산공동체	243
대안금융회사	3
농 협	426(중앙회 제외)
수 협	8
신 협	105
새마을 금고	62
계	1,421

본 절에서는 충남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중 충남의 사회적 경제 T/F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만을 대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충남의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하 인증 사회적 기업)수는 2011년 7월 기준 17개로 대전(11개), 제주(11개)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표 27> 시도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1년 7월 기준)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18	28	28	34	20	11	18	94
53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2	24	17	24	27	25	20	11

그러나 2011년 7월에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 28개가 추가로 인증되어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58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충남의 사회적 기업 수를 살펴보면, 총 80개중 가공·유통분야 35개, 환경·녹지분야 10개, 기타분야 12개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증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분야가 5개(29.4%)로 가장 많은 반면, 충남형 사회적 기업은 가공·유통분야가 31개(38.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가공·유통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28> 분야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1년 7월 기준)

(단위 : 개)

구 분	계	보건 보육	사회 복지	문화	환경 녹지	교육	가공 유통	기타
계	80	4	7	7	10	5	35	12
인증 사회적 기업	17	3	5	—	3	2	2	2
예비 사회적 기업	5	—	—	1	1	—	2	1
충남형 사회적 기업	58	1	2	6	6	3	31	9

충남 사회적 기업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12개, 서천군 10개, 아산시와 논산시 각각 8개인데 반해 계룡시는 사회적 기업이 한 개도 없고, 보령시는 1개, 태안군은 2개에 불과하다. 인증 사회적 기업이 1개도 없는 시군은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7개 시군이며, 계룡시의 경우 충남형 사회적 기업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시군별 불균형은 사회적 경제의 견실한 네트워크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29> 시군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1년 7월 기준)

(단위 : 개)

구 분	계	인 증	예비 + 충남형	구 분	계	인 증	예비 + 충남형
계	80	17	63				
천 안 시	12	4	8	연 기 군	5	3	2
공 주 시	5	2	3	부 여 군	3	1	2
보 령 시	1	—	1	서 천 군	10	—	10
아 산 시	8	1	7	청 양 군	3	—	3
서 산 시	5	1	4	홍 성 군	4	—	4
논 산 시	8	2	6	예 산 군	5	—	5
계 룡 시	—	—	—	태 안 군	2	—	2
금 산 군	6	2	4	당 진 군	3	1	2

충남 사회적 기업의 조직유형을 살펴보면 상법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가 37개로 전체의 46.3%, 영농(어)법인 18개(22.5%), 민간단체 15개(18.8%)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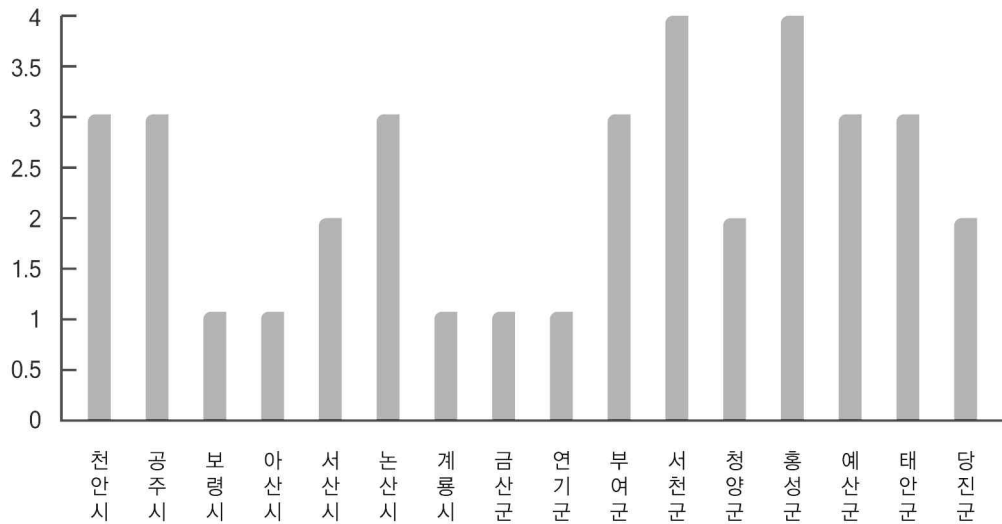
상법회사가 많은 이유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승인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비교적 설립이 쉬운 상법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0> 조직유형별 사회적 기업 현황(2011년 7월 기준)

(단위 : 개)

구 분	합계	상법 회사	사단재단 법인	사회복지 법인	민간 단체	영농어 조합	소비자 생협	농협
합 계	80	37	6	2	15	18	1	1
인증 사회적 기업	17	9	1	—	6	1	—	—
예비 사회적 기업	5	—	—	—	4	—	1	—
충남형 사회적 기업	58	28	5	2	5	17	—	1

아울러 충남의 마을기업은 2010년 11개, 2011년 26개 등 총37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었다. 시군별 마을기업 분포를 보면, 서천군과 홍성군이 각각 4개,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이 각각 3개씩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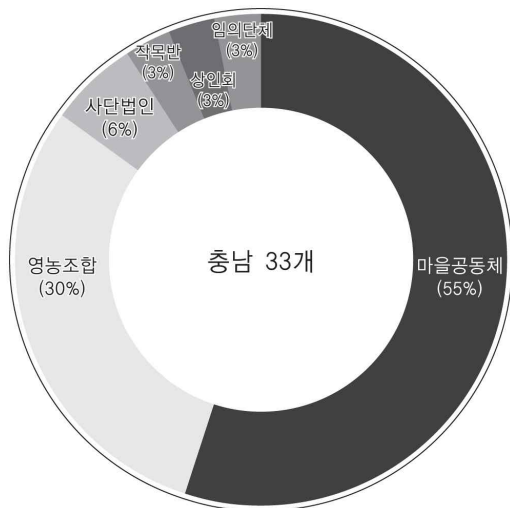
[그림 12] 충남도 시군별 마을기업 수

그러나 2011년 4개 마을기업은 2차 사업으로 재선정¹⁶⁾되어 2010-2011년 기간 중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33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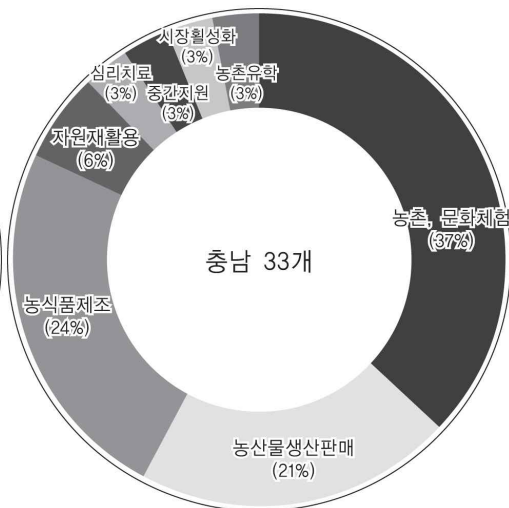
33개 마을기업을 조직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가 18개(55%), 영농조합이 10개(30%), 사단법인 2개(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기업 사업내용을 보면, 농촌·문화체험이 12개(37%), 농식품제조 8개(24%), 농산물생산·판매 7개(21%) 등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16) 천안 양곡마을회, 서천 홍림2리 마을회, 홍성 홍동 문당권역 3개단체, 홍성 홍동마을 자치주민 모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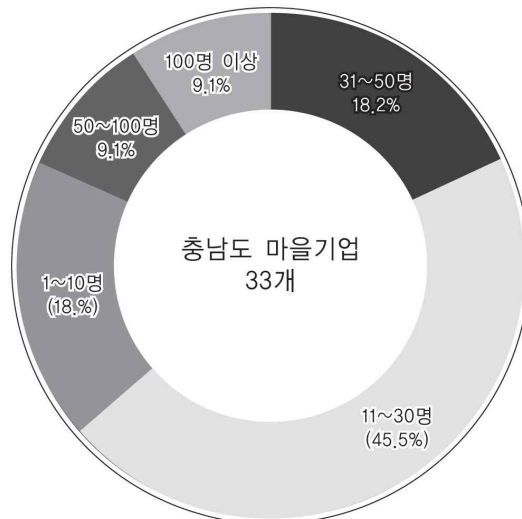


[그림 13] 충남도 마을기업 조직유형



[그림 14] 충남도 마을기업 사업내용

충남도 33개 마을기업의 총 회원수는 1,150명으로 기업당 평균 34.9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기업 회원규모는 11명~30명이 15개(45.5%), 1명~10명과 31명~50명이 각각 6개(18.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50개 이하 중소규모 회원규모를 가진 기업이 27개(81.8%)로 대부분의 마을기업은 중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15] 충남도 마을기업 회원규모

3) 제반인식여건

본 절에서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제반인식에 대한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낯설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앞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도 두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겠다. 인식도 조사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조직의 특성, 연대구조 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¹⁷⁾를 기반으로 하였다.

<표 31> 사회적 경제 인식 여부

조 직 유 형	들어본적 있음	들어본적 없음
장애인보호작업장	80.0	20.0
노인생산공동체	85.5	14.5
자활공동체	81.9	18.1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80.2	19.8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단체	82.7	17.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6.5	23.5
시민단체	85.7	14.3
금융관련기관	81.9	18.1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분류되는 조직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남 사회적 경제 TF와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80.2%는 높은 수치라 할 수 없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준비단체보다 낮은 수치이다.

17) 제4장 제2절 '충남의 사회적 경제 의식분석' 참조

<표 32>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의 부합정도

구 분	매우 부합함	부합함	보통	부합 하지않음	전혀 부합하지 않음	통계량
장애인보호작업장	86.7	13.3	0.0	0.0	0.0	13.751
노인생산공동체	61.8	36.4	1.8	0.0	0.0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65.3	33.3	1.4	0.0	0.0	
(충남형)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62.8	31.4	5.8	0.0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65.4	25.9	8.6	0.0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8.8	41.2	0.0	0.0	0.0	
시민단체	59.5	38.1	2.4	0.0	0.0	
전 체	64.1	31.8	4.1	0.0	0.0	

또한 개별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합한다는 응답률이 보통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부합한다는 응답률이 62.8%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 또한 높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각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경제의 일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경제주체간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충남은 이들 이질적인 조직들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미래전망

<표 33> 현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직유형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어렵다	매우 어렵다
장애인보호작업장	0.0	26.7	73.3	0.0	0.0
노인생산공동체	0.0	30.9	54.5	10.9	3.64
자활공동체	1.4	30.6	59.7	8.3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0.0	33.7	58.1	5.8	2.3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단체	0.0	33.3	58.0	6.2	2.4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0	35.3	58.8	5.9	0.0
시민단체	0.0	35.7	57.1	7.1	0.0
금융관련기관	0.9	26.4	63.9	8.8	0.0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현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도의 홍보와 지원의 성과가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서조차 그 수치가 높지 않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향후 여건을 묻는 질문에는 좋다는 응답률이 높아 충남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미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 직 유 형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어렵다	매우 어렵다
장애인보호작업장	6.7	66.7	26.7	0.0	0.0
노인생산공동체	0.0	65.5	32.7	1.8	0.0
자활공동체	2.8	75.0	19.4	2.8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1.2	74.4	22.1	1.2	1.2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단체	3.7	67.9	28.4	0.0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0	76.5	23.5	0.0	0.0
시민단체	4.8	69.0	26.2	0.0	0.0
금융관련기관	3.5	71.8	22.9	1.8	0.0

충남도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온전히 사회적 경제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긍정적 미래는 현재의 노력 여하에 크게 좌우될 것이며 도는 미래 충남의 사회적 경제의 비옥한 토대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3. 충남 사회적 경제 여건으로 본 시사점

충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경제의 인식을 확대 하고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깨닫고 사회적 경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회지표(사회적 경제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환경이 조성되면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 예산의 확대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 규모나 성격의 차이가 커서 이런 이질적인 부분의 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조직 유형별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체간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며 충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단체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끌어 들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단체들과 사회적 기업 연계모델을 개발, 전문기관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유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충남의 사회적 경제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혼란스럽고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지원이 많은 사회적 기업 또한 그 분야에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한데, 이는 상호간에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견실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초기단계인 사회적 경제가 도입기를 지나 발전기를 거쳐 성숙기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충남도의 역할이며, 성숙기가 도래할 때 도민의 삶은 보다 윤택해지고 진정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다. 외형적 성장이 담보하지 못했던 도민의 행복을 내발적으로 채워가야 할 것이며,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때 충남도는 그 혜택을 완전히 공유할 것이다. 이제 충남의 사회적 경제는 시작단계임을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경제주체 모두가 노력해서 충남이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충남 사회적 경제 의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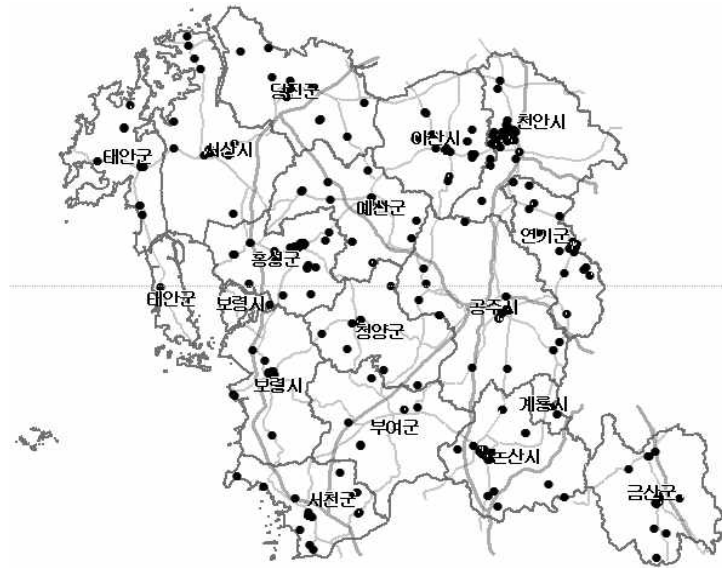
1. 조사개요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조직의 특성, 연대 구조 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주간 교육된 조사원을 통해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적 분석 후 의심나는 설문지에 대해서는 재방문과 전화 인터뷰조사를 통해 9월 19일부터 1주간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충남의 16개 시군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대상을 노대명(2007년)의 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유형, 8개 조직으로 나누어 총 880개 샘플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설문거부, 부실조사 등을 제외한 총 595개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기초분석결과 금융관련(유형D)은 다른 조직과 뚜렷한 차이가 있어 통계값 해석이 혼란을 주기 때문에 실태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35> 설문대상(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및 표본수

구 분		충남의 조직수	조사설계 (샘플수)	조사결과	
				응답자수	응답자(%)
유형A (142명)	장애인보호작업장	15	15	15	2.5
	노인생산공동체	243	60	55	9.2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81	81	72	12.1
유형B (167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113	113	86	14.5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116	116	81	13.6
유형C (59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7	17	17	2.9
	시민단체	359	50	42	7.1
유형D (227명)	금융관련 (대안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662	239	227	38.2
전 체		1606	691	595	100.0



[그림 16] 조사대상 조직의 분포

설문조사표의 구성은 조직의 일반적 현황과 조직 및 구성원의 특징, 영업 및 경제활동 특징, 조직의 연대 및 네트워크 구조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정도,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의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36>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직의 일반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 모기관 유무 - 조직형태, 조직형태 변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운영예산 - 채무상태, 매출액 - 순수익
조직 및 구성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수 - 취약계층 등 고용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 회원제도 특성
영업 및 경제활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원재료 구입처 -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판매처 - 정부와 민간 지원
조직의 연대 및 네트워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하고 있는 단체 - 충남도와 시군의 연대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활성화를 위한 의식 - 연대 장애 요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의 인지정도 - 사회적 경제 운영원리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부합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인지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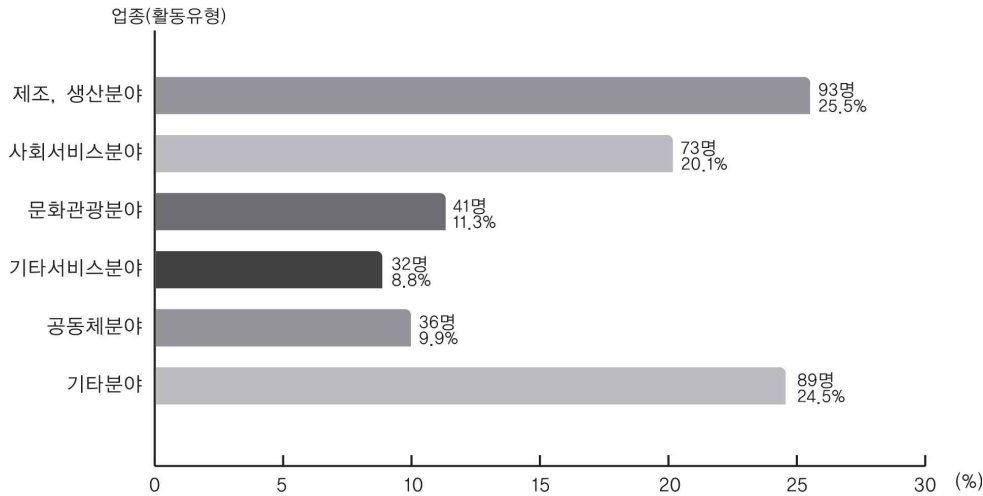
□ 설문 응답자(조직) 속성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고, 남성과 여성은 비슷하다. 조사대상 조직의 형태는 조합이 가장 많았고, 절반 이상이 2000년 이후 설립된 조직이다.



[그림 17] 설문대상자 및 응답자의 속성

그리고 이들 조직들의 주요 활동으로는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조분야, 문화관광분야도 많았다. 하지만 이들 분류 외에 기타 분야가 상당히 많아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림 18] 설문대상 조직의 활동 특성

* 응답자수에는 다소의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음(이하 동일)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

1) 조직운영 실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를 보면 조직의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정부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매출액의 경우 2억 4천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지원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조직들은 이보다 조금 적은 1억 9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조직의 순이익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지정 조직들은 2천 5백만원, 준비중인 기업은 1천 7백만원 정도로 적었다. 조직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많은 조직들이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채규모는 1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 역시 10여명으로 비교적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가 오히려 조직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조직형태별로 매출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금융관련업의 주요 형태인 조합이 가장 크고, 기타 법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에 있어서는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단체나 임의단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실태

(단위 : 만원)

구 분		매출액	순수익	핵심사업 매출액 비중(%)	종사자수 (인)	채무있음 (%)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15,914	841	99.9	9.1	20.0
	노인생산공동체	20,937	1,702	95.3	8.6	16.4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19,986	1,936	94.0	12.5	6.9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23,527	2,465	90.9	11.5	9.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19,302	1,708	93.8	10.1	8.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0,680	1,760	94.4	8.1	.
	시민단체	38,704	3,426	94.7	10.4	7.1
	통계량	1,099	1,427	0.824	0.536	7.606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16,621	2,640	92.4	6.5	21.6
	기타 법인	9,056	1,038	95.4	9.3	7.9
	민간단체(임의단체)	13,787	1,811	93.0	5.4	7.7
	조합	64,443	3,528	92.9	16.0	8.2
	기타	18,660	3,139	95.3	5.4	11.1
	통계량	28.017**	6.150**	0.474	8.617**	7.219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20,803	2,972	92.0	11.9	18.3
	사회서비스분야	10,131	1,141	94.8	7.1	4.1
	문화관광분야	11,081	1,015	96.5	7.5	17.1
	기타서비스분야	13,338	1,585	93.9	14.4	9.4
	공동체분야	12,273	1,472	93.3	7.3	2.8
	기타분야	99,788	4,603	93.3	13.7	4.5
	통계량	48.766**	7.149**	0.467	2.921**	17.827**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19,054	1,966	92.7	11.0	9.9
	지원받은 경험 없음	28,915	2,315	95.1	10.1	9.1
	통계량	4.119**	0.718	1.746	0.296	0.061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15,396	1,845	93.3	8.5	9.7
	보통	57,443	3,382	95.9	14.3	9.4
	부합하지 않음	11,638	1,188	85.3	14.4	6.7
	통계량	29.55**	4.910**	2.794*	6.715**	0.158
전체		23,379	2,119	93.8	10.6	9.5

**는 95, *는 90 유의수준을 의미함(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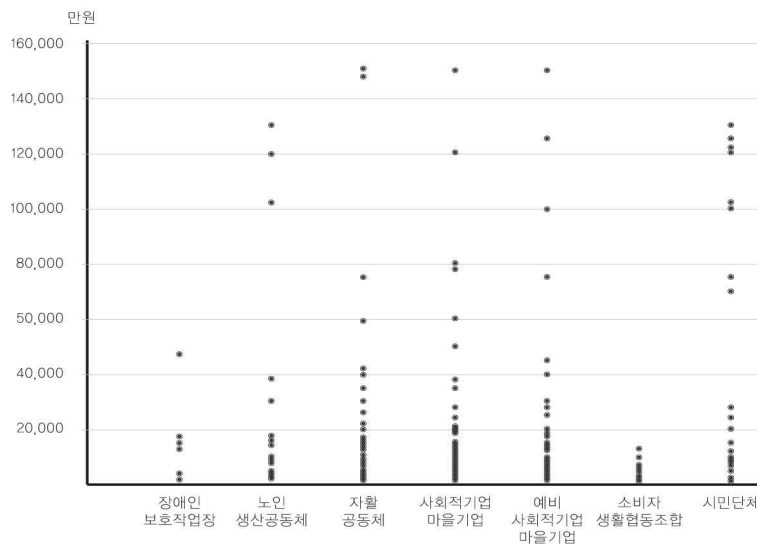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업종(활동) 영역별로 보면 금융 등이 포함된 제조업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조업분야, 문화관광분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동체분야나 사회서비스 분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 역시 공동체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들의 주요 활동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활동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을 받은 경험의 유무에 따른 매출액과 순이익, 종사자 규모 등을 보면 두 그룹 간에 핵심사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차이를 찾아보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나, 조직의 특성보다는 조직리드와 정보인식의 차이가 지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부합정도에 따라 매출액과 순수익, 종사자수 등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부합하는 경우가 종사자수는 적지만 매출액과 순수익은 오히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매출액의 분포를 보면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몇 조직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의 매출액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직유형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같은 조직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조직유형별 매출액 분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과 쇠퇴 측면에서 매출액을 분석하며, 2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으며(56.1), 2년 후에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63.6).

조직유형별로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자활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비교적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매출액의 변화

구 분		2년전과 비교		2년후 예측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61.5	38.5	84.6	15.4
	노인생산공동체	46.2	53.8	61.5	38.5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63.2	36.8	66.2	33.8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52.5	47.5	69.6	30.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61.1	38.9	62.5	37.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6.7	33.3	66.7	33.3
	시민단체	55.0	45.0	61.0	39.0
	통계값	5.463		3.741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62.2	37.8	70.3	29.7
	기타 법인	48.0	52.0	55.1	44.9
	민간단체(임의단체)	51.8	48.2	61.8	38.2
	조합	66.9	33.1	75.4	24.6
	기타	31.3	68.8	50.0	50.0
	통계값	13.931**		12.887**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62.6	37.4	68.5	31.5
	사회서비스분야	44.9	55.1	49.3	50.7
	문화관광분야	62.9	37.1	74.3	25.7
	기타서비스분야	36.0	64.0	44.0	56.0
	공동체분야	60.6	39.4	81.3	18.8
	기타분야	61.4	38.6	71.1	28.9
	통계값	11.060**		19.267**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54.3	45.7	64.2	35.8
	지원받은 경험 없음	59.7	40.3	67.3	32.7
	통계값	1.016		0.370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54.8	45.2	64.7	35.3
	보통	61.1	38.9	69.7	30.3
	부합하지 않음	53.8	46.2	46.2	53.8
	통계값	1.223		3.082	
전체		56.8	43.2	65.6	34.4

조직형태별로는 주식회사나 개인 사업자 형태의 조직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활동) 유형별로는 문화관광분야의 매출액 증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민간의 지원경험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적합성 여부와도 큰 차이는 없었지만 2년 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2) 매출구조 실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매처의 경우 대부분 일반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판매, 우선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조직 유형, 조직형태와 관계없으며,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공공기관 판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처(1/2)

구 분		시장판매 (영업을 통한 판매)	공공기관 판매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95.53	4.79
	노인생산공동체	94.75	5.67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95.04	5.1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93.57	6.66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94.25	5.8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6.18	3.82
	시민단체	95.76	4.45
	통계값	0.562	0.557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94.54	5.77
	기타 법인	93.75	6.53
	민간단체(임의단체)	95.35	4.72
	조합	95.38	4.80
	기타	92.22	7.78
	통계값	1.123	1.143

<표 40>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처(2/2)

구 분		시장판매 (영업을 통한 판매)	공공기관 판매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95.72	4.37
	사회서비스분야	92.86	7.24
	문화관광분야	96.71	3.38
	기타서비스분야	93.22	7.23
	공동체분야	95.28	5.15
	기타분야	94.25	6.02
	통계값	1.810	1.839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96.35	3.81
	지원받은 경험 없음	92.52	7.67
	통계값	21.045**	20.099**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95.42	4.74
	보통	93.89	6.38
	부합하지 않음	88.00	12.00
	통계값	6.687**	6.403**
전체		94.63	5.56

3) 정부지원여부

조사대상 368개 사회적 경제 조직 중 정부나 민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55.2%로 나타났으며, 지원을 받은 분야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비 지원에서부터 각종 사업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농지원금	운영비	장애인자원	물품비
사회복지서비스지원	귀농정착금	소외계층창업자금지원	북한이탈주민사업
정착지원	바우처서비스	전문인력	쌀보조
육아사업비지원	산촌농장직원급여지원	후원금지원	문화활동비지원
체험마을지원	동막종장직원급여지원	농업발전기금	여성정책활동비
돌봄지원	산림조성사업비	녹색농촌지원	농기계수리사업
재활수거지원	노인요양지원비	가축시장현대화시설	유통센터건립기금
재활지원서비스	자립지원비창업지원	차량지원	농산물가공공장지원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경영에 얼마만큼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직들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조직유형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 지원이 끈길 경우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41>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조직의 경영상태

구 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 질 것이다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	9.1	90.9	0.0	0.0
노인생산공동체	16.1	80.6	3.2	0.0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15.8	76.3	7.9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17.0	78.7	4.3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17.8	75.6	6.7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0.0		0.0
시민단체	20.0	76.0	4.0	0.0
전 체	16.1	79.0	4.9	0.0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네트워크) 구조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사회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70% 정도가 활발하거나 매우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조직유형이나 형태, 활동유형에 상관없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 사회적 경제 조직에 따른 연대구조

구 분		매우 활발함	활발함	보통	활발하 지 않음	전혀 활발하 지 않음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6.7	60.0	33.3	0.0	0.0
	노인생산공동체	14.5	52.7	30.9	1.8	0.0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15.3	52.8	30.6	1.4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14.0	58.1	25.6	2.3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 체	12.3	56.8	28.4	2.5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9	70.6	23.5	0.0	0.0
	시민단체	16.7	52.4	28.6	2.4	0.0
	통계값			4.684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16.2	48.6	32.4	2.7	0.0
	기타 법인	12.3	61.4	22.8	3.5	0.0
	민간단체(임의단체)	13.8	67.7	18.5	0.0	0.0
	조합	12.7	47.8	38.1	1.5	0.0
	기타	22.2	55.6	22.2	0.0	0.0
	통계값			17.267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11.8	54.8	30.1	3.2	0.0
	사회서비스분야	13.7	54.8	30.1	1.4	0.0
	문화관광분야	14.6	63.4	22.0	0.0	0.0
	기타서비스분야	18.8	56.3	21.9	3.1	0.0
	공동체분야	5.6	58.3	33.3	2.8	0.0
	기타분야	15.7	53.9	29.2	1.1	0.0
	통계값			7.420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11.3	59.6	26.6	2.5	0.0
	지원받은 경험 없음	16.4	51.5	30.9	1.2	0.0
	통계값			4.103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12.7	58.5	26.7	2.1	0.0
	보통	15.4	48.7	34.2	1.7	0.0
	부합하지 않음	13.3	73.3	13.3	0.0	0.0
	통계값			5.755		
전 체		13.6	56.0	28.5	1.9	0.0

연대 교류는 주로 마을과 해당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도 상당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조직, 준비하고 있는 조직의 경우 다른 조직에 비해 마을 내에서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대하고 있는 단체의 소재지

구 분		마을	시군	시군외 충남	충남외 충청	수도권	기타 타지역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6.7	66.7	6.7	0.0	20.0	0.0
	노인생산공동체	9.3	48.1	11.1	5.6	24.1	1.9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2.9	52.9	10.0	8.6	24.3	1.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10.7	50.0	8.3	9.5	20.2	1.2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12.5	53.8	6.3	7.5	17.5	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4.7	5.9	5.9	23.5	0.0
	시민단체	4.9	51.2	12.2	14.6	14.6	2.4
	통계값			17.448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10.8	48.6	5.4	10.8	24.3	0.0
	기타 법인	7.0	54.4	7.0	3.5	24.6	3.5
	민간단체(임의단체)	4.9	59.0	11.5	9.8	14.8	0.0
	조합	8.3	51.5	11.4	12.1	15.9	.8
	기타	17.6	35.3			41.2	5.9
	통계값			29.544*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11.0	51.6	7.7	9.9	16.5	3.3
	사회서비스분야	5.6	62.0	7.0	4.2	19.7	1.4
	문화관광분야	7.3	65.9	7.3	4.9	14.6	0.0
	기타서비스분야	12.5	37.5	12.5	3.1	31.3	3.1
	공동체분야	2.9	55.9	5.9	5.9	29.4	0.0
	기타분야	8.0	44.3	12.5	13.6	20.5	1.1
	통계값			25.672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8.1	66.5	9.1	5.1	8.1	3.0
	지원받은 경험 없음	7.9	36.0	8.5	12.2	35.4	0.0
	통계값			58.740**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8.6	59.9	9.9	6.0	12.9	2.6
	보통	7.0	39.5	7.0	13.2	33.3	0.0
	부합하지 않음	6.7	40.0	6.7	6.7	40.0	0.0
	통계값			34.112**			
전 체		8.0	52.6	8.9	8.3	20.5	1.7

이들 조직의 연대활동이 조직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0%이상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조직유형별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활동유형별로는 문화관광분야 업종이 많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연대구조 활성화가 조직에 주는 도움 정도

구 분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보통이 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20.0	73.3	6.7	0.0	0.0
	노인생산공동체	12.7	80.0	7.3	0.0	0.0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13.9	63.9	20.8	1.4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10.5	70.9	18.6	0.0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 체	17.3	61.7	19.8	1.2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3.5	52.9	17.6	5.9	0.0
	시민단체	19.0	59.5	16.7	4.8	0.0
통계값		19.662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18.9	64.9	10.8	5.4	0.0
	기타 법인	7.9	78.1	14.0	0.0	0.0
	민간단체(임의단체)	29.2	49.2	20.0	1.5	0.0
	조합	12.7	68.7	17.2	1.5	0.0
	기타	16.7	50.0	33.3	0.0	0.0
통계값		30.485**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12.9	72.0	14.0	1.1	0.0
	사회서비스분야	17.8	65.8	15.1	1.4	0.0
	문화관광분야	22.0	58.5	19.5	0.0	0.0
	기타서비스분야	21.9	65.6	9.4	3.1	0.0
	공동체분야	11.1	58.3	30.6	0.0	0.0
	기타분야	11.2	68.5	18.0	2.2	0.0
통계값		13.566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15.3	70.4	13.3	1.0	0.0
	지원받은 경험 없음	14.5	62.4	21.2	1.8	0.0
	통계값	4.754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16.9	68.2	14.0	.8	0.0
	보통	10.3	63.2	23.9	2.6	0.0
	부합하지 않음	20.0	73.3	6.7	0.0	0.0
	통계값	10.466				
전 체		14.9	66.8	16.8	1.4	0.0

이들 조직들이 교류하고 있는 영역은 시장영역과의 교류가 많은 반면 정부영역과 유사조직과의 교류는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조직과의 교류가 부족한 점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내부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45> 주로 교류하고 있는 영역

구 분		정부영역	시장영역	시민영역	유사조직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26.7	53.3	20.0	0.0
	노인생산공동체	23.6	40.0	23.6	12.7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22.2	27.8	37.5	12.5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18.6	43.0	20.9	17.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 체	23.5	32.1	33.3	1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3.5	47.1	29.4	0.0
	시민단체	16.7	40.5	33.3	9.5
	통계값	17.807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35.1	37.8	18.9	8.1
	기타 법인	18.4	40.4	29.8	11.4
	민간단체(임의단체)	24.6	35.4	26.2	13.8
	조합	16.4	38.1	32.8	12.7
	기타	38.9	22.2	27.8	11.1
	통계값	12.546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21.5	39.8	28.0	10.8
	사회서비스분야	27.4	38.4	21.9	12.3
	문화관광분야	24.4	36.6	26.8	12.2
	기타서비스분야	9.4	37.5	37.5	15.6
	공동체분야	25.0	44.4	25.0	5.6
	기타분야	15.7	33.7	36.0	14.6
	통계값	12.164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24.6	35.5	31.0	8.9
	지원받은 경험 없음	17.6	40.0	26.7	15.8
	통계값	6.820*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21.6	41.5	25.8	11.0
	보통	20.5	29.1	35.9	14.5
	부합하지 않음	26.7	40.0	26.7	6.7
	통계값	7.430			
전 체		21.5	37.5	29.1	12.0

이들 조직의 70%이상이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었으며, 그 시기는 주로 3년 전부터 조직 스스로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유형별로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연대협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현황

구 분		협력경험		협력시기 (몇년 전부터)	협력요청자(%)		
		있음	없음		충남도	시군	우리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80.0	20.0	2.92	15.4	15.4	69.2
	노인생산공동체	65.5	34.5	2.94	11.1	33.3	55.6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69.4	30.6	3.51	20.4	28.6	51.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73.3	26.7	2.30	12.7	27.0	60.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64.2	35.8	2.44	15.4	21.2	63.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8.8	41.2	1.80	20.0	50.0	30.0
	시민단체	76.2	23.8	4.75	15.6	40.6	43.8
	통계값	4.628		2.237**	10.373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70.3	29.7	3.88	11.5	30.8	57.7
	기타 법인	70.2	29.8	2.94	13.6	28.4	58.0
	민간단체(임의단체)	72.3	27.7	3.34	4.3	29.8	66.0
	조합	68.7	31.3	2.59	23.1	26.4	50.5
	기타	55.6	44.4	2.60	20.0	50.0	30.0
	통계값	1.958		0.804	12.278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73.1	26.9	2.97	14.7	22.1	63.2
	사회서비스분야	71.2	28.8	3.13	17.3	28.8	53.8
	문화관광분야	68.3	31.7	2.96	3.6	35.7	60.7
	기타서비스분야	65.6	34.4	2.71	28.6	23.8	47.6
	공동체분야	69.4	30.6	3.12		50.0	50.0
	기타분야	67.4	32.6	2.90	22.0	25.4	52.5
	통계값	1.107		0.054	18.146*		
지원 유무	지원받은 경험 있음	92.6	7.4	2.98	10.6	28.7	60.6
	지원받은 경험 없음	40.6	59.4	2.98	28.4	29.9	41.8
	통계값	115.690**		0.000	13.314**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72.9	27.1	2.96	12.7	28.3	59.0
	보통	63.2	36.8	2.38	20.5	28.8	50.7
	부합하지 않음	60.0	40.0	8.00	22.2	44.4	33.3
	통계값	4.046		10.283**	4.588		
전 체		69.3	30.7	2.98	15.3	29.0	55.7

이들은 지방정부로부터 주로 자금지원이나 홍보지원, 교육제공, 정보제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경우 다른 조직에 비해 경영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대내용

구 분		인건비 및 자금 지원	교육 제공	정보 제공	경영 지원	홍보 지원	물품 구매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61.5	21.4	15.4	7.7	57.1	7.7
	노인생산공동체	35.8	30.8	30.2	5.9	26.4	2.0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43.3	30.9	29.4	6.0	20.6	8.8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39.5	35.8	25.0	10.1	34.9	3.8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38.8	26.9	23.1	8.8	35.4	5.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9.4	23.5	23.5	5.9	23.5	0.0
	시민단체	43.9	35.0	20.0	10.3	31.7	12.5
	통계값	4.280	2.827	2.790	1.587	10.227	7.656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51.4	25.7	42.9	5.9	40.0	8.8
	기타 법인	45.0	28.0	24.5	10.3	30.9	4.7
	민간단체(임의단체)	46.7	29.5	21.7	6.7	31.7	6.5
	조합	34.6	35.7	25.4	8.7	31.0	5.5
	기타	11.1	27.8	5.6	0.0	11.1	5.6
	통계값	11.910**	2.359	9.895**	2.716	4.672	0.870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50.0	31.5	22.7	5.7	36.3	3.4
	사회서비스분야	45.8	30.0	22.9	8.3	29.6	7.1
	문화관광분야	37.5	37.5	20.0	7.5	24.4	12.2
	기타서비스분야	36.7	22.6	29.0	10.3	31.3	0.0
	공동체분야	38.7	30.3	37.5	6.5	28.1	9.4
	기타분야	29.4	32.5	26.2	11.0	32.1	4.9
	통계값	8.930	1.943	3.915	1.914	2.227	6.888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51.3	27.7	26.6	10.0	32.8	6.3
	보통	19.5	36.9	24.1	4.5	27.9	4.5
	부합하지 않음	33.3	33.3	13.3	6.7	26.7	6.7
	통계값	32.019**	3.027	1.414	2.932	0.950	0.443
전 체		40.3	30.9	25.2	8.1	31.0	5.8

충남도와 시군의 협력을 받은 조직들의 만족도는 절반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통정도라고 답한 경우도 44.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8> 지방정부와 협력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0.0	46.2	53.8	0.0	0.0
	노인생산공동체	0.0	41.7	58.3	0.0	0.0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0.0	56.0	36.0	8.0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1.6	50.8	42.9	4.8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0.0	51.9	44.2	3.8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0	40.0	50.0	0.0	0.0
	시민단체	3.1	43.8	37.5	15.6	0.0
	통계값			24.188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0.0	65.4	26.9	7.7	0.0
	기타 법인	1.2	63.0	30.9	4.9	0.0
	민간단체(임의단체)	2.1	36.2	55.3	6.4	0.0
	조합	1.1	43.5	50.0	5.4	0.0
	기타		10.0	90.0	0.0	0.0
	통계값			23.340**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0.0	47.1	48.5	4.4	0.0
	사회서비스분야	1.9	71.2	23.1	3.8	0.0
	문화관광분야	0.0	32.1	57.1	10.7	0.0
	기타서비스분야	0.0	66.7	33.3	0.0	0.0
	공동체분야	3.8	42.3	38.5	15.4	0.0
	기타분야	1.7	38.3	56.7	3.3	0.0
	통계값			30.691**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1.6	54.0	39.7	4.8	0.0
	지원받은 경험 없음	0.0	35.8	56.7	7.5	0.0
	통계값			8.281**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1.2	57.2	35.8	5.8	0.0
	보통	0.0	31.1	64.9	4.1	0.0
	부합하지 않음	11.1	44.4	33.3	11.1	0.0
	통계값			26.661**		
전 체		1.2	49.2	44.1	5.5	0.0

한편, 충남도와 시군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원규모 자체가 작고 한시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유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시군의 협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미흡하거나 지원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책지원 및 협력의 집중도를 높이고, 가장 기초적인 정보공유 및 교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지방정부와 협력을 어렵게 하는 점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	충남도와의 협력 시			시군과의 협력 시		
	1순위	2순위	전체	1순위	2순위	전체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7.7	9.8	27.4	10.1	13.3	23.4
지원 규모가 작고 한시적이다	39.7	11.4	51.1	31.5	8.2	39.7
세제 혜택, 우선구매,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	8.4	17.7	26.1	11.7	11.7	23.4
정보 공유를 잘 하지 못한다.	17.7	22.6	40.2	20.1	17.4	37.5
행정적인 처리만을 중시하여 관리 감독하려고 한다	7.6	17.9	25.5	9.8	15.8	25.5
지역 내 단체들 간 연대하도록 돕지 않는다.	6.3	15.2	21.5	14.4	15.8	30.2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려고 한다	2.7	5.4	8.2	2.4	17.9	20.4

4. 지역사회 기여도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효과는 90%가 넘는 지역민 고용이다. 그 밖에 고용 시장에서 약자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고용, 취약계층고용이 높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0>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고용특성

구 분		취약계층 고용	지역민 고용	정규직 고용	여성 고용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11.0	97.7	83.2	52.8
	노인생산공동체	16.4	90.5	82.1	46.9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26.3	90.5	83.7	46.8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25.9	92.6	78.8	46.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25.6	88.8	84.4	4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3	87.5	77.6	45.5
	시민단체	23.4	87.8	89.6	50.0
	통계값	0.877	0.871	0.739	0.492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39.3	96.7	87.8	45.9
	기타 법인	35.6	91.5	78.5	56.9
	민간단체(임의단체)	19.7	97.2	71.4	39.3
	조합	9.2	83.5	90.3	39.5
	기타	30.9	98.6	85.8	50.1
	통계값	11.918**	9.394**	5.395**	5.281**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35.1	90.9	84.1	39.8
	사회서비스분야	27.6	93.0	73.6	50.0
	문화관광분야	20.1	96.7	82.5	46.3
	기타서비스분야	31.6	96.4	73.5	60.8
	공동체분야	20.9	92.0	77.1	39.4
	기타분야	6.1	81.9	94.3	46.8
	통계값	7.287**	5.880**	5.001**	2.466**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21.7	90.6	82.8	45.8
	지원받은 경험 없음	25.3	90.3	82.8	46.2
	통계값	0.862	0.021	0.000	0.013
사회적 경제 부합여부	부합함	28.2	93.9	77.9	45.8
	보통	15.1	83.4	91.3	47.2
	부합하지 않음	10.7	92.0	94.4	39.7
	통계값	6.347**	12.891**	9.107**	0.347
전 체		23.3	90.5	82.8	46.0

고용구조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제활동에서도 지역기여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원재료의 구입처의 93.6%가 해당 마을이나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산품 특히, 마을상품의 구매효과가 높고, 이를 통해 물류비용절감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표 51> 사회적 경제 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구입처

구 분		마 을	시 군	시군외 충남	충남외 충청	수도권	기타 타지역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68.0	24.7	4.7	2.0	0.7	0.0
	노인생산공동체	62.7	32.5	4.1	0.7	0.0	0.0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63.4	30.6	5.4	0.6	0.1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63.4	29.7	5.6	1.0	0.3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 체	60.4	32.7	5.0	1.1	0.7	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9.7	35.6	4.1	0.6	0.0	0.0
	시민단체	62.3	30.7	4.9	2.1	0.0	0.0
	통계값	0.255	0.537	0.164	0.803	0.687	0.574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57.7	36.1	5.8	0.4	0.0	0.0
	기타 법인	63.6	30.4	4.4	1.2	0.3	0.1
	민간단체(임의단체)	66.4	30.3	3.2	0.2	0.0	0.0
	조합	60.0	31.8	6.2	1.7	0.2	0.0
	기타	70.6	22.5	4.4	0.0	2.5	0.0
활동 유형	통계값	1.384	1.274	1.236	1.958	3.123**	0.555
	생산제조분야	56.5	37.3	5.2	0.6	0.4	0.0
	사회서비스분야	62.5	32.3	3.7	1.2	0.1	0.1
	문화관광분야	62.1	29.5	6.1	2.1	0.3	0.0
	기타서비스분야	74.2	23.3	2.5	0.0	0.0	0.0
	공동체분야	59.9	33.4	5.9	0.3	0.6	0.0
	기타분야	65.5	26.6	5.9	1.7	0.3	0.0
	통계값	2.581**	3.565**	0.952	1.649	0.251	0.778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52.3	37.6	7.8	1.7	0.5	0.1
	지원받은 경험 없음	74.8	23.3	1.6	0.2	0.0	0.0
	통계값	80.060**	46.201**	39.264**	11.084**	3.072*	0.828
사회적 경제 부합 여부	부합함	57.8	34.6	6.1	1.2	0.3	0.0
	보통	73.0	23.6	2.6	0.7	0.1	0.0
	부합하지 않음	57.5	33.9	5.7	1.4	1.4	0.0
	통계값	13.837**	11.076**	4.737**	0.600	1.544	0.269
전 체		62.5	31.1	5.0	1.1	0.3	0.0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처를 보면 원재료의 구입처와 유사하게 해당 마을과 시군에서 88%이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인 소비자행활협동조합과 잘살공동체에서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52> 사회적 경제 활동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처

통계량	구 분	마 을	시 군	시군외 충남	충남외 충청	수도권	기타 타지역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51.0	34.7	9.3	3.3	1.3	0.3
	노인생산공동체	53.8	34.2	9.0	2.3	0.4	0.4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59.1	33.5	5.4	1.1	0.8	0.1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53.3	32.2	9.3	3.3	1.5	0.5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 체	58.3	30.9	6.7	2.3	1.5	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0.6	30.9	2.2	1.9	4.4	0.0
	시민단체	49.8	33.3	9.8	3.8	2.6	0.7
	통계값	0.860	0.233	1.774	1.000	1.043	0.363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46.4	35.8	9.7	4.6	3.0	0.5
	기타 법인	58.3	30.4	6.3	2.5	2.0	0.6
	민간단체(임의단체)	53.7	34.0	9.4	1.8	0.8	0.3
	조합	55.5	33.4	7.7	2.5	0.7	0.2
	기타	63.1	29.4	3.8	0.6	3.1	0.0
	통계값	1.565	0.825	1.416	1.336	1.461	0.591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50.9	38.2	7.2	2.0	1.8	0.0
	사회서비스분야	55.3	31.4	7.4	3.4	2.2	0.3
	문화관광분야	56.2	34.6	7.4	0.8	0.5	0.5
	기타서비스분야	62.7	25.0	6.7	2.7	2.0	0.9
	공동체분야	50.5	33.3	10.9	2.6	1.4	1.3
	기타분야	58.3	30.2	7.6	3.0	0.7	0.1
	통계값	1.272	2.800	0.590	0.960	0.642	2.016*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45.7	40.2	9.9	2.7	1.1	0.4
	지원받은 경험 없음	67.2	23.5	4.9	2.3	1.9	0.3
	통계값	58.419**	75.097**	16.804**	0.385	1.116	0.071
사회적 경제 부합 여부	부합함	49.4	35.7	9.3	3.0	2.1	0.5
	보통	68.1	25.8	4.3	1.5	0.3	0.0
	부합하지 않음	54.6	36.8	5.7	2.9	0.0	0.0
	통계값	17.912**	10.254**	7.170**	1.768	3.250*	1.943
전 체		55.4	32.6	7.6	2.5	1.5	0.3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의 40%이상이 금액은 평균 1천만원 정도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투자 지역 역시 해당 마을과 시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재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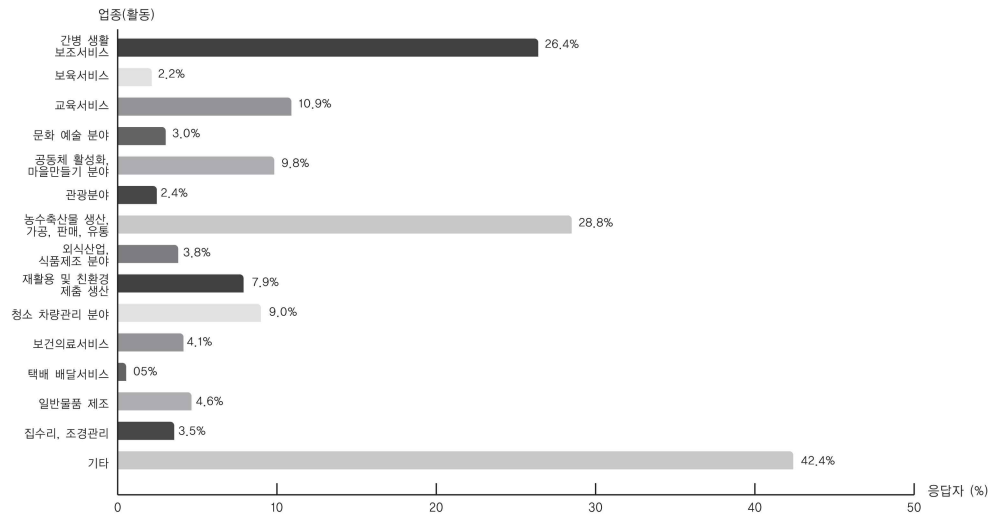
구 분		재투자율 (%)	재투자 금액	재투자 지역			
				마 을	시 군	시군외 충남	충남외 충청
조직 유형	장애인보호작업장	33.3	1040.0	60.0	0.0	40.0	0.0
	노인생산공동체	43.6	1102.1	16.7	54.2	25.0	4.2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38.9	776.8	14.3	71.4	14.3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고용부, 농림부, 충남도)	34.9	984.7	20.0	63.3	16.7	0.0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준비 단체	38.3	1004.8	29.0	51.6	19.4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8.8	575.0	10.0	80.0	10.0	0.0
	시민단체	50.0	671.4	28.6	61.9	4.8	4.8
	통계값	5.856	0.643	20.522			
조직 형태	회사(사업자)	24.3	1904.4	11.1	77.8	11.1	0.0
	기타 법인	43.0	865.3	20.4	67.3	12.2	0.0
	민간단체(임의단체)	35.4	626.1	26.1	56.5	17.4	0.0
	조합	45.5	898.4	21.3	52.5	23.0	3.3
	기타	38.9	742.9	42.9	57.1	0.0	0.0
	통계값	6.437	2.680**	9.874			
활동 유형	생산제조분야	35.5	1107.6	18.2	66.7	15.2	0.0
	사회서비스분야	42.5	774.2	19.4	67.7	12.9	0.0
	문화관광분야	29.3	808.3	25.0	58.3	16.7	0.0
	기타서비스분야	37.5	770.0	25.0	75.0	0.0	0.0
	공동체분야	41.7	833.3	40.0	46.7	13.3	
	기타분야	48.3	808.1	20.9	51.2	23.3	4.7
	통계값	5.624	0.500	13.003			
지원 경험	지원받은 경험 있음	38.9	925.2	22.8	59.5	15.2	2.5
	지원받은 경험 없음	42.4	869.3	21.4	60.0	18.6	0.0
	통계값	0.465	0.107	2.058			
사회적 경제 부합여 부	부합함	40.3	999.9	21.1	63.2	15.8	0.0
	보통	43.6	659.8	25.5	52.9	17.6	3.9
	부합하지 않음	20.0	1766.7	0.0	66.7	33.3	0.0
	통계값	3.086	2.928*	5.989			
전 체		40.5	898.9	22.1	59.7	16.8	1.3

* 충청권 외 타지역에 재투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54> 지역사회 재투자(예)

마을기업대출	지역내취약계층자녀교육	논산희망지역이동센터
복지사업	농촌지역살리기운동확산	결식노인식사지원
장학금지원	초등학교도서지원	섬마을어르신건강돌봄서비스
독거노인돕기	지역어린이에코체험교육	어업민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현물급여사업	마을노인회관지원(난방비)
다문화가정지원	무료소독방역	장애인돕기
소상공인대출	후원금,기부금	농민들상해보험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층집수리	의료비지원(취약계층)
김장김치복지관전달	봉사활동	재활센터,장애인단체지원
사랑의좁드리운동	마을공동투자자금	농산물기부
김장김치노인회전달	로컬푸드 운동홍보	취약계층및독거노인지원및저가
길거리청소	마을체험활동(맥운동)	판매
스쿨존교통안내	대둔산동식물보호	조합원경조사
소외계층돕기	등산로사업	마을주민과연계한농산물판매
도시락나눔	청소년금연예방사업	마을정비
푸른숲가꾸기실천운동	영농자재지원	관광휴양지유지관리비지원

한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은 간병 생활보조서비스,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와 청소 분야 등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20] 설문대상 조직의 핵심사업(주요활동)

5. 요약 및 시사점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의식조사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이해) 정도 분석에서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잘 모를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이에, 최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지가 많이 높아진 점에서 확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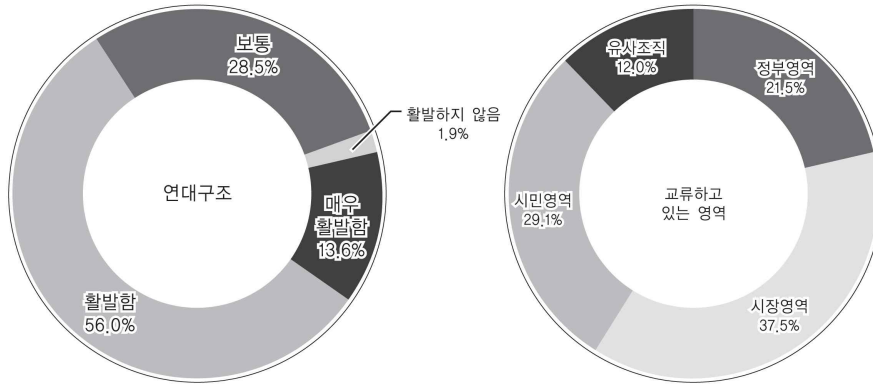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분석에서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의 경영(영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정부나 민간 지원이 끊어질 경우 생존이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인건비지원이나 사업비지원 등 직접지원의 문제점도 논의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직접지원 비중을 줄이고, 지속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5>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

(단위 : 만원)

구분	매출액	순수익	채무액	핵심사업매출액 비중(%)	종사자 수(인)	채무(%)
내용	23527	2465	1041875	90.9	11.5	9.3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연 구대구조는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대구조가 조직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구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보다 활발한 연계가 필요하 고, 사회적 경제 유사 조직 간의 연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2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구조 [그림 22] 교류하고 있는 영역

넷째, 조직의 경영상태 등은 미약하지만 지역사회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고용측면에서 지역친화적이고,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 고용이 90%를 넘고, 여성고용 비중이 높으며, 원재료의 구입과 생산된 재화·서비스의 판매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실제 조직의 40%이상이 금전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지역사회의 순환과 공생,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실천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 지역사회 재투자 현황

구 분	재투자율 (%)	재투자 금액 (만원)	재투자 지역(%)			
			마을	시군	시군외 충남	충남 외 충청
전 체	40.5	898.9	22.1	59.7	16.8	1.3

제3절 충남 사회적 경제 심층사례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충남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조직간 연계 상황과 인적, 물적 자원의 순환 구조를 파악하고, 충남 사회적 경제 지도 작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점검하며, 충남 도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심층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의 핵심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대면조사 중심의 현황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 및 문헌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이다. 이를 통해 충남 사회적 경제의 특성과 강점, 그리고 기반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심층조사는 충남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 조직 가운데 대표적 성격을 가지는 조직을 선정하여 진행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기반 활동의 역사가 오래된 충남내 지역 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한 지역중심의 조사로 구성되었다. 이는 지역내 사회적 경제 구조의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충남 사회적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차원적으로 도출해 내고자 함이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충청남도 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8개 사례 조사

본 조사는 앞 절에서 정리된 충남지역에 입지한 총 113개의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충남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전체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심층 사례조사를 위해 총 8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선정된 심층 사례조사 대상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 4개소, 마을기업 1개소, 시민단체 1개소,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추가선정한 천안 지역 추가 심화 조사 기업 2개소 등 총 8개이다.

<표 57> 사례조사 대상 업체

분류	단체명	지역	조직 형태	사업 내용
마을 기업	홍동 마을활력소	홍성군	비영리단체	마을자립지원센터 / 네트워크 사업
사회적 기업	얼굴 있는 먹거리	서천군	영농조합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즐거운 밥상	천안시	주식회사	도시락, 뷔페
	온양온천 시장	아산시	주식회사	재래시장 활성화
	난장 앤 판	천안시	주식회사	문화 예술
시민 단체	천안 KYC	천안시	시민단체 (임의단체)	지역사회 시민운동
추가 조사	아름다운 동행	천안시	주식회사	외식업/ 수익 기부
	산새	천안시	주식회사	외식업 /인문학 강좌

심층사례조사 대상 업체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충남 도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가운데 유형별, 업종별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으며, 2010년 선정된 마을기업,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되었다.

<표 58> 사례조사 대상 업체 유형별 구분

분 류		업체 수	업 체명
지역	농촌형	2	마을활력소, 얼굴있는 먹거리
	도시형	6	즐거운밥상, 온양온천, 난장앤판, 천안 KYC, 아름다운 동행, 산새
조직 형태	영농조합	1	얼굴있는 먹거리
	주식회사	5	즐거운 밥상, 온양온천, 난장앤판, 아름다운 동행, 산새
	비영리단체	2	천안 KYC, 마을활력소
사업 영역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1	얼굴있는 먹거리
	서비스 /외식업	3	즐거운 밥상, 아름다운 동행, 산새
	지역 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2	온양온천, 마을활력소
	문화 예술	1	난장앤판
	지역사회 시민운동	1	천안KYC

<표58>에서 나타나듯이 지역, 조직형태, 사업 영역별로 보아 대표성을 지니도록 선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충남도 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천안 KYC를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시민단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확인되었으며, 조사의 포괄성을 위해 이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 홍성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 조사

지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입체적으로 구조를 조망하기 위해 충남도 내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인식되어지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사회적 경제 관련조직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지역내 사회적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주체별 관계망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표 59> 홍성군 심층면접 대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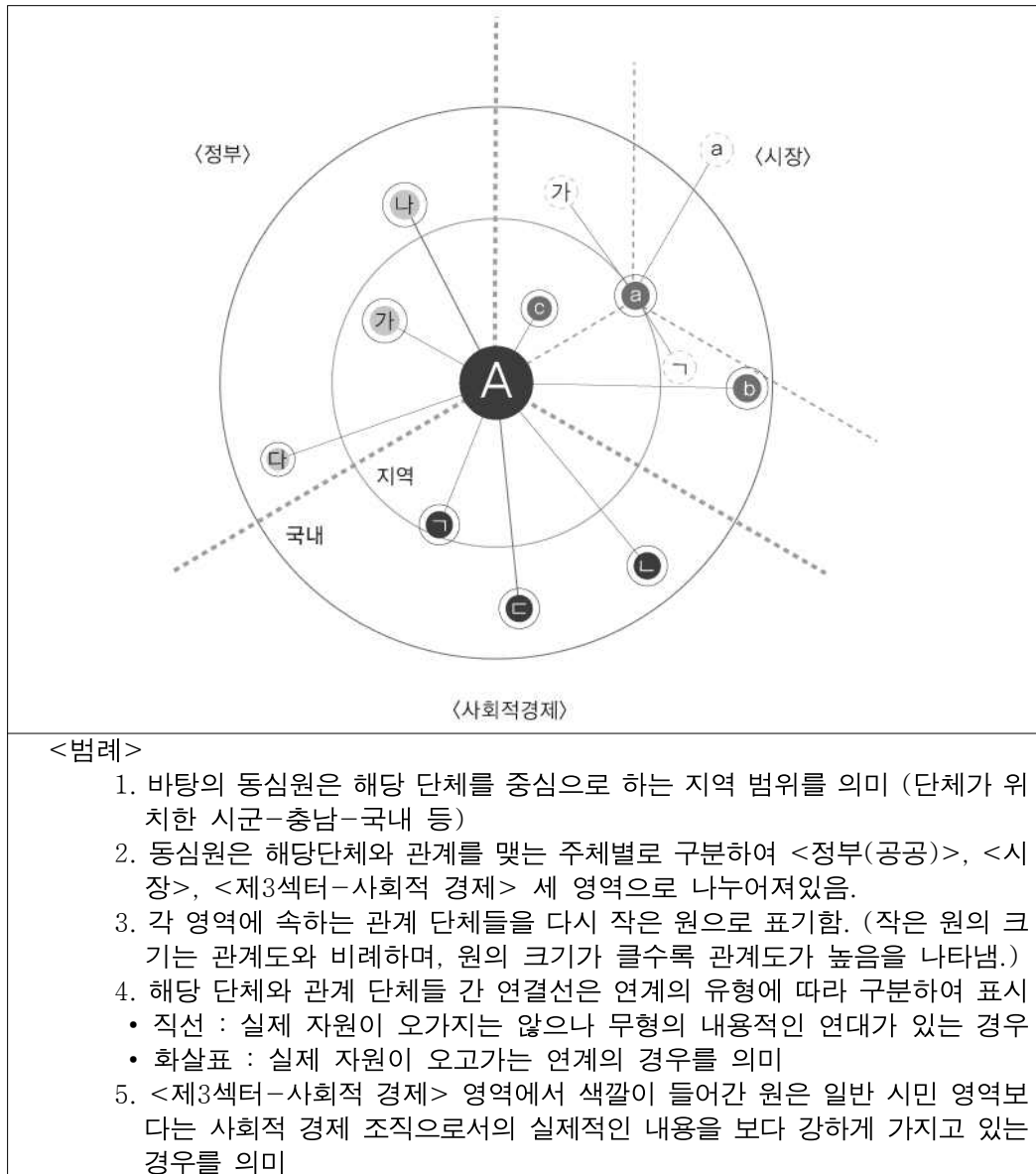
구분	방문지
지방정부	홍성군청 지역경제과
지역대학	청운대 건축공학과
협동조합 및 생산자 조직	홍성축협
	홍동농협
	풀무신협
	풀무생협
	홍성환경농업영농조합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
	(풀무생협,소포장센터등)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성여성농업인센터
마을기업 등 회사조직	디살림 마을기업
	광천토굴새우젓시장
	홍성지활센터장
	홍성 YMCA
	내현권역추진위원회(거북이마을)
	홍동면 금평리
	마을활력소
마을모임 및 시민단체 등	

현재 홍성군에는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3개소, 자립형 공동체 사업 2개소, 마을기업 2개소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가 지역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는 가급적 모두 포함하여 심층면접 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대상 기관의 현황 및 관계망,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들과의 연계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홍성군 대상 조사는 지자체, 지역대학, 협동조합, 생협 등 생산자 조직, 지역내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마을모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요소를 망라할 수 있도록 배분하여 진행하였다.

3) 분석 방법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충남 사회적 경제 단위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대 구조 분석은 심층사례조사 대상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 영역 등 섹터별 사회적 경제의 구성요소간 관계를 확인하고 연계망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위조직의 연대구조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하였다.

- [1단계]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분석을 위한 대상을 추출한 후 분석대상의 연대 구조 및 자원연계망 파악
- [2단계] 파악된 생태계 구성요소간 연대구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 구분에 기초한 생태계 분석 모형 설정
- [3단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시민단체 등 심층조사 단체 대상으로 인터뷰조사
- [4단계] 조사내용 분석을 통한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생과정과 현황 파악
- [5단계] 심층 조사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영역별 관계망을 [그림 23]과 같이 도식화



[그림 23] 생태계 분석 모형의 사례

2.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분석

1) 사회적 경제 조직개요

충남도 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을 위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총 8개 단체(1차 6개, 심화 추가 2개)의 조직개요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60>과 같다.

<표 60> 사례조사 대상 단체의 조직개요 요약

단체명	연혁	소재지	법적 지위	기타
즐거운 밥상	2005 2007.12 2010.8 2010.11 자활근로 사업단 자활공동체 인정 주식회사 설립 충남형 SE 인증	천안시	주식회사	충남형 사회적 기업
얼굴있는 먹거리	2008.10 2010.3 2010.11 영농조합 설립 희망근로 CB사업참여 충남형 SE 인증	서천군	영농조합	충남형 사회적 기업
마을활력소	2010.7 2010.9 2011.3 주민자치 마을모임 자립형 마을공동체 비영리 민간단체등록	홍성군	비영리 민간단체	마을기업
온양온천 시장	2009.9 2010.10 2010.11 온양전통 시장 상인회 (주) 온양온천시장 설립 충남형 SE 인증	아산시	주식회사	충남형 사회적 기업
난장애평	2004.12 2010.11 2011.5 창단 (비영리민간단체) 충남형 SE 인증 주식회사 전환	천안시	주식회사	충남형 사회적 기업
천안KYC	1995 1999 천안사랑 청년회 한국KYC 천안지부 등록	천안시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단체
아름다운 동행	2010.9 2010.10 2010.12 2011.1 2011.2 충남 사회적 기업 포럼 조직 사회적 기업 교육 진행 시민 주주 공모 창립총회 희망칼국수 개점	천안시	주식회사 (시민주주)	천안 지역 심화조사 사례
산새	2010.10 2010.12 사회적 기업 교육 참여 주식회사 설립	천안시	주식회사 (워커즈 컬렉티브)	

(1) 법적 형태 및 출현과정

전체 8개 단체 중 6개 조직이 영리 조직의 법적 형태(주식회사 5, 영농조합 1)를 가지고 있으며 2개 조직이 비영리 민간단체였다. 개별 사례의 출현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각 단위의 출현과정은 현재 충남도 전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즉 충남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나 비영리단체 등 시민기반 영역에서 대다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성, 성장하여 경제적 활동을 위해 영리법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시장 영역에서 발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은 충남도 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출현이 기존의 자활이나 사회복지, 비영리단체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가능한 이유이다.

시민사회 영역을 기반으로 한 자생적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출현한 예는 '천안KYC'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천안KYC'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교육 과정을 통해 어떠한 외부 지원도 없이 자생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목적 의식적으로 결의하고 조직하게 된 경우이며, 자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파생시킴으로써 지역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공헌하였다. 한편,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 등 외부 대자본에 편승되지 않은 일반시장 영역에서도 사회적 경제 요소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온양온천시장'의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의 확장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조직 구성

조사대상 조직의 대표(또는 실무의 총괄적인 사무국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40대가 대다수로 시민운동의 경력을 보유한 경우가 다수였다. 시민운동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많았으며, '난장애판'이나 '온양온천시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표 및 주요 활동가의 경력은 우리 사회 운동 및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특성 및 강점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비영리 성격이 강한 시민운동 위주의 사업경험으로 인해 영리조직을 운영하는 기업가적인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기존 시장질서에 대한

정교한 대안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 경영자로서의 역량부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낸다.

전문 경력자 그룹의 조직들의 경우, 그 분야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업능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경우 조직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기존 시장 방식을 답습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조사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구성원을 보면, 조직당 평균 8명 정도가 근무하며 조직원 전원이 단위조직의 소재지 (마을 또는 시군단위)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경제 단위조직이 지역주민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높은 지역주민 고용 비율은 지역 내 실업률 해소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61>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구성원 특성

단체명	구성원 규모	거주지	월 평균 급여	취약계층 유무
즐거운 밥상	11명 (남4,여7)	천안시	170만원	6명 (수급자 등 저소득)
얼굴있는 먹거리	7명 (남5,여2)	서천군	97만6천원	3명 (고령자, 청년실업)
온양온천시장	16명 (남5,여11)	아산시	96만원	15명 (고령자, 저소득)
난장애판	8명 (남7,여1)	천안시	100만원	2명 (청년실업)
마을활력소	7명 (남2,여5)	홍성군	80만원	-
아름다운 동행 (희망칼국수)	6명 (남1,여5)	천안시	160만원	-
산새	6명 (남2,여4)	천안시	전일근무자 1명	-
			180만원 (파트 시간당 5,000원)	
합계	61명 (평균8명)	지역 100%	평균 115만원	26명
성별		연령대		
남	여			
26	35	50대 이상	40대	30대
		22	24	5
취약계층 구성		고령자	저소득	한부모
		12	9	1
				청년실업
				4

구성원의 취약계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기업인 경우)의 취약 계층 고용 비율은 약 62%에 달하였다. 취약 계층 고용과 관련해서는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46%

로 매우 높았고, 뒤를 이어 수급자 및 한부모를 포함한 저소득 계층이 약 39%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높은 고령자 고용비율을 볼 때, 지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도 시사한다. 구성원의 남녀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좀 더 높았으며,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3) 재무 관련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매우 영세한 수준이었다. 대표 사례로 조사된 조직 중 대다수가 모두 1억 이하, 평균 약 2천만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 역시 ‘즐거운 밥상’과 ‘아름다운 동행’을 제외한 조직들이 대부분 월 1천만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소규모 영업장이 대부분이었다.

<표 62>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재무현황 요약

단체명	자본금	매출규모 (‘10 or '11 추정치)	손익 여부	생산(서비스) 제공 지역	
				충남도 내	기타
즐거운 밥상	3천만	5억5천만	+	100%	
얼굴있는 먹거리	8백만	1억5천만	-	70%	30%
마을활력소	천5백만	1억8백만	+	80%	20%
온양온천시장	4천만	1억2천만	-	100%	
난장애편	1천만	8천만	-	70%	30%
천안 KYC	회원 2010년 기준 324명		+	100%	
아름다운동행 (희망칼국수)	1억2천만	2억8천만	-	100%	
산새	5백만	1억8천만	+	100%	
평균	3,257만원	2억원		88%	

특이할 점은 가장 자본 규모가 큰 ‘아름다운 동행’의 경우, 수익금 전액을 사회 환원하는 사회적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주주가 자본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 방식의 자본조달은 앞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성화될 경우 충남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구성요소들의 등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인증 사회적 기업 형식 외에, 조사대상 중 하나인 ‘산새’와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에 동의하는 소규모 출자자들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실제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의 재무상황은 열악한 편이었다. 실제로 조사대상 가운데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은 외부 지원이 중단될 때 지속가능성이 쉽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조직이 생존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 및 보호된 시장, 우선구매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대자본과 비교할 수 없는 영세한 규모이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조직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내 성과측면에서 높은 지역기여도를 나타냈다. 실제 조사대상 단위의 지역민 고용비율이 100%,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충남도 내 공급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인력 및 자본의 순환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충남도 내에서 수행하여 지역기업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이는 흔히 외부 대기업의 지역유치에서 나타나는 낮은 지역주민 고용율이나 자본의 외부 유출 등과 대비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발전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4) 사업내용과 조직목표

사업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충남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한 사업분야에 걸쳐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사업내용만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아

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오히려 해당 조직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는 그 사업내용의 목표가 사회적 경제의 기본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조사대상 중 하나인 '즐거운 밥상'의 경우, 도시락 사업이 주 사업분야이지만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도시락 사업체와 달리 지역사회 내 결식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영양공급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안정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때문에 '즐거운 밥상'은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공급에 있어서는 추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전액 도시락 제작에 투입하고 있으며, 소량의 노인도시락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체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회경제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사회의 순환적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써 '온양온천시장'을 들 수 있는데, 지역의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받기보다는 서울의 가락동 시장을 거쳐 지역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농산물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직거래 하는 쪽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과 '전통'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분절과 단절로 상징되는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사대상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핵심 활동가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핵심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인식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실제 지역에서 긴밀한 관계와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일부 조직의 경우 조직의 목표 자체를 지역의 전통계승으로 삼는 등의 접근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중 하나인 '난장엔판'은 전통문화 계승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데, 이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내용상 세 번째 특징은, 조직들의 일부가 오랜 시민사회기반 활동에 바탕을 둔 협력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마을활력소'와 '천안KYC'는 그 자체로 특정 사업을 하는 조직이라기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반 구축에 진력하는 간접 지원 단위로 볼 수 있었으며,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자원 및 정보 유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출현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들은 대체로 시민사회에 기반하여 성장해왔으며, '마을활력소'의 경우 자체만으로 보면 짧은 연혁의 신생조직에 불과하나, 그 출현배경에는 흥성의 오랜 시민기반 활동과 내용이 응축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천안KYC'의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왔던 시민운동 중심조직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 단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민기반으로 전환된 형태였다. 이는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과 지역운동으로 출발했던 시민 진영의 활동들이 이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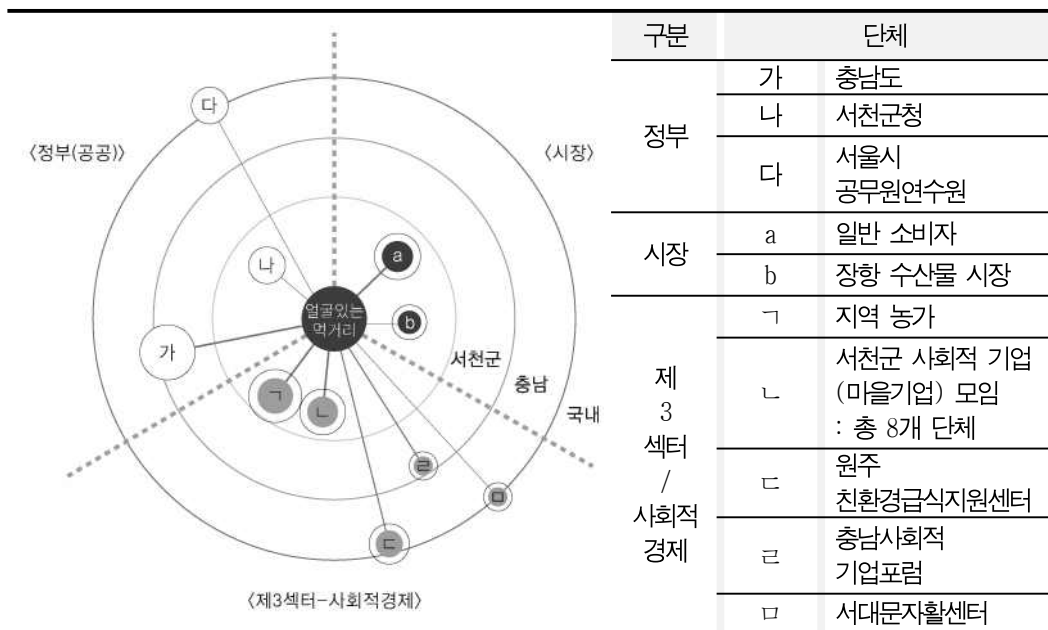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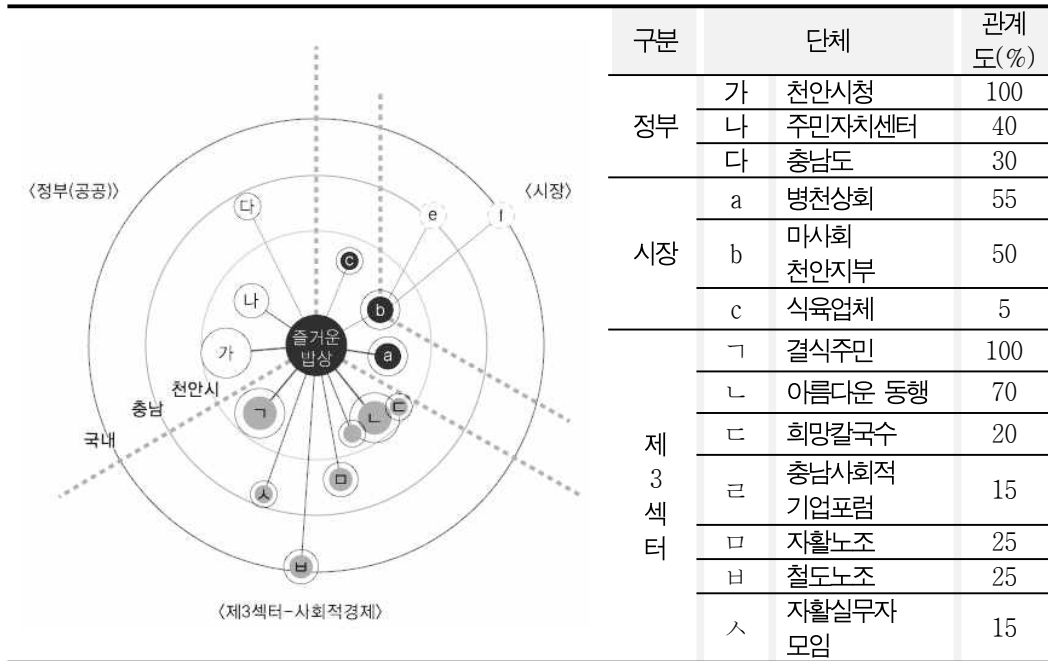
2) 연대구조 내용 비교분석

사례조사 대상인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구조를 사업유형과 조직특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은 개별단체별 연대구조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유형별 특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두 개 단체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일대일 비교가 어려운 단체의 경우 개별단체의 연대구조 특성을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과 비교하여 고찰했다.

(1) '즐거운 밥상' vs. '얼굴있는 먹거리'

두 조직 모두 지역 내 먹거리와 관련한 사업 단위로서의 유사성은 있으나 각각의 영역별 네트워크에서 차이가 있었다. 정부영역에서 '즐거운 밥상'은 소재지인 천안시와 가장 높은 관계도를 보이는 반면 '얼굴있는 먹거리'는 해당 지자체인 서천군과의 관계도가 낮고 사회적 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충남도와의 관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얼굴있는 먹거리'가 상대적으로 단기적 연대관계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보면 '즐거운 밥상'이 자신들의 생산품을 소비해 주는 노조그룹 등과 연대하고 있는 반면, '얼굴있는 먹거리'의 경우 제3섹터 영역의 연대가 있기는 하나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품을 소비해 주는 구매력 있는 지지 그룹과의 연대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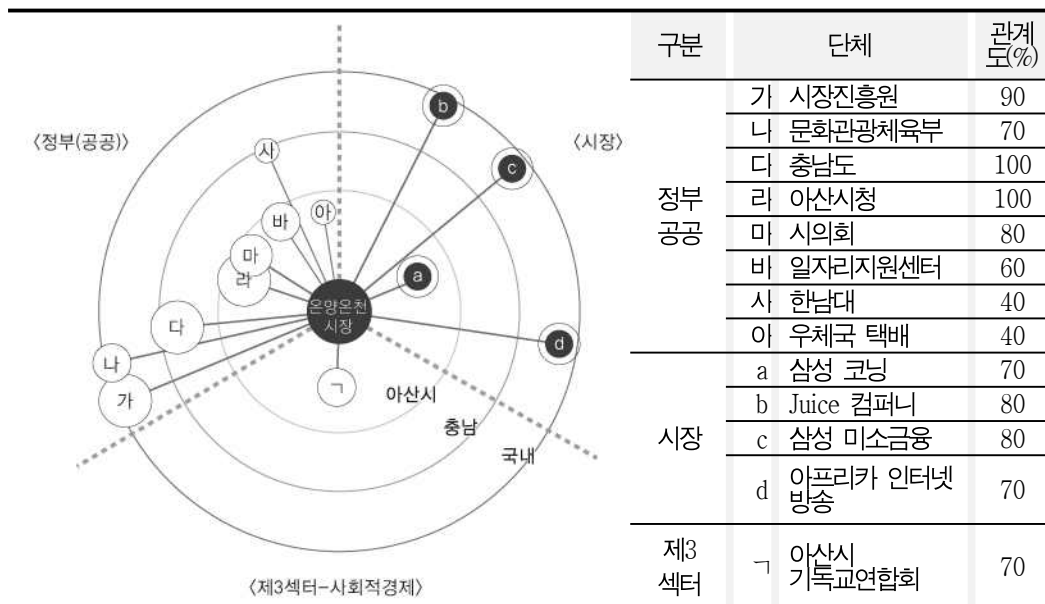
[그림 24] 즐거운 밥상 vs 얼굴있는 먹거리

(2) '온양온천시장' vs. '천안 KYC(산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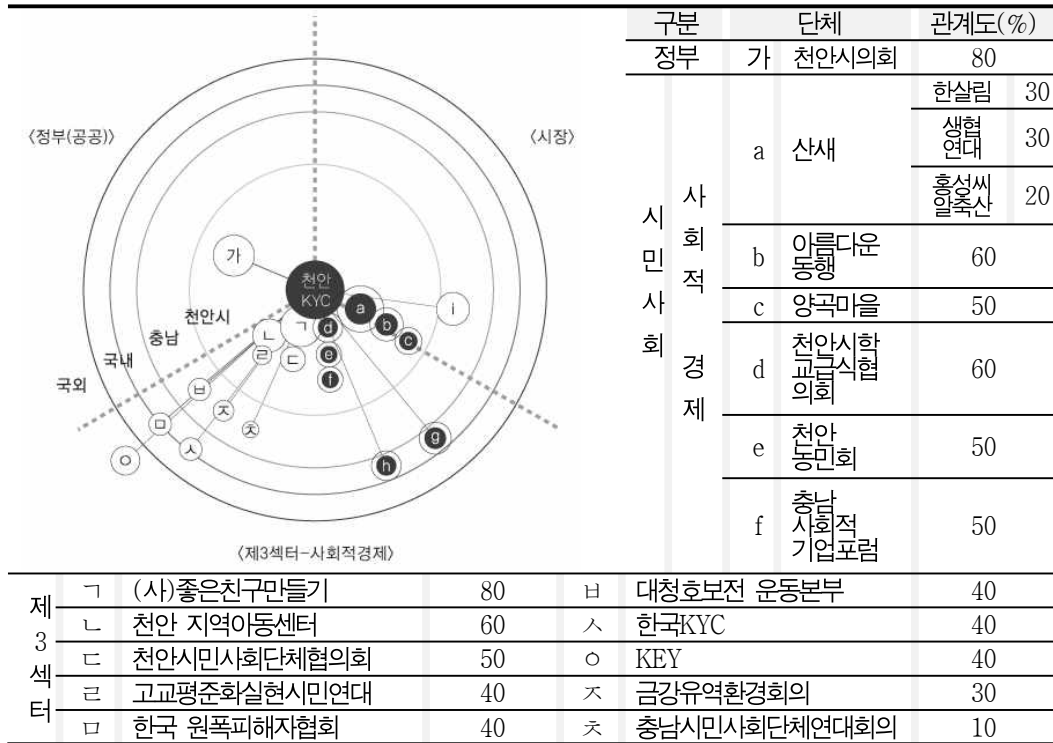
두 조직은 순수하게 (영리목적의) 민간시장 기반인 조직과 비영리 시민단체라는 점에서 대척점에 있다. '온양온천시장'의 경우, 연계는 주로 정부영역과 시장영역에 국한되고 있으며 제3섹터 영역 및 여타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연대가 취약했다.

반대로 '천안KYC'는 비영리 시민단체의 성격상 정부나 일반 시장 영역의 네트워크는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연대관계가 자신이 속한 제3섹터 및 사회적 경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조직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으로서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자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의 관계망을 보다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가늠을 하여 접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즉, '온양온천시장'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호적 시민기반 확립이 필요하며, '천안KYC'의 경우 정부나 일반 시장영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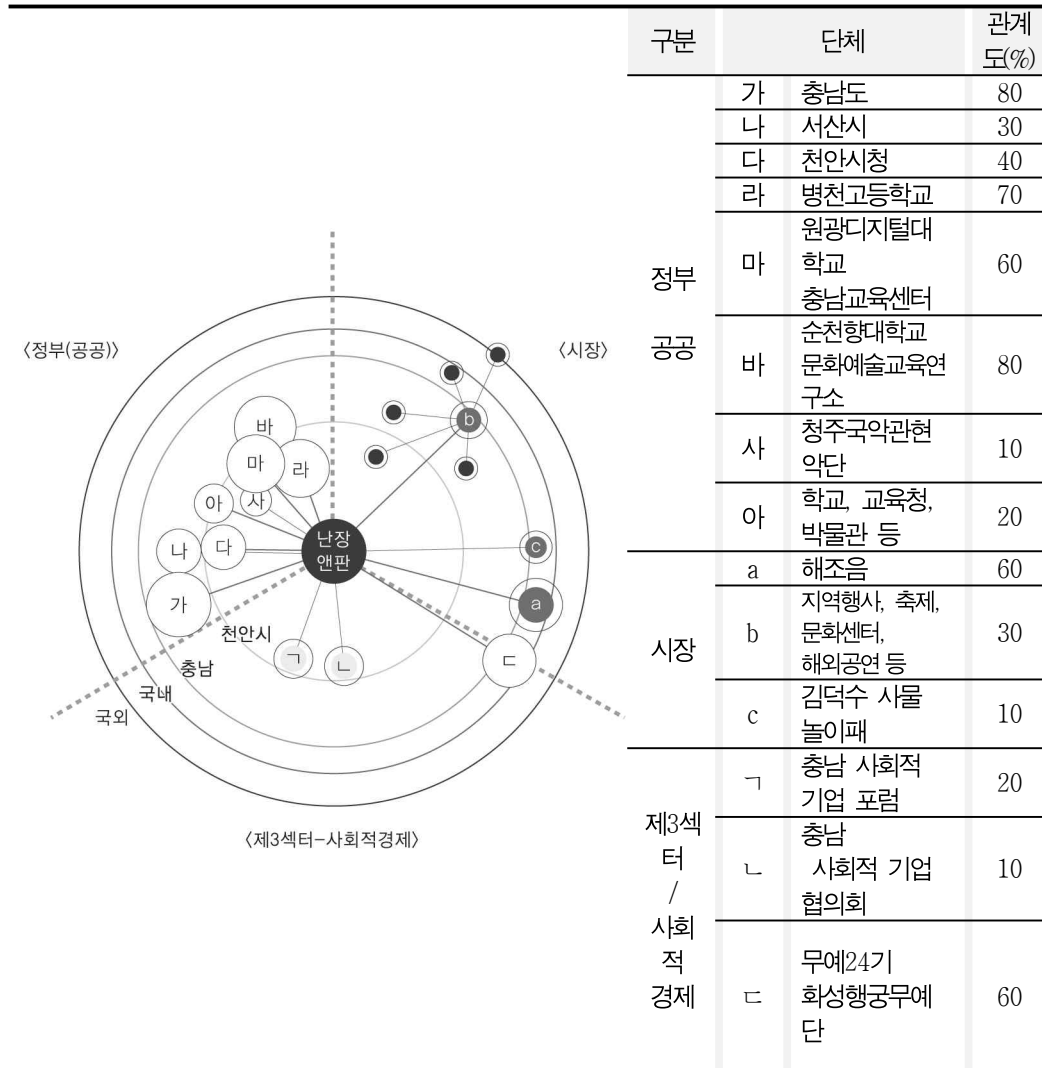
[그림 25] 온양온천시장 vs 천안KYC(산새)(1/2)



[그림 26] 온양온천시장 vs 천안KYC(산새)(2/2)

(3) '난장애판'

'난장애판'의 연대관계도 업종의 특성상 정부 공공 영역의 연대가 매우 높고 시장과의 연대관계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3섹터, 시민기반과의 연대는 천안 지역 사회적 기업 관련 모임에 한정된 낮은 연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적 지지를 얻어내고 전통문화 예술 분야 계승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영역의 연대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 기업으로서 안착하기 위해 천안지역에서의 상설 공연 등 일정정도 지역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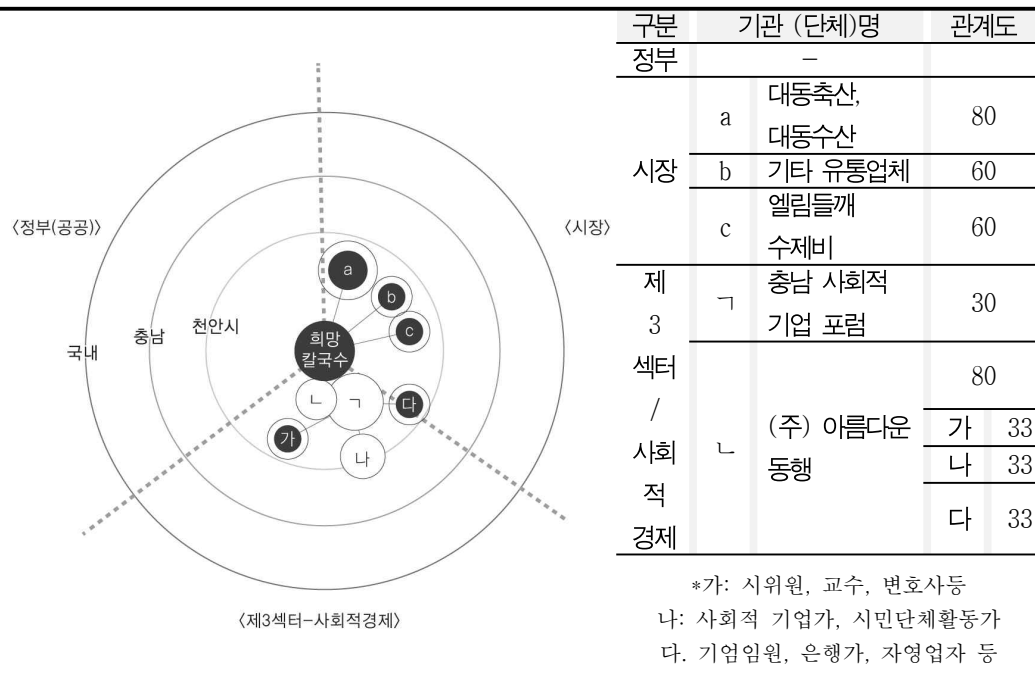


[그림 27] 난장안판

(4) '희망칼국수'

'희망칼국수'는 모범인인 '아름다운 동행'의 시민 주주 그룹이 천안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연계망은 매우 풍부한 반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관계망은 아직 미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 기반만으로는 지속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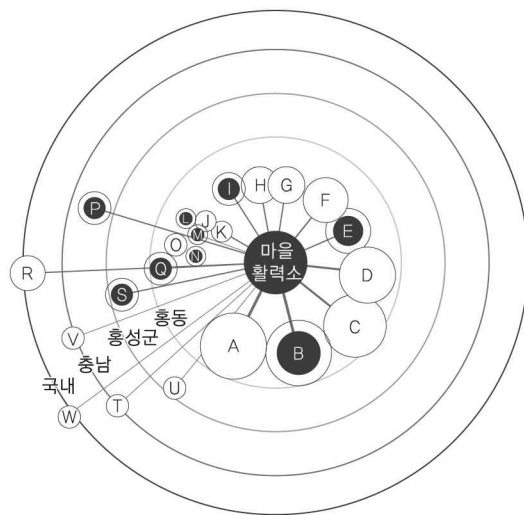
사업 연대 구조를 갖기가 힘들고, 지속적인 사업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자금 조성 단계에서 발현되고 있는 시민 주주 그룹의 역동이 좀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연대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로서 다른 사회적 기업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참여방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고 사업적으로도 연계하는 방식을 강화하여 사업에 이러한 연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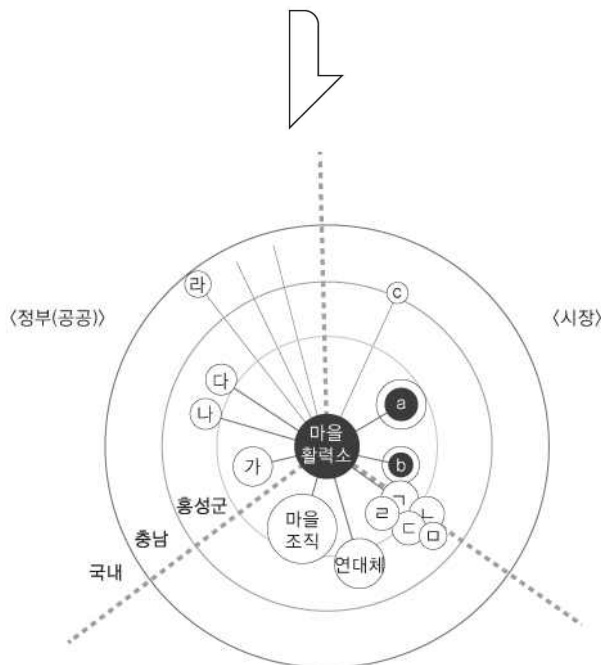
[그림 28] 희망칼국수

(5) '마을활력소'

'마을활력소'는 치밀하고 다양한 연대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해당 단체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특히 '마을활력소'의 제3섹터와 사회적 경제 부분의 연대관계는 조사대상 조직 가운데 가장 치밀하고 지역적 기반이 건설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 구조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섹터-사회적경제〉



〈제3섹터-사회적경제〉

구분	단체
정부 (공공)	가 홍성군
	나 충청남도
	다 충남발전연구원
	라 행정안전부
	마 농림수산물식품부
	바 남양주시
시장	a 홍동지역 생산자 및 지역주민
	b 홍성군 지역주민
	c 도농교류 및 교육 방문객
	ㄱ 풀무생협 친환경농산물 소포장센터
	ㄴ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ㄷ (주)풀무축산/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제3 섹터 / 사회적 경제	ㄹ 농업회사법인 홍성풀무(주)
	ㅁ 농업회사법인 다살림(주)
	A 마실이 학교
	B 지역 공동원예사업단 '가뭇'
	C 농교육네트워크
	D 갯골생태농업연구소
	E 마을카페 '딸'
	F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
	G 풀무학교 전공부
	H (사) 밝맑 도서관
	I 지역화폐 (준비)
	J 논배미
	K 빼꾸기 합창단
	L 갯골목공소
	M 느티나무한책방/그물코출판사
	N 반질고리 공방
	O 신동리 살기좋은마을만들기
	P 충남사회적 경제지원네트워크
	Q 문당권역 운영위
	R 5.18 기념 재단
	S 홍성로컬푸드 네트워크(준)
	T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U 홍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
	V (사) 풀뿌리 사람들
	W 민우회

[그림 29] 마을 활력소 → 마을활력소를 중심으로 하는 제3섹터 및 사회적 경제

세부구조

이는 ‘마을활력소’의 기능이 시민기반 조직과 연대가 다양하게 발달한 흥동지역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모아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며,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마을활력소’는 앞으로 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배가되도록 하는 지원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반면 ‘마을활력소’의 활동과 연계의 공간적 범위가 흥성군(더 특정해서는 흥동면 일대)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적 범위의 협소성 때문에 ‘마을활력소’가 흥성군, 더 나아가 충남 사회적 경제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제한적인 역할만 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조직의 역할강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과정과 자원확보

사례조사대상 8개 단체의 연대구조를 통한 자원확보 상황을 단체의 성장과정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경제 주체인 이들 단체의 설립연도를 감안하여 성숙도를 구분하였는데, 실제로는 설립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4개 단체와 설립 후 1년 미만의 4개 단체로 크게 대별되었다(‘(주)온양온천시장’의 경우 주식회사 설립시점을 적용).



[그림 30]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장과정별 자원확보 상황

자원확보 내용은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금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경우 그림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반면, 연대구조를 통해 시장확보 등 자립기반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 경우 상대적으로 그림의 위쪽에 위치하게 하였다.

어느 한 쪽이 아닌 가로축의 상하 양쪽에 걸쳐 있는 경우, 실제로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시장확보 및 협력관계 구축 등도 시작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0]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립기반을 위한 시장확보 등의 연계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파악됐다. 하지만 설립 뒤 일정 시간이 경과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에도, 연대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직접적 재정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했다. (예: ‘얼굴없는 먹거리’)

따라서 단순히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장과정에서 직접적 재정지원이 자연스럽게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대구조내에서 다양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연대구조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숙도와 자원확보 내용에 대한 분석에서 특기할만한 또 하나의 내용은, 시민사회기반으로 신설된 단체(‘아름다운 동행’, ‘산새’)의 경우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이 전혀 없이 바로 연대구조를 통해 자원확보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두 단체가 ‘천안 KYC’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반을 바탕으로 출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일견 당연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조직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이들 단체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것이다. 두 단체 모두 천안 KYC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자원을 확보한 상황이고 설립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에서 자원확보가 가능할 경우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에서 설립 초기부터 자원을 확보하며 활동을 시작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직접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립기반 확보까지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의 경우에도 연대구조를 통해 자원을 확보할

하여 직접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연대구조내의 자원연계의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정리

(1) 시민 기반을 통한 자발적 사회적 경제 조직의 출현

심층사례조사 대상인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부는 자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시민기반으로 출현하였다. 시민단체를 모태로 한 ‘아름다운 동행’과 ‘산새’의 예는 자생적인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특히 ‘아름다운 동행’의 시민 공모주 방식을 통한 자금 조성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금 마련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산새’의 위커즈 컬렉티브 방식 또한 협력과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 중요한 출현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에 대한 사회 · 경제 · 문화적 기여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을 통해 창출된 사회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1개 조직당 평균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단체 당 평균 6·7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에서 노동 통합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도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즐거운 도시락’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가 그동안 제공하지 못한 양질의 도시락을 결식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했다. 더불어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활동을 증가시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대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헌은 지역경제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인적 자원들이 발굴되고, 모임이 이루어지며, 이들을 통해 또다른 시민 영역의 활동들이 촉진됨으로써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또한 지역내 공급기반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취약하기 쉬운 문화 예술 관련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오고 있다. 지역전

통문화를 계승하려는 난장엔팍이나 지역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마을활력소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충남 사회경제적 조직의 활동은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3. 홍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

1) 홍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일반특성

충남도 내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기반 활동의 역사가 오래된 충남 홍성군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조를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은 홍성군내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내 협동조합 및 생산자 조직, 마을기업 등 회사, 마을모임, 시민단체 등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요소가 망라되었다. 이러한 홍성군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의 특성과 상호관계성 파악을 통해 홍성군의 사회적 경제 구조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홍성군은 농업과 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군 단위 기초지자체로서 일반적인 농어업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농업관련 조직이 존재한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갈수록 세분화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 유기농의 핵심지역 가운데 하나로서 많은 조직들이 친환경, 유기농업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랜 지역운동의 역사와 결합하여 이러한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는 홍성군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의 출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되어왔다. 실제로 이러한 홍성군의 사회적 경제 차원의 경쟁력 내지 선도성은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홍성군은 크게 홍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지역과 여타의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성군에서는 2004년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홍동면 중심의 문당권역(문당생태마을)과 2008년 동일사업에 선정된 구항면 중심의 내현권역(거북이마을), 2009년 말 확정된 홍북면 중심의 한솔기권역(용봉산 자연생태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충남도청이 이전될 내포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천수만권역 마을개발사업이 2010년 확정되어 홍성군의 농촌지역은 다른 군 단위 농촌지역에 비해 지속적인 마을개발이 이루어져왔다.

심층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홍성군 사회적 경제 구조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63>와 같다.

<표 63> 홍성군 심층면접 대상 조직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직개요
지방정부	홍성군청 지역경제과	홍성군 사회적 기업 / 마을기업 담당자 면담
지역대학	청운대 건축공학과	지역전문가
협동조합 및 생산자 조직/ 마을기업 등 회사조직	홍성축협	자산 2,652억으로 지역내 축산관련 정부지원금 담당
	홍동농협	친환경작목회, 친환경미곡처리장, 부산물비료공장 부설 운영 1970년 설립. 2009년 현재 자산 700억
	풀무신협	지역기반 금융조직 / 40 여 년 역사 / 2011년 현재 200억 자산
	풀무생협	2011년 풀무영농과 분리
	홍성환경농업영농조합	800명 조합원 보유. 3개(주곡,축산,채소) 작목으로 연 150 억매출. 영농법인 설립 운영(2011년 현재)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 (풀무생협,소포장센터등)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 기업 (2009년부터 참여)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자연순환 농법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조직. 소비자 직거래. 주요작목 : 곡류, 야채 과일 축산.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민조직
	홍성여성농업인센터	농림부 지원 여성 관련 사업 수행기관 신나는놀이방 / 함께먹는식구들(직판장) 운영
	다살림 마을기업	2010~2011년 마을기업(문당권역 운영위와 컨소시엄) 쌀빵, 쌀과자 등 생산중
마을모임 및 시민단체 등	광천토굴새우젓시장	전통 수산물 가공품 시장
	홍성자활센터장	지역내 자활부문
	홍성 YMCA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현권역추진위원회 (거북이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획
	홍동면 금평리	홍동면내 대표지역
	마을활력소	마을재생 전문조직

(1) 홍동면을 일대로 장기적으로 구축된 사회적 경제 기반의 존재

홍동면에 소재한 풀무학교는 1958년 개교 이래 지역의 중심조직으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연관기관들을 파생시켜 왔다.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다년간 축적된 활동의 결과로 홍성에는 사회적 경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과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지역리더 양성이 풀무고등학교, 전공부 등을 통해 이루어

짐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는 리더가 사회적 경제 구조를 구축해왔다. 실제로 홍성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략 65% 정도가 풀무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조직으로 파악되었고, 35% 정도만이 풀무학교와 상관없이 설립된 조직들로 나타났다.¹⁸⁾

풀무학교에서 파생된 조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 중 하나인 풀무신협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지역의 경제적 토대가 안정화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풀무신협은 전국 신협 중에서도 지역사업 규모와 조합원의 충성도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위기 이후 다소 정체하거나 감소추세인 타 지역 신협과 달리 풀무신협의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된 사회적 경제 기반은 홍동면이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선도적인 사회적 경제 실천 지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2) 지역성장에 있어 지역내 대학의 제한적 역할 수행

홍성군에는 군 지역으로서는 흔치 않게 지역 내에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이라는 2개 대학이 소재함으로써 지역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발전전략 수립과 사회적 경제 체계 강화가 가능한 환경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지역 내 소재 대학은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면담조사에 따르면 지역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두 대학의 재학생 대다수는 수도권 등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출신 학생의 수는 많지 않았다. 또한 두 대학의 졸업생이 홍성지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지역인재 양성기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의 활동가나 해당 대학의 일부 교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대학의 지역내 역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부족으로 실제 지역발전 동력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한 예로, 지역내 대학에 대한 지역민 대다수의 시각도 지역인재 양정보다는 홍성군내 유동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추가수요 정도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18) 면담조사 내용

청운대학교가 수도권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자 홍성군민 일부가 지역내 유동인구 감소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대학의 제한적 역할은, 홍동면 내에서 풀무고등학교, 전공부 등을 통해 지역발전의 필수적인 지역리더 양성이 이루어진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홍동면을 제외한 홍성군 지역에서 지역인재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역 내 순환구조 구축이 핵심인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후술되는 내용처럼 홍동면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강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는 리더가 사회적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홍성군 소재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소농을 기반으로 한 지역내 농업구조의 변화

홍성군의 마을종합개발사업은 문당권역, 내현권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왔다. 이 중 가장 먼저 실시된 문당권역의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홍성군을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하였으며,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기획, 진행되고 있어 마을의 소득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홍성군내 유기농업의 중요 주체이자 홍성군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농들의 경우 지역생협의 경영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생산자 조직에서 점차 이탈하여 개별적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홍성군의 대표적인 생산자 조직인 풀무생협의 경우 경영악화 등으로 부채가 발생하였고, 경영개선을 위해 외부기관에게 경영을 위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생산자 조직으로서의 자율성이 감소하였고, 경영상태는 개선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생산자인 조합원들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였다. 생협을 통한 판로를 잃어버린 조합탈퇴 소농은 유기농에서 관행농으로 전환하거나 농사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기농업에 참여하던 소농의 이탈이라는 변화와 더불어 홍성군내 농축산업의 구조상 발생하는 상호배타적 요소도 지역의 농업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기농을 기반으로 하는 홍성군 내 산업특성상 ‘친환경’농업이 강조되어왔고 현재에도 친환경쌀 등이 홍성군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한우’를 주요 산물로 하는 축산업이 홍성군 지역산업의 또다른 중심이다. 축산업의 특성상 오폐수 처리 문제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지만 지자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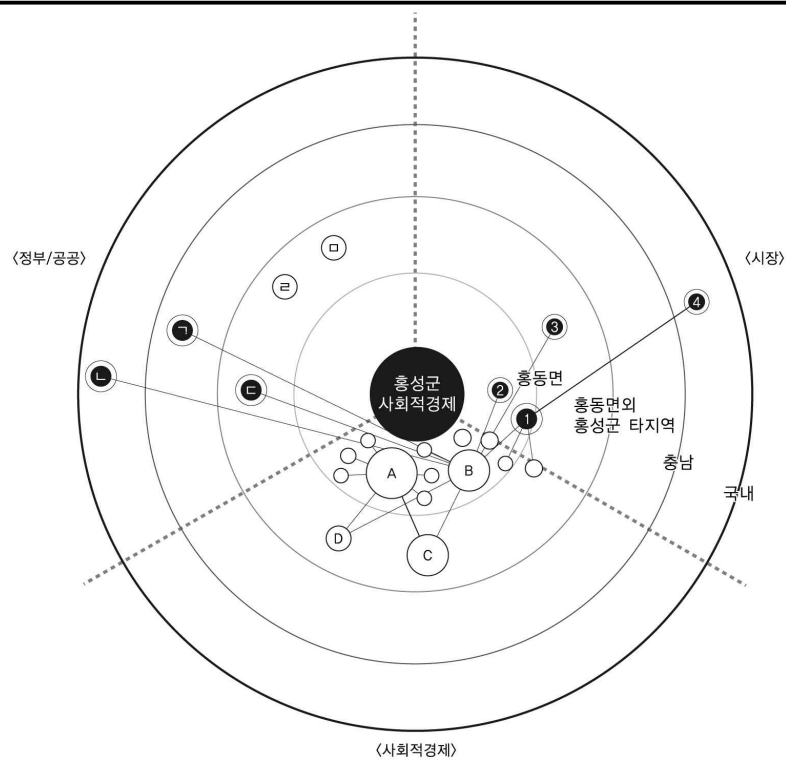
개별축산농가 차원의 대응은 미비한 편으로 최근 들어 홍성군내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홍성군 일부 지역주민의 경우 악취 등의 문제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면담조사 결과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상기한 유기농 소농들의 관행농 전환 등과 함께 축산농가의 오폐수 미처리 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지역내 대표산업인 농업의 친환경성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기축산의 적극적 도입, 축산오폐수 정화시설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유기농 대표 지역으로서의 홍성군의 경쟁력은 앞으로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내 농업구조의 변화는 지역내 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이 보다 협력적인 환경에서 생업을 운위할 수 있는 방식의 접근과 홍성군의 친환경 농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홍성군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성요소간 연대구조 분석

홍성군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조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구성요소간 연대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홍동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환경과 홍성군내 여타 지역간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홍성군을 홍동면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연대구조를 파악하였다. 홍성군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연대구조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에서 알 수 있듯이 홍성군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홍동면 지역내에서 매우 밀도높은 연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3섹터와 사회적 경제 부분은 홍동면 내에서 다수의 조직들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밀도높은 연계망의 중심에는 홍성군 사회적 경제 활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풀무학교가 자리잡고 있으며, 근래에 설립된 마을활력소의 경우도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동면의 중심적 역할은 시장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데, 풀무생협을 중심으로 외부 시장과의 연계망을 형성해왔다. 정부 및 공공분야와 홍동면 내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들간의 연계도 제3섹터내의 연계관계의 밀도보다는 낮았지만 분명히 존재하였다.



정부/공공	사회적 경제 / 제3섹터	시장
ㄱ : 충남도청	a : 풀무학교	1 : 풀무생협
ㄴ : 중앙정부 (농림수산부/행정안전부 등)	b : 마을활력소	2 : 풀무축산
ㄷ : 홍성군청	c : 풀무신협	3 : 홍성 유기농조합 법인
ㄹ, ㅁ : 지역대학 (청운대학교/대전대학교)	d : 홍성 YMCA	4 : 풀무생협 거래처

[그림 31] 홍성군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연대구조

반면 홍동면 외 홍성군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간의 연계관계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로 홍성 YMCA 등 소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제외하면 홍동면 이외 지역의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는 확실한 지역내 연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 및 공공 섹터나 시장섹터와의 연계도 개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뿐 홍동면 내 사회적 경제 구성요

소의 연대관계와는 대비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시장섹터에서는 홍동면 외 지역에서도 연대 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지역내 생산자들과의 연계와 충남도 및 홍성군과의 연계 정도를 제외 하면 다른 섹터의 구성요소들과 뚜렷한 연계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 및 공공섹터의 구성요소들의 경우 충남도, 홍성군의 연대구조내에서의 역할이 확인 되었고, 중앙부처(농림수산부 등)와의 연계도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관계는 일부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강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역의 대학들은 홍성군 내 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정부 및 공공섹터 구성요소에 비해서 홍성군 내 다른 섹터와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홍성군의 사회적 경제 연대구조는 홍동면의 사회적 경제/제3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밀도있는 연대구조와 그 이외의 지역과 섹터에서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연대구조가 공존 하는 이중적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다.

제4절 종합분석: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의 시사점

충남의 산업경제는 성장해왔고, 지금도 어느 지역보다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고용구조나 도민의 느끼는 행복도는 타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민선5기 시작과 더불어 내발적지역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여건이 좋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전국최초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적 경제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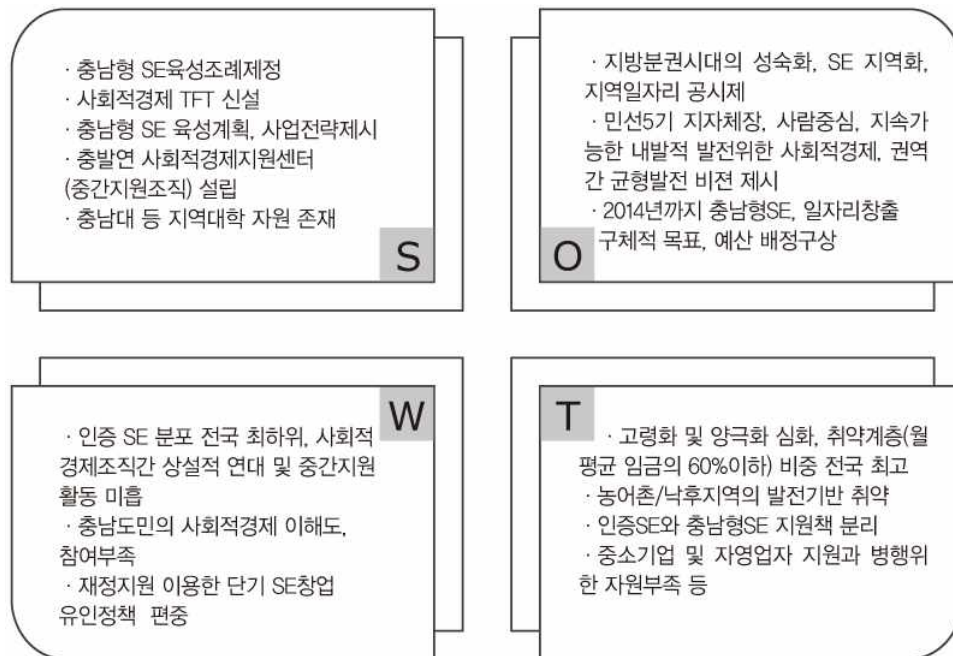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양적 부족, 조직 리더의 부재 등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범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 그리고 기존 정책사업 중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정도와 조직실태, 연대구조를 설문조사 한 결과 매출액 및 순수익 등 재정구조는 열악하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있고, 지역사회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충남의 사회적 경제 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지역사회기여 정도는 고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수입처, 지역사회기여활동 등에서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충남의 사회적 경제 여건을 SWOT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점으로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 충남형 사회적 기업육성조례, 사회적 경제 TF팀 신설, 충남형 사회적 기업육성계획 및 사업전략 제시, 충남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개소, 충남대 등 지역대학이라는 자원의 존재 등이 있다. 약점요인으로는 노동부인증사회적 기업 전국 최하위, 사회적 경제조직 간 상설연대 및 중간지원 활동미흡을 들 수 있다. 충남의 위협요인으로는 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 취약계층 전국 최고,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취약, 인증 사회적 기업과 충남형 사회적 기업의 지원책 분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과 병행위한 자원부족 등이 존재하며, 위협기회요인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화, 민간5기 지자체장의 '사람'중심의 정책 및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위한 권역간 균형발전 비

전 제시, 2014년까지 충남형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예산 확대 등 구체적 목표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32]과 같다.



[그림 32]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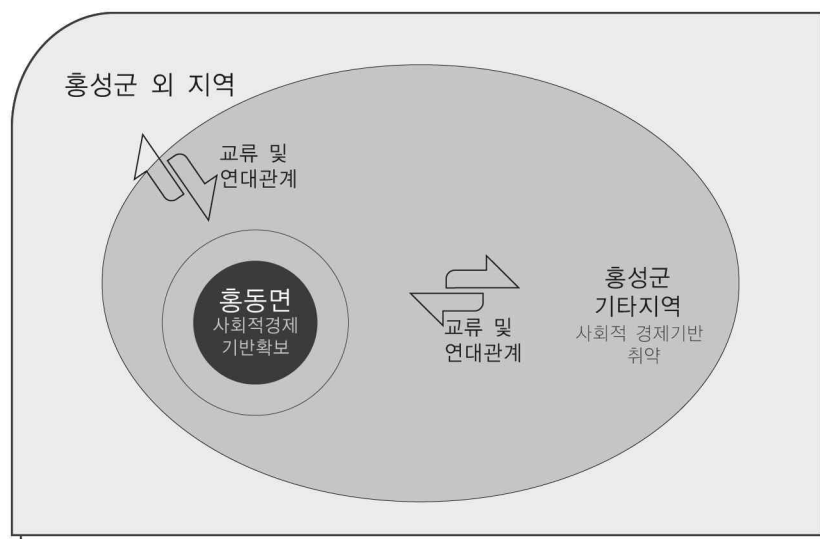
이상에서와 같이 충남은 제약요건(위협, 약점요인)을 최소화하고 하고 강점요인을 극대화 하는 동시에 기회요인을 잘 살려 선순환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체계 하의 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고령화, 농어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방식은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지역시민을 고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내발적 발전의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소외된 사회문제 및 지역문제가 구체화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도민 친화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순환과 공생의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에 최적의 대안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그리고 충남의 사회적 경제 여건을 생태계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대표 사례지역으로 홍성군을 대상으로 조사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심층사례조사를 통해 확인된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매우 다양한 성장단계에 있는 구성요소들이 지역별로 혼재해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구성요소와 지역에서는 강력한 연대 구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반면, 아직 상당수의 지역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맹아기에 있는 조직들이 더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충남 사회적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완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층사례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충남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발전양상을 보여주는 홍성군의 경우 홍동면과 비홍동면 지역간의 격차로 대별되는 ‘이중성(duality)’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홍성군 사회적 경제 구조는 홍동면과 홍동면 이외 지역의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홍성군 사회적 경제의 이중적 구조

실제로, 사회적 경제 성격이 강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홍성군내 홍동면 인근 지역은 상당히 안정된 사회적 경제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마을활력소 등 사회적 경제의 철학을 지역내에서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 존재함으로써 홍동면의 사회적 경제

기반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홍동면 이외 지역은 인구규모나 산업기반 등에서 홍성군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기반이 취약하며 실제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 낮은 편이었다. 이는 홍동면의 주민 다수가 귀농인인 반면, 홍동면 이외 지역의 대다수 주민은 원주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제로 선진적이라고 인식되는 홍동면의 노력들이 홍성군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홍동면이 연계하는 주요 관계대상이 홍성군내 주체들이기보다 지역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홍동면의 사회적 경제 차원의 혁신성이 홍성군에 고립된 채 제한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2013년 예정된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인한 홍성군 구도심과 신도심의 공간적 격차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홍성군 지역내 사회적 경제 기반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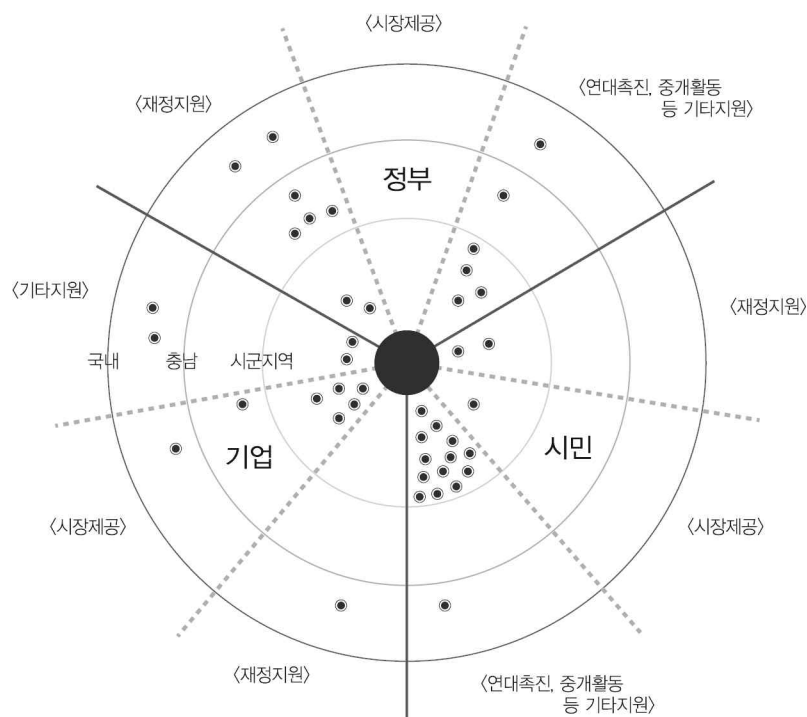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내의 이중성은 홍성군뿐만 아니라 충남 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로,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더욱 강화되는데 있어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지역의 순환구조 구축을 통해 내생적인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내에서도 선도지역과 후발지역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선도지역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고 아직 사회적 경제 성격이 약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시사점을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는 바로 섹터별 지원내용과 공간적 범위에 따른 연대관계 존재여부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원내용을 섹터별로, 또 지원이 제공되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연대구조에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34]는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연대관계 가운데 관계도가 50%가 넘는 경우를 연대의 성격과 내용을 바탕으로 표시한 내용이다. 각 영역별 연대관계는 크게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시장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직접적 재정지원과 시장제공을 제외한 여타의 지원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조사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과 가지는 연대관계는 재정지원과 기타 지원에 한정되어있는 반면, 기업과의 관계는 주로 시장제공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시민영역에 대한 관계는 대다수가 연대축진, 중개활동 등 실질적인 자원의 교류보다는 협력관계 구축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특성에서 현재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는 공공영역의 역할이 재정과 기타 지원에 한정되고 실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보호된 시장 제공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시민사회영역의 경우 지원내용이 협력관계 구축에 집중되고 시장제공의 기능이나 재정지원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 역시 한정된 역할을 나타냈다. 반면 기업영역에서는 시장제공 등의 연계관계가 강한 반면 재정지원이나 기타 지원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관계를 보였다.



- *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연대관계 가운데 관계도가 50%가 넘는 경우만을 표시
- * 각 영역별 연대관계는 크게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시장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적 재정지원과 시장제공을 제외한 여타의 지원을 하는 경우로 구분함

[그림 34] 충남 사회적 경제의 섹터별 연대구조

관계의 유형뿐만 아니라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도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영역별 차이를 보였다. 공공영역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충남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단체가

소재한 해당 시군, 충남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비중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광범위하게 연계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공공영역의 지원이지만 연대촉진 등의 기타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영역과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연계관계가 공간적으로 보다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시장제공 등을 위한 연대관계는 해당 시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일부만 충남과 전국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례조사대상 단체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 지역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충남도내의 다른 기업과의 연계관계 등을 통해 추가 시장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시민사회 영역의 연대관계는 그 공간적 범위가 시군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사례조사대상 단체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가지는 연대관계 가운데 해당 시군지역을 벗어나는 관계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상기한 바와 같이 연대관계는 ‘연대촉진 및 중개활동’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의 소비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영역의 연대관계가 단순한 협력관계 구축을 넘어서 지역내 소비자 그룹 형성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시민사회영역의 연대관계가 가지는 공간적 범위의 제한성이 ‘소비의 지역화’로 발현될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중심으로 성장해온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은 섹터별, 지역별로 편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대구조 형성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는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특화된 전략과 함께 충남 사회적 경제의 성과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산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 5 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와 방안

제1절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방향

1. 정책과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21세기에 와서 새롭게 등장해 지구적 동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을 보면, 국가의 쇠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최근 복지국가 실패의 대안으로, 또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특히 오랜 전통으로 발전해온 서구에서 두드러진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는 특히 위기에 처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며 복지국가와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복지국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국가나 시장이 충족시키지 못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중개기관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정부는 최근까지 공공지출을 매년 10% 이상씩 증가시키며 사회적 경제를 진흥해왔다(UK Cabinet Office, 2007). 한국정부도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 심각해진 경제위기의 처방으로 사회적 경제에 초점을 맞춰 복지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해오고 있다. 서구사회가 1980년대 이래 당면해온 실업과 빈곤의 확대나 양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채택한 ‘사회적일자리’, ‘사회서비스’사업, ‘사회적 기업’ 정책 등 일련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이제 한국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주성수, 2010).

한편, 사회적 경제가 주는 함의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중앙보다는 지방(지역)에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대표되는 현상은 다중격차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 충격은 비수도권, 지방(지역)에서 더욱 구체화된다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남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이를 타개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충남의 이러한 노력은 실제 충남도와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가령, 2000년~2009년 기간 중 연평균 9.0%씩 경제성장(전국2위)을 이루어졌으나 취업계수는 동 기간 중 28.8%에서 1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 재정자립도는 36.6%로 전국평균 52.2%에 미치지 못하고 16개 시도 중 10위에 머물면서 취약계층(월평균임금의 60%이하)은 53.5%로 1위에 머물러있는 점, 충남도내 졸업자가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하나 2005년 기준 지역 취업자 비율은 18.5%인 반면, 65.9%가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교육통계연보, 2005), 외래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이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2009년 기준 민간소비지출은 1,008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11위로 전국평균 1,185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은 외래기업이 지역에 유치되면 인구유입,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역경제 활성화)을 저해할 수 있다면, 이는 '성장'이 내발적 발전과 연계되어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즉 생산은 이루어지나 지역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의 GRDP는 높으나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동시에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과 소비의 연계, 성장과 과실의 공유 등에 대한 고민이 깊이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앞에서 살펴본 충남형 사회적 기업 심층사례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설문결과,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높은 지역민 고용비율을 보인다는 점, 지역내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지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측면이 발견되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지역내 문제를 지역내 자원이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성장의 과실을 내재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시민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에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외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유효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는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가 지니는 중요성은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주요 부문을 구성하며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 관련 다양한 사업 중 사회적 기업 정책의 경우 2011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형태인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정책이 지역적 차원으로 내려온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었을 때 그 지속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에 기반을 둔 것에서 나아가 지역과 실효적 관계를 맺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즉, 지역의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지역에 유용한 서비스를 공급한다든지, 지역의 생산물을 자재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행위와 지역의 조직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지역사회 내부 순환경제의 구축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를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내의 자원과 주체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국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순환과 공생의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목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충남이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는 유효한 정책적 수단임을 제시해왔다. 충남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정책적 목표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목표는 단기간, 단일액터, 단일차원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장기간, 다중액터, 다차원의 과정을 거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의 사회적 경제 비전을 ‘순환과 공생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설정하고, 시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기반조성기, 사회적 경제육성기, 사회적 경제정착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과제 해결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 구분은 사회적 경제기반조성기는 2013년까지, 사회적 경제육성기는 2016년까지, 사회적 경제정착기는 2020년까지로 설정한다. 사회적 경제는 어디까지나 수단적 개념으로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에 유용한 개념이자 체계로 작동할 것이다. 발전단계별 정책목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충남의 사회적 경제 발전단계별 정책목표

먼저, 사회적 경제기반조성기에는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과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노동부인증SE가 17개, 예비SE가 40개, 지역형SE가 58개, 마을기업이 32개 등이 존재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둘러싼 환경 중 충남도의 예산으로 56억이 배정 및 활용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도민의 의식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경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요성은 비단 일자리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양극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전국1위라는 점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반조성에 대한 시급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와 그 환경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 지원의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T/F 주요업무는 사회적 기업육성, 마을기업 육성 등 아직까지 일부 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2011년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예산 또한 56억 정도에 불과한 점을 생각할 때 이는 사회적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사업영역도 제한되어 있고, 지원예산도 턱없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충남도의 2012년 사회적 경제 분야의 예산확대 계획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반조성에 중요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조직간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조직과 충남도간의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식, 사회적 경제 관련 DB구축여부 등도 현재 수준에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하여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정착기에는 사회적기반조성기를 거치면서 양적,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책목표는 기반조성기에 비해 상당부분 상향되어야 한다. 노동부인증SE 32개(기존 17개의 약 150%성장), 지역형SE 86개(기존 58개의 150%성장, 마을기업 20%가 진입), 마을기업 64개(기존 32개의 200%성장)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한다. 아울러 충남도의 사회적 경제관련 예산은 2010년 56억, 2012년 159억인 점을 감안하여 2013년에는 100억원을 추가배정하여 259억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충남 사회적 경제의 위기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회지표(사회적 경제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회적 경제 예산의 확대와 계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체간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며 충남의 대기기업과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단체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단체와 사회적 기업과는 연계모델을 개발, 전문기관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유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김양중, 2011).

이와 관련, 설문조사결과(이은애, 2011)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내발적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없을 것이다. 설문결과 손익상황으로 보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과 같은 외부지원이 끊길 경우 지속가능성이 쉽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를 보였다는 점은 우려할만하다. 대자본과 비교할 수 없는 영세한 규모들의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착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인건비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 및 보호된 시장을 확보해주고, 우선구매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중심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원하는 지원방식이 무엇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정착기에는 노동부인증 사회적 기업, 행안부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 발굴

외에도 이들 기업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형SE의 지속적 발굴로 내발적 발전을 위해 타시도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사회적 경제영역은 자체 진화하는 단계로,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가령, 동일업종간 시너지에서 나아가 이종업종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내 대학 및 시민사회를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적 경제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 및 내용의 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킬 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시책 및 사업

이제까지 SWOT분석을 통해 충남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제시하고 내발적 발전을 위한 유효 정책수단으로 사회적 경제적 방식을 제시해왔다. 내발적 발전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사회적 경제 기간을 세 가지로 구분·제시한 후 각 단계별 정책목표를 제시해왔다. 그러나 설정된 정책목표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다차원의 시책 및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시책, 8개 세부시책, 34개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책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는 2가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경제 내부에 대한 것으로 인재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 외부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경제와 다양한 행위자와의 네트워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 및 그를 육성하는 시스템, 방향뿐 만 아니라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자산이 발굴되고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경제 관련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인재의 범위는 창업을 준비하는 리더 및 창업자 뿐만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근로자와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전문컨설턴트,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범위를 확장한다. 이들 사회적 경제관련 사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후자는 사람의 중요성 못지않게 사회적 경제 관련 외부환경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환경으로부터 요구

와 지지를 얻고, 투입되며, 이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환경과의 교호작용은 조직의 존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으로는 사회적 경제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 외부액터 등과의 협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책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영역은 3가지의 세부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만들기’를 달성하기 위해 내발적 발전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한 세부시책으로 첫째, 사회적 경제 통합 육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도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통합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다양하게 진행되던 사업들을 충남도의 상황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토착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충남만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인지도(수익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설문결과(임준홍, 2011),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정도는 52.8%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인지가 존재하며, 인지한 경우라도 설문대상자의 5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의 저하는 구매력의 저하로 귀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지도의 제고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사업, 목적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세 번째 시책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는 3가지 세부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를 들 수 있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내 사회적 경제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책 및 사업의 성패에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조직이 취약하면 할수록 조직 자체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하나는,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발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기존의 센터의 기능을 정립하여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직내 공무원들의 사회적 경제 및 그 조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재정적 자원 확보를 들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상당수의 조직들이 영세한 점을 감안, 초기운영자금 마련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 때 시의적절한 정책자금이 투입된다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성을 일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한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제도(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제도적인 장치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충남이라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 정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충남도의 경우 조례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조례를 정비하여 지원조직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예산지원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지원책이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시책들의 도입 및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임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사회적 경제 인제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요조사

(단위 : 5점(매우필요) 만점)

시책	세부시책	조직임원		전문가	
		5점만점	2개선택	5점만점	2개선택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경제역량 및 연대강화	4.36	17.8	4.67	26.2
	사회적 경제지역사회 협력 강화	4.31	17.7	4.72	18.1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	사회적 경제 통합육성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 포함)	4.22	15.2	4.20	4.8
	사회적 경제 인지도(수익성)강화	4.20	14.9	4.25	8.1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	4.19	13.6	4.54	19.0
	지속적·안정적 자원 확보	4.31	15.4	4.56	19.0
	제도(조례)정비	4.17	5.4	4.40	4.8

* 5점만점은 매우필요(5점)에서 전혀필요없음(1점)을 점수화 한 것이며, 2개선택은 무순으로 필요한 것을 2가지 선택한 비중임.

제2절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1. 시책의 목적

1) 시책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살펴보면 경제적 효율성 및 이윤의 극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은 여러 부분에서 도전을 맞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보다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다. 앞서 충남의 경제상황을 돌아보면 언급해온 바와 같이, 충남지역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과거 10년간 독보적인 외형적인 성장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충남의 민간소비지출은 전국평균보다 적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평균인 52.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형적 성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충남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발적 발전의 계기가 필요하며, 충남지역은 내발적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체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김양중, 2011).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경제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서 경제를 다시 사회의 일부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경제의 목표를 이윤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실현과 문제 해결에 두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최혁진, 2006). 이러한 사회적 경제 모형은 기본적으로 연대와 협력의 작동기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경제 모델의 구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의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충남의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연대구조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 조사의 79.4%로 교류 및 연대의 활성화가 조직의 경쟁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¹⁹⁾ 또한 지역사회의 사

19) 연대구조 활성화가 조직에 주는 도움의 정도: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14.6%),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64.8%), 보통이다(19.3%),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3%),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0.0%).

회적 경제 연대구조와 조직구조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연대구조가 강할수록 매출액 및 순수익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와 협력의 메카니즘이 가지는 중요성은 그 개념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란 포괄적으로 근대화의 산물인 국가(의무, 위계, 집단) 중심과 시장(계약, 평등, 개인) 중심의 사고가 아닌 사회가 근간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김신양, 2011: 29).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을 구성요소로 하여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 경제 방식을 의미한다(장원봉, 2006; 채종현·이종한, 2010: 16).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개인 사이의 계약이나 국가가 가지는 위계를 대체하는 자원배분의 메카니즘으로서 사회를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하나의 유기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에 따른 자원의 분배 혹은 사회문제의 해결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위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작동기제인 네트워크, 협력의 기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로 교류·협력하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영역 25.0%, 시장영역 32.9%, 시민영역 20.0%, 유사조직 12.1% 등으로 그 조직적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시장, 시민의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안적·보완적 경제 모형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및 협력의 강화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탐색 및 고찰을 바탕으로 하며,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이러한 핵심 주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앞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모형이 지역사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 113개소의 전수조사 및 8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심층사례조사를 통해 충남 사회적 경제 부문에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관련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충남도 정책과의 긴밀한 연대, 연대사업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사회적 경제 협의체 마련, 장기적 사회적 투자 확대, 네트워크 확대·강화를 통한 지원, 공공시장을 통한 구매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대안들은 정부의 지원정책, 사회적 기업의 생산역량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네트워크의 확대, 교육훈련을 통한 지원 등 연대 및 협력의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의 역량을 검토하고 강화하는 방안과 이러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인재 육성 체계 등은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네트워크역량, 사업역량, 지원역량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제시될 수 있지만, 본 절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춘 시책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고 그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 역량 및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행위자 및 일부 정책담당자만의 소규모 네트워크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화두를 제시하고 창업을 주도하는 리더 및 창업자 뿐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근로자와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전문 컨설턴트,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네트워크 이외에도 그를 둘러싼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환경과 연결되어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광역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시민사회영역, 기업영역 등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제(諸)분야의 협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역량이 적절하게 발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영역과 가지는 연대관계는 재정지원과 기타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기업과의 관계는 주로 시장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관계 역시 실질적 자원의 교류보다는 협력관계 구축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공부문은 보호된 시장 제공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기업부문 역시 실질적 자원교류보다는 형식적 협력관계 구축에 그치는 제한된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보이고 있다(이은애, 2011: 21). 이에 본 시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구성원의 역량을 이해하고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지역사회 거버넌스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제시되는 본 시책은 협소하게 접근하기 쉬운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네트워크의 역량을 재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가지는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계약 혹은 위계가 아닌 사회의 네트워크를 그 자원배분의 기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협력기제의 발견은 물적 기반 및 역량을 중심으로 판단했던 사회적 경제의 사업적 측면에 있어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책 구성 및 추진방향

1) 시책개요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일부 지원사업에 한정되고 있으며, 2011년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 예산 또한 56억 정도에 불과하다. 제한된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일방향적인 예산 지원사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 부문의 예산 총액을 159억원 규모로 증액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2012년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이외에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14억),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기반구축(4억), 사회

적 경제추진지원역량강화(11억), 사회적 경제 이해확산 및 사업모델 발굴 지원(17억) 등으로 사업역량 이외에도 네트워크 및 지원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충남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시책은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 및 그를 육성하는 시스템, 사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들이 구성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와 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접근으로 구성된다. 실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역시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를 충남 사회적 경제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충남도내 시군구, 충남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이은애, 2011). 이러한 측면은 행위주체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지며, 고려해야 할 항목 역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파악된다. 이에 본 시책 역시 사회적 경제를 크게 내적 부문과 외적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우선 협의의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내적 행위자로서 사업자 및 리더, 근로자, 주민 등의 역량 및 네트워크를 검토하는 ‘사회적 경제 역량 및 연대 강화’ 부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경제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행위자 혹은 사회적 경제의 직·간접적 수혜자로 파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및 기업, 정부 등과의 파트너십을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협력 강화’ 부문은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외부적 행위자의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경제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민사회 역량, 법·제도적 환경, 일반 비즈니스 영역으로 인식되는 기업과의 협력 등의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운영주체의 외부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충남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시책은 그 세부시책에 있어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내·외적 차원을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각 세부시책별로 해당 사업을 배치하여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시책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책과 세부시책 그리고 해당 사업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65>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 구성

시책	세부시책	사업	단계
충남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경제 역량 및 연대강화	사회적 경제 리더 육성	
		사회적 경제 인력 발굴 및 확대	
		소셜벤처대회 개최	
		소셜인턴제도 운영	
		사회적 경제 리더 및 전문 컨설턴트 육성	
		대학 연계방안	
		주민아카데미	
		사회적 경제 협의회 지원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협력 강화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 대회 개최	
		사회적 경제 민간상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사회적 경제 관련 프로보노 운동 전개	
		기업 및 지역사회와 협약체결	

2) 시책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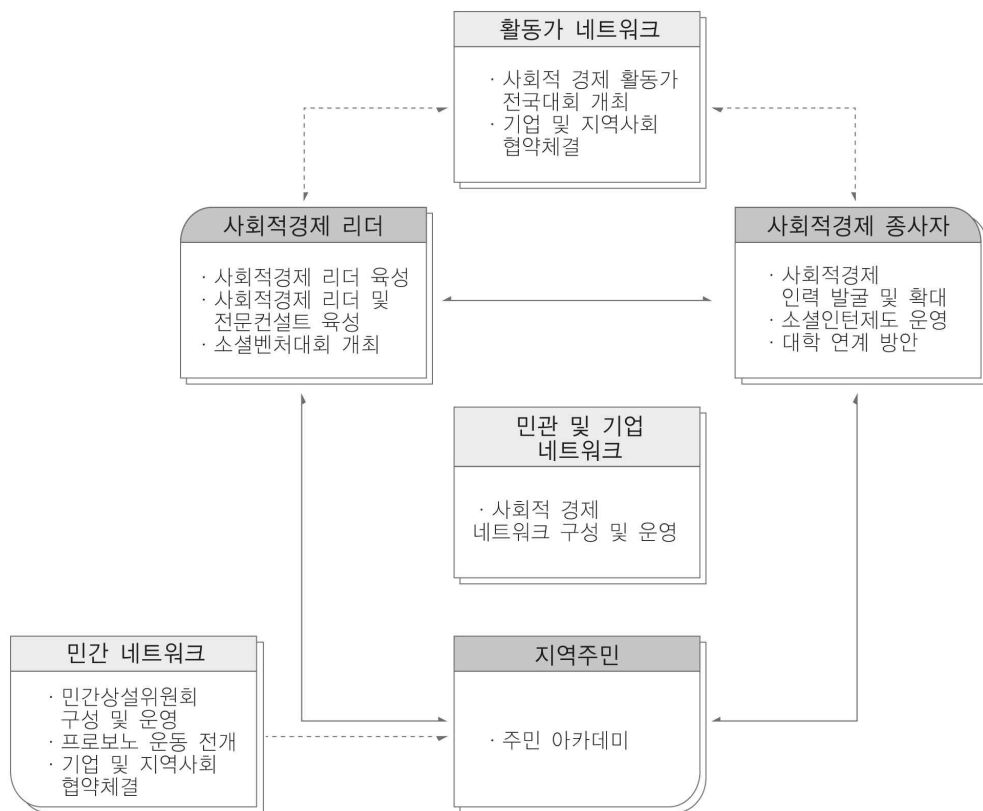
‘충남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시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의 내부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내적 역량의 강화 부문과 외부적 네트워크의 강화 부문으로 그 세부시책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요 사업을 배분하고 있다. 위의 <표65>에서 제시된 주요 시책 및 사업구성의 추진체계를 그 구조적 속성에 따라 간략하게 제시하면 [그림 3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경제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내부의 핵심행위자로는 사회적 경제의 리더, 그리고 종사자, 그리고 실질적 수혜를 받거나 소비자의 입장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언급할 수 있다. 각각의 핵심주체별로 제시된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은 해당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간접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하나의 추진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것은 네트워크 구조로서, 본 시책에서는 이러한 외부의 네트워크 관계를 활동가 네트워크, 민간 네트워크, 민관 및 기업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민관 및 기업 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의 운영주체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언급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를 직접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운영이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자원을 보여주는 민간 네트워크 또한 중요한 사회적 경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추진체계는 그 속성 및 역할, 주체에 따라 구분될 수 있지만, 시책이 제시하고 있는 거버넌스 차원의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체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하나의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림 36] 시책의 추진체계 및 세부사업

3. 시책별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회적 경제 역량 및 연대 강화

(1) 사회적 경제 리더 육성

① 사업목적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리더를 육성하여 충남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의 수립 및 실천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경제 리더 육성’ 사업은 사회적 경제 및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경제 부문의 정책적 방향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사회적 경제 리더 육성’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경제의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연수 및 지역리더포럼 등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부문 리더 상호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회를 창출한다.

각각의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 리더 해외 현지 사례 연수’ 사업은 사회적 경제의 CEO, 관련 공직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유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 경제 리더의 사회적 경제 우수 사례에 대한 연수 실시를 주 사업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은 모범사례와 충남 사례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충남형 사회적 경제 생태 구축 방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 공직자, 민간리더의 사회적 경제 이해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리더포럼’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지역활동가, 전문 연구자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리더들의 상호소통과 자유로운 연대를 지향하는 사업이다. ‘지역리더포럼’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십 수 차례에 걸쳐 지역자활 사업, 에너지자립의 지역만들기,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과제,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순환농업, 가축분뇨의 지원화, 로컬푸드 운동 등 공생과 순환의 지역만들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러한 ‘지역리더포럼’은 학술적·전문적 논의를 재생산해내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다

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제 분야 전문가·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임으로 인하여 네트워킹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앞서 모범사례 연수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능도 겸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사례: (사)한국사회적 기업중앙협의회(KCCSE)

한국사회적 기업중앙협의회(KCCSE)는 전국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로서 당사자 조직이면서 스스로를 돕는 지원조직으로 정부 정책 대응과 조직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 부문에서는 신규 육성과 더불어 기존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시장 진입 등 시장문제, 자금시장 조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지원은 기반이 취약한 지역협의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역기관과의 연대와 홍보를 도와준다. 올해는 창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 기업 역량 강화에도 비중을 둔 사회적 기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한겨레, 2011. 9. 6).

이를 위하여 KCCSE는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과 함께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청소대안기업연합회, 지속가능한관광사회적 기업네트워크와 손잡고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실무지역량강화과정’을 개설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성 훈련 및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료: 한겨레, 2011.09.06일자 기사 참조

③ 시행방법

‘사회적 기업 리더 육성’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본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범사례연수 및 지역리더포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범사례연수의 경우, 지자체 및 기관의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우선 수요를 고려한 기본계획을 설정한 후 그에 적당한 연수 참여자를 모집하고 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한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작업도 요구된다. 이에 비해 ‘지역리더포럼’은 보다 자발적 기제를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인 만큼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경제 인력 발굴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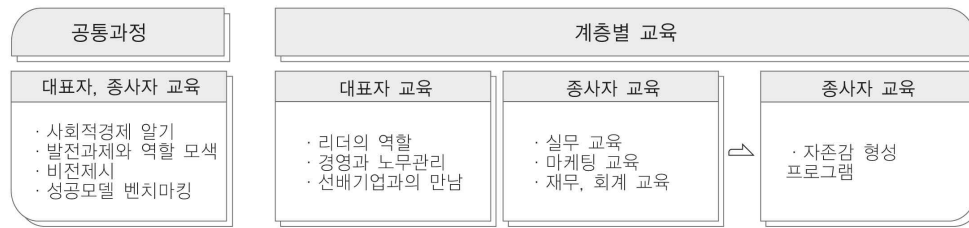
① 사업목적

‘사회적 경제 인력 발굴 및 확대’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경제를 이해함으로써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조직하는데 있다. 또한 인력의 발굴 및 확대는 지금 현안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느 정도의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인력 발굴 및 확대’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사업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의 인력 발굴 및 확대 사업은 사회적 기업, 충남형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등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과 연계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활성화를 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진 학습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적인 지혜와 진취적 의지를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관리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관리자를 육성하고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학습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향후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사회적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사)한국사회적 기업협의회 충남지부 충남 사회적 기업협의회는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의 개괄적 방향을 언급하면, 우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자와 대표자의 계층별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교육을 통한 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 형성하여 지속적인 학습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의 교육체계도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7] 아카데미 교육 체계도

이러한 주요 교육과정의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면, 공통과정은 사회적 경제의 일반적 내용으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지역에서의 역할을 모색하거나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대표자 과정은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가지고 지역과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나 종합적 실무안목과 경영 추진방안을 학습한다. 실무교육에 해당하는 종사자교육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실무학습과 차별적으로 종사자 과정 가운데 자존감 형성 프로그램은 조직과 자아 관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조직의 성장을 이끌고, 개별 리더십을 향상시켜 조직운영의 합리적 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선진 기업을 방문하여 조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거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 역량을 키우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종사자 및 대표자들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관리자, 그리고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다.

적용사례: Said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Oxford

옥스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의 사회적 기업가 과정에 관한 정규과목은 MBA 과정에서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 기업과 직접 관련 있는 과목으로는 37개의 경영대 선택과목 가운데 3개의 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혁신, 사회적 재정, 사회적 기업 설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들 내용은 국제적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혁신의 성격과 개념, 사회 금융시장과 투자환경, 사회적 벤처의 설립과 개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버드대학교의 경영대학원,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등에서도 유사한 사회적 경제 관련 과목을 제공하거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현재 우리 사회에 내에서도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체계 및 기회의 확대는 사회적 기업 인재 육성 및 확대에 중요한 조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사회적 기업연구회 워크숍 자료집, 김홍희(2010).

③ 시행방법

‘사회적 경제 인력 발굴 및 확대’ 사업의 하나로 제시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는 (사)한국사회적 기업협의회 충남지부 충남사회적 기업협회의 주최로 추진된다. 그 대상은 충남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대표 및 종사자를 포함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의 구성원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주요활동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은 공통과정, 대표자과정, 종사자과정, 선진지 견학 등 계층별·내용별로 진행되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을 가장 적합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의 추진방식이 고려된다.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인력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인력 발굴 및 확대’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도 일정부분 인력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설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추진체계 역시 각 프로그램에 적합한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소셜벤처대회 개최(창업 발굴 및 지원)

① 사업목적

‘소셜벤처(Social Venture)’란 사회 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시장실패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목적과 경제원리, 혁신성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소셜벤처 대회의 개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과 단체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의 협력관계 또한 촉진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소셜벤처경연대회’는 이미 전국적 단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이 주관,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대회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경연 대회는 서울·강원,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으로 나뉜 전국 6개 권역별 대회를 치르고, 전국대회에서 최종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셜벤처경연대회의 참가 분야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관광·운동,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기타 등으로 다양하며, 그 대상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아이템이면 된다.

특히 본 시책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를 구성하는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대회로 충남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충남형 사회적 경제 모형을 발굴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대회는 마을만들기분야, 사회복지 바우처분야, 3농혁신분야, 문화관광분야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사회적일자리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창업 사이의 연계점을 강화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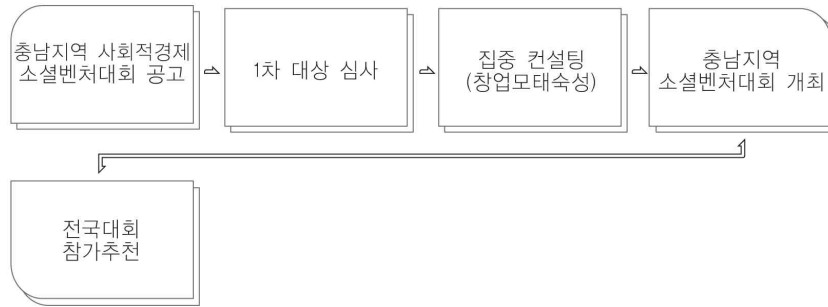
적용사례: 아시아 소셜벤처대회(Social Venture Competition Asia: SVCA)

아시아 소셜벤처대회(SVCA)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된 대회로서 아시아 대학생들의 사회적 기업 사업계획서 경진대회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SVCA의 우승팀은 세계 대회인 GSVC(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된다. GSVC는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MIT 및 런던비즈니스 스쿨, 베이징대 등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소셜벤처대회이다.

이러한 소셜벤처대회들은 지역사회에서 올라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숙성된 상태로 창업될 수 있는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 경제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막연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아닌 지역사회를 바탕으로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들은 지역과 전국,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이어지면서 그 가능성 및 혁신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더 넓은 지역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흡수하면서 그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③ 시행방법

소셜벤처대회 개최는 앞서 적용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 아시아, 그리고 세계적 범위까지 확대된다. 각 단계별로 그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숙성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본 시책에서는 충남지역에서의 소셜벤처대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소셜벤처대회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바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고를 통해 대상 사업을 걸러내고, 1차 대상 심사를 통화한 사업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통한 모태숙성과정을 거쳐 충남지역 소셜벤처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사회적 경제 운영안들은 전체 대회를 마치고 전국단위 경연대회에 대한 참가자격이 부여됨으로 인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 및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그림 38] ‘소셜벤처대회’ 사업 추진단계

(4) 소셜인턴제도 운영(사회복지과 실습교육)

① 사업목적

소셜인턴제도의 운영은 충남 지역의 도민들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및 모델숙성과정 지원을 통한 사업기회 확대에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시행되는 소셜인턴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청년계층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목적을 찾아볼 수 있다. 소셜인턴제도는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계층에게 혁신적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청년계층에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소셜인턴제도’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 및 자원봉사 지원, 대안학교(직업훈련)의 청소년 단기 인턴협약 진행, 충남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대회 운영 등의 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청년인턴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그 인력을 배정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경우 충남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센터 사업 등을 고려하여 그 인력을 배정하고, 멘토링 등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적용사례: 사회적 기업 직장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함께일하는재단은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지방 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중합고용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와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직장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회적 기업 중 9개 기업((주)나눔공동체, (주)노리단, (주)미디어교육연구소, (주)바리의꿈, (사)온누리복지재단 변동코이노니아, 열린사회, (주)우리가만드는미래,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주)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에 18명을 연계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www.hamkke.org>)

③ 시행방법

소셜인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소셜인턴에 지원하는 청년 및 청소년을 받아들이는 기관 및 이를 관리해줄 수 있는 기관의 활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충남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센터 등의 해당 기관은 소셜인턴의 활용계획을 세우고, 그들에 대한 인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셜인턴제도를 전체적으로 담당할 충남지역에서는 전체 소셜인턴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기관을 선정하고, 매 과정별로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수정·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5) 사회적 경제 리더 및 전문 컨설턴트 육성

① 사업목적

‘사회적 경제 리더 및 전문 컨설턴트 육성’ 사업은 사회적 경제 추진 조직 및 도민 중 사회적 경제 리더의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경영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은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 CEO, 각 분야 시니어 전문가 등을 지역밀착형 경영컨설턴트(충남형 In House Consultant)로 육성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사회적 경제 리더 및 전문컨설턴트 육성 사업의 주요 활동은 사업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MBA의 운영과 사회적 경제 컨설턴트아카데미의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경제 MBA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CEO를 대상으로 하는 Action Learning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리더들이 실무적 역량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사회적 경제 컨설턴트아카데미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 각 분야 시니어, 퇴직예정 공직자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컨설팅 기법, 실습을 주도적으로 학습시킴으로써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프로보노 운동의 전개 및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지역의 내적 역량 강화에 기초한 지역주도 지역발전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증진 프로그램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도민의 자발적 사회적 경제 실천 활동을 발굴, 촉진, 지원할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가지는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적용사례: Social Enterprise Program(SEP)

실제 컬럼비아 경영대학에서는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SEP)을 설립하여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경영의 기여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은 경영, 비영리, 공공 기고나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영감을 주기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983년 설립한 Public and Nonprofit Management Program을 2000년 Social Enterprise Program으로 명칭을 전환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에는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더욱 개발할 생각으로 5년 전략계획을 설정해놓은 상태라고 제시하고 있다(산드라 나발리, 2009). 이러한 경영대학의 혁신관련 프로그램은 인턴십, 기금모금, 마이크로파이낸스 투자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혁신과 피드백을 촉진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길러내고 있다(채종현·이종한, 2009: 82)

자료: 사회적 기업 국제 컨퍼런스 2009 자료집(2009); 채종한 · 이종한(2009: 82)

또한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경제 시책발굴 보고대회 및 퇴직 공무원 교육 등의 기회를 통해 공직사회 내부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업종별·대상별 특성을 살린 Action

Learning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별 사회적 경제 컨설턴트의 발굴과 훈련을 통해 충남지역에서 시군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시행방법

사회적 경제 리더 및 전문 컨설턴트 육성 사업은 충남지역의 지원 및 관련 전문역량을 가진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 MBA과정은 청양대학, 충남 테크노파크 등과 사회적 경제협의체의 공동주관으로, 사회적 경제 컨설턴트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공동주관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공무원 교육의 경우, 지자체 내부의 담당자 워크숍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전문가를 섭외하고 토론 및 특강사업을 진행하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회 등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9] ‘사회적 경제 리더 및 전문컨설턴트 육성’ 사업 추진단계

(6) 대학(사회복지 관련 학과, 청양대학) 연계방안

① 사업목적

사회적 경제 관련분야의 이론적 틀을 확립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재생산을 담당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인재를 육성하

고 인력풀을 확대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사회적 기업과 대학의 연계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활동의 수행이다. 사회적 경제는 현재 그 지역현황 및 지역자산, 네트워크 등 다양한 개념이 모호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활동의 수행은 향후 사회적 경제의 발전적 방향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충남지역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 및 지역주민, 기업을 제외하고도 시민사회 및 공적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양대학, 충남발전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은 나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대학은 사회적 경제 종사자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새로운 인력을 발굴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학과 실습교육, 소셜인턴제도 등을 통하여 대학은 사회적 경제 부문에 새로운 인력을 발굴하고 학습시키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과정까지 담당하여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적용사례: 사회적 경제에 있어 해외 대학의 연계 사례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 전담 지원조직과 지역 거점 대학 간의 유기적 분업 관계 및 전략적 네트워크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기구(런던의 경우, Social Enterprise London)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매우 일사불란하고도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한 유럽과는 달리, 지역의 대학이 중심이 되어 전문성 강화와 인재육성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정량적-정성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학, 기업, NPO, 투자자가 연계한 클러스터를 통해 인재중심의 사회적 기업이 형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개념 자체를 알리는데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대학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미국의 사회적 기업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료: 제4차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 자료집(양준호, 2011: 7).

③ 시행방법

사회적 경제와 대학의 연계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공적부문을 활용한 민간위탁의 방식이나, 민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결된 중간지원조직, 혹은 순수 연구기관의 형태 등 대학과의 연계방식은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와 대학의 연계가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와 대학의 연계목적이 연구수행을 통한 전문성의 보완인지, 전문정보의 제공 및 학습·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발굴 및 확산인지 그 목적과 연계 대상기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합한 추진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7) 주민아카데미

① 사업목적

‘주민아카데미’ 사업은 사회적 경제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도민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충남형 사회적 경제의 모형을 실천할 활동가,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기대효과를 가진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충남 지역에서 주민아카데미 사업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하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전문강좌, 일반강좌, 협동조합을 통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역화폐 관련 강좌, 농업농촌형 사회적 경제의 공동체 창업 강좌, 사회적 이해와 실천 강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사회적 경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아카데미와 같은 사업은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역별 사회적 경제 조직, 시군공무원, 언론, 기업, 시민사회단체, 종교기관 등의 사회적 경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용이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과 지원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며, 이러한 참여는 Action Learnign 방식의 학습모형 보급을 통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적 경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적용사례: 지역재단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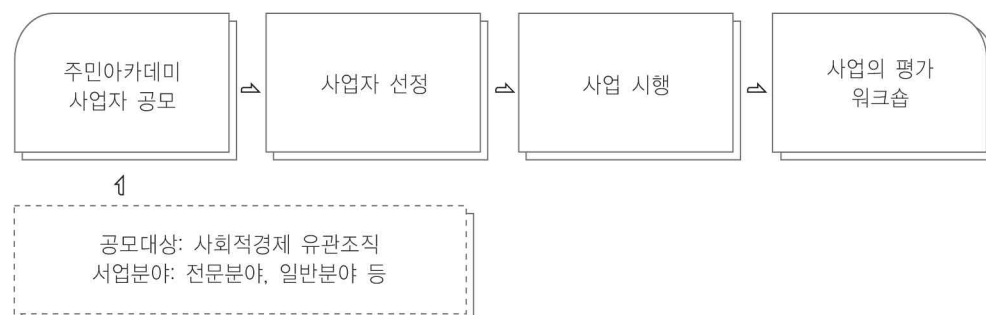
지역재단은 ‘지역을 바꾸어 세상을 바꾼다’, ‘지역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는 신념아래 지역리더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주민 스스로의 정책 수용력 및 기획력 강화, 지역자원 발굴 및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지역 주체역량 강화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집단’ 곧 ‘지역리더’ 발굴과 양성 및 네트워킹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이를 위하여 지역재단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 및 상호학습을 연결하는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재단에서는 2011년 9월까지 21회에 걸쳐 괴산군 농업농촌 핵심리더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및 기획하고 있다.

자료: 지역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www.krdf.or.kr>)

③ 시행방법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고취하기 위한 본 사업은 공익활동지원 관련법 및 사회적 기업육성법 그리고 관련 조례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및 강좌의 제공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전문성은 충남사회경제센터 등의 기관에 민간단체보조금 등의 제도를 통하여 위탁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이 사업을 집행할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별 사회적 경제연합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중간지원 조직의 형성 촉진 및 지역별 거버넌스 참여 주체의 결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0] ‘주민아카데미’ 사업 추진단계

(8) 사회적 경제 협의회 지원

① 사업목적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협의회는 충남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 단체들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한 거래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협의회는 사회적 경제 디자이너의 배출을 통해 재생산 구조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협의회 지원체계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협의회 활동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통해 정보 공유의 확산과 조직들 간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비전 제시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충남 지역 사회적 경제의 지원 및 발전적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협의회'는 업종별 네트워크 및 지역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충남 지역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체계 구성 및 지원을 주 사업의 대상으로 한다. 협의회는 주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우선 협의회 지원 및 구성을 통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마련,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 구성, 공동사업의 발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단체의 의견 수렴 및 자문, 지역 활동 지원, 네트워크 행사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협의회 활동으로 제시될 수 있는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6> 사회적 경제 협의회 주요 활동

분류	주요 활동	세부 사업
지원체계 확립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	운영, 실무, 분야별 제위원회 구성
	지역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분석, 조사, 평가, 정책대안 제시	-
운영체계 확립	업종별 네트워크	돌봄, 영농, 로컬푸드, 문화예술 등
	지역별 네트워크	권역별, 시군별
사업체계 확립	공동사업의 발굴	-
	활동단체의 의견 수렴 및 자문	-
	현안 및 지역활동 협조	-
	네트워크 행사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대회, 단체 간 워크숍 등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 간의 조직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회적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협의회는 각종 네트워크 행사 및 이벤트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부족한 인지도를 제고 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높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협의회 구성 및 기반 구축 사업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여 전반적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적용사례: Community Action Network

Community Action Network(CAN)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연구하는 민간단체이다. 이들은 기업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자원봉사조직과 비영리조직, 공적, 사적영역들을 연계하여 아이디어를 나눈다와 동시 실천적인 경험을 공유하여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CAN은 영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기관 성격을 가진 민간 네트워크로서 사회적 기업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적용사례: 한국사회적 기업협의회

한국사회적 기업협의회는 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의체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고,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이다. 이들은 기존 사회적 기업 간의 연대와 협조는 물론 새로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의 구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사업을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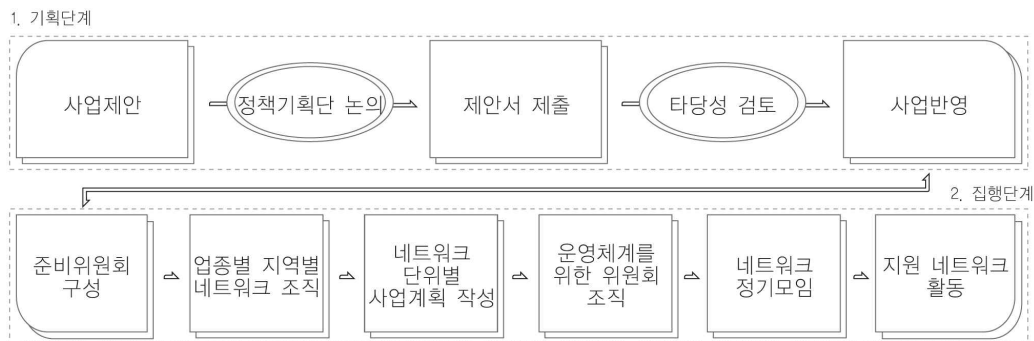
-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제도, 서비스에 관한 연구 및 정책건의
 - 사회적 기업과 관련도니 정보의 수집 및 공유
 -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출판사업
 - 사회적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판매사업 등
-

자료: Community Action Network 홈페이지(<http://www.can-online.org.uk>),

한국사회적 기업협의회 홈페이지(<http://www.ikose.or.kr/>)

③ 시행방법

사회적 경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단계는 시책의 기획 및 집행단계로 나누어 그 추진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사업을 제안하고 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에 반영된 내용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여 정기모임 등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 지원네트워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사업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1] ‘사회적 경제 협의회’ 사업 추진단계

2)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협력 강화

(1)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 대회 개최

① 사업목적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 대회 개최’는 사회적 경제의 장기적인 평가와 전망을 제시하고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활동과 비전을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활동가 대회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정체성을 점검하고 공동의 해결과제를 찾아 발전방향을 모색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지역별, 단체별 교류의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를 가진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 대회’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이 모여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방향 및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활동가들은 그 지역사회, 공공기관, 주민 등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여러 지역,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료 활동가를 만나는 기회를 통하여 서로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 대회’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경제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의 토론 및 기조발표 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부문의 장기적 전망 등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 사례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워크숍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각 지역 혹은 부문별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한 물적 교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 및 그 분류를 간략하게 구조화하면 아래 <표 6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67>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대회 주요 활동

분류	주요 활동
학습 및 미션공유	기조발표 및 토론, 특강, 사례발표 등
정보 교류	사례발표, 활동(재화 및 서비스)소개, 분과회의 등
물적 교류	생산물 전시 및 판매 등
네트워킹	단위별 워크숍, 문화행사 등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대회’는 이러한 활동들을 계기로 일차적으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적 교류 및 물적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대의 장은 각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부문에 있어 공통의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의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충남지역은 지역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자원 및 행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사례: 아시아 사회적 기업 활동가 대회

실제로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전국적 차원에서 이미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본 시책에서는 전국 단위의 활동가 대회를 제안하고 있지만 다른 사례에는 아시아, 혹은 세계 사회적 경제 활동가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창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2008년과 2010년에 걸쳐 이미 두 차례 활동가 대회를 개최한 ‘아시아 사회적 기업 활동가 대회(Asian Social Enterprise Summit: ASSES)’를 언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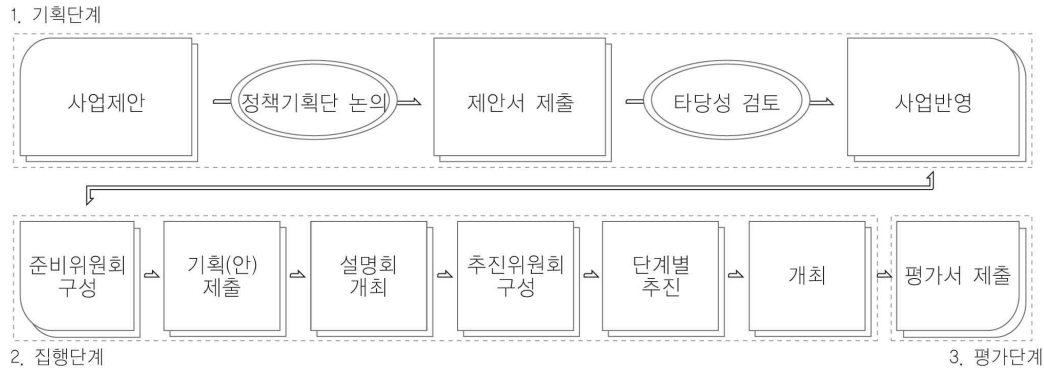
ASSES는 아시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온 주요 사회적 기업가들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외연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아시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그 연대를 만들어 내고자 기획된 아시아 최대의 사회적 기업가 네트워크 장이다. 이는 일방적으로 선진국의 모델을 따르는 것에서 탈피하여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 기업 활동가들을 모아냄을 통해, 아시아내 지리적 경제적 상황과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우수사례를 모아내고, 아시아 내에서의 사회적 기업 역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그 활동을 고무시키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이들의 미션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아시아 사회적 기업가의 협력을 위한 지속적 교류의 토대 마련
- 아시아 각국의 사회적 기업 소개 및 네트워킹
- 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아시아 사회적 기업의 모델 구축
- 아시아의 성공한 사회적 기업 사례 제시

자료: 아시아사회적 기업활동가대회 홈페이지(<http://www.asiases.org>)

③ 시행방법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고 보다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충남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시행방법은 그 단계에 따라 기획, 집행, 평가의 단계로 제시될 수 있다. 사업을 제안하고 정책기획단의 논의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충남 사회적 경제 시책 및 사업체계(안)’에 반영하는 과정을 기획단계라고 한다면, 실질적 전국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까지의 과정은 집행단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 및 보완을 위한 평가서 제출은 평가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차년도 사업의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피드백 체계를 구성할 있도록 한다.



[그림 42] ‘충남 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대회’ 추진단계

(2) 사회적 경제 민간상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사업목적

사회적 경제의 민간상설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형태는 사회적 경제 정책에 있어서 집행의 민간 전문역량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시군 밀착형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역량의 개발과 육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민간상설위원회는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부족, 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들을 지원조직이 가진 전문성과 외부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보강 등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민간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부분은 시군별 중간지원기관 역량 개발 방향 및 민관거버넌스체제 형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을 모으는 작업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부상하는 시군별 중간지원 (예비)조직에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공유 및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사업의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조직이 사회적 경제의 지역단위 중간조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또한 시군별 중간지원 (예비)조직들을 모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하여 개별 지역의 정보 및 자원을 교류하는 상호협력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광역단위로만 설정되어 있는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이 시군별로 작동할 수 있다면, 지역밀착형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의 형성 및 발굴이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로 민간상설위원회가 작동하고 지역기반형 사회적 경제가 정착된다면 중간지원조직 사이의 연대 또한 활발해지며, 전체 민관 거버넌스가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사례: 영국의 중간지원조직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전문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 및 사회적 기업가의 재생산을 위해 각 지역에서는 지원조직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그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실제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의 중간조직인 RAWM(Regional Action West Midlands),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런던의 중간지원조직 SEL(Social Enterprise London)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점대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의 재생산,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조사, 모범사례 연구 및 확산,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킹, 정보공유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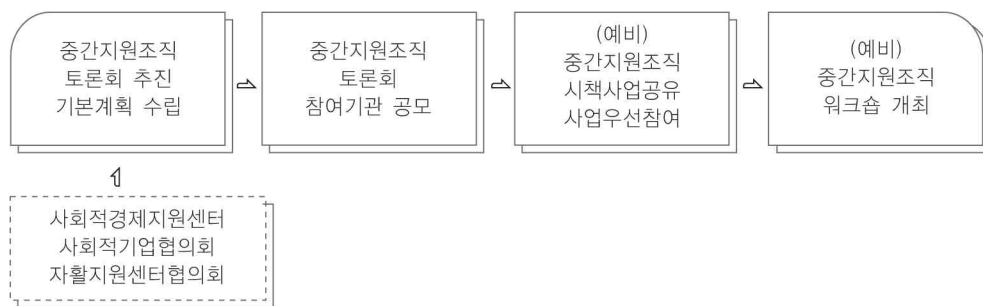
적용사례: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인구 8만5천명의 작은 지방도시인 완주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가 있다. 지역경제순환센터는 지난해 6월에 ‘지속순환형 사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센터 내에는 특색 있는 5개의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센터들은 각각의 독창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 양준호(2011: 6-9). 제4차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포럼 자료집, 사회적 경제연구회 워크숍 자료집.

③ 시행방법

민간상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우선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들에 대해 민간상설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토론을 거쳐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이들 기관에 꾸준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민간상설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일련의 조직들이 (예비) 중간지원조직으로 판단되며, 이들 조직에 대해 사회적 경제의 시책사업공유, 사업에 대한 우선참여 보장 등을 통해 그 역량을 키우고, 워크숍 등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민간상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단계

(3)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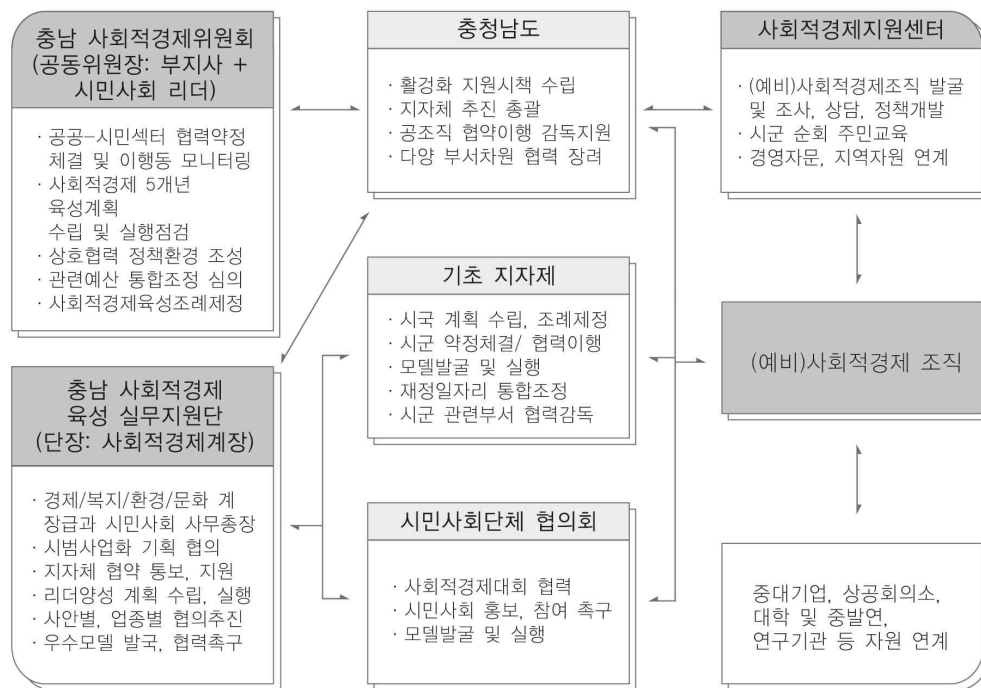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사회적 경제협의회 대표·지방의회 의원·주요 관련부서 공무원(경제통상실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사회적 경제 TF팀장, 문화산업계장, 농산계장, 사회복지계장 등)·충남발전연구원·유관기관 대표·연구자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방향 및 우선추진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은 사회적 경제 담론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사회적 경제의 발전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정책수행 모니터링, 정책지표 작성 및 정

책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조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들은 향후 지역자원 공동발굴·공동 판로개척 및 지역별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구축 및 내부거래 활성화 등의 활동들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충남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기획 및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구조로서,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를 실현하고 자발적 발전을 통한자립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충남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할 수 있는 위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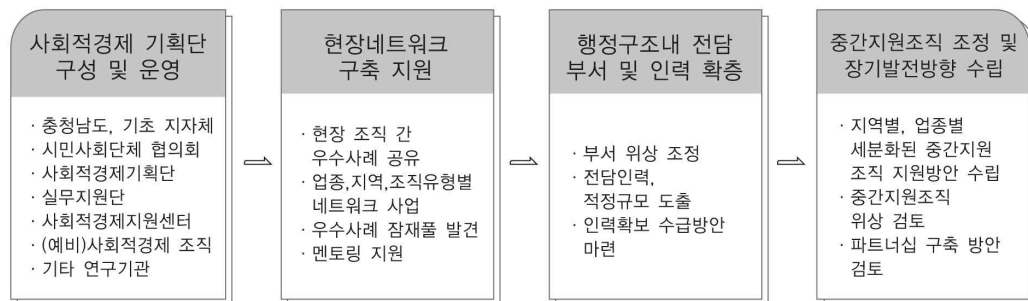


[그림 44]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조직도 및 협력체계(안)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결집된 네트워크는 정책 입안 및 집행자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정책설명회, 충남의 지역현황을 근거로 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시범사업’ 수행, 충남 사회적 경제 추진구조에 있어서 인력배치 방안의 수립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전국대회, 사회적 경제 대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의견수렴을 통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본 시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충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핵심 이해당사자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확립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문 및 점검의 역할, 자발적 필터링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 운영의 네트워크를 간략히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③ 시행방법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초기에는 충남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주요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기초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5]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사업 추진 단계

네트워크의 형태는 초기 자발적 네트워크에서 조직이 안정화되는 과정에 따라 사회적 경제 기획단,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 등 그 조직적 형태를 달리해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가지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및 참여 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초기

네트워크의 구성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현장네트워크, 행정조직 내의 사회적 경제 전담 부서,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위상이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 속성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위상 역시 변화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회적 경제 관련 프로보노 운동 전개

① 사업목적

‘프로보노’란 라틴어 ‘프로 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에서 발생한 용어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진다. 최초의 프로보노 활동은 미국사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출발하였으나, 사회적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적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개개인의 전문성을 기부하는 활동을 통칭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보노 운동 전개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성공적 사업 확산 및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제공하고 그를 통하여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프로보노 운동의 대표적 분야로는 기업경영, 법률, 세무회계, 디자인, 홍보, 기술, 이벤트 및 행사지원 등을 포함한다.

적용사례: 창원시, 사회적 기업 후원 ‘프로보노단’ 운영 (연합뉴스, 2011.05.09)

경남 창원시는 취약계층의 복지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프로보노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영·회계·노무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프로보노단을 조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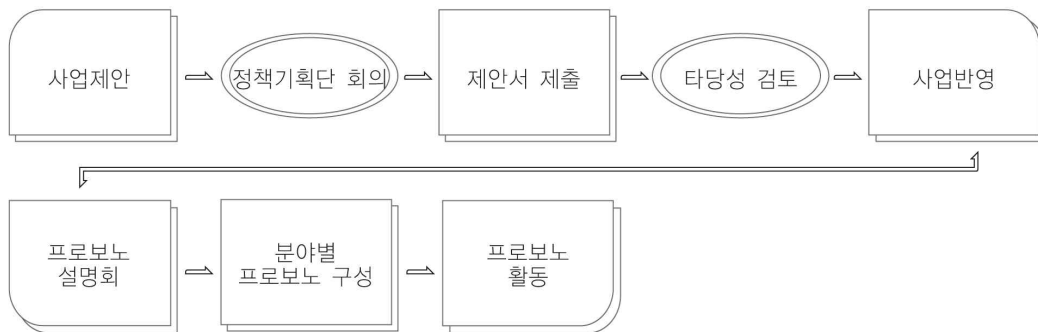
프로보노단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모두 30여명이 참가해 경영컨설팅, 노무·회계 상담, 법률자문, 교육과 세미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은 설립 취지는 좋지만 영세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며 "프로보노단이 법률과 회계 등 전문성을 제공하면 경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프로보노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연합뉴스, 2011.05.09.일자 기사.

이들 분야의 전문가들은 현장지원, 육성 및 홍보, 연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멘토링(mentoring)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교육, 단체별 1:1 경영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각 분야 전문가의 전문성 기부 활동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 성장을 통해 사업의 안정화, 공익활동의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③ 시행방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제시되는 프로보노 운동의 전개는 정부주도의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프로보노 방식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을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보노 운동의 전개는 사업의 제안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충남 사회적 경제 시책 및 사업체계(안)’에 반영되고, 이후 설명회 및 분야별 전문가의 구성을 통하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46] ‘프로보노 운동 전개’ 사업 추진단계

(5) 기업 및 지역사회(아파트 부녀회 등)와 협약체결

① 사업목적

앞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설명하며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는 포괄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약체결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기업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은 기업과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발전과 지역민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가진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약체결 등을 대표하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의 기업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지역 기업들의 생산품과 서비스 박람회 개최, 지역 활동가 봉사단의 구성 및 지역취약계층 후원활동, 기업과 지역사회 협약체결 행사, 협약기관 네트워크 조직 구성 지원 등의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적용사례: 영국 Business in the Community(BITC) 사례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사회는 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사업형태로의 전환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그 결과 현재 영국의 개인기업 가운데 20%가 CB에 해당하며, 찰스 황태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BITC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창업, 신규사업발굴, 의료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0개의 회사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일례로서 영국의 Peak 지역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소규모 농가들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양과 소고기를 생산해왔다. 전통적으로 광범위한 경작방식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도 하는 이 지역은 2005년 찰스 왕세자의 방문 이후 몇몇 농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그들의 고품질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보는 것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활동들은 농부들에게 지속적인 재정적 혜택을 가져다 주었으며, 기업은 이들 농부에게 지식, 기술 및 전략을 제공하여 상호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 사업은 The Prince's Farmers Marketing Initiative의 첫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 기업의 성공적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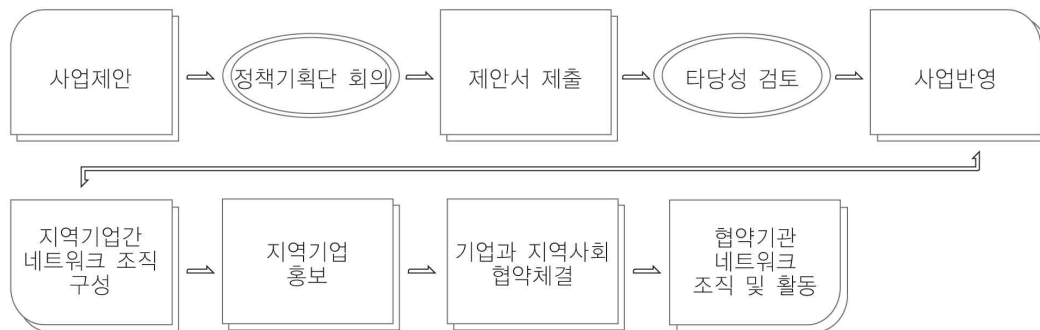
자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김재현(2010: 10-11).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기업과 사회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기업과 지역주민 사이의 연계활동은 지역의 기업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가져오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지역주민 간의 협력 및 협약체결 등의 사업전략은 국내·외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협동조합 및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③ 시행방법

프로보노 운동의 전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기업,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의 주체는 기업과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협력이 보다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모범사례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다양한 기회에 대한 정보를 각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지역의 경우, 이러한 홍보 및 조직활동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제안하고 검토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7]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약체결' 추진단계

4. 정책 건의

충남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가운데 '충남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시책은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의 역량 및 네트워크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측면에서 접근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시책은 추진체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의 직접적 운영에 관련된 내부의 핵심주체와 외부적 환경과 맞닿은 네트워크 역량의 부분

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책과 그를 구성하는 사업들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자를 강화하는 단일 사업의 성공을 넘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 체제 안에서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및 추진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 있어서 역시 사회적 경제가 내포하는 핵심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리를 구성하고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자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자산은 자연경관이나 경제적 자산 등의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전통 및 관습, 인적 분포 현황 등 무형의 자산까지도 포함한다. 실제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한 활성화 방안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지역의 자산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없이는 최대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거버넌스 구조는 유기적 관계라는 것이다. 시책을 구조화하고 개념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내·외부관계 및 그를 구성하는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세부시책과 구성 사업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또한 크게는 거버넌스 차원의 해법 뿐 아니라 사업기반이나 지원체계 부문의 활성화 방안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개별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개별 사업의 자원배분이 과연 합리적으로 일어났는가를 조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복잡한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내부의 책무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 강조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매개로 자원을 배분하는 운영체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주체들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기적 성과의 산출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발적 참여와 연대, 협력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가 정부중심으로 도입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제대로 성숙하기 이전에 또 다른 정부중심의 사업으로 변질되

어갈 위험성이 더 크게 존재한다. 사회적 경제 정책은 지금까지 시장과 정부 중심의 자원배분 메카니즘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그 속성을 바꿔가는 데는 장기적 안목과 인내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 연대와 협력이라는 기본적 원칙 없이,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어 기본적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도리어 기존의 질서마저 어지럽히고 또 다른 사회문제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올바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수많은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제와 시행착오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지만, 보다 많은 경우에 사업의 계획과 집행 등의 단계에서 발견될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도입에 있어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버넌스 차원의 시책은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가능성을 높이고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수많은 위험과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경제가 가져오는 최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자발적 참여와 연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장기적 안목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

1. 시책의 목적

1) 시책의 배경 및 필요성

지금까지 지역발전은 공간개발 측면에서 성장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중심도시의 개발에 주로 관심을 두었을 뿐 총체적인 지역발전 전략에는 무관심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대안모색의 관점을 외생적 발전론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산업의 경쟁력도 낮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이나 기업의 유치가 불가피하였다. 특히 한정된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농업의존도가 높은 저발전지역은 주민의 복지보다는 경제적 생산 영역에 투자하여 확대재생산을 유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용웅 외, 2009).

최근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외생적 발전론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서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왜 필요하며, 왜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동기부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동기부여는 지역사회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강한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 정도가 약 52%인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강화 및 확대, 사회적 경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반 형성을 통한 영역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대안적·보완적 경제 모형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왜 필요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지원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들과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사업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앞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고,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충남도에서 사회적 경제가 ‘왜’ 필요하고, ‘어떤’분야, ‘어떻게’ 활용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 통합 육성 측면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기존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즉, 제도적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기존의 다양하게 진행되던 사업들을 충남도의 상황에 맞게 재편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 측면으로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충남도 내의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타지방과 차별화된 상품영역을 개발하고, 이것을 사업모델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업모델을 지역에 어떻게 토착화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인식 및 인지도 강화 측면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인지정도를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 지역성과 현실성이 반영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생력과 내생적 선순환체계를 갖춘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책의 구성 및 추진방향

1) 시책 개요

사회적 경제 기반강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방향, 전략적 사업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방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전체적인 인식 및 인지로 향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내부적인 사회적 경제 자생력을 형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본 시책은 충남의 사회적 경제 사업의 총체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크게 사회적 경제 통합 육성 측면,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 측면, 사회적 경제 인지도 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활용가능한 시책 및 사업 내용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활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남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시책은 그 세부시책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관련된 영역의 접근,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기반을 전제로 하여 특성있고 다양한 영역의 접근, 총체적인 사회적 경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각 세부시책별로 해당 사업을 배치하여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시책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책과 세부시책, 그리고 해당사업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 6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8>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구성

시책	세부시책	사업	단계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	사회적 경제 통합 육성	정부지원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사업	
		정부비지원 사회적 경제 대상 지원사업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	충남 사회적 경제 전략분야 개발	
		시범지역개발사업	
		주민창안제도(공모사업 등)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공간제공 사업	
	사회적 경제 인지도 강화	사회적 경제 안테나숍 운영	
		사회적 경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홍보	
		사회적 경제 브랜드	

2) 시책추진 및 추진체계

사회적 경제 기반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은 사회적 경제 통합육성,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 사회적 경제 인지도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세부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각 세부 시책별 세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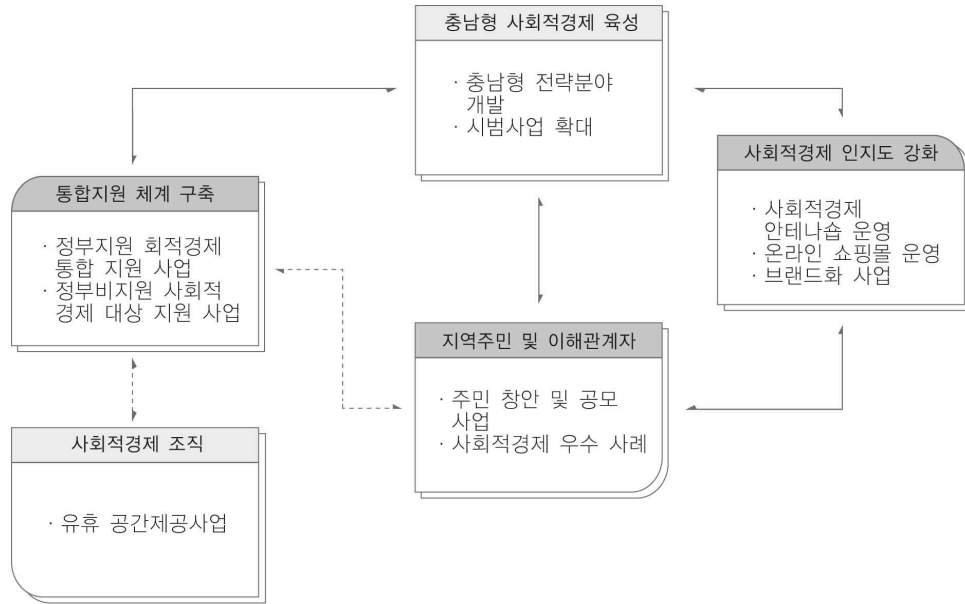
첫째, 사회적 경제 통합육성은 크게 정부지원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사업과 정부 비지원 사회적 경제 대상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산발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반감되었던 부분을 최소화하고 통일된 체계 안에서 실질적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은 크게 기존의 정부 주도형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 육성에 실질적인 수혜자인 지역주민들을 공모사업 혹은 시범사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전략분야를 개발하여 충남의 특성과 지역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사회적 경제의 토대마련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범지역개발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충남 전지역으로 점차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방안 정책방안의 모색과 개선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인지도 강화로 충남형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브랜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회적 경제 안테나숍 운영, 사회적 경제의 우수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전반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사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에서는 일괄적이고 통일성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 육성의 방향성과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민, 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및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의견수렴의 통로 마련은 물론 지속적인 Feedback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여건을 형성하는 여건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및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충남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터 플랜과 세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하여 올바른 사회적 경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 사회적 기업 협의회 및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은 충남도와 사회적 기업, 그리고 민간 조직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1차적으로 충남도 내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충남도 외부의 정부 및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수행가능한 영역과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재정자원, 인적자원, 환경자원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의 매년 정기적인 기본과제로 배정하여 정기적인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및 자료의 축적은 물론 사회적 경제 추진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와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와 충남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8] 시책의 추진체계 및 세부 계획

3.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 주요 내용

1) 사회적 경제 통합육성(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 TF 팀 운영,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협의회 등을 통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집중되지 못하고 각 정책들간의 원활하게 결합되지 않아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지원 정책의 통합화와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통합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정부지원 사회적 경제의 통합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와 두 번째는 정부지원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사회적 경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들을 충남의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육성이 가능할 것이며, 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책적 오류와 자원 낭비의 최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부지원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사업

① 사업목적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사업과 충남도에서 추진중인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 토착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합·지원하는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 6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지원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 사업’은 다양한 자원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현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육성사업, 행안부의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사업 등 각 중앙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역차원의 주체적이고 체계적·통합적인 지원 체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공동체의 조직화, 지역성에 바탕을 둔 수익성의 추구,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분화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주민의 창안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우수사례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개별 중앙부처 지원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설(농어촌체험시설,

숙박시설, 정보화 관련 시설 등)과 상품(농산물, 특산물, 농촌관광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개발되었지만 사업성과 자발성의 부족으로 많은 한계에 직면하여 추진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에는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의 조직적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투자가 충남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본적 투자가 되도록 만드는 한편으로 자생적 공동체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에 나서도록 유기적인 연계활동이 시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충남도에서 추진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평가를 토대로 충남형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방향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충남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다 큰 틀 안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③ 시행방법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는 다양할 수 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가 사회적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보다는 ‘충남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 하에서 정부부처의 육성계획과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육성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과정에서 각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충남도의 현실에 맞는 사회적 경제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정부비지원 사회적 경제 대상 지원사업(협동조합 등)

① 사업목적

충남의 ‘사회적 경제 통합’육성과 관련된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조직들이 스스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직유형에 따라 자신들의 조직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비지원 사회적 경제 대상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더 내실있고 건실한 여건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충남은 앞서 살펴본 정부지원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충남도 사회적 경제의 내생적 발전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지역적 차원에서는 외형적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수량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여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우선적인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 구축을 위한 혁신역량의 강화, 기업가정신의 고양, 잠재적 사회적 경제 집단 내부의 학습 능력 배양 등 지속적인 인적 및 사회적 자본 개발의 촉진 등 사회적 경제 전반적인 발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하다.

충남도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내생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역에 이미 뿌리 내린 양질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내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중심 추진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다양한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중앙부처 및 지역차원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 내생적 발전 영역이 더 강화될 수 있다.

③ 시행방법

일단,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경제 활동 사업과 지방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차원의 관련제도 정비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및 시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지원과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도 필요하다.

2)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시범사업)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충남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에 이어 사회적 경제의 대상과 영역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경제를 육성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직접적인 사업대상을 모색하고 그것이 충남이라는 지역성을 대표하고 타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대상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영역을 충남에서 총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 충남도에서 모델화하여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역주민, 단체, 학계 등과 같이 충남의 사회적 경제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경제 추진의 명분과 정당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의 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또 사회적 경제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혼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내발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 충남 사회적 경제 전략분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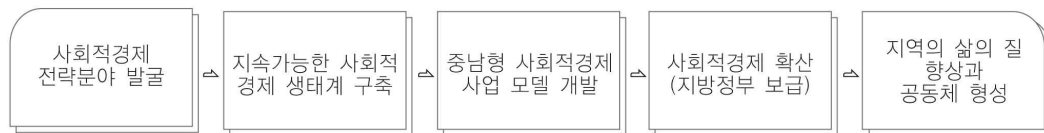
① 사업목적

충남 지역 내 수요가 높고 지역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사업 분야에서 지역의 선순환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수요가 높은 사회적 경제 사업 및 지원정책 발달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및 지역경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 결과도 사회적 경제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충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사업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 및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충남형 사회적 경제 개념에 어울리는 사업모델의 개발과 성공모델 도출하여 충남 내 기초자치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지역 내 선순환적 자원배분 및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확충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충남형 사회적 경제 전략분야 개발은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면서도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충남형 사회적 경제 전략 분야’ 개발과정에 대해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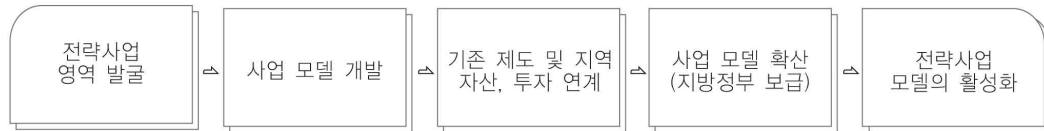
[그림 49] 사회적 경제 전략분야 개발과정 및 효과

현재 충남형 사회적 경제의 전략분야는 크게 전략사업형과 지역클러스터 구축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사업형은 충남도가 전략적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산업영역, 지역적으로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영역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사업의 영역은 충남도 사회적 경제 5개년 육성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되, 지역 특성(중소도시형/농촌형) 및 사업분야(자치경제형/유통혁신형/지역자원개발형 등) 등의 변수간 매트릭스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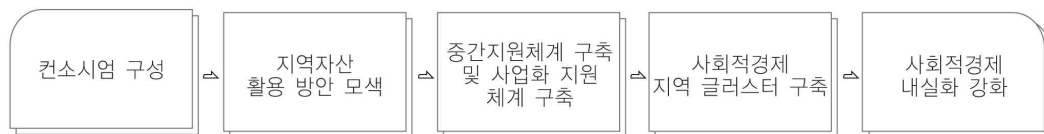
이러한 전략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 유기농업 생산농가 및 밀집지역에서 유기농 로컬푸드 레스토랑 창업, 친환경 대안에너지 보급 및 지역교통수단 개발, 생태교육 및 도농교류 활성화 등 복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및 생태적 교구재 생산·학습용품 재활용가게-무상보급 등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모델 개발 시 지원하고 이후 충남도 및 시군의 지역혁신 바우처와 연계하여 모델을 확산하도록 한다. 셋째, 과거 정부에서 농·산촌 개발지원 명목으로 투자한 생산설비 중 미사용중인 시설설비를 재사용

하여 마을형기업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금의 의존도가 높고, 창업 초기지원에 집중된 사회적 경제 자본조달 확충을 위해 지역시민 투자서클 조직 및 연계를 도모하는 시민참여형 사회투자 자원개발형 사업과 지역화 폐운동을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성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50] 전략사업형 사회적 경제 모델 개발 과정

지역클러스터 구축형은 사회적 경제 발전을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와 민간조직 간의 컨소시엄(지자체, 사회적 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사회투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선정하여 지역내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와 다양한 중간지원체계 육성 및 지역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견인하고자 한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이나 기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S/W적 지원뿐만 아니라, H/W적 지원(예: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허브 공간 확보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민간 협의체 구성 및 이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시민이용률이 저조한 문화체육센터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및 교육분야 사회적 기업 허브로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기존 사회경제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등이 공동입주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융합 및 확충 등을 통한 내실화를 이뤄낼 수 있다.



[그림 51] 지역클러스터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AMAP :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새로운 관계를 통한 상생

AMAP은 ‘시골농업유지를 위한 민간단체(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의 약자로 프랑스 남부의 다니엘 뷔옹이라는 농민이 미국의 지역사회후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을 모델로 2001년 지역주민들과 함께 처음으로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모델이 자생적으로 전파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2008년 프랑스 각지에 1,000개의 AMAP이 조직되어 있다. .

AMAP은 한 그룹의 소비자 그룹과 한 명의 생산자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소비자 그룹과 생산자그룹은 계절에 따라 생산할 식품(과일, 야채, 고기, 달걀, 치즈 등)의 종류와 양을 함께 결정하고, 보통 연간 2회로 나눈 계약을 맺으며, 생산된 식품들을 바구니에 담겨져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바구니의 가격은 생산자의 생산원가와 적절한 수입을 보장하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상호합의에 결정된다. 이러한 가격은 중간유통과 포장 그리고 생산물의 낭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소비자가 배달을 돕는 방식으로 할인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된다. 배달은 소비자들이 농장으로 직접 가지러 오거나 시내에 특정 지점에 배달하면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방식을 취한다. 생산자가 양질의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로 구성된 자원활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총무업무, 내부 커뮤니케이션, 조직활성화, 자원활동조직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AMAP은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윤리적이고 건강한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양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며, 유기농업을 통해 환경의 보전과 지역농업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복원한다는 공익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특히, 농업의 산업화에 따른 소농의 몰락과 생물학적 다양성 훼손에 대한 대안운동으로서 AMAP의 가치와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농가가구와 소비자 회원들 간의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과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인식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AMAP은 개별 농민과 소비자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결성되는 모임으로서, 그 자체는 특정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통해 아이디어가 확산, 전파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그룹들은 환경,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들을 매개로 조직되고 있다.

자료 : 엄형식 · 마상진(2010).

③ 시행방법

전략사업형의 경우 신규 주민 고용창출시에 수반되는 인건비, 시설장비 구입비용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전략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지와 전문역량을 보유한 단체를 선정하여 지역조사 등을 통해 지역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추진전략의 제시와 수립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목표 및 추진분야를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목표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평가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연말에 사업성과를 재무적·사회적 측면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차기 년도

의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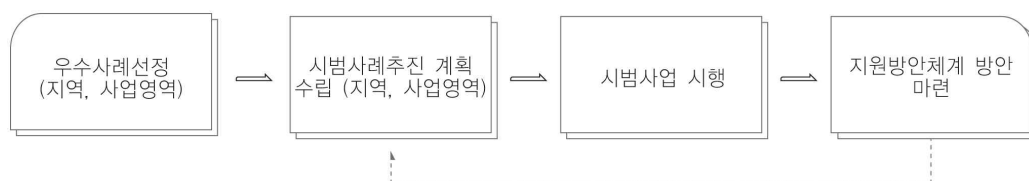
(2) 시범지역개발사업

① 사업목적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시범지역개발사업은 지역 내 우수사례들을 충남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책적 측면, 제도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과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충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과 지원 체계 및 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충남지역에는 농촌의 내발적 성공사례로 홍성군 풀무학교 마을과 문당리 사례가 존재한다. 중소도시에는 천안 자활지원센터(즐거운밥상)나 행복한 칼국수를 만든 시민투자그룹 행복한 동행 등이 우수사례로 존재한다.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실질적인 경험의 부족과 제반 지식이 부족하고 통일된 지원 체계 형성도 미흡한 형태이다. 그래서 충남도 전역에 다양한 유형과 영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4년간 우수사례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농어촌과 중소도시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지역개발(지역사회 공헌형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방안과 기준, 해당지역의 토착화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2] 시범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안

아르들렌(Ardelaine) : 지역전통산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개발

아르들렌의 역사는 1975년 청소년 운동을 매개로 모인 청년들의 아르데슈 지방 생삐에르라는 농촌오지마을의 버려진 모직공장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아르데슈 지역은 전통적인 모직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으나, 모직산업이 값싼 외국제품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몰락하고, 이로 인해 산업기반을 상실한 채 심각한 인구 유출과 공동화를 겪고 있었다. 청년들은 모직산업을 복원함으로써 지역내부의 힘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모였으며, 7년에 걸쳐 공동체적인 생활을 통해 소비를 줄이고, 다양한 일거리를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자신들의 자원으로 공장건물을 복원시켰다.

설립 이후 몇 년간 아르들렌은 생산과 마케팅의 다각화에 주력하였다. 1986년 인근 대도시인 발랑스에 취약계층 작업장으로서 봉제작업장을 설립하였다. 프랑스와 유럽차원의 박람회도 참가하고, 우편 주문 카탈로그 등의 방법도 도입하였다. 또한 론알프스 지방정부의 지역고용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하였다. 그 결과 1990년에는 12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다른 유럽국가 시장으로 마케팅을 넓혔으며, 1991년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공장건물을 양털 박물관으로 전환시켰다. 2000년에는 첫 번째 박물관에 이어 모직기계에 대한 새로운 박물관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아르들렌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아르들렌은 지역문화상품 판매, 식사제공 서비스, 지역 유기농 농산물 가공 및 개발에 투자를 하였으며, 2009년 아르들렌은 양털 수집 및 1차 가공, 메트리스, 침구, 의류 등의 완제품 가공, 마케팅, 관광 및 문화, 사무관리 등의 업무 영역에서 35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비노동자 조합원 83명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르들렌의 가치와 이에 기반을 둔 활동들은 전형적인 사회적 경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아르들렌의 목표는 지역의 인구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인구, 특히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설립이후 28년 동안 매년 평균 1명씩의 전일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또한 지역주민 대부분이 미숙련 노동자와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통합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모직산업의 활성화와 연동하여 지역산업과 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목양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르들렌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아르들렌은 이를 위해 목양자들로부터 양털을 구입하면서 시장가격이 아닌 품질과 최소가격에 기반을 두어 공정한 가격으로 지불하며, 완성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목양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한다.

그리고 아르들렌은 이러한 지역의 자산 활용과 개척된 자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훈련에 대한 투자, 지역에 대한 연구조사, 출판과 외부의 컨퍼런스 및 교육훈련을 통한 경험의 전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료 : 엄형식 · 마상진(2010).

③ 시행방법

충남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농어촌과 중소도시 수준에서 시범사업단지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 계획의 수립

은 물론 지원 체계 및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범사업단지 운영을 통해서 발견되는 개선방안의 지속적인 feedback을 통해 충남형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을 완성·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민창안제도(공모사업,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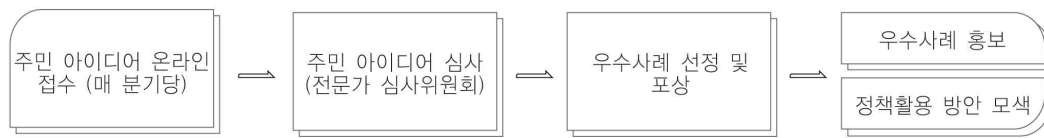
① 사업목적

충남 도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역사업이 필요한 분야의 발굴, 창의적 해법의 아이디어를 모아낼 상시적 온·오프라인의 제안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활용한 충남형 사회적 경제 모델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다. 실제로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민과 단체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사업,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와 같은 사업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69%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결국 충남형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단체들이 협력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추진의 정당성확보와 실효성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충남도 및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지역문제, 사회적 경제 창업아이디어,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 제안 등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아이디어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그리고 주민창안제도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한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사회적 경제 추진단체에게 사업정보로 제공하고, 사업화 결과를 지역방송 및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는 물론 도정 수립에서 도민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제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림 53] 주민창안제도 추진 과정

발레 델 크로끼오(Valle del Crochio) 지역행동그룹

‘농촌관광특구’ 프로젝트는 LEADER+에 의해 지운된 발레 델 크로끼오 지역행동그룹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며, 사업의 결과에 있어서도 사회적 경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사례는 지역행동그룹이 지역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발레 델 크로끼오 지역행동그룹은 실라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끼고 있는 이탈리아 남부지역에 위치한 LEADER 지역행동그룹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이 지역은 청년층의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과소화 및 여성들의 실업이라는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전략은 주요 경제활동의 다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지역발전전략은 농촌관광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보다 잘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LEADER 지역행동그룹은 ‘농촌관광특구(Rural tourism district)’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프로젝트(2004-2008)를 통해 이러한 발전전략에 직접적으로 답하고자 하였다.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다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한 노력의 투입과 중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LEADER 지역행동그룹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토론을 조직함으로써 지역개발전략이 특정 부문에서 가로막히는 문제들을 풀어내고, 지역전반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료 : 엄형식 · 마상진(2010).

③ 시행방법

분기당 응모결과를 집계하여 우수사례를 선정, 포상하는 형태로 1년에 총 4회에 걸쳐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분기당 응모된 내용들은 사회적 경제 주민창안 아이디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각 분기당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3팀, 동상 10팀을 선정하여 포상토록 한다.

(4) 사회적 경제관련 기업 공간제공 사업

① 사업목적

신설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어 재원이나 활동인력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공간 제공'사업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경감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이 공간과 관련된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충남도에서는 도내 유희 공간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공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도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중 유희 공간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혹은 낮은 임대료로 장기임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해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밀집지역(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에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에는 단지 내 유희공간을 해당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공간을 제공토록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의 재활용과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증진의 효과까지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③ 시행방법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의 무상 혹은 낮은 임대료 장기임대 형태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제공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 혹은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의 유희공간은 해당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공간의 활용할 수 있다.

적용사례: LH 사회적 기업에 유휴 공간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부터 건설하는 모든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사업 특성과 무관하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자투리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 특성에 맞는 공간이 미리 계획되어 제공됨으로써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간이 사회적 기업에 제공됨으로써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 파이낸셜 뉴스 2011.4.20.일자 기사.

3) 사회적 경제 인지도(수익성) 강화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존성에 대해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결국,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을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 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쇼핑몰, 전문매장, 브랜드화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생활의 일부분처럼 쉽게 접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인지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 안테나숍 운영

① 사업목적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홍보 활동은 단순히 책자나 사진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을 체험할 수 있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안테나숍 운용'사업은 소비

자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수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 개선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충남 로컬 푸드 직판장, 전통시장 등 사회적 경제 및 충남 특산물 유통을 위한 전문 매장과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 제품 홍보 및 소비자의 인식조사, 판매망 확대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일회성 지원정책이 아닌 정기적인 홍보 및 이벤트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활용효과 등 전반에 걸쳐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 안테나숍의 운용 필요성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를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용사례: 쓰네요시 촌영(村營) 백화점

교토부 단고반도 오미야초에 위치한 쓰네요시 마을은 쓰네요시 촌영 백화점을 운영한다. 이곳은 1997년 지역 농업을 진흥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출자로 만들어진 회사이다. 백화점 공간으로 폐지된 농협지소의 일부를 제공받았고, 주민 35명이 350만엔을 마련하여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도매로 떼어온 물건을 팔다가 차츰 주민들이 재배한 유기·자연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생활필수품과 가공식품 등도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고, 복사·팩스, 택배, 세탁, 사진현상, 독거노인에 대한 상품 배달, 제사준비, 우편발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촌영백화점은 주민 배당금과 운영비를 제외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다.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문을 닫으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촌영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자 마을의 의사소통의 통로라는 공감을 얻어 유지되고 있다.

자료 : 김광선 외, 2010:86.

③ 시행방법

사회적 경제 안테나숍은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생산품 조사 및 머천다이징(merchandising)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제품 품질력 및

시민들의 우호적·윤리적 구매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관련 유통망을 연계하여 고객평가 및 판로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적 경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

① 사업목적

‘사회적 경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은 사회적 경제 조직간 거래 및 오프라인을 통한 한계로 작용하는 지역성을 극복하여 전국적인 단위에서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과 제품의 선정은 충남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질적인 부분과 신뢰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사회적 경제 온라인 유통 전문 사회적 기업에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통 대행을 위탁하고 온라인 판매확대를 위한 제품생산-유통-관리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충남을 중심으로 충청·대전 권역 사회적 경제의 생산품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한 후 ‘충청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품질검증시스템 거쳐 판매 대행 및 권역내 원자재 사용률 증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적용사례: 서울형 사회적 기업 청밀의 ‘온라인 쇼핑몰 밀알스토리’

밀알스토리 쇼핑몰은 친환경유기농산물, 식품, 사회적 기업상품, 장애인생산품, 자원재활용상품, 유명인사/기업/개인 기부물품, 브랜드상품군 등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경기도 광주에서 취약계층(노인·장애인)이 직접 재배하여 생산부터 배송까지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는 맞춤기부를 통하여 적립금을 밀알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내·외 후원사업 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판매자 또한 자신의 상품을 알리고 수익금의 1%를 어려운 이웃에게 환원하여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쇼핑공간이라 할 수 있다.

자료 : 코카뉴스, 2011년 7월 27일자 기사.

③ 시행방법

온라인 유통 전문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대기업 사회적임 조달 견인 창구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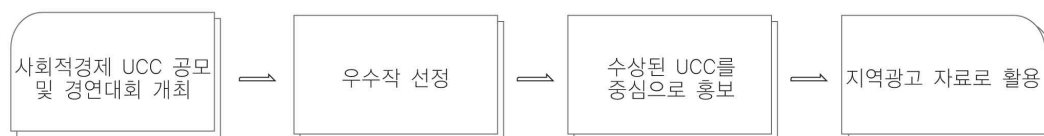
(3)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홍보

① 사업목적

도내 기업인, 도민 등 사회적 경제 발전에 있어 우호적 소비자이자 자원 투자자로 연계 가능한 주체들의 인식제고 및 참여 유인을 위한 대중홍보 확대를 꾀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결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약 7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는 단순히 사례 발굴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인식의 확산을 꾀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대학생 및 청년 대상 사회적 경제 UCC(user created contents) 경연대회 및 공모하여 수상작을 선정한 뒤 온라인 홍보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역의 방송대상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비의 일부 지원하여 충남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인식의 벽을 완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수기사례를 공모하여 수상작들을 반상회 및 관보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홍보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그림 54]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 홍보 과정

③ 시행방법

대학생 및 청년 대상 사회적 경제 UCC 경연대회 및 공모전, 지역의 방송광고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및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경험 수기를 공모하여 관보 및 반상회 자료로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꾀할 수 있다.

(4) 사회적 경제 브랜드화

① 사업목적

충남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브랜드화’사업을 통해 대외인지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사업이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결과, 약 73%가 충남의 사회적 경제 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브랜드화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더불어 이를 충남도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의 신뢰 향상도 꾀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과 충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이미지 혹은 LOGO를 제작하여 독립적인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및 경쟁력 향상, 소비자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공동 브랜드 이미지 및 로고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상품에는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유니폼 로고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지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③ 시행방법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이미지 및 LOGO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 선정된 공동브랜드 이미지 및 로고에 대해서는 포상 후 소유권은 충남도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4. 정책건의

충남의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통합 육성 사업,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 사회적 경제 인지도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 및 시책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남형 사회적 경제의 기반 강화의 목적은 기존의 결과지향적, 생산지향적 정책이 아니라 충남도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 지역과 다른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관주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제시와 가치의 추구는 일정 시점에서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충남도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취약한 재정여건, 부동산 중심 개발의 한계 노정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구축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닌 충남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과 그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바 사회적 경제가 잘 배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충남도 차원에서의 역할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 등과 같이 사회적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역민의 교육훈련 및 홍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체(관보, 반상회보, 충남소식 등)과 같은 간행물을 통해 쉽게 사회적 경제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실시하되, 이전에 충남형 사회적 경제 모델을 찾기 위한 연구조사(지역의 특성,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산, 사회적 경제 구축 Mapping, 충남형 사회적 경제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 전략 등)가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충남의 특성이 반영된 전략적인 사회적 경제 영역을 개발하고,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성공의 핵심요인은 사업의 촉발과 사업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진정성과 사업성의 잠재력을 가진 공동체를 발굴하고 사업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촉발하며 상호 네트워크화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광역적 차원에서 형성되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역의 활동가를 발굴·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실행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의 활동가를 발굴·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가들의 발굴과 양성은 지속적인 실천교육을 통해서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과 민간기업, 지역대학, 지역금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와 신뢰기반을 형성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

1. 시책의 목적

1) 시책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사회는 서구에서 발달한 사회적 경제를 국내에 도입하게 되면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관심은 점차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시 지역 사회로 그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경제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유럽에서 특히, 이탈리아와 같은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 그 성장 배경이 농업사회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충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사회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육성되고 있고 지원체제도 중앙정부 중심적이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이전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생적으로 발달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분위기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고,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인적·물적·지역적 요소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때만이 가능하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각 국가들의 법·제도적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한국도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고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취약한 지방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나 재원, 그리고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충남은 16개 시군의 불균형 발전과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남이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충남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충남만의 독창적인 사회적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조사에서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를 묻는 질문에 '충남도'라는 응답이 58.8%로 나타나 충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2) 목적 및 기대효과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이양은 단순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 깊숙이 침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중앙의 권한이양에 따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따라서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 한다면 지방정부 중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기틀을 다지고 다른 지방정부까지 확산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충남이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체계화하여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충남이 사회적 경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지방에서 사회적 경제가 얼마나 잘 정착될 수 있는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는 취약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각종 법·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충남은 대전시와 세종시 등 산업 및 행정, 교육 등의 복합도시가 들어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홍성과 금산, 서산, 태안 등 전통적인 농·어업이 산업 기반을 이루고 있어 복합적인 산업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산업 배경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주기 보

다는 다양한 성격과 형태를 가진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잘 구축된다면, 충남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와 정책수요 설문조사에서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책이 추진될 경우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30% → 73%)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시책 구성 및 추진 방향

1) 시책 개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남도의 의지와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충남도는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회적 경제 예산의 확대와 계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듯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황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조직 자체의 노력만으로 성장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확대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크게 3가지 부분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체계화를 위한 조치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전담 조직은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영세한 상태에서 조직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 때 적절한 초기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어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마련하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제도(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제도적인 장치가 체계화 되어야 한다. 즉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지방정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새로이 마련하고 기존의 유사한 지원정책이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 6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69>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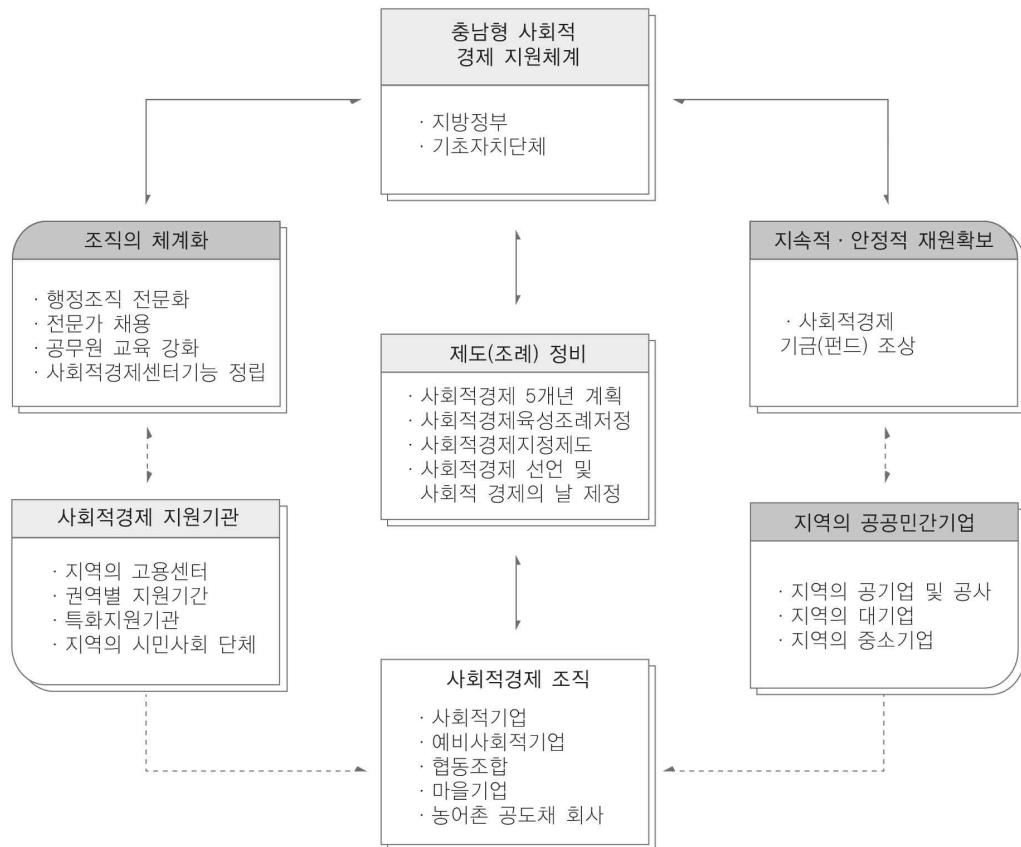
시책	세부시책	사업	단계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	지방정부 조직의 체계화	행정조직 전문화	
		전문가 채용	
		공무원 교육의 강화	
		충남 사회적 경제센터 기능 정립	
	재정지원의 확보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충남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구축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 제정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 운영	
		사회적 경제 선언 및 사회적 경제의 날 제정	

2) 시책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

충남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시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전문화(도지사 직속 부서 운영), 전문가 채용, 공무원 교육 강화(시군 순회토론회, 공무원연수원 교육 강화), 충남 사회적 경제센터 기능 정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정조직의 전문화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 조직의 신설 또는 확대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가 채용은 현재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에 종사 중인 인력을 지방정부의 인력으로 특별채용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무원 교육 강화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에 대해 공무원들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무원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충남 사회적 경제센터의 기능 정립은 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현재 그 위상과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에는 조직정비를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55] 시책의 추진체계 및 세부 사업

둘째, 지속적·안정적인 재원 확보이다.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대부분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가칭 사회적 경제 기금(펀드) 조성(100억) 등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조례) 정비가 요구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적인 여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충남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충남은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략적인 사회적 경제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충남은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충남은 2009년 4월 15일에 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고 보기에 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 운영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포괄하고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발굴하기 위한 지정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선언 및 사회적 경제의 날 제정이다.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홍보를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 기업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경제 홍보를 위한 선언 내용이 담긴 충남만의 사회적 경제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더욱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체계 강화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하되 지방정부 독자적인 추진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를 강화함에 있어 다른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이나 지역의 공공·민간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이는 곧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기업 혹은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시책별 사업의 주요 내용

1)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

(1) 행정조직 전문화(강화)_ 도지사 직속 부서 운영

① 사업목적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사회적 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전문화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극히 소수이다. 또한 충남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났다(임준홍, 2011: 19). 이에 따라 행정조직을 전문화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충남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직속 부서를 운영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게 되어 보다 전문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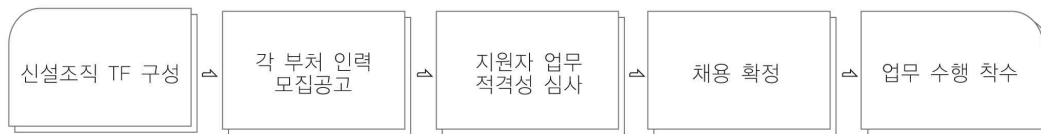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전문화 사업은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 한다. 현재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관련 행정인력은 매우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업무에 있어서도 다른 업무와 중복되어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도지사 직속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신설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수의 인력을 충원하거나 관련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새로운 신설 조직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지사 직속 부서는 조직의 위상이 다른 조직과 별도로 위치하게 됨으로써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고, 조직의 인력 또한 다른 업무를 맡지 않고 사회적 경제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③ 시행방법

행정조직의 전문화 사업은 2012년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된다. 우선 독립기구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 내에 사회적 경제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마련하여 관련 조직의 규모와 인력 충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 때 태스크포스의 구성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회적 경제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신설하거나 편성하여 사회적 경제 전담 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6] 충남 사회적 경제 전담 부서 신설 단계

(2) 전문가 채용

① 사업 목적

전문가 채용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사회적 경제를 전공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는 국내외를 비롯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채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은 충남의 사회적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충남이 사회적 경제의 선도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관련 연구기관이나 학계를 통해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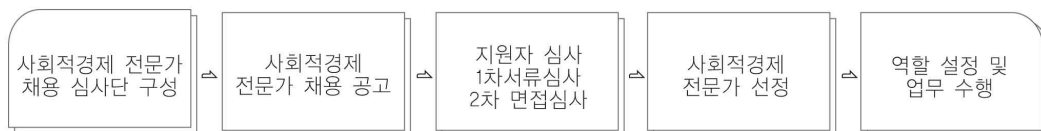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향후 충남의 사회적 경제의 방향설정과 장기적인

사업 구상을 위해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전문가의 요건은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박사학위논문 소지자를 중심으로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충남의 제반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거나 충남의 연고가 있는 전문가라면 더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를 채용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역량이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적성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지역사회나 공동체 등을 연구함에 있어서 지역민들과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문적 연구 소양과 인적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③ 시행방법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채용하는 시기는 2012년 초에 시작되어야 한다.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의 조속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 그리고 외부 인사선발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채용 심사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 채용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특히 충남에 연고가 있거나 복합도시인 충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력이라면 선발 대상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문가 채용에 대한 예산은 충남도의 예산에서 별도 편성하도록 한다.



[그림 57] 충남 사회적 경제 전문가 채용 절차

(3) 공무원 교육 강화

① 사업목적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체들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조사에서 공무원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임준홍, 2011: 19) 공무원은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자의 역할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공무원 교육 강화는 지역의 내적 역량 강화에 기초한 지역주도와 지역발전의 전략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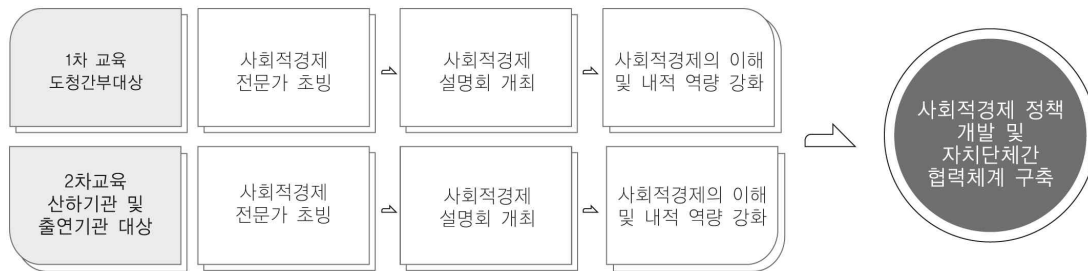
② 사업의 주요 내용

공무원 교육 강화 사업은 행정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민의 자발적 사회적 경제 실천을 발굴하고, 촉진, 지원할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 사례조사 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이은애, 2011: 29). 이에 따라 공무원 교육은 향후 사회적 경제 정책을 수립, 기획,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무원 교육 강화 사업은 공직자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창조적 유관 정책의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학습연구모임 및 시책개발모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교육 강화 사업은 시군 및 도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출연기관의 사회적 경제 활동 능력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무원 교육 강화 사업을 통해 시군 간에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화를 이룰 수 있다.

③ 시행방법

공무원 교육 강화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 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이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도청 간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도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특강, 시군 담당 과장 대상 사

업 설명회, 시군별 공직자 대상 사업 설명회 및 특강, 시군별 사회적 경제 담당자(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일자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 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시책발굴 보고 대회 및 퇴직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4400만원으로 예정이다.



[그림 58] 공무원 대상 사회적 경제 교육 효과

(4) 충남 사회적 경제센터 기능 정립

① 사업목적

현재 충남에서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기관은 충남발전연구원 내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이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현재 연구 업무와 현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능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조사에서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기능강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6%로 나타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임준홍, 2011: 19)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기능 정립 사업은 향후 충남이 사회적 경제의 선도적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사업이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현재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으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조직규모로 보았을 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인력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향후 사회적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은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인력규모를 현재보다 더욱 충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센터의 조직명을 개편하여 사회적 경제기획단 등의 명칭으로 바꾸고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연구와 현장 업무를 분장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9]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단계별 핵심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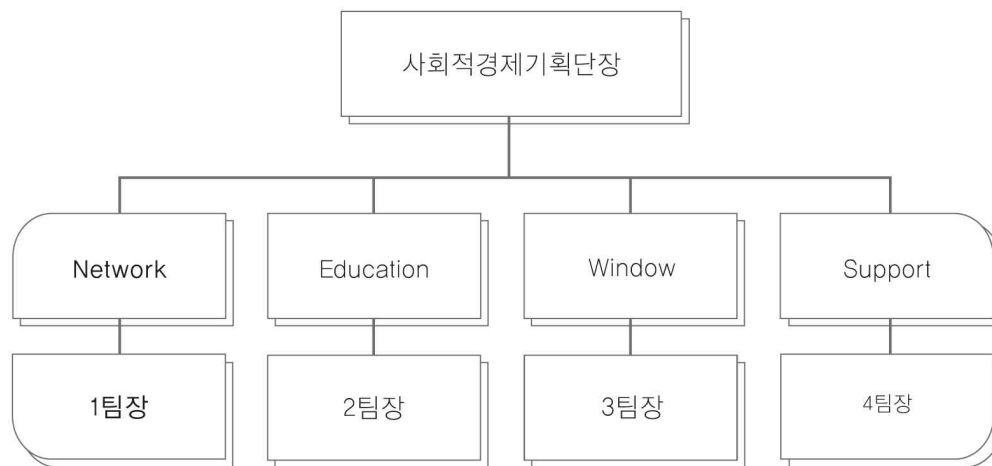
자료: 송두범, 2011: 4

③ 시행 방법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기능 정립은 2012년부터 시작하되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과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충남발전연구원 내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조직을 연구 인력과 현장인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연구인력00명, 현장인력00명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력선발이 완료되면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을 착수하여 그 인력선발 기준에 맞게 기능을 재편하도록 한다. 또한 새로이 선발된 인력들과 기능이 분류된 연구 인력과 현장 인력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도록 정기적인 회의나 모임이 있어야 한다.

한편,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로서 사회적 경

제 조직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충남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수행 및 지원,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연대구조 내에서 자립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구조 활용방안 제시 등과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이은애, 2011: 32).



[그림 60] (가칭) 충남 사회적 경제기획단의 조직도

자료: 송두범, 2011: 6

2) 지속적 · 안정적 재원 확보

(1) 유사 정책자금 활용(소상공인정책 등)

① 사업목적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반 속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창업 초기에 자본금의 소요가 많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 어려워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근거는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자금(펀드)을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5%로 나타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임준홍, 2011: 19). 충남이 재정적으로 건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

정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건강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펀드를 구축하여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사업의 주요내용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금융지원은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지역사회개발, 소셜비즈니스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발에 필요한 융·투자 및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지자체 차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유사 정책 자금 활용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지역금융정책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혁신 촉진과 지속가능한 성장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의 다양한 민간금융재원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소셜금융 Tool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 심층사례조사에서도 일부 사회적 기업의 손익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함이 나타났다(이은애, 2011: 11).

적용사례: 국내 사회적 기업 금융지원

- **고용노동부의 대부사업:** 고용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증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 대부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50억, 2009년 30억, 2010년 60억 총 140억 규모의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수행함
- **미소금융재단 대부사업:** 미소금융재단은 2010년 12월 기준 8천억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향후 10년동안 2조를 조성하여 연간 2000억원의 기금을 마이크로크레딧에 사용하기로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부사업:** 영리법인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지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기로 하고 2010년 50억을 지원하고 2011년에는 100억으로 확대
-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미래에셋사회적 기업투자펀드:** 고용노동부 25억을 모태자본으로 하여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영사가 되어 42억 규모의 사회적 기업투자펀드 조합결성

자료: 이희수, 2011: 21

적용사례 : 외국의 사회적 경제 기금

- EU차원에서 50조 규모의 유럽소셜펀드(ESF, 2017-2013)를 조성하여 연재 120조 규모를 유럽 각국과 지역에 매칭펀드로 지원
 - ex)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ESF 4조 6천억에 영국정부 매칭자금 4조 6천억을 플러스한 9조 5천억이 투입됨
- 영국의 경우 퓨처빌더스펀드(CIC분야기금), 피닉스펀드(빈곤지역 지원펀드), Plunkett Foundation(농촌지역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지원), CAN 메자닌펀드(제3섹터조직에 공동사무공간 임대사업), Unlimited 펀드(혁신적사회적기업가에게 공모시상제 지원금 제공), 빅소사이어티뱅크, Charity Bank 등 정책목표에 따른 정부 기금과 민간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 프랑스의 경우 국영금융기관기금(CDC기금: 사회적 경제와 지역개발지원,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지원), France Active, France Initiative 등 마이크로파이낸스 펀드 등 다양한 금융인프라 구축
- 미국은 SVP 인터내셔널, 아쇼카재단, 스콜재단, 드래퍼 리처드 재단, 에코잉그린, 아큐먼 펀드 등 4만개의 재단과 지역투자법(CRA법)에 따른 공동체개발기구(CDFI)가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 육성을 프로모션
- 이탈리아는 마르코니 협동조합 기금, CGM 재정 컨소시엄 기금,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상업적 금융기관, 윤리은행, 사회적책임투자기금 등 소셜금융 지원시스템 구축

자료: 이회수, 2011: 12

③ 시행 방법

충남은 향후 4년간 200개의 사회적 기업과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때 도 예산 48억(국비 매칭된 2011년 추정예산)규모 외에도 최소한 매년 민간차원에서 50억 정도의 재원이 개발·투여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은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 정책변화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별화된 경쟁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충남만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금 마련의 Tool 에 대한 방안으로서 충남도는 산하기관에 지역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민관협력의 독립적인 지역공익재단으로 지역기금을 설립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충남의 지역투자기관은 민법상 민간재단이며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며 가칭 '충남사회적 경제지역투자재단'으로 한다. 충남도가 시드머니를 출연하고 지역의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민관파트너십 방식의 비영리 민간공익재단방식으로 지역투자기금(지역재단)을 설립한다. 충남은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가칭)충남사회적 경제지역투자재단'에 시드머니 기금을 출연하고 여타 민간기관들이 컨소시엄 법인에 지배구조에 참여하도록 한다. 충남도 차원에서 지역재단 설립에 대한 정책, 예산, 사업조정 등은 경제통상실이 총괄하고 정책실행과 집행 등은 충남발전연구원(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실행력을 담보하여 도차원의 T/F단을 구성하여 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충남도내 4개 시군의 대기업 참여를 네트워크화하고 지역기반의 협동조합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충남도 산하 16개 시군에 대해서는 출연단계 또는 사업집행단계에서 매칭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시군의 자발성과 협동적 경쟁을 건인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연금은 2012년도에 50억 규모의 재단 출연금 확보로 재단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는 충남30%(50%), 관내금융기관 30%, 대기업 40%, 민간재단 9%, 일반시민, 충남·충청 기업인 등으로 출연을 조직화 한다. 또한 매년 재단 출연금 30%씩을 증액발행하고, 대기업이 유치된 4개 시군의 기업들과 관내 금융기관 및 협동조합금융기관, 민간시민 벤처중소기업 인 등을 참여시킨다. 사업재원은 2012년도부터 연간 50억 이상의 기탁금, 위탁금, 컨소시엄자금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충남도와 민간지역재단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풀뿌리 민간기금 모금운동 전개로 지속적인 사업재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제도(조례) 정비

(1) 충남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수립

① 사업목적

충남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충남이 2011~2015년을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 및 집중 육성기간으로

상정하고, 정책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첫째, 사회적 인지도 향상, 둘째, 지역리더 양성, 셋째, 사회적 기업 기반 조성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충남은 2011년 7월말 현재 113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2015년 상반기까지 지역기여도 10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충남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총 3기로 구분하여 발전 단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제1기 기반조성기는 (2010년 충남도 차원의 정책수립기를 포함하여) 2012년 까지 충남도의 '제1차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이 수립되고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기이다.

제2기 지역형 사회적 경제 육성기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고 상시적 민관협력기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육성되는 시기이며,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로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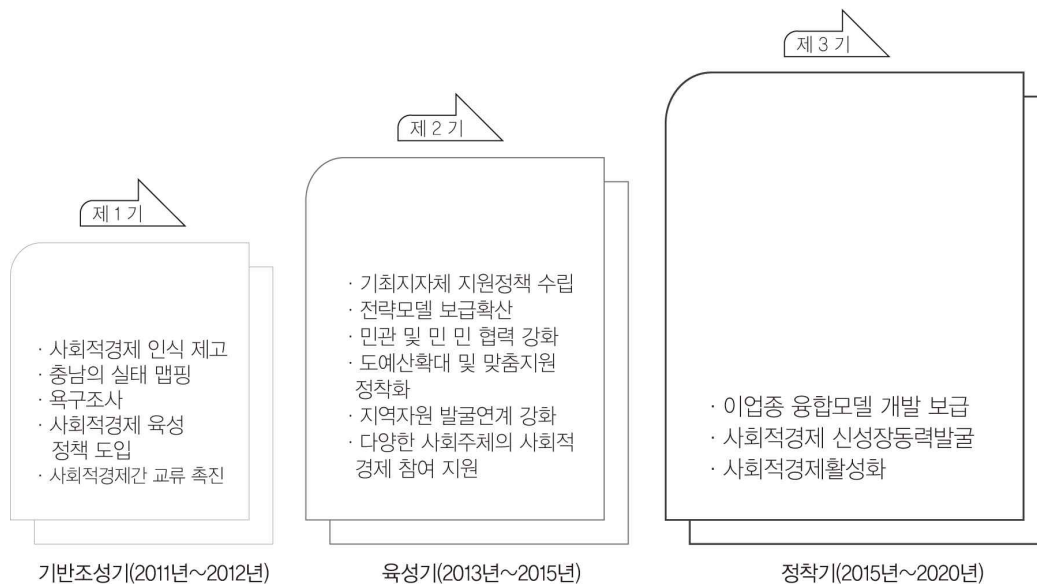
제3기는 지역수요를 근거로, 도민 주도하에 지역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전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 낙후지역 발전과 지역고용 창출의 핵심적 해법으로 자리 잡아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가는 시기, 2015년 하반기부터 5년(민선6기 지자체장 공약화)이라 할 수 있다.

③ 시행방법

첫째, 제1기는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기이다. 기간은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이다. 우선 2011년 하반기는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 충남실태 맵핑, 욕구조사,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 도입, 사회적 경제간 교류촉진 등을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공무원 및 예비창업자의 교육, 기초지자체 순회토론회, 충남 대토론회,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사회적 경제육성계획, 사회적 기업육성계획 초안작성, 당사자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적 경제 전국대회 개최 등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 2012년에는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 및 도입참여 창구확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5개년 육성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충남도 재정확보로 맞춤형 지역정책 추진, 사회적 경제 현장리더 양성, 충남형 성공모델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은 사회적 경제육성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상설화 및 역할 수행, 사회경제정책 집행 재설계, 사회적 경제육성조례

제·개정, 주민창안제 및 홍보강화, 대상별 사회적 경제아카데미 운영, 사회적 경제 실무리더네트워크 구축 및 Peer Consultant 양성, 청(소)년 Change Maker 지역활동 지원사업, 전략모델 기획 발굴사업(유기농 로컬푸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제공 등), 시범 기초지자체 지원사업, 기초지자체 실태조사 확대, 지역 및 업종 지원센터 강화, 제2차 사회적 경제전국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둘째, 제2기는 사회적 경제 육성기로 2013~2015년 6월 까지 이다. 제2기의 목표는 기초지자체 지원정책 수립, 전략모델 보급 확산, 민관 및 민민 협력 강화, 도예산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정착화, 지역자원 발굴연계 강화, 다양한 사회주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 지원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기초지자체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센터 확충 지원, 기초지자체 민관협의체 확대, 사회적 책임조달 수립 및 적용, 현장전문가 경영컨설팅 강화, 전략모델 기획보급사업 확대, 사회적 경제 복합공간 지원, 지역인재은행 구축, 프로보노 및 신규창업자 발굴연계, 자본지원(지역개발기금조성), 충남 사회적 경제 온라인 포털구축 및 판로지원 본격화, 지역간, 업종간 조직유형 연대, 시민참여형 사회적 경제 포럼 개최 등을 시행한다.



[그림 61] 충남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자료: 이은애, 2011: 6

셋째, 제3기는 사회적 경제 정착기로서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다. 사업목표는 이업종 융합모델 개발보급, 사회적 경제 신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지역산업전략, 지역고용전략, 지역복지계획 등과 연동하고 시민기반 사회적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동기금을 운용하고 대전·충청 지역화폐운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인턴십,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2)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

① 사업목적

충남은 2009년 4월 15일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고 보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조사에서 충남도와 시군에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3%로 나타나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만이 제정되어 있어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만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조례 제정 사업은 충남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법적 지원 장치 구축 사업이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본 사업은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조례의 적용을 받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은 크게 제1장 총칙과 제2장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제3장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제4장 예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정·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구성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구

체적인 내용과 지침, 그리고 예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정·육성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 즉 기존의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를 확장하여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③ 시행방법

충남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전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은 향후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충남의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 새롭게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안을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예비적으로 안을 만들어낸 후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에 관한 조례는 충남이 사실상 선발 주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학자, 실무자, 법률가 등의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적용사례: 사회적 경제 현장

제1조 사회적 경제 기업은 민주적 방식으로 기능하고 연대적이며, 또한 의무와 권리에 있어서 평등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제2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산자, 소비자 구성원들은 각 조직(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 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해당 사회적 기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3조 사회적 경제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이며, 또한 내부의 교육과 정보공유 활동을 통해 신뢰와 배려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제4조 사회적 경제 기업은 개인의 기회 평등과 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발전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5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수익의 확보와 분배에 있어서 특별한 방식을 갖는다. 사업의 잉여금은 기업의 목적과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인간적 활동,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탐구와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사회가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제7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자신의 목적이 인간에 대한 봉사라는 것을 선언한다.

자료: 김정원, 2009: 40에서 재인용

2012년 초에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제정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이 끝나면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끝나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조례를 공포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2] 충남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 절차

(3)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 운영

① 사업 목적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기에는 조직의 형태나 유형 등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인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로 인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조사에서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 운영을 통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5%로 나타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임준홍, 2011: 19). 또한 설문조사에서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43.6%가 지원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중 36%는 선정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더불어 선정에 따른 지원이 조직에 주는 도움 정도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0.9%로 나타나 중요성을 나타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정된 조직이나 단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명칭 하에 사업이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충남의 사회적 경제 인증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정됨으로써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 제도는 충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즉 충남형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정된 조직 및 단체는 관련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관련 심사를 거쳐 충남형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정되면 충남도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즉 인건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정 이전에 받지 못했던 각종 혜택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충남만의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도민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시행 방법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충남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즉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심사위원회의 지정 심사에 따라 적격성이 충족되면 충남형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림 63]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 인증 절차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데, 충남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충남형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심사위원회의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충남형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정되면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공식 지정되었다는 인증번호 및 인증로고 등을 통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는 연4회의 심사기간에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인증 후에도 관련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요건이 누락되었을 때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사회적 경제 선언 및 사회적 경제의 날 제정

① 사업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충남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로서 사회적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강한의지와 노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먼저, 사회적 경제 정책의 지방화에 발맞춰 한국형 사회적 경제의 방향을 정립하고 민관거버넌스의 발전적 기초 형성을 목표로 한다. 둘째,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존을 넘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축과 순환, 공생의 지역사회경제를 만들어갈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산을 위한 것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선언 및 사회적 경제의 날 제정은 충남도가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발전 전략 및 사회적 경제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② 사업의 주요 내용

사회적 경제 선언 및 사회적 경제의 날 제정 사업은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고 선도한다는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및 순환과 공생의 지역발전의 메카로 충남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업은 사회적 경제의 개별 조직들의 성장과 발전 중심의 정책에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과 발전,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내부 시장 형성으로의 전환 계기가 형성 될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단체, 금융,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시민사회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을 홍보를 통해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민사회 내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이 사업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충남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③ 시행 방법

사업의 시기는 2012년에 실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지만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사회적 경제 선언 및 사회적 경제의 날을 제정하도록 한다. 행사날짜에는 전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시니어클럽, 유관 지원 기관)관계자, 관련 연구자 및 연구단체, 유관 시민사회단체, 유관 공직자 등 400인 내외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기간에는 학술회의, 영역별 발전 과제 세미나, 사회적 경제 조직간 네트워크 강화 및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선진 사례 탐방 등을 실시한다. 이 때 충남도는 사회적 경제 선언 및 사회적 경제의 날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한다.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적용사례: “서울광장, 사회적 기업 열정 愛 빠지다”

7/1, ‘제1회 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행사’개최

스타릴레이강연, 국제포럼, 사회적 기업페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07.7.1)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7월 1일(금) 14시부터 21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및 서울광장에서 제1회 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회적 기업 페어를 진행하며, 시청광장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사회적 기업 페어는 사회적 기업 성장단계를 따른 맞춤형 Class 운영을 통해 사회적 기업인 상호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한마당 행사는 ‘사회적 기업 종합홍보관 운영,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체험 한마당, 기념식 및 공개방송’으로 구성된다. 한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공감하고 사회적 기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6/28~6/30일 동안 사전행사도 진행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은 우리사회에 아름다운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기업의 실용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2011

4. 정책 건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체계가 이전 되면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관주도형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도 있다. 과거 충남은 외자유치, 기업유치가 북부 4개 시·군(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에 집중되어 일부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충남경제는 지역불균형과 양극화라는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발적 발전의 계기가 필요하며, 내발적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김양중, 2011: 3). 이에 따라 충남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적 경제 지원과 육성을 위해 다른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충남의 사회적 경제 발전은 물론 한국사회의 사회적 경제 정착과 발전에도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충남형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한국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는 양극화, 청년실업, 복지의 사각지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충남은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세부시책으로써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 지속적·안정적 재원 확보, 제도(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충남은 다른 시도보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하였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 사회적 경제 T/F를 신설, 충남발전연구원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김양중, 2011: 10). 이에 따라 충남이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를 이루는 정부, 시민사회, 시장 등의 개별주체가 있다면 정부의 역할은 거버넌스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충남이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각 주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충남도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로서 충남도 및 16개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전면 재검토, 공공시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우호적 구매 추진, 충남도내 재정 배분시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자립성이 낮으나 필요성이 높은 부문에 우선투자, 지역농업 환경 개선 등 도차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응, 도내 상공인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경제 관련 인식확산 등이 제시되었다(이은애, 2011: 32).

사회적 경제의 선진국은 시민사회나 시장의 자율적 힘만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

고 정착시키지 못했다. 즉,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없이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꽃을 피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의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건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조직의 개편과 업무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와 정책분석 수요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센터 기능 강화의 필요도 설문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인력의 재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부서를 만드는 차원에서 지원체계의 강화가 그친다면 사회적 경제 추진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지방정부 주도하에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은 물론 그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까지 고려해야만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둘째, 지속적·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재정자립도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모든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조직의 상태가 '어려워 질 것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8%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기금 조성 등)의 필요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3.4%로 나타나 재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임준홍, 2011: 18). 이에 충남은 세부시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기업들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일반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협상, 그리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경제 분위기 조성 등으로 기업들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도(조례)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안의 마련이다.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이 48.9%로 나타나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시책에서는 충남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세부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최고 의사결정자의 사회적 경제 추진 의지가 뚜렷해야 한다.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도지사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경제가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을 적극 건의하여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6 장 결론

1. 요약 및 정책제언

□ 사회적 경제는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외환위기(IMF) 이후 우리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본격 진입하였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82.2%(수출 43.4%, 수입 38.8%)로 G20 회원국(평균 43.3%) 중 1위이며, 최근,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효과 등에 힘입어 충남의 GRDP(2009년)는 3,370만원으로 울산(4,622만원)에 이어 전국 2위이며(전국 평균의 2,187만원), 그 성장률은 전국 1위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생산현장인 삼성 LCD 공장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민의 생활수준은 전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일자리문제도 전국과 별반 다르없다. 더 나아가 충남도민은 과연 타시도민에 비해 행복할까? 아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 답은 바로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사회적 경제가 있다. 이에 이 본 연구에서는 충남 사회적 경제의 실태가 어떠한지,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자 이루어졌다.

□ 충남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사회적 경제란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업이나 국가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나 협회, 재단 등 제3섹터가 주체가 되는 사회경제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NGO 등의 형태로 이미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정책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역시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민선5기 공약에서 충남형 사회적 기업 200개 육성이란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하였다.

특히, 충남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증 사회적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 TF팀'을 설치하고, 실행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충남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충남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컨설팅에서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개발을 위해 '사회적 경제연구회'20)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위주의 정책을 넘어 사회적 경제 영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충남의 사회적 경제는 현실은 열악하지만,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의식조사 한 결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분석에서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의 경영(영업) 환경은 매우 열악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관련 조직은 비교적 높지만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상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조직들의 대부분은 정부나 민간 지원이 끊어질 경우 생존이

20) 사회적 경제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9회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연구회는 도의회의원, 공무원, 교수, 연구원, 사회적 기업가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정의, 해외사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등을 공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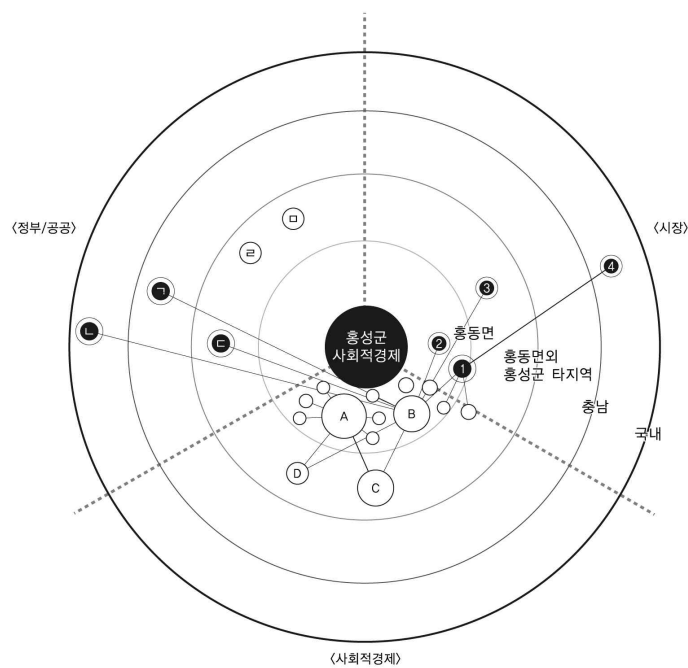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연구대구조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대구조가 조직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관련 조직의 연대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방정부와의 교류는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지원의 내용은 자금지원이 가장 컸지만 교육제공, 정보제공, 홍보지원 등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조직의 경영상태 등은 미약하지만 지역사회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고용측면에서 지역친화적이고,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 고용이 100%이며, 여성고용 비중이 높으며, 원재료의 구입과 생산된 재화·서비스의 판매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실제 조직의 약 40%이상이 지역사회에 환원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이해) 정도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잘 모를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구분	지역민 고용	여성 고용	취약계층 고용	시군에서 원재료구입	지역사회 재투자
비중(%)	90.3	48.8	20.5	93.6%	41.8 (966만원*)



<홍성군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연대구조>

정 부/ 공 공 영 역	ㄱ : 충남도청
	ㄴ : 중앙정부 (농림수산부/행정 안전부 등)
	ㄷ : 홍성군청
	ㄹ, ㅁ : 지역 대학(청운대학교 /혜전대학)
사 회 적 경 제 범 례 /제3 섹 터 영 역	a : 풀무학교
	b : 마을활력소
	c : 풀무실험
	d : 홍성 YMCA
시 장 영 역	1 : 풀무생협
	2 : 풀무축산
	3 : 홍성 유기 농조합 법인
	4 : 풀무생협 거래처

[그림 64]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기여효과 및 연대구조

*는 1개 조직당 1년에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출액임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단, 중·장기적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순환과 공생의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비전 아래 단기, 중장기적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의 충남의 특색에 맞게 효율적으로 통합 추진하여 투자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상호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끌 리더를 육성하고, 시범지역, 시범업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경제 정책 기반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단계로 충남형 사회적 경제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고, 충남도 전역에 확대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대상 역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생활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대와 조직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지원의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들이 충남의 성격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예산 확대,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소비주체로서 도민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도민의 생활 속에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한 소비행태가 일정부분 자리잡고 확대되어야 충남의 사회적 경제는 정책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개발되고 실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설정된 정책목표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다차원의 시책 및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시책, 8개 세부시책, 34개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책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는 2가지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경제 내부에 대한 것으로 인재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

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 외부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경제와 다양한 행위자와의 네트워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 및 그를 육성하는 시스템, 방향 뿐만 아니라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자산이 발굴되고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경제 관련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인재의 범위는 창업을 준비하는 리더 및 창업자 뿐만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근로자와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전문컨설턴트,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범위를 확장한다. 이들 사회적 경제관련 사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후자는 사람의 중요성 못지않게 사회적 경제 관련 외부환경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환경으로부터 요구와 지지를 얻고, 투입되며, 이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환경과의 교호작용은 조직의 존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으로는 사회적 경제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 외부액터 등과의 협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0>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요조사

(단위 : 5점(매우필요) 만점)

시책	세부시책	조직임원		전문가	
		5점 만점	2개 선택	5점 만점	2개 선택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경제역량 및 연대강화	4.36	17.8	4.67	26.2
	사회적 경제지역사회 협력 강화	4.31	17.7	4.72	18.1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	사회적 경제 통합육성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 포함)	4.22	15.2	4.20	4.8
	사회적 경제 인지도(수익성)강화	4.20	14.9	4.25	8.1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	4.19	13.6	4.54	19.0
	지속적·안정적 자원 확보	4.31	15.4	4.56	19.0
	제도(조례)정비	4.17	5.4	4.40	4.8

* 5점만점은 매우필요(5점)에서 전혀필요없음(1점)을 점수화 한 것이며, 2개선택은 무순으로 필요한 것을 2가지 선택한 비중임.

두 번째 시책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기반 강화’영역은 3가지의 세부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만들기’를 달성하기 위해 내발적 발전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한 세부시책으로 첫째, 사회적 경제 통합 육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도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통합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다양하게 진행되던 사업들을 충남도의 상황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충남형 사회적 경제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토착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충남만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인지도(수익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설문결과(임준홍, 2011),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정도는 52.8%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인지가 존재하며, 인지한 경우라도 설문대상자의 5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의 저하는 구매력의 저하로 귀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지도의 제고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사업, 목적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세 번째 시책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 강화’는 3가지 세부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하나는,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를 들 수 있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내 사회적 경제추진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책 및 사업의 성패에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경제조직이 취약하면 할수록 조직 자체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하나는, 조직의 체계화 및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발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기존의 센터의 기능을 정립하여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직내 공무원들의 사회적 경제 및 그 조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필요하다. 둘, 지속적·재정적 자원 확보를 들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상당수의 조직들이 영세한 점을 감안, 초기운영자금 마련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

제가 된다. 이 때 시의적절한 정책자금이 투입된다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성을 일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한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셋, 지방정부의 제도(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정책을 추진하려면 법·제도적인 장치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충남이라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 정착에 만전을 기울려야 하며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충남도의 경우 조례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조례를 정비하여 지원조직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예산지원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지원책이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이 체계화 되지 않고, 국내외 사례가 많지 않고, 제한적인 현실에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짧은 연구기간 내에 이론과 실태조사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는 충남도의 사회적 경제의 실태를 ‘생태계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사회, 도민과의 관계, 도민의 소비패턴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기존 시장경제와의 관계 및 역할 분담 등 다양한 분석 하에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에 초점을 두었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홍성군의 사례를 심층조사하는 수준에서 충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위한 제언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지만 ‘충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두며, 또한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부분은 빠른 시간 내 ‘충남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 경상북도(2011. 5),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지원 5개년 계획」.
- 고용노동부(2008),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 古村 伸宏(2008), 「노동자협동조합운동 30년역사」, 10일마다발행되는간행물, NO1668, 3월 하순호.
- 今村 肇(2011),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의 국제적연구네트워터의 경계소멸」, 농중총연 제23호.
- 김정휘·반정호(2006. 10),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 김상민(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2010. 11),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
- 김수행·신정완(2007),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신양(2009),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다른 경제를 꿈꾸는 지방-프랑스의 노르빠드칼레”, 도시와 빈곤, 제89호.
- 김신양(2011), “다른 경제의 희망: 사회적 경제, 연대의 경제, 민중경제”, 제1차 사회적 경제 연구회 워크숍 자료집(사회적 경제의 이상과 현실), 충남발전연구원.
- 김신양·장원봉(2009), 「사회적 경제의 이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사회투자지원재단.
- 김영철외(2007), “양극화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연구, 제15권 제2호.
- 김용우(2006), 「원주지역의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 고찰」.
- 김의영, 한주희(2008), “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험: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의 사례”, 한국정치학보, 제42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127-151쪽.
- 김인춘(2007),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 김재호·김봉화(2010), 「한국의 사회적 기업 모델개발과 운영전략」, 한국학술정보.
- 김정욱(2010),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형성과정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미산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원(2009),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은 민

- (民)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도시와 빈곤, 제89호.
- 김종수(2009), 지역기반형 사회적 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호(2003),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실험”. 「환경과생명」 39호.
 - 김준양(2010. 8),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정부 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행정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 노대명(2007), “한국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 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 노대명·김신양·장원봉·김문길(2010),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2011. 1. 17), 「대경CEO Briefing」.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b.go.kr>.
 - 대구광역시(2009. 8), 「대구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중기계획」.
 - 도묘연·이관률(2010),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협력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3호.
 - 藤井 敦史 (2003), 「생활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 COOP연구센터편 生活クラブ事業連合会 協同組合連合理事会編 2008 「(협동조합법제화 검토 프로젝트 최종답신) 우리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의 미래-3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사회」.
 - 鈴木 純(2001),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시장경제시스템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의 viability」, 사회경제시스템.
 - 매일신문(2011. 2. 25) 기사.
 - 문순영(2010. 11),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들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 뮌크너한스외(2006), “사회적 경제와 촉진 지향적 기업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비영리조직의 공통분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4권 제1호.
 - 粕谷 信次(2005), 「사회적 경제의 촉진·세계의 동향」, 경제지평.
 - 박원순(2009),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검동소.
 - 부샤르, 크리스티안(2010), “사회연대경제의 관점에서 본 지역개발: 프랑스 릴시의 사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성공회대학교시민사회복지대학원.
 - 社会的經濟 促進プロジェクト(2003.9), 社会的經濟の促進に向けて もう一つの構造改革〈市民・協同セクター〉の形成へ, 同時代社.

- 생태보전시민모임(2001), “성미산 자연 생태 현황 조사 보고서”.
- 石塚秀雄(2009.10), フランスの社会的経済, 日本経済評論社(ISBN:9784818820722)
- 성미산 대책위(2003), “성미산 개발 저지 대책 활동 보고서”.
- 성미산 대책위(2008), “성미산 생태공원 제안서”.
- 신명호(2009), “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도시와 빈곤, 통권 제89호.
- 안청시의(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박영사.
- 안치용(2008), 「지식을 거닐며 미래를 통찰하다」, 리더스북.
- 원주 사회적 경제 블록화 심포지엄 자료집(2011), 「‘원주에 사는 즐거움’ 잔치」.
- 원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현황 소개(2009).
- 유창복(2009),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구(2011),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통합적 기업”,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1호.
- 이선향(2006), 강한 시민사회와 강한 민주주의, 서울:(주)일신사.
- 이주영(2006),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통해 본 지역시민운동”,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영·오지선(2010. 10),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기업」.
- 임혁백(2007),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송정.
- 장원봉(2005),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운동의 모색”, 도시와 빈곤, 제73호.
- 장원봉(2006), “빈곤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발전과제”, 도시와 빈곤, 제80호.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나눔의집 출판부.
- 장원봉(2007),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 장원봉(2009),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도시와 빈곤, 제89호.
- 田中夏子(2011.1), イタリア社会的経済の地域展開, (ISBN:4-8188-1638-8).
- 第8回 Workers' Collective 全国会議実行委員会編(2008), 「Workers' Collective 가 만들어진지 25년」.
- 宮崎 徹(2003), 「사회적 경제의 축진을 향하여」, 동시대사.
- 조경민(2011),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이해.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 경제연구회 워크숍 자료집.

- 주성수(2010), 「사회적 경제-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 채종현·최준규(2010. 6), 「한국 사회적 기업의 운영상 특성과 법·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 최혁진(2011.3.18), 농정연구센터 213회 월례 세미나자료집 中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 湯浅 誠(2007), 「반빈곤 - 미끄럼틀사회로부터의 탈출」, 이와나.
- 한겨레신문(2011. 1. 24) 기사.
- 황미영(2007),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2호.
- Alternatives économiques(2006), L'économie sociale de A à Z, Alternatives Economiques, Hors-série pratique N° 22.
- Amin, A.(2009), 「The Social Economy」, Zedbooks,
- Amin, A.(2009), The Social Econom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conomic Solidarity, London & New York: Zed Nooks.
- Benjamin, R. B.(1998), A Place for Us: How to Make Society Civil and Democracy Strong, Hill and Wang.
- Bidet, E.(2005), "L'économie sociale à la française", Economie et Humanisme.
- Borzaga, C. & Santuari, A. 1998 SOCIAL ENTERPRISES AND NEW EMPLOYMENT IN EUROPE Trentino, in co-operation with European Commision-DGV, CGM-Consorzio nazionale della cooperazione sociale.
- Defourny, J.(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 Galliano, R(2004), Social Economy Entrepreneurship and Local Development, OECD.
- Gonzales, Vanna.(2007), “Globalization, Welfare Reform and the Social Economy”,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Vol. 34 Issue 2.
- Graefem P.(2006), “The Social Economy and the American Model”, Global Social Policy, Vol. 6. Issue 2.
- James, E.(1987), “Nonprofit Sector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Walter W. Powell(ed), The Nonprofit Sector : A Research Handbook,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Jeantet, T.(1995), L'économie sociale en action, Ciem Editions.
- Jette', Christian & Yves Vaillancourt(2011), “Social Economy and Home Care Services in Quebec: Co-Production or Co-Construc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22, No. 1.
- Kay, A.(2006), "Social Capital, the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Vol. 41, Issue 2.
 - Monica Loss,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국제노동브리프
 - Moulaert F. & J. Nussbaumner(2005), "Defining the Social Economy and its Governance at the Neighbourhood Level. Urban Studies, Vol. 42, No. 11.
 - Noya, Antonella & E. Clarence(2007), The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OECD.
 - OECD LEED(2005), The Social Economy in Central, East and South-East Europe,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 OECD LEED(2007), The Social Enterprise Sector: A Conceptual Framework, in <http://www.oecd.org/dataoecd/43/40/37753595.pdf>.
 - Pearce, J.(2003), Social Enterprise in Anytown, Lond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 Pestoff, V.(1998). *Beyond the Market and State: Social enterprises and civil democracy in a welfare society*, Ashgate.
 - Putnam, R. D. et. al.(2002), Making Democracy Work: Civil Tradition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eague, P.(2007),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i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1. No. 1.
 - Weisbrod, Burton A.(1998), The Voluntary Nonprofit Sector: An Economic Analysis, Lexington. Mass.: D.C. Heath.
 - Williams, C. C. & R. White(2001), "Evaluating the Role of the Social Economy in Tackling Rural Transport Problems",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 16, No. 3/4.
 - Zamagni, S. & Zamagni, V.(2010), 「Cooperative Enterprise」, Edward Elgar, (1997), L'économie sociale, Le Monde Editions.
 - http://www.srdc.org/uploads/Social_Economy.pdf

(붙임자료 1)

충남 사회적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의식조사

ID

--	--	--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충남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법칙)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8월

- 조사기관 :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리서치센터
- 조사문의 : 임준홍(041-840-1121) / 왕소영 실장(042-538-5970)

※ 설문지 작성 시 참고 사항

1. 설문지는 **대표자 혹은 기관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실무담당자**께서 작성해 주십시오
2. 모범인이 있는 경우, 모범인이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사업단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3. 설문지 **작성시점은 2011년 6월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자료가 없을 경우 현 시점)

▽ 아래는 **설문조사자가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설문조사자명 : _____ 조사일시 : 2011년 8월 _____ 일

* 조직분류상 번호 ()SQ1

<조사기관 및 응답자 특성>

단체 (기업)	단 체 명	()		
	소 재 지	충청남도 () 시·군 () 읍·면·동		
대 표 자	나 이	만 _____ 세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설문 응답자	성 명		직 위	
	나 이	만 _____ 세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락처			

I. 귀 기관(단체, 조직, 기업)의 일반적 내용에 대해

1. 귀 기관(단체, 조직, 기업)은 언제 설립하였습니까? (_____ 년)
2. 귀 기관은 모기관(모법인)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 ① 있다면 모기관(모법인)의 이름은? (_____)
 2-1. ① 있다면 모기관(모법인)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_____ 년)
3. 귀 기관의 법적 지위(조직 형태)는 ? (_____)
 ①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②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③ 비영리민간단체 ④ 사회복지법인
 ⑤ 민법상 조합(협동조합) ⑥ 임의단체
 ⑦ 종교법인 ⑧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⑨ 비영리법인내 독립 사업단 ⑩ 소비자협동조합법 상 생활협동조합
 ⑪ 개인사업자
 ⑫ 기타 (_____)
4. 귀 기관은 조직형태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1. “① 있다”면 과거에는 어떤 조직형태였습니까? (_____)
5. 귀 기관의 설립 자본금(출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만원 정도)
6. 귀 기관의 연간(2011년) 운영예산은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정도)
7. 귀 기관은 현재 채무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1. “①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_____ 만원 정도)
8. 귀 기관의 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정도)
 8-1. 매출액은 2년 전에 비해 어떻게 됩니까? ① 증가 ② 감소
 8-2. 매출액은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증가 ② 감소
9. 귀 기관의 년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정도)
10. 귀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관련 설명회, 워크숍, 토론회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a10

II. 귀 기관(단체, 조직, 기업)의 조직원 구성에 대해

1. 귀 기관의 **종사자**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대표자 제외)? 총 _____명
 - 1-1. 귀 기관의 직원 중 **정규직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 1-2. **정규직 종사자의 평균 월 급여**는 얼마입니까? (_____만원 정도)
 - 1-3. 귀 기관의 **사회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 1-4. 귀 기관의 **여성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 1-5. 귀 기관은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까? ① 한다 ② 안한다
 - 1-6. 귀 기관은 **급여 외 복리후생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① 한다 ② 안한다
 - 1-6-1 “①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년 _____만원 정도

2. 종업원 중 아래의 **취약계층**은 몇 명입니까? 아래에 직접 기입해주시시오.

취약계층 유형	종사자 수
장애인	_____명
저소득층(가구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이하인자)	_____명
중고령자(만 55세 이상)	_____명
기타 취약계층(한부모가정,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여성,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	_____명

3. 종업원 들은 **어디에서 출퇴근(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래에 직접 기입해주시시오

취약계층 유형	종사자 수
귀 기관이 있는 마을(읍면동) 주민	_____명
해당 시군에서 살고 있는 사람	_____명
충남도에 살고 있는 사람	_____명
대전과 충북에 살고 있는 사람	_____명
충청도와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_____명

4. 귀 기관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는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4-1 “① 있다”면 **몇 명** 정도입니까? (_____명 정도)
5. 귀 기관은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5-1. “① 있다”면 현재 **몇 명**입니까? (_____명 정도)

III. 귀 단체(조직)의 경제활동 구조에 대해

1. 귀 기관의 **주요(핵심)** 사업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 | |
|------------------------|-----------------|
| ① 간병·생활보조서비스 | ② 보육서비스 |
| ③ 교육서비스 | ④ 문화·예술 분야 |
| ⑤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분야 | ⑥ 관광분야 |
| ⑦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유통 | ⑧ 외식산업, 식품제조 분야 |
| ⑨ 재활용 및 친환경 제품 생산 | ⑩ 청소·차량관리 분야 |
| ⑪ 보건의료서비스 | ⑫ 택배·배달서비스 |
| ⑬ 일반물품 제조 | ⑭ 집수리, 조경관리 |
| ⑮ 기타 () | |

1-1. 위의 **핵심 사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_____ % 정도

2. 귀 단체의 **대표 상품(서비스, 활동)**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기입해주십시오.

(), (), ()

3. 귀 기관이 제품(서비스)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자재나 재료** 등은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금액기준) 전체 합계가 100%이 되도록 응답해주십시오.

3-1.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구입처	3-2. 생산 물품의 판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해당 읍면동) : _____ % 정도 • 살고 있는 시군 : _____ % 정도 • 시군 외 충남 : _____ % 정도 • 대전, 충북지역 : _____ % 정도 • 수도권 : _____ % 정도 • 기타 지역 : _____ % 정도 합 계 : _____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해당 읍면동) : _____ % 정도 • 살고 있는 시군 : _____ % 정도 • 시군 외 충남 : _____ % 정도 • 대전, 충북지역 : _____ % 정도 • 수도권 : _____ % 정도 • 기타 지역 : _____ % 정도 합 계 : _____ 100 %

4. 전체 매출액에서 다음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 전체 매출액에서 **영업을 통한 일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 : _____ % 정도
- 전체 매출액에서 **공공기관 판매(매입)**이 차지하는 비중 : _____ % 정도
- 기타 () : _____ % 정도
- 합 계 : _____ %

5. 최근 3년 내에 **정부와 민간 등의 지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1. “① 있다”면 (시기 : _____ 년, 사업명 : _____, 총지원금 : _____ 천만원)

5-1. “① 있다”면 (시기 : _____ 년, 사업명 : _____, 총지원금 : _____ 천만원)

5-1. “① 있다”면 (시기 : _____ 년, 사업명 : _____, 총지원금 : _____ 천만원)

5-2. 만약,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끊길 경우 생존가능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② 어려워 질 것이다 ③ 큰 문제 없을 것이다 ④ 전혀 문제없을 것이다

IV. 귀 단체(조직)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

1-1. 귀 기관이 현재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단체** 이름과 지역을 기입해주시지요?

- 1 순위 : 기관 명 _____ 위치한 지역 _____
- 2 순위 : 기관 명 _____ 위치한 지역 _____
- 3 순위 : 기관 명 _____ 위치한 지역 _____

1-2. 귀 기관은 위의 단체와 **얼마나 교류하고 있습니까?** d1_2

- ① 매우 활발하다 ② 활발하다 ③ 보통이다 ④ 활발하지 않다 ⑤ 매우 활발하지 않다

1-3. 귀 기관이 향후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은 단체** 이름과 지역을 기입해주시지요?

- 1 순위 : 기관 명 _____ 위치한 지역 _____
- 2 순위 : 기관 명 _____ 위치한 지역 _____
- 3 순위 : 기관 명 _____ 위치한 지역 _____

※ 위치한 지역: ① 마을(해당 읍면동) ② 해당 시군 ③ 충남 ④ 대전 ⑤ 수도권 ⑥ 기타 지역

1-4. 위의 기관과 교류가 **활성화되면 얼마나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귀 기관의 활성화(성공)를 위해 **가장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곳**은?

- ① 충청도, 시군 등 정부영역 ② 제품을 구매해줄 시장 영역
③ 시민단체 등 시민영역 ④ 유사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귀 기관은 사업을 위해 **충남도 또는 시군의 도움**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1. “① 있다”면 **얼마 전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약 _____ 년 전부터

3-2. “① 있다”면 **누가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① 충청도 ② 시군 ③ 귀 기관(단체)

3-3. “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시지요.

- ① 인건비, 운영비 등 자금지원 ② 각종 교육 제공 ③ 시장정보 등 각종 정보 제공
④ 컨설팅 및 경영지원 ⑤ 홍보 및 마케팅 지원 ⑥ 물품 구매

3-4. 충청도와 시군의 **지원(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4. **충청남도**와 귀 기관의 **연계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2가지만 선택 (____), (____)

- ①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② 지원 규모가 작고 한시적이다. ③ 세제 혜택, 우선구매,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
④ 정보 공유를 잘 하지 못한다. ⑤ 행정적인 처리만을 중시하여 관리 감독하려고 한다.
⑥ 지역 내 단체들 간 연대하도록 돕지 않는다. ⑦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려고 한다.

4-1 위의 ①~⑦ 항목 중 **시군과 기관의 연계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2가지만 선택해주시지요. (____), (____)

5. 귀 단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2가지만 선택해주시지요. (____), (____)

- ① 대표자의 경영능력 부족 ② 종업원의 업무능력 부족
③ 작업시설 및 설비 미비 ④ 전문기술 및 지식, 정보 부족
⑤ 자본금 부족 ⑥ 홍보, 마케팅 및 판로 문제

- ⑦ 근로자채용 및 이직 등 인력수급 문제 ⑧ 기관(충남도, 시군 등)의 협력 부족
 ⑧ 기타 ()

V.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식에 대해

1. **사회적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르고 있다. ⑤ 전혀 모르고 있다.
2. **사회적 경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 “① 있다”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르고 있다. ⑤ 전혀 모르고 있다.
3. 귀하가 **알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 **모두** √표 해주세요(복수응답 가능).
 ① (예비)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② 마을기업(행정안전부)
 ③ 커뮤니티비즈니스(지식경제부) ④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⑤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 ⑥ 대안금융기관(마이크로크레딧)
 ⑦ 노동자협동조합 ⑧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⑨ 기타()
4. 귀하의 조직은 **사회적 경제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합함 ② 부합함 ③ 보통 ④ 부합하지 않음 ⑤ 전혀 부합하지 않음
5. 귀 기관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귀 기관은 **사회적 기여 활동**(지역사회 재투자)을 하고 계십니까?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6-1. “① 있다”면 무엇입니까? ()
 6-2. “① 있다”면 작년 기준으로 얼마나 재투자 하였습니다습니까? ()만원 정도)
 6-3. “① 있다”면 주로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① 마을에서 ② 시군지역에서 ③ 충남지역에서 ④ 대전지역에서 ⑤ 수도권지역에서 ⑥ 기타지역에서

7. 다음은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리**입니다. 귀 기관은 이 원리를 얼마나 **준수(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정도에 “√”표시 해주십시오

운 영 원 리	잘 준수하고 있음 ◀◁ ▷▶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음				
	잘 준수하 고 있음	준수하 고 있음	보통	준수하 지 않음	전혀 준수하 지 않음
①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 판매한다.					
② 경영에 있어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경영의 자율성)					
③ 정부 지원과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자립적 운영을 하고 있다.					
④ 최소 유급근로자와 함께 자원봉사자 등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⑤ 시민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⑥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단체를 운영한다.					
⑦ 이윤창출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⑧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⑨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는다(이익의 사회환원).					
⑩ 수익배분에 있어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한다.					
⑪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⑫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한다.					
⑬ 지역사회와의 순환과 공생에 기여한다.					
⑭ 주민들의 연대와 협동에 기여한다.					

7-1. 위의 ①~⑭ 번 중 귀 기관이 **가장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7-2. 귀 조직은 사회적 경제 운영원리 중 어디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인 측면(사회적 가치 실현 등) ② 경제적인 측면(생산·판매, 일자리 창출 등)

VI.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1. 귀하는 **충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사회적 경제 T/F팀**”(일자리경제정책과내)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충남도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1. 만약 “① 알고 있다”면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이용 했다 ② 이용하지 않았다
3. 충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 “**충남사회적 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 충남도내 사회적 기업, 충남형사회적 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충남사회적 기업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5. 충청남도는 현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6. 귀 기관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1. “① 있다”면 **선정결과**는? ① 선정되었다 ② 탈락하였다
6-1-1. “① 선정되었다”면 충남도의 지원이 귀 기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7. 귀 기관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1. “① 있다” 몇 년 후 받을 생각입니까? ① 1년 후 ② 2년 후 ③ 3년 후 ④ 모르겠다.
7-2. “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선택해주시요. (), ()
① 인건비 지원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② 기관 설립 당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해왔기 때문에
③ 조직의 성격상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④ 다른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보고 도전 하고 싶어서
⑤ 사업운영을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⑥ 기타 ()
8. 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직접 **인건비 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못하고 있다 ⑤ 매우 잘못하고 있다
9. 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개발비(홍보,마케팅,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못하고 있다 ⑤ 매우 잘못하고 있다
10. 다음은 충청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필요정도에 “√”표시 해주시요

시책(사업 예)	매우 필요함 ◀◀◀◀ ▶▶▶▶ 전혀 필요없음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없 음	전혀 필요없음
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끄는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들					
②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청년 인턴제도 등)					
③ 사회적 경제 현장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사업들					
④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협의회를 지원하는 사업들					
⑤ 사회적 경제의 전국적 관심을 높이는 사업(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대회 등)					
⑥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기업, 시민들을 연결(네트워크)하는 사업들					
⑦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프로보노)을 연결·확대하는 사업들					
⑧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사업(아파트부녀회를 통한 판매지원 등)					
⑨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합지원하는 사업들					
⑩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					
⑪ 사회적 경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수 지역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들					
⑫ 사회적 경제의 전략분야를 육성하는 사업들					
⑬ 주민과 단체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사업 지원(충남도, 시군이 지원)					
⑭ 사회적 경제 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쇼룸, 전문매장운영, 브랜드화)					
⑮ 충남의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들					
⑯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설치(전문가 채용, 공무원 교육 등)					
⑰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 운영을 통한 지원 강화					
⑱ 충남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기능강화(연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⑲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자금(펀드)를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들					
⑳ 충남도와 시군에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 제정					

10-1. 위의 ①~⑳ 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2가지는? (____), (____)

11. 다음은 충청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시책들입니다. 그 필요정도에 “√”표시 해주십시오

시책(사업 예)	매우 필요함 ◀◀◀◀ ▶▶▶▶ 전혀 필요없음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① 사회적 경제 관련 인재 육성					
②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연대 강화)					
③ 사회적 경제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					
④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의 사업성(수익성) 강화 지원					
⑤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센터 기능 강화					
⑥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기금 조성 등)					
⑦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11-1. 위의 ①~⑦ 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2가지는?(____),(____)
12. 충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지원**은?
 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② 홍보 및 마케팅 ③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
 ④ 사업비 지원 ⑤ 인건비 지원 ⑥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네트워크 형성
 ⑦ 기타(_____)
13. 귀하는 충청남도에서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가 활성화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____)
 ① 지역 공동체 활성화 ② 지역 문화 활성화 ③ 지역의 일자리 창출
 ④ 지역경제 활성화 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4. 귀하는 **현재**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15. 귀하는 **향후**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좋아 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렵워 질 것이다 ⑤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16. 귀하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17. 귀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누가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중앙정부 ② 지방자치단체(도) ③ 지방자치단체(시, 군) ④ 사회적 경제조직
 ⑤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⑥ 전문가 및 활동가 ⑦ 기타(_____)
18. 충남도의 정책적 노력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가능하다 ② 가능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가능하다 ⑤ 전혀 불가능하다
- 18-1. 만약, “**④,⑤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2가지 선택.(____),(____)
 ① 사회적 경제의 기반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② 현재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 기반이 너무 취약해서
 ③ 충청남도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들이 비효율적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④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충청남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⑤ 도와 시군의 정책의지 및 예산 편성 등의 노력이 부족해서
 ⑥ 민간기관단체의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19. 귀하는 충남도의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20. 다음은 사회적 경제의 **운영원리**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 표시 해주십시오

운 영 원 리	<div> <div> <div>잘 준수하고 있음</div> <div>◀◀</div> <div>▷▷</div> <div>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음</div> </div> </div>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 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①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 판매한다.					
② 경영에 있어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경영의 자율성)					
③ 정부 지원과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자립적 운영을 하고 있다.					
④ 최소 유급근로자와 함께 자원봉사자 등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⑤ 시민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⑥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단체를 운영한다.					
⑦ 이윤창출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⑧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⑨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는다(이익의 사회환원).					
⑩ 수익배분에 있어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한다.					
⑪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⑫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한다.					
⑬ 지역사회의 순환과 공생에 기여한다.					
⑭ 주민들의 연대와 협동에 기여한다.					

20-1. 위의 ①~⑭ 번 중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f20_1a), (f20_1b)

(붙임자료 2)

충남 사회적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식조사

ID

--	--	--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 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와 시군, 중간지원기관 등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며, 어느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 조사기관 :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 조사문의 : 임준홍(041-840-1121), 김종수(041-840-1213)

※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도서상품권 1만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답례품을 받을 주소를 기입해주시십시오

우편번호(-) _____

다음은 자료 분류를 위한 항목입니다. 간단히 기입해주시십시오.

성 명		소 속	
나 이	만 _____세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귀하의 주요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은?	① 사회적 경제 관련 조사 및 연구 ②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컨설팅 및 지원(지원기관, 활동가) ③ 사회적 경제 관련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 근무 ④ 사회적 경제 관련 공무원 ⑤ 기타(_____)		
생활(활동)지역은?	(_____) 시·군 (_____) 읍·면·동		
사회적 경제의 인지 정도는?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르고 있다 ⑤ 전혀 모르고 있다		

I. 사회적 경제 개념과 대상(영역)에 대해

1. 다음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운영원리**입니다. 각각의 운영원리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중요도에 “√”표시 해주십시오.

운 영 원 리	매우 중요하다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 다	중요하 다	보통	중요하 지 않다	전혀 중요하 지 않다
①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 판매한다.					
② 경영에 있어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경영의 자율성)					
③ 정부 지원과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자립적 운영을 하고 있다.					
④ 최소 유급근로자와 함께 자원봉사자 등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⑤ 시민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⑥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단체를 운영한다.					
⑦ 이윤창출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⑧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⑨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는다(이익의 사회환원).					
⑩ 수익배분에 있어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한다.					
⑪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⑫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한다.					
⑬ 지역사회의 순환과 공생에 기여한다.					
⑭ 주민들의 연대와 협동에 기여한다.					

- 1-1. 위의 ①~⑭ 번 중 사회적 경제 원리 중 가장 중요한 2가지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 다음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적합도**에 대해 “√”표시 해주시시오.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현황>

조 직	매우 적합 ◀ ◯ ◯ ◯ ▶ 매우 부적합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① 장애인 보호작업장					
② 노인생산공동체					
③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④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⑤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⑥ 노동부 사회적 기업					
⑦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⑧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⑨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⑩ 대안금융기관					
⑪ 시민단체(서비스공급형)					
⑫ 노동자협동조합					
⑬ 소비생활협동조합					
⑭ 농협					
⑮ 수협					
⑯ 산림조합					
⑰ 신협					
⑱ 새마을금고					
⑲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희망업체					

- 2-1. 위의 조직 외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직접 기입해주시시오.
(_____)

3. 귀하가 **생활(활동)하고 있는 도시(시군)의 사회적 경제 육성 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열악하다 ⑤ 매우 열악하다

II.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1. 귀하는 **충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사회적 경제 T/F팀**”(일자리경제정책과내)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2. 충남도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3. 충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 “**충남사회적 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4. 충남도내 사회적 기업, 충남형사회적 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해 “**충남사회적 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5. 충청남도는 현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6. 다음은 충청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시책들**입니다. 그 **필요정도**에 “√” 표시 해주십시오.

시책(사업 예)	매우 필요함 ◀◀◀◀ ▶▶▶▶ 전혀 필요없음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① 사회적 경제 관련 인재 육성					
②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연대 강화)					
③ 사회적 경제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					
④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의 사업성(수익성) 강화 지원					
⑤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센터 기능 강화					
⑥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기금 조성 등)					
⑦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6-1. 위의 ①~⑦ 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2가지는? (____), (____)

7. 다음은 충청남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필요정도에 “√” 표시 해주십시오.

사업(사업 예)	매우 필요함 ◀◀◀◀ ▶▶▶▶ 전혀 필요없음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끄는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들					
②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청년 인턴제도 등)					
③ 사회적 경제 현장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사업들					
④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의 협의회를 지원하는 사업들					
⑤ 사회적 경제의 전국적 관심을 높이는 사업(사회적 경제 활동가 전국대회 등)					
⑥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기업, 시민들을 연결(네트워크)하는 사업들					
⑦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프로보노)을 연결·확대하는 사업들					
⑧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사업(아파트 부녀회를 통한 판매지원 등)					
⑨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을 통합지원하는 사업들					
⑩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					
⑪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수지역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들					
⑫ 사회적 경제의 전략분야를 육성하는 사업들					
⑬ 주민과 단체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사업 지원(충남도, 시군이 지원)					
⑭ 사회적 경제 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쇼룸, 전문매장운영, 브랜드화)					
⑮ 충남의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들					
⑯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설치(전문가 채용, 공무원 교육 등)					
⑰ 충남형 사회적 경제 지정제도 운영을 통한 지원 강화					
⑱ 충남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기능강화(연구 및 맞춤형 컨설팅 등)					
⑲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자금(펀드)를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들					
⑳ 충남도와 시군에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 제정					

7-1. 위의 ①~⑳ 번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2가지는? (), ()

8. 충청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원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② 홍보 및 마케팅 ③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
 ④ 사업비 지원 ⑤ 인건비 지원 ⑥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형성
 ⑦ 기타()
9. 귀하는 충청남도에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가 **활성화**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 공동체 활성화 ② 지역 문화 활성화 ③ 지역의 일자리 창출
 ④ 지역경제 활성화 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0. 귀하는 **현재**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11. 귀하는 **향후**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좋아 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려워 질 것이다 ⑤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12. 귀하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13. 귀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누가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 ② 지방자치단체(도) ③ 지방자치단체(시, 군) ④ 사회적 경제조직
 ⑤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⑥ 전문가 및 활동가 ⑦ 기타()
14. 충남도의 정책적 노력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가능하다 ② 가능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가능하다 ⑤ 전혀 불가능하다
- 14-1. 만약, “**④,⑤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2가지만 선택. (), ()
- ① 사회적 경제의 기반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② 현재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 기반이 너무 취약해서
 ③ 충청남도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들이 비효율적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④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충청남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⑤ 도와 시군의 정책의지 및 예산 편성 등의 노력이 부족해서
 ⑥ 민간기관단체의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15. 귀하는 충남도의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붙임자료 3)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인터뷰 (대표용)

1. 인터뷰 일자	2011. . .	조사원 성명	
2. 기 업 명		조직유형	
3. 대표자 성명		소재지	

1. 기업 주요 현황 파악 (사전에 조사표를 배포, 인터뷰 전에 숙지)

사업명	
사업 개시일	
핵심 사업내용	주요 수혜대상 및 대상지역 제품 및 서비스
고용 현황	총 명 (취약층 %) (시군 명/ 충남도민 명/ 기타지역 명) (취약계층 명 : 장애인 명, 빈곤층 명, 기타- 명) 참여자 평균 월급여 천원, 퇴직금 적립여부 , 사회보험 가입여부 , 기타 복리후생비용
재무적 성과	최근 3개월 평균 매출 총액 천원 (계절별 변동 큰 경우 1년 평균) 서비스별 매출비율) 순수익 천원 (매출의 %) 원자재 공급자 지역분포(마을 %, 시군 %, 충남도 %, 기타) 소비자 지역분포 (마을내 %, 시군내 %, 충남도내 %, 기타)
사회적 성과	사회서비스 및 재화의 무상 또는 설비 제공: 연인원 건 수혜지역 분포 (마을 %, 시군 %, 충남도 %, 기타) 지역사회공헌(구체적 내용) : 지역사회 재투자 (내용 및 금액)
영업외 수입	1) 최근 3년간 정부지원 내역 및 연간 지원액 : 총액 천원 (면 천원, 시군 천원, 충남도 천원, 고용부 천원, 기타)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기타 후원 규모 및 지역분포
재무구조	자본금 총 천원 (마을내 %, 시군내 %, 충남도내 %, 기타) 채무 총 천원 (마을내 %, 시군내 %, 충남도내 %, 기타) 적립액 총 천원

2. 사회적 목적 활동

설립 목표	Q. 귀사가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해결하기 원하는 지역사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환 사유	Q. 사회적 기업/마을기업으로 시작(또는 전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비즈니스 모델

고객수요 인지도	Q. 귀사의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의 주 타깃이 되는 고객은 누구이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Q. 이러한 목표고객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고객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Q. 고객들은 귀사의 사업 내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이를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사업 수행 지역	Q. 귀사의 사업 대상 지역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향후 확대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고객과 미션공유 정도	Q. 목표고객이 귀사가 사회적 기업(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고객이 인지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마케팅 전략	Q. 귀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 됩니까? 원가계산에 따릅니까? 동종 업계의 시장가격에 반응하는 편입니까? Q. 전담 영업인력이 있습니까? Q. 귀사의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요한 홍보, 영업전략은 무엇입니까? Q. 고객 평가와 AS 접수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Q. 신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고객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계십니까?
강/약점 분석	Q. 귀사의 강점, 또는 타 업체와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업적 장애요인	Q. 귀사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제도적으로나 시장조건에 의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4. 인적 자원

1) 창업 주도그룹 및 사업 대표

동기/ 비전	Q. 사회적 기업 참여 동기는 무엇입니까? 비전은?
주요 경력	Q. 사회적 기업 이전의 경력은 어떠하십니까?
전문성 기여도	Q. 창업당시 대표자 및 창업파트너들은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전문성을 보유한 상태였나요? Q. 귀사의 모범인은 기업활동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경영역량 애로사항	Q. 대표자 및 창업파트너(모범인)에게 가장 부족했던 전문성은 무엇이었나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원 기대사항	Q. 사회적 기업의 대표로서 경영역량 발휘위해 특별히 지자체 등에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직원

직원 구성	Q. 관리직 : 생산서비스직 비율 = :
채용과정	Q. 인력 채용시 주요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Q. 인력 채용시 어떤 방식으로 모집합니까? 애로사항은? Q.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채용 기준과 목표가 있습니까?
직무기술 정도	Q. 귀 사의 참여자들은 귀 사의 사업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지식 또는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까? Q. 귀 사는 참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평가보상	Q.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근로자 만족도	Q. 귀 사의 참여자들이 귀 사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일반 영리기업과 비교하여 급여, 근무여건, 복리후생에 있어 귀사의 제공 수준은 어떠합니까?
사회적 기업 인 지도	Q. 귀 사가 사회적 기업(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참여자들도 알고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교육 내용 및 기간? Q. 근로자가 느끼는 사회적 기업(마을기업)과 일반 영리기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Q. 귀 사의 사회적 목적(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해 참여자들이 얼마나 이해 혹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까?
고용확대	Q. 향후 고용확대 가능시기 및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Q. 취약 계층의 고용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배구조	Q. 귀 사에 참여자(근로자)와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투자자, 사업지역의 리더 등)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합니까? (대표 참여 or 직접 참여 : 방식과 회수 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5. 물적자원 및 지역자원

내부 시설장비	Q. 현재 주요시설장비 및 추가로 필요한 시설장비 목록과 확보방안
지역사회 자연/문화 자원활용도	Q. 귀 사의 사업 추진시에 활용중인 마을, 시군, 충남도의 자연적 문화적 자원은 무엇입니까? Q. 자원활용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6. 자원 네트워크

1) 현재 귀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1. 언제부터 협력하셨습니다?			
2. 누가 먼저 협력을 구했습니까? 왜 선택하셨습니까?			
3.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4. 주요 내용과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5. 기관 내 담당자 외 업무 협조하는 분이나 교류하는 다른 그룹이 있습니까?			
6. 앞으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라면 이유는?			

2) 현재 귀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연구소 등이 있습니까?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1. 언제부터 협력하셨습니다?			
2. 누가 먼저 협력을 구했습니까? 왜 선택하셨습니까?			
3.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4. 주요 내용과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5. 기관 내 담당자 외 업무 협조하는 분이나 교류하는 다른 그룹이 있습니까?			
6. 앞으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라면 이유는?			

3) 현재 귀 업체에 일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1.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소속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2. 자원봉사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3. 평균 자원봉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4. 거주하시는 지역의 분포는 어떠합니까?
5.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집하십니까?
6. 앞으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라면 이유는?

사회적 경제의 이상과 현실

충청남도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사회적 경제연구회는 충남지역의 교수, 연구원, 지역전문가, 현장활동가들을 망라한 조직이다. 연구회 구성원간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실체가 있는지 이론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씩 탐구해나가고자 한다. 이 글은 그 첫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3월 25일(금) 14:00 ~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3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송두범, 김종수, 김민숙, 홍은일(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실)
-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 이관률, 이영옥(농촌농업연구부)
-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박영송(충청남도의회), 추욱(충청남도청) 외 2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다른경제의 희망: 사회적 경제, 연대경제, 민중경제
 -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 사회적 경제의 개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역사, 개념, 이론적 근거)
 - 사회적 경제 왜 필요한가? 특히, 충남
 - 사회적 경제 실체는 있는가(대상과 유형, 생태계 구성요소 등)
- 토론
 - 연구회 회원 등 참석자 전원

■ 사회적 경제 개념의 다양성

사회적 경제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어떤 이들은 경제학의 일부분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사회정책에 가깝다고도 한다. 1회 워크숍의 발제자인 김신양 박사는 이를 사회적 경제, 연대경제, 민중경제로 나누어서 보고 통칭하여 '다른경제'라고 부른다.

•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막 태동한 자본주의의 급속한 진전으로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농민, 노동자, 장인이 불평등과 탄압에 맞서 조직한 것이다. 당시 노동계층의기본적 욕구인 교육, 보건, 신용대출, 음식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현대에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근간이 되었던 지역, 종교, 가족의 붕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사회적 결속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모든 이들은 서로 돕고 서로 연대한다. 우리는 운명공동체다”라는 말은 이를 잘 나타낸다.

• 연대경제

연대경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연대경제는 오일 쇼크와 더불어 시작된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한편으론 68년 5월 혁명 이후 형성된 세대의 대안적 삶의 모색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 스스로 사회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대경제는 형성된다.

연대적 서비스 조직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욕구를 발굴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조직하고 이들로 이루어진 의사결정 단위를 구성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동원된다.

- 민중경제

민중경제는 자신의 노동력과 이용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물질적·비물질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중조직에 의해 개발되는 모든 경제활동 및 사회실현을 뜻한다. 주로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는 민중집단이 결사하여 다양한 방식에 따라 노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아우르는 활동이다. 이는 보통 비공식적인 구조로 존재하며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호혜적 관계에서 활동의 근거를 찾는다.

김신양 박사는 결국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민주적 연대성을 통한 재분배와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보편적 연대의형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박애적 연대’와 ‘민주적 연대’라고 설명한다.

- 토론 요약

김신양 박사의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사회적’의 의미

사회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집합이 아닌 공동의 운영원리에서 개인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즉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공동의 어떤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common이라는 용어를 쓰지 collective를 쓰지 않는 것이다.

-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영역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난다. 공정무역, 민중교역, 아시아 민중기금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교환체계를 활용하기도 하고 기존의 전통농업이나 환경문제를 결합시키기도 하는 새로운 활동의 등장은 기존의 단일한 법체계에서는 받아안기 힘들고 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경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회적 경제는 독립적인 개인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라민 뱅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훌륭한 사회적 활동이 될 수가 있다.

•사회적 경제의 토양마련이 중요

사회적 경제를 이루어 나가는데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안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은 현재 노동통합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반, 시스템, 주변의 연대, 네트워크 이러한 토양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시사점

첫 연구회 워크숍이었던 만큼 개념적인 혼란도 많았고 참석자의 이해 수준차이도 컸다. 하지만 이러한 첫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이라는 형용사와 경제라는 명사가 합쳐진 일종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개념 안에는 역사적 맥락과 국가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가? 또한 충남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실체는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는가? 그 실질적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앞으로 연구회를 진행하면서 찾아야 하는 숙제일 것이다. 그 해답을 찾을 때 충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어렵פות하게나마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정책으로 충남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해외사례- 캐나다 퀘백을 중심으로

충청남도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두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두 번째 워크숍을 통해서 캐나다 퀘백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과 지역기금의 사례는 충청남도에서도 고민할 가치가 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캐나다 퀘백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4월 1일(금) 14:00 ~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송두범, 김종수, 김민숙, 홍은일(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실)
-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추욱(충청남도청)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시책추진 현황(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 송두범(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
 - 사회적 경제의 해외사례- 캐나다 퀘백을 중심으로
 - 이은애(Seed's 혁신지원단장)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충남의 사회적 경제 시책추진현황

송두범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형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현황에 대해 개괄하였다. 현재 사회적 기업에 신청한 기업들의 문제점으로 4가지 지정요건을 구비한 기업이 매우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 또한 대상자들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특히 사회적 목적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마을기업의 경우도 보조금의 사용용도 등 세부집행계획 및 자부담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보조금을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시설설치, 기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신청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향후과제에 대해서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대상사업자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개별지원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증진과 공감대의 확산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캐나다 퀘백의 사회적 경제의 형성

사회적 경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 국가의 역사와 상황에 따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은애 단장은 캐나다 퀘백의 사례에 대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유기적인 연대로 인해 사회적 경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발전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공동체주의가 사적기업 모델의 지배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Galera(2004)는 협동조합의 다른 형태의 발전모델로 상호주의 모델, 사회적 모델, 중간모델, 준공공성 모델을 제시한다. 상호주의모델은 엄격하게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하

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간주한다. 사회적모델은 협동조합을 지역사회의 이익에 보다 개방된 조직으로 설명한다. 중간모델은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법률에 정의된 상호주의 개념이 협동조합의 상호적 본성과 사회적 기능까지 포함된 조직체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준공공성 모델은 협동조합 조직을 공기업처럼 이해하고 그 지배원칙이 공공기관에 의해 규정받는다고 간주한다.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발전요인

첫째, 세계경제, 글로벌 기술의 발전이다. 경제적인 세계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본래 근거지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을 때 오히려 협동조합은 '전 지구적 경제와 지역사회의 강한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한다. 둘째, 인구학적 변화이다. 개인주의의 성장, 가족의 해체, 전문직 청년들의 단독가구화 등으로 보건, 주거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증가가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영향이다. 공공재정에 대한 예산삭감과 건강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늘어나는 욕구들을 결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수단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모델에 추가된 가치

- 협동조합들은 지역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 협동조합들은 자발적인 공동참여에 의존한다.
- 분할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협동조합들의 자본은 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들의 규모는 주변지역의 범위에 필적한다.
- 협동조합의 발전은 조합원들의 책임이며 1인 1표의 원칙에 대한 존중 속에 이루어진다.

이은애 단장은 캐나다 퀘벡에서 이러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들이 발전한 것은 정부, 기업, 노동계, 사회경제영역, 비영리조직들을 통틀어서 모두 노력한 결과이었다고 본다.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부처 간 연계와 조정을 통하여 수평적인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섹터 간의 조율기구가 필요한데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하였다. 특히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맵핑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경제영역을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토론 요약

이은애 단장의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연대’의 필요성

퀘백의 사회적 경제를 위한 노력들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영역이 함께 구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연대기금의 조성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 단순히 정부를 탓하고 재계를 탓할 문제가 아닌 노동계에서 스스로의 문제임으로 깨닫고 기금을 합의해 가는 구조에서 태동한 것이다.

-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신뢰

캐나다 퀘백의 사회적 경제가 쭉 갈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이민의 역사 속에서 이미 1800년대부터 유럽의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가 밑바탕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조합 새로운 가치에 대한 신뢰들이 쌓일 수 있었다.

- 충청남도에 적용 필요

해외사례의 내용 중 좋은 것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도에 영농조합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어떻게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영농조합들이 많이 신청했었는데 이익재분배 등의 문제 때문에 요건을 갖춰 진입하지 못하는 조합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풀어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역할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틀에서 센터도 메여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빨리 극복이 되어야 한다. 극복이 되면 센터의 역할도 교육 및 컨설팅 수행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시사점

두 번째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캐나다 퀘백의 사례는 충남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 주요행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논의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행위가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기금 등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연대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사회적 경제의 해외사례- 영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충청남도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세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 번째 워크숍을 통해서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가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형성되었고 그 개별 주체들의 구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의 사회적 투자와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운동은 충청남도에서도 고민할 가치가 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 경제 사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4월 19일(화) 14:00 ~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송두범, 김종수, 김민숙, 홍은일(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실)
- 허남혁(농촌농업연구부)

□ 원외

- 추욱(충청남도청)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영국 사회적 경제의 이해

- 조우석(소기업발전소 연구원)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의 이해
- 최혁진(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투자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의 조우석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하여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영국 정부 예산의 대부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3섹터/사회적 기업의 지원금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시민영역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되었다. 이는 현재 시민사회 영역이 매우 취약한 한국의 상황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시장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사회적투자는 사회와 환경에 이익을 주는 투자를 뜻한다. 특히 이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때 까지 기다려주는 '인내 자본'인 것이 특징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사회투자자의 보증인의 역할을 하고 민간으로부터 대출/투자를 유치하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투자하여 효율적인 기업운영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기업은 이과정에서 정부와 계약하고 민간으로 투자받기 위하여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가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최종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실행능력을 기본으로 한다.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동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최혁진 이사는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차이는 한국은 농협, 신협, 생협 등 개별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일반법의 규정이 없는 반면 이탈리아는 일반법으로 협동조합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하고,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 설명한다. 트렌토 협동조합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트렌토 협동조합 현황

- 1890년 소비자협동조합 설립
- 1895년 트렌토협동조합연맹 설립
- 50만 인구 중 255,000명 조합원, 536개의 조합, 16,000명 종사자, 5,066명 임원, 연맹직원 174명,
24억유로매출(3조6천억원)
- 소비자, 신용, 농업, 일자리-사회서비스로 분야를 나누고 2차 권소사업 다양.
- 매출액의 3% 회비납부. 시-재정자립 100%
- 연맹차원의 행정, 법률, 세금, 설립, 컨설팅 등 지원하여 단위조합의 발전 유도

최혁진 이사는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지역 내 대안경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트렌토 시는 자급율이 100%이고 정부중심의 보호된 시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보호된 시장 속에서 자주관리생산협동과 워커즈 콜렉티브의 실현가능성이 있었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이탈리아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이탈리아 동부지역이나 산악지대에 특수한 문화적 환경들이 있고 상당히 연대의식이 강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이 강한 지역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발달했다는 특징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라고 하면, 결국은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회적 경제의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는 네트워크의 노력이 없으면 어렵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의 유용성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은 한국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사회연대협동조합법은 노동자, 소비자, 지역기업, 심지어 공공재단까지도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직이다. 외국에서도 현재 상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만 계속 성장하는 추세이다.

•정부의 역할 중요

영국의 경우 더 컴팩트라는 사회연합을 만들면서 자기선언을 하게 됩니다. 공공이, 그리고 그 간에 각종 민영화 조치 속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권 보장에 대해서 악화시켜왔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또는 새로운 지역 고용의 대안으로 제3섹터와 함께하는 길을 가게 했고 공공에 대한 단순한 책임 이양이라는 차원에서 제3섹터에 사업권을 위탁했다기보다는 자기한계 같은 부분들을 선언하면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그런 사회협약을 중앙단위에서 맺게 되고 그게 한 10년에 걸쳐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계속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 시사점

세 번째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와 영국의 사례는 사회적 경제의 두터운 역사 속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발표를 통해 우리도 다중이해관계자 즉, 정부, 기업, 시민영역 등이 상호 협력할 때 사회적 경제의 지름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영역이 다른 영역에 기대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에게만 의존하려 하지 않고 그들 나름의 연대구조를 통해 상호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충남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경제 단위끼리의 연대를 통해 튼튼한 기반을 확립할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사례연구- 일본과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례 중심으로

충청남도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네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네 번째 워크숍을 통해서 일본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와 성미산 마을만들기가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두 사례는 모두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일본의 사회적 경제와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충남의 사회적 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행사 개요

- 1) 일 시 : 2011년 5월 3일(화) 14:00 ~ 17:00
-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송두범, 김종수, 김민숙, 홍은일(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박철희(지역도시연구부)
- 박경(목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

□ 원외

- 박영송(충청남도의원)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일본 사회적 경제의 이해
 - 강내영(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 ▷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이해
 - 조경민(마포희망나눔)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일본의 사회적 경제

강내영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사회적 경제는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개호복지, 지역 재생, 마을만들기, 환경보호, 빈곤문제의 대두로 나타났다고 한다. 나아가 출생률 저하, 고령화의 진전으로 일본을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영역’ 구축의 중요한 근간으로 사회적 경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연구자의 따라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협동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협동 경제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를 NPO활성화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정무역, 유기농, 협동조합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 연대 경제 포럼>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조직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협동조합(각 협동조합법에 준거한 법인)
- 노동자 협동조합(근거 법이 없음)
- 워커즈 컬렉티브(근거 법이 없음)
- 비영리조직(NPO법인,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 사회적 기업(SB)
- 커뮤니티 비즈니스(CB) 등

■ 성미산 마을만들기

성미산 마을만들기에 대해 조경민 대표의 발제가 있었다. 성미산 마을만들기는 국내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어 그 성공원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우선적으로 조경민 대표는 성미산 마을만들기는 호혜적 지역경제와 주민자치

를 통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꿈꾸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소개하였다. 조경민 대표가 소개하는 성미산 마을만들기의 원칙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자(당사자 중심): 지속가능성은 당사자의 결의와 시행착오로부터 온다.
2.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합의는 대체로 낮은 차원에서 동의를 구하게 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3. 안되면 돌아가자: 유연하지만 한결같은 때 좋은 결과가 온다.
4. 부러우면 지는거다: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변하면 좋다는 것을 보여주자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일본의 사회적 경제 구성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라든가 사회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PO라는 것이 필요했는데 NPO라는 것이 어쨌든 지속가능한 부분에서 담보하기 힘들다는 의견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일종에 활용된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것과는 별개로 생협의 복지클럽생협의 움직임이라든가, 노동자협동조합, 워크스컬렉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일본의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일본 사회적 경제에서 배울 점

일본의 사회적 경제 영역 총 정리 속에서 배울 것은 충청남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보여준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경제 스펙트럼이 충남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사업 속에서 네트워크라는 것이 형성되어야지, 말로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 간의 강점이나 사업내용을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안형

네트워크, 제안형으로 사업들을 제안하거나 정보들을 공유시켜주거나 하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성미산의 성공이유

저희는 성과지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치지향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의 좋은 인재들이나 마을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보니까 일정정도의 목표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 목표설정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도 받아야하는 관점에서 보면 수치로 나오지 않으면 힘듭니다. 저는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에 대해서 계량화하는 것은 쉽습니다. 가치지향에 계량화방법을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사점

일본의 사회적 경제와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실제적인 구성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두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의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주체들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주체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경제에 한걸음 나갈 수 있음을 배웠다. 다시 말해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고 이를 채워나가는 데에 먼저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는 질문에 발제자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충청남도에서도 사업과 건물을 남기는 것보다는 지역의 리더를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됨을 배울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사례연구- 대구, 경북사례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에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다섯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구 경북의 사회적 경제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충남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분석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대구경북의 사회적 경제를 살펴보고 충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을 통해 충남의 사회적 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행사 개요

- 1) 일 시 : 2011년 6월 8일(수) 14:00 ~ 17:00
-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3) 참석자 : 20명 내외
 -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김종수, 이은애, 배혜정(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 원외

-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대구경북 사회적 경제의 이해-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 류병윤(대구경북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 충남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분석
- 이은애(Seed's 혁신사업단장)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대구경북 사회적 경제의 이해

류병윤 센터장은 사회적 경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지역밀착형'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발전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밀착형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범위도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정부와 지방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이 인증, 육성되는 현재의 현실에서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특성과 경제적, 사회적 현황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역밀착형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한 방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문제'의 특징을 파악, 분석해 비즈니스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적합한 업종 및 아이템의 발굴, 지역자원의 연계와 네트워크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전통과 정서의 회복 등 지역과 밀착한 사업 기회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분석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일반현황을 살펴보았다.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 기업(예비사회적 기업 포함)의 주요 활동분야는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문화분야가 2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식품분야로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조 8%, 환경 7%, 사회복지 4%, 재활용 2%, 가사·간병 2%이며, 기타가 13%였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2010년말 현재, 대구지역 13개의 생협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1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200여억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기업 못지않게 지역의 사회적 경제 범위와 영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충남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분석

이은애 단장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충남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는 전략과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내용이다.

이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조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생태계 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해 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일원화된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 해당기업에 대한 현황 자료 수집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조직간 연계 상황과 인적, 물적 자원의 순환 구조 파악
3. 사회적 경제 생태계 지도를 구축하고 발굴 육성 및 지원 정책과 개선 과제 도출

이은애 단장은 6개 사회적 경제 단위의 분석을 통해 충남 전체를 분석하기 보다는 보다 홍성군 홍동면과 같이 더 작은 단위에 집중함으로써 더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와의 연결 네트워크나 자원동원의 구조 등을 파악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구체적인 실체를 통한 사회적 경제 이해 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 위기나 식량위기, 기후적 위기나, 최소한 그런 지구적인 문제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관점 자체가 상실된 채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캐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원기관의 역할 중요

저희들도 권역별 지역기관으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운동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로 직원들을 반 정도는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으로 뽑아서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한다는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나가는 단계입니다. 모든 행사나 활동 중에 최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우리 네트워크에서 이용하도록 의식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소비되는 물품들을 가급적 그런 곳에서 구매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 행사 비용의 상당부분은 사회적 기업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마을 기업들도 소개하고 소비하기도 합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을기업

컨설팅 사업을 수행을 했고, 원래 대구광역시 마을기업을, 연구소 안에 별도의 주요 센터를 만들어서 연계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끊임없는 영향을 미친다고 자부 혹은 자평을 해봅니다.

- 재지역화가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다.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계화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고 하더라도 바뀌나갈 수 있는 힘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 그걸 지역화라고 얘기를 그럼 세계화에 대한 대안인 지역화를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 지역이 살아왔던 힘을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오는 것 그렇잖아요. 지역끼리 우리 잘살 수 있어 그 동안에 세계화라고 하면서 빼앗긴 것들 연대를 통해 찾아가자는 얘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 그런 힘의 토대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다.

-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사방식의 변화 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을활력소를 하면서 이 방식은 아니겠다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을 더 들여 봐야겠다고 했던 게 지금 여기 보시는 데로 처음에 6개를 뽑았을 때 제도영역 안에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 불리는 곳들을 딱 집어서 거기에 관계집단이라든지, 연대정도 등 여러 가지로 읽어보려고 했었으나, 그렇게 대상을 잡다보니까 홍성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마을활력소가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으로는 홍성이 가져온 역사라든가 그 안에 어떤 목표가 있었고 막 분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업형태로 보지만, 마을로 봐서는 사실은 마을수준의 지원조직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나지가 않았습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밥상이라든지 이런데는 오히려 자활의 역사라든가 설명과정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데, 그래서 홍성군전체로 해서 풀무학교가 만들어진 것, 농업에 대한 문제를 전망했던 것 그것에 대응과정들, 대신에 홍성군 홍동면 안에 풀무네트워크가 가진 폐쇄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새로운 귀촌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어떤 것은 연결되어있고, 어떤 것은 고리가 끊겨있고 이쪽에 기대사항으로는 홍성에 역사를 주도해온 그룹들이 지역에 지원자이자, 업종네트워크에 주도자이자 여러 가지에 역할변화를 갖고 있을 것인데 조사과정에 사실로 드러나셨으면 싶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대상의 변화를 가져와야 싶었던 것입니다.

■ 시사점

다섯 번의 연구회 워크숍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개념적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사이다. 이는 충남에 사회적 경제가 어떠한 양태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 대한 명확한 사전이해 후 범위를 마을단위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협동경제를 구성되는지, 그 주체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때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또다시 확인하였다.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충청남도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여섯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경제 형성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함

2. 행사 개요

- 1)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14:00 ~ 17:00
-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송두범, 김종수, 홍은일, 배혜정(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허남혁(농촌농업연구부), 이관률(농촌농업연구부)

□ 원외

- 최선희(씨즈 충남지부)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 하승우(지행 네트워크)
- ▷ 사회적 경제와 주거협동조합

- 함영진(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부연구위원)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한국에서도 환상의 짝궁일까?

하승우 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협동조합은 낡은 브랜드가 아니며 뜨는 브랜드라고 판단한다. 특히 소비자생협의 조합원수와 공급액 증가속도는 다른 사업보다 월등하게 빠르다고 한다. 현재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생협의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를 토대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협동조합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협동조합은 가격과 품질, 환경, 윤리, 공정성의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보편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보다 중요해질 과제, 인류 생존조건의 근본적인 변화와 결부된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인구의 급속한 증가, 환경에 대한 압력의 증대, 극히 일부에게만 집중된 경제력, 세계 도처에서 커뮤니티를 고민케 하는 다양한 위기, 지구 곳곳에서 현저해지는 빈곤의 심각화, 점차 빈발하는 민족분쟁 문제가 포함됩니다. 협동조합이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해결을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고품질의 식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종종 해온 것처럼 환경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력을 보다 널리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역사적 역할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각각이 위치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자조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정치적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²¹⁾

향후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사회적 지향을 마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사실 협동조합의 성공 여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른 ‘사회적 시장’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협동조합이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성장한다면, 그 운동은 결국 기반을 스스로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 운동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나 레츠(LETS), 마을만들기운동 등을 통해, 그리고 친환경급식이나 로컬푸

21) 쿠리모토 아키라(栗本 昭) 지음, 주영덕·김형미 옮김. 2009. 『21세기의 새로운 협동조합원칙: 일본과 세계 생협 10년 동안의 실천』. 생협전국연합회, 22~23쪽.

드만이 아니라 주거, 보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단체들이 이런 관계망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만일 이런 관계망의 확대가 소유권을 약화시키고 공동소유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 협동조합운동 새로운 노동과 거래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 사회적 기업과 지역 거버넌스 발전

함영진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이유로 지역 내 기초지방정부들과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가 지역경제 혁신과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발제자는 캐슬베일 주거협동조합(CVCHA)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CVCHA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불량 주거의 문제, 지역 재생문제,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문제 등에서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리고 동시에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파급효과와 피드백을 고래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의 달성과 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CVCHA는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지역협력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관련이 있는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때문에 지역주민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와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다양한 통로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로컬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지역자산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 둘째,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 주민의 요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등을 기반으로 지역조직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셋째, 사회적 기업의 자활방안을 지역 자산과 연계하여 구상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에서 찾음, 넷째, 공익 및 사회적 목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과평가 실시이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협동조합의 정신이 사회적 기업으로 녹아드는 것 필요

이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성 민우회 생협은 8원칙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대안적 사회 창출을 위한 제 8원칙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드리면 우리 조합원은 자기 생활을 주체적으로 창조한다. 먹을거리, 성, 평등, 판결, 지역, 복지 등 생활 제반영역을 정부나 자본시장에 내맡기지 않고 조화와 협동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뜻을 모으고 행동하며 실천한다. 생산하는 소비자로서 생활재를 생산자와 함께 만들고 구매력을 결집하고 예약운동 구입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의 구조를 일취 발전시키는 대한경제를 구축한다고 라고 하는 8원칙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논의되면서 저는 협동조합의 원칙이 정신이 정체성이 사회적 기업의 모태가 되길 사실은 바랍니다.

• 협동조합 간 연계네트워크 필요

사회적 기업 자산단위 예를 들자면 특히 네트워킹 서로 주고받는 것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들에게도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지고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대기업의 횡포나 어려움으로부터 서로의 협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자체의 역할 중요

우리나라의 지자체에 대한 시스템화가 안됐다고 그러나요, 시스템화 되면 거기에 맞춰 굴러 가야되는데 사람이 바뀔므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고 정책의 주안점이 바뀌어나갔다는 점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과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자체에 대한, 지자체 행정에서도 시스템 화되어 가고 좀 더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책임, 책무성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적 경제를 이끌 사람을 키우는 것 중요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은 사람의 부분인데 사람을 어떻게 키워내고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같이할 젊은 사

람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이론작업이었거든요. 그런 기업과 이런 꿈을 꾸는 청년들이나, 그런데 사회를 보면 암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보여주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적 경제에서 구조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 저희는 교육 파트인데 교육 시킨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역에서 내 보내는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역에 남아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하는데 이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담당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되고,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 시사점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하부조직 중 하나인 협동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회의 의의가 있다. 현재 각 부처의 정책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주요 요소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협 등 협동조합 조직이 사회적 경제의 역사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한다.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러한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논의된 것처럼 교육, 지역자산의 활용, 연대, 지역 거버넌스 등이 뒷받침 된다면 협동조합이 충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지역기금형성

충청남도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일곱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기금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지역기금형성 및 지역화폐의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7월 21일(목) 14:00 ~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3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종수, 김민숙, 배혜정, 홍은일(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최선희(씨즈 충남지부)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사회적 경제와 지역기금형성
 - 이희수(한국사회적 기업협의회 상임정책위원)
- ▷ 사회적 경제와 지역화폐

- 김성훈(민들레의료생협 이사)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사회적 경제와 지역기금 조성 방안

이회수 이사는 사회적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기금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은 기업가정신 계발과 금융인프라 구축인데 특히 조직의 특성에 맞는 자원-자본 시장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금융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 기업의 자본시장의 성격과 더불어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자본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해외의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과정에서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금융과 공동체개발을 위해 조성된 지역기금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 자본시장과 연계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에서 정부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마중물 역할을 할 내셔널 펀드를 규모있게 조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재정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풀뿌리 공제회, 사회적 조직간의 컨소시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내 협동조합금융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 있다.

사회적 경제에 있어 사회적 기업 금융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투자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제공하는 투자가로서의 역할
- 둘째, (혁신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금융프로그램과 소셜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혁신가로서의 역할
- 셋째, (가치평가전문가) 기업별, 프로젝트별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수익을 추정하고, 위험을 가격으로 전환하는 역할
- 넷째, (지역사회재건과 사회통합의 촉진자) 제도권 금융이 회피하는 낙후지역과 버팀경제(Bottom Economy)에 대한 소셜금융 제공으로 지역공동체사회의 재건과 소외그룹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역할

■ 한발레츠의 사례로 보는 지역통화 운동의 가능성

김성훈 이사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지역통화 운동의 실제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역통화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

역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발행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화된 자본주의 화폐경제 시스템의 폐해를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익추구집단에 의한 화폐발행권의 독점, 둘째 이자 등으로 인한 부의 소수 집중과 양극화, 셋째 화폐 부족으로 인한 대립과 경쟁관계의 심화이다. 이러한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시작된 것이 지역통화운동의 시작이다.

발표사례인 한발레츠 역시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시작하였듯이 2008년 말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에 지역통화에 대한 관심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에 일고 있는 사회적 경제운동의 대유행과 맞물려 전국의 지역통화단체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국의 지역통화단체는 30여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직 전해 듣지 못한 곳 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통화운동은 결국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는 기존의 교환시장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즉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레츠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한발레츠의 경우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한의사가 가입하고 얼마 후 지역공동체 운동에 뜻을 둔 레스토랑이 가입하였다. 연이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부가 가입하면서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또한 품앗이 운동을 통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서로 알게하였고 자연스럽게 거래가 시작되게 되었다. 레츠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색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전통사회속에서 품앗이나, 두레, 계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삶의 밑바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보살핌과 배려, 나눔과 협동으로 작동하는 사랑의 경제를 부활하는 운동인 것이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지역화폐와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가능성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거하고 연계시켜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사회적 경제 기획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결사대 얘기하시면서 항상 문제 되는 게 소비자뿐만이 아닌 생산자도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는 한발 레츠의 열성적인 회원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충남발전연구원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큰 규모로 확대할 수 있을 거고, 한발레츠의 회원들이 원하는 수요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잘 공급해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우선적으로 매칭을 시켜준다거나 하면 열성적인 실무자 몇 분이 희생을 해가면서 하는 부분을 커버 해주면서 물론 소규모의 공동체성 이런 건 퇴색될 수 있으나 지금 보다 더 확장된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

렛츠의 경우 지역 기반을 가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지역기반이 가진 공동체가 남은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의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지역화폐를 하고 있던 조직들이 다 같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실험적으로라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들에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자원을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화폐를 쓰는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작은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관계망으로 자원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해야 성과가 있습니다. 실제 경제생활하고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화폐범위를 넓게 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은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기금의 성격이 중요하다.

지역기금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대기업중심의 이상하게 흘러가지 안 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곡된 상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간지원조직이 기업가정신이라든가 마인드와 비전을 주는 것과 또한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기금을 누가 조성해서 누가 배분해주는 것인가에 문제, 마인드를 나눠주는 것과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간지원조직에서 역할들이 중요하고,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단순 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 기금조성도 마찬가지로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매치시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 시사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순환구조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지역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기금은 시작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지역기금이 충남 전체를 바라보는 기획이라면 마을단위에서는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사람들 간의 면대면 관계를 맺게 해주고 이렇게 쌓인 신뢰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이 태동될 수 있다. 단순히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드는 것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역기금, 지역화폐를 충남에서 고민해야 할 때이다.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

충청남도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여덟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8월 10일(수) 14:00 ~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종수, 김민숙, 배혜정, 홍은일(충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

- 이란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사회적 경제의 중간지원기관 사례연구-풀뿌리사람들의 사례

-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

이란희 연구교수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를 비교하면서 시민사회는 사회적 경제의 토양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민간에서 시작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87년 체제 이후 도시지역에서 시작된 생협운동, 200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작된 자활공동체사업, 2003년 노동부에서 시작된 사회적일자리사업,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인증 사회적 기업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윤 배분의 엄격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적 전통으로 볼 때, 제3섹터는 영리부문과 다른 비영리부문이고 국가와 구별되는 시민사회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럽권은 미국식 분류를 따르지 않고, 중간적(intermediary)이고 다원적(pluralistic)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제3섹터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일부'라는 가설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발제자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는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사회적 경제의 자율성의 문제이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영국식 모델에 근접하다면, 국가(정부)와의 관계 또한 복잡미묘하게 이루어진다. 이때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중첩되어 있어 중간적 조직, 보완적 조직으로 그 기능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국가에 대한 자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 특히 사회적 기업의 유사 영리민간기업화의 문제가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지키지 못할때는 일반영리기업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리민간기업과 같이 시장화에 집착하게 된다면, 사회적 기업의 존재이유(rationale)는 무색해질 것이다. '사회적'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발현하기 위한 근거에 각각의 액터(국가-시장-시민사회)간 창 의와 협력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다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경제의 신뢰 및 건강성의 문제가 있다. 만약 사회적 경제 조직이 회계부정 등 조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저버리게 된다면, 시민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 시민사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비전의 확장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상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제도적 동형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시도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특색을 살린 지역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사회적 경제의 중간지원기관 사례연구-풀뿌리사람들의 사례

김제선 상임이사는 풀뿌리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어떻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었다. 발표를 통해 『풀뿌리』 자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의 변화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런 저런 일들에 참여해 온 작은 경험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풀뿌리의 설립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3지체운동 기획, 즉 정치적 중립과 권력감시로 대표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양극화의 심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한다. 당시에 주로 논의된 지점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권력의 계층중립성의 확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운동, 운동의 심화 발전을 위한 분화였다고 한다.

이후 『풀뿌리』는 주민조직으로서 마을어린이도서관운동이 안착되면서, 풀뿌리운동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중간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당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시민센터설립 논의, 2006년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이 소개하였던 지역재단운동의 필요성에 자극을 받으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풀뿌리운동사례에 대한 문헌조사와 ‘풀뿌리유랑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범 사례 현장 방문 조사, 중간지원조직의 형태와 방식에 대한 ‘풀뿌리수다’ 워크숍을 거치면서 조직의 성격을 정립하였다. ‘도시형’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지역의 자원을 풀뿌리운동에 중개하는 지역재단형 운동, 아래로 부터의 참여와 협동, 활동가의 성장과 발전의 중시하는 대전형풀뿌리운동, 중간지원조직의 모색을 추진했다.

『풀뿌리』 지원사업의 기본 관점은 풀뿌리역량개발에 있다. 그 과정은 현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찾도록 함으로써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갖게 함과 동시에 작은 성공을 축적하여 성취감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의 동기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풀뿌리』의 사회적 경제의 활동 지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부 지원 의존형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 반면에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지역밀착형의 자주적 협동의 모델은 보편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내부 시장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협동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주체의 형성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 담론을 적극적으로 형성 필요

저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을 좀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시민사회도 사회적 경제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축소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구요. 제가 보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내년에 총선대선의 담론 자체가 재벌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새로운 화두로 드러날 건데,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안된다.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 실패, 시장에 포획된 정부의 가치를 변화시켜줘야 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의 현재 경제 시스템이 집중이면 분산을 해줘야되는거고, 중앙 중심이면 지역으로 다시 편재해줘야 하는거고, 강자 중심에서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배타성으로 상성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회적 경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구요.

•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치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그 사람들이 갖는 가치적인 것에 대한 욕구하고 경제적인 욕구를 합일시켜가는 과정으로써 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가치적인 것에 대한 욕구도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것에 대한 욕구도 높고요. 이중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실제 자기 생활에서, 경제적 영역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과정을 설계해주고 실제 실용할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적 경제의 시작은 충청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시작은 충청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대전에서 생산된 사회서비스제품이 대전에서만 가지고는 좀 유지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청권이 되어야 한다. 왜냐면 충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산이나 천안에서 소비되는게 아니라 대전까지 포함된 권역에, 충청권역에 생태계 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어야 갈수 있다는거죠. 우리 이탈리아 다녀온 지역도 지역범위가 하나의 도시는 아니거든요.

- 사회적 경제는 지역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간에 따라 시민사회 구성이나 특성이 많이 다를텐데 공통된 것은 이중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된 곳과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쪼개지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도 이중화되어 있고 농촌지역도 이중화되어 있는 양상은 전체적으로 공간 구조도 그렇고 삶의 양식이나 인간관계의 연결망이 상당부분 이중화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의 내부이중화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도시지역은 공동체적 기반이 거의 없거든요. 같은 지역에 살지만 커뮤니티 의식이 없어요. 소비적 의식, 아파트도 자산으로써, 부동산 가치로 생각을 하지 주거공간으로써 공동체로써 생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구가 희박하고 제한되어있다고 하지만 그런 자체가 새로운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야한다는 것도,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누구랑 상의합니까 하는 것을 작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상의하고 그래서 도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 도가 시행하고 싶은 정책을 유형화된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조사를 해야합니다 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 시사점

이번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관계에 대해 잘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는 그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사회가 정부의 서비스 정책의 도구로 동원되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과 시민사회의 균열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비판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사회적 경제와 지역발전

충청남도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아홉 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촌형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지역기금형성 및 지역화폐의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14:00 ~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종수, 배혜정, 홍은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강마야(농업농촌연구부),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 원외

- 최선희(씨즈 충남지부)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 유정규(지역재단 운영이사)
- ▷ 인적자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김동준(엔씨스컴 이사)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육성방향

유정규 박사는 발제를 통해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그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역활성화에 유용한 대안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됨으로써 지역전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은 현재 농어촌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①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②교육, 의료, 주택,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에서 도농간 격차 확대, ③농촌사회의 양극화(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와 농촌 취약계층의 증대, ④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와 농촌의 역사문화자원의 훼손은 농어촌 활력저하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다.

농촌의 내발적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 '내발적 발전'이란 외부지원에 의한 개발이 주민참여의 결여, 지역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 발생,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며, 지역발전의 주체와 발전동력을 지역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략이다. 즉,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로 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전략에 관심의 증대는 그 추진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내발적 발전전략에서는 지역발전의 주체를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을 지향하는 주민참가와 자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협치조직(governance)이며, 발전의 동력은 원칙적으로 지역내부에서 찾으면서(driven from within) 외부와의 관계 중시하고, 지역 자원의 최대한 활용과 발전의 성과를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하는 발전전략을 추구하며,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통합적인 발전을 지향한다.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은 농어촌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추진해 나갈 핵심주체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 즉,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이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이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제를 정리하며 발제자는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

는 기관이나 단체가 형식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적기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행의 기관·조직 인증에서 사업(project)인증으로 인증방식을 바꾸고 셋째,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방식과 지원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적극적인 육성이 선결되어야 하고 다섯째,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 인적자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김동준 박사는 발제를 통해 인적자원의 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적자원을 통한 경쟁력이란 단순히 인적자원의 질적인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조직적 차원의 유무형의 자원을 총합한 개념이다 (Barney, 1991). 이러한 역량은 한 조직 내에서 일정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과 유지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인적자본의 우위 (human capital advantage)와 구분되는 인적자원 활용 프로세스의 우위 (human process advantage)라고도 말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것의 선행요인으로서 조직 내 신뢰 (trust), 조직후원의식 (PO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공정성(justice) 등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것이 조직 또는 집단 내 협력과 조직몰입, 지식공유 등을 높이고, 과업수행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적·심리적 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조직구성원들이 그 조직과의 가치관 및 비전의 일치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더구나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종업원들은 임금수준이나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에 대한 기대와 만족 보다는 그 사회적 기업의 가치관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여 조직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목표나 비전의 공유에 대해 보다 만족감을 느낄 것으로 본다.

발제자는 발제를 통해 최근 사회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있어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인 규정이나 보상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조직과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보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중요한 비전공유와 가치관일치가 절차공정성, 조직후원인식, 신뢰가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사회적 기업의 자부심이 경쟁력이다.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 지원 이런 것에서만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들도 자부심 같은 것들도 좀 생겨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에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했을 때 완전 싸구려 일자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하면 돈은 조금 벌지만 사회적 목적으로 인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데서 일하고 있다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 아무나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또 경쟁력이기도 해요. 사회적 기업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배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조건 열었을 때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면이 생길거다.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맥이 좀 풀리는 부분도 있을테고, 그 중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요. 정책 고민하시는 곳에 계신 분들은 이런 면도 감안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합적 방식이 필요하다.

농촌쪽에선 현장밀착형이라고 하기보다 지역밀착형이라고 하는 걸 더 잘 이해하시죠. 마을이 그걸 지향하고는 있는건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이 용어도 농촌지역에선 알아듣기가 어렵다는거죠. 실제 농민들은 협동조합에 굉장히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좀 틀어서 자주적협동경제 이런 기반을 같이 한번 만들어봅시다 하고 일을 하고 있는거고요. 저희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사에 기반을 좀 하자. 그리고 개인의 성과가 아닌, 조합적 방식으로 같이 모여서 일을 하자. 구멍가게들끼리 경쟁해봤자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런 거구요. 직접 사업보다는 지원하는 형태로 각각 활동단위들을 조직화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저희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디자인이 필요하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조합이라고 해서 지원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지역화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그런 장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실제 재원, 굉장히 어렵다. 이건 극복할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건데, 다들 말씀하시듯 인지도, 재원조달 문제, 농촌 지역 사람, 예산 구조, 전문성도 사실 굉장히 떨어져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흉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거구요.

-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교육 및 컨설팅을 할 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조직이 살아남는 길들이 또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새로운 것에 가치를 혼합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방식의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특히 농촌형에서는 마을에서 각 주체들 혹은 주민들이 서로 어떻게 연대하고 네트워크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다른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시사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남의 현실에 맞는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렵פות한 상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다. 단순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거나 인건비를 준다고 하니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역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농촌의 사회적 경제 단위들이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사회적 경제 생태계 분석

충청남도에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그 열번째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전략과제의 정리 내용, 즉 충남사회적 경제 여건분석, 생태계분석, 정책수요분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대한 분석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14:00 ~ 17:00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종수, 배혜정, 홍은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충남사회적 경제 여건분석
 - 김양중(충남발전연구원)
- ▷ 충남형 사회적 기업 심층사례조사 결과분석 및 제언

- 이은애(Seed's 이사장)
- ▷ 충남사회적 경제 실태 및 정책수요분석
- 임준홍(충남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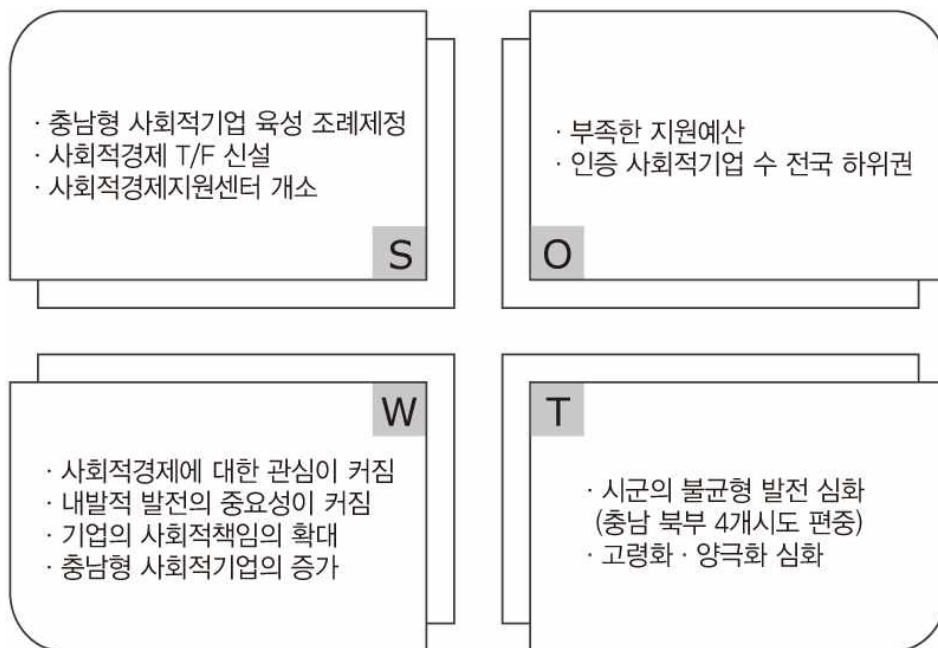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충남사회적 경제 여건분석

김양중박사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여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SWAT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충남 사회적 경제 SWOT 분석



- 충남 사회적 경제의 강점요인: 충남은 다른 시도보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 경제 T/F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충남발전연구원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음
- 충남 사회적 경제의 약점요인: 충남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예산은 56에 불과하며,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 기업 수 또한 전국 하위권

- 충남 사회적 경제의 기회요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인 높아졌고, 외형적 성장에 대한 비판으로 내발적 발전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커짐
- 충남 사회적 경제의 위기요인: 충남 16개 시군의 불균형 발전과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양극화가 가속
- 충남 사회적 경제의 위기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인식을 확대 하고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회지표(사회적 경제 D/B)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회적 경제 예산의 확대와 계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체간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며 충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단체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이들 단체들과 사회적 기업 연계모델을 개발, 전문기관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 또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유도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함

● 충남형 사회적 기업 심층사례 조사 결과 분석 및 제언

이은애 이사장은 충남의 사회적 기업의 심층사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순환적 경제구조 구축에 대해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양온천시장’은 지역의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받기보다는 서울의 가락동 시장을 거쳐 지역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농산물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직거래 하는 쪽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셋째, 지역과 전통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장애판’은 전통문화 계승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며 이를 통해 한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넷째, 오랜 시민사회기반 활동에 바탕을 둔 협력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마을활력소’와 ‘천안KYC’는 그 자체로 특정 사업을 하는 조직이라기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반 구축에 진력하는 간접 지원 단위이다.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자원 및 정보 유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출현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임준홍 박사는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충남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는 조직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실제 민간 보조가 끊어질 경우 84%가 힘들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70.2%가 스스로 지역사회 연대가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연대구조가 활발할수록 경영상태가 좋으며, 조직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지역민 고용이 100%이며, 여성고용 비중이 높고 원재료의 구입과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판매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40%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70%정도가 충남도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과 활동을 알고 있어 관심이 높다. 그리고 95%의 응답자가 충남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를 수행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이 두가지 가치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위험한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경제 내의 관계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관계에 있어서의 유대감, 시장경제의 유대 강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경제관계에서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 그렇게 봤을 때 관과의 협치가 중요할 것 같고, 시장경제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재정분야 쪽으로 사회적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수요구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적 경제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하나는 충남에서 생각하는 충남도가 설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명료하게 마무리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다의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되서는 이걸 조례화 한다거나 정책화할 때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기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논의하는거와는 다르게, 조례화를 내년 3월쯤엔 시행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

회적 기업과 다른 것과 같은 게 뭔지 분명히 드러나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업이 아닌 어떤 것까지 하겠다 하는 정책 목표 범위가 결정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적 경제의 내부 생태계 형성 정책이 필요하다.

내부 시장 형성해서 발전하는 경로, 유형, 사례가 있고, 정부가 환경을 잘 조성해서 만들어가는 경로 과정이 있고, 시민자체에 의한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고, 이것이 다 섞인 복합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구상들이 다 좋다고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강조점을 가질것이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보적으로 관계적인 사회적 경제 클러스트, 지역 권 내에서 상대적 자주성을 좀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광의로 보면 충남도 경우 800개까지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 사업주체간에 공동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규모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갈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정돈하고 일정 제한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시사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남에 맞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조사 결과 충남의 사회적 경제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충남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발표자, 토론자 모두 입을 모았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끼리의 네트워크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상호간에 도울 수 있는 구조, 생태계를 만들어 줄 때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사회적 경제 정책 제안

충청남도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한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글은 올해의 마지막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남 사회적 경제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었다.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충남사회적 경제 정책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전략과제 「충남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 1)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14:00 ~ 17:00
- 2)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송두범, 김종수, 배혜정, 홍은일(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임준홍(기획조정실),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원외

-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외 10여명

4) 주요 내용

○ 주제발표

- ▷ 충남형 사회적 경제 정책의 모색
 -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 ▷ 충남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

- 최조순(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수료)

○ 토론

- 지정 토론자 3명 외 연구회 회원 전원

■ 충남형 사회적 경제정책의 모색

김제선 이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충남 사회적 경제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까지 충남사회적 경제연구회,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충남발전전략적 과제로서 충남사회적 경제발전전략 연구, 충남도정책자문위원회 사회적 경제추진 기획단의 과정을 거쳐 충남형 사회적 경제의 상과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사회적 경제연구회의 논의는 낮은 사회적 경제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 연구, 충남지역의 특성과 정책 과제 진단, 분야별 사회적 경제 사례로서 협동조합, 기금(펀드), 지역화폐,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제선 이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첫째, 사회적 경제가 창출하고자 하는 공적가치가 무엇인지, 둘째, 충남형사회적 기업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셋째, 기존 정부 지원 사회적 경제 사업체는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업체로 육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결국 사회적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적 성과목표보다는 자발성과 호혜성의 규범을 지역사회에 정착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이런 방식의 사회적 경제가 뿌리 내리면 지역 차원에서 공동체적 연대감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 내부의 동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의 사회적 경제 분야 2012 예산 편성의 동향은 이런 점에서 도정혁신의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로 설정하는 것 자체를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 예산 편성 동향에서 드러나는 정책결정 집단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채워나갈 정교한 정책의 설계가 더욱 필요하다는 교훈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다양한 모색과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설계와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

최조순 박사는 사회적 경제가 복지국가 및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충남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몇 가지 주제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 역량 및 연대강화의 부문과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이다. 이는 크게 사회적 경제를 통합 육성하는 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인지도를 향상하는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셋째,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조직을 체계화하는 것과 재정지원의 확보,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발제를 정리하면서 최조순 박사는 이러한 정책을 위한 기반으로 지역자산 및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남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 지역과 다른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토론 요약

발제 후 청중들 간의 다양한 토론이 있어 지면을 빌어 소개한다.

•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오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유사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각종 교육이라던가 벤처 대회 이러한 것들은 중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몰아놓고 몇 가지를 해야 할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재원이든 뭐든 활용 가능한 자원을 내놓고 그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종의 틈새정책이죠.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사회적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틈새정책들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물론 도가 내놓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정된 자원 내에서 할 수 있는 틈새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떤 지역펀드가 만들어지면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지만 현재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틈새정책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충남만의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저는 고유자산이라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다면 충남이 사회적 경제를, 그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사람들을 육성해내고 지원해주고 홍보해주고 판매해주는 고유시스템, 고유매뉴얼, 이걸 갖고 있느냐 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을 가져가야 정말 충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새로운 자원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충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독특하고 진심어리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사회적 경제에는 인문학적, 철학적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저는 사회적 경제의 배경은 엄청난 인문학적, 철학적 가치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성장할수 없는 경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문학적, 철학적 배양, 토양없이 우리가 이 많은 시책들과 모델들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래성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역에서 어떻게 인문학적, 철학적 토양들을 나누고 배양하고 깊이 있게 다룰 것인가 그 부분에 들어가면 참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서울로 가야한다는 수백년에 걸친 사대주의라고 해야할까요. 그런 것들. 지역분들이 갖고 계신 그리고 저 자신도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아이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현장에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나. 도시의 역동감,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냈다는 것이 실제 우리 현장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편으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개인적인 실천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고 나름 고민하는 사람이구요. 이 사회적 경제를 배양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가장 저변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은 그 지역에서 교육집단, 인문학,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룹들, 그런 많은 그룹들하고 만나고 논의하고 거기에서 싹트는 아주 깊이있는 단계부터의 출발점이 없으면 구호에 불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서 그런 그룹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소통하고 키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개인적 실천의 문제들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적 경제에는 사회적혁신가가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회혁신가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지역에 충남형사회적 기업, 충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지점이 아닐까 싶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

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건데 아직 협동이 잘 안되는 이유는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덜 어려워서 협동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한편에선 혁신가로서 사회적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지역의 문제를 협동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 나가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 생태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인데 사회적 기업이 제도화되고 지역에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준비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걸 통합해 나가는 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시사점

사회적 경제 연구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도내 인식을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한다. 특히 이미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도내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사회적 경제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공유하였으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잘 활동하고 연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